

한국전쟁 정전60주년 국제학술대회

끝나지 않은 전쟁

The Unfinished War



서용선 작 '경계-휴전선'(2004년)

- 주 최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 주 관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한국전쟁 아카이브 프로젝트
하버드대학교 데이비스센터 냉전 연구 프로젝트
- 후 원 고려대학교 박물관
고려대학교 국제하계대학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 일 시 2013년 7월 27일(토), 09:00am ~ 06:00pm
- 장 소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원격회의실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3년 7월 27일 (土), 09:00~18:00
- 장소: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원격회의실 (지하 1층)

■ 개회식 (09:00-09:30)

- 사회: 원태준 (고려대)
- 환영사
: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조 광 (한국전쟁 아카이브 프로젝트 준비위원장)
- 축사
: 조명철 (고려대 박물관장)

■ 발표 및 토론 제1부 (09:30-12:30)

- 사회: 김경현 (고려대)

섹션 1. 미국 (09:30-10:35)

- 콜린 F. 잭슨 (미 해군대), “한국전쟁 후기 미국의 전쟁규모 확대에 연계되는 선택들 (1951년 7월-1953년 7월)”
 - 토론: 원태준 (고려대)
- 제임스 매트레이 (캘리포니아주립대), “아이젠하워와 한국전쟁: 계속되는 논쟁거리”
 - 토론: 김정욱 (고려대)

섹션 2. 소련 (10:45-12:30)

- 민경현 (고려대 역사연구소장), “스탈린과 한국전쟁”

- 토론: 황동하 (한국방송통신대)
- 캐서린 웨더스비 (존스홉킨스대), “북한과 정전협상”
- 토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 마크 크레이머 (하버드대학 데이비스센터 냉전사연구소장), “스탈린의 죽음과 한국전쟁 종결의 결과”
- 토론: 구자정 (대전대)

■ 점심 시간 (12:30-14:00)

■ 발표 및 토론 제2부 (14:00-18:00)

- 사회: 박찬영 (고려대)

섹션 3. 중국 (14:00-15:05)

- 첸 지안 (코넬대), “정전은 베이징의 제1선택지가 아니었다: 중국의 한국전쟁 종전전략을 다시 생각하다”
- 토론: 김은기 (고려대)
- 김정현 (동북아역사재단), “중국의 한국전쟁 기억과 기념: 항미원조기념관을 중심으로”
- 토론: 하세봉 (한국해양대)

섹션 4. 정전의 회고 (15:15-17:40)

- 이재훈 (동국대),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장 사료에 비친 휴전협상 시기 공산 측의 내부적 갈등”
- 토론: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 박명립 (연세대), “1953년 한미동맹체결: 준다자조약 및 준집단안보체제 -- 한국문제 해결과 생존방식의 귀환?”
- 토론: 허은 (고려대)
- 박태균 (서울대), “작동하지 않는 정전협정”
- 토론: 정일준 (고려대)
-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6·25전쟁에 대한 국내 연구의 회고와 전망: ‘전쟁종합사료관’ 구축을 위해”
- 토론: 홍면기 (동북아역사재단)

■ 만찬회 (18:00-20:00)

환영사

올해는 한반도를 3년 넘게 피로 물들였던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일단 멈춘 지 육십갑자가 되는 해입니다. 60년이 지나도록 정전 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한반도의 남과 북은 언제라도 다시 전쟁에 뛰어들 수 있는 일상화된 긴장을 오늘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60년이 지나도록 한국전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한국전쟁 전문 아카이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역사연구소와 박물관은 한국전쟁을 사실로 재구성하고 이론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전쟁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을 기념하면서 우리 연구소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냉전사 연구팀과 공동으로 한국전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전쟁 아카이브를 구축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koreanwar.com이라는 가상공간에서 그리고 현실공간에서 알찬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학술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취지를 공감하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북아재단의 김학준 이사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부탁을 망설이지 않고 흔쾌히 수락하고 도와주신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의 한철호 소장님,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 손을 잡아주신 고려대학 국제처장 강성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학술대회를 공동주관하신 하바드대학교 냉전연구 프로젝트 소장 크레이머 교수님과 처음부터 우리 학술대회 기획에 참가하신 웨더스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학술대회는 미국을 대표하는 한국전쟁 전문 연구자들을 하바드대학의 냉전연구 프로젝트에서 선정했고, 한국의 한국전쟁 전문 연구자들은 고대 역사연구소에서 선정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 참가해서 발표와 토론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연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이끄실 조광 교수님과 조명철 박물관장님께 응원의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2013년 7월 27일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장 민경현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학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계 냉전사의 한 획기가 된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날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날 세계적인 저명한 석학들을 모시고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정이 바쁘신 데도 좋은 논문을 작성해주신 발표자님들, 그리고 토론과 사회를 맡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멀리서 참가해주신 Harvard University의 Mark Kramer 교수, California State University의 James Matray 교수, Cornell University의 Chen Jian 교수, Johns Hopkins University의 Kathryn Weathersby 교수, Naval War Academy의 Colin F. Jackson 교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추진해주신 민경현 고려대 교수님과 고려대 역사연구소·하버드대학교 데이비스센터 냉전사 아카이브 프로젝트, 고려대학교 박물관,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한국전쟁을 연구해 온 정치학자로서, 정전협정 60주년에 개최되는 이 학술대회에 축사를 하게 된 것이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한국전쟁 정전6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영국·프랑스·터키 등 여러 유엔참전국에서 기념대회가 개최되었습지만,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 학술대회는 특별히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대한 미국, 소련과 중국의 역할과 의미를 탐구해보는 자리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06년 설립 이래 동아시아의 역사 화해와 평화를 위한 다수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성과물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에서 주요 과제는 한국전쟁, 특히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정전협정에 대한 이번 학술대회의 수준 높은 발표·토론들을 반영하여, 동북아의 화해와 평화공존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한국전쟁 연구자들이 모인 이번 학술회의가 서로의 연구 성과를 존중하는 가운데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한국전쟁과 정전체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연구를 열어가는 발판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국경을 넘는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동북아 평화의 중요한 초석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27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학준

차 례

Section 1. 미국

- 콜린 F. 잭슨(Colin F. Jacson) 013
“한국전쟁 후기 미국의 전쟁규모 확대에 연계되는 선택들(1951년 7
월~1953년 7월)”
- 제임스 I. 매트레이(James I. Matray) 041
“아이젠하워와 한국전쟁: 계속되는 논쟁거리”

Section 2. 소련

- 민경현 067
“스탈린과 한국전쟁”
- 캐서린 웨더스비(Kathryn Weathersby) 077
“북한과 정전협상”
- 마크 크레이머(Mark Kramer) 099
“스탈린의 죽음과 한국전쟁 종결의 결과”

Section 3. 중국

첸 지안(Chen Jian)	123
“정전은 베이징의 제1선택지가 아니었다: 중국의 한국전쟁 종전전략을 다시 생각하다”	
김정현	149
“중국의 한국전쟁 기억과 기념 : 抗美援朝紀念館을 중심으로”	

Section 4. 정전의 회고

이재훈	169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장 사료에 비친 휴전협상 시기 공산 측의 내부 적 갈등”	
박태균	183
“작동하지 않는 정전협정”	
이완범	199
“6·25전쟁에 대한 국내 연구의 회고와 전망: ‘전쟁종합사료관’ 구축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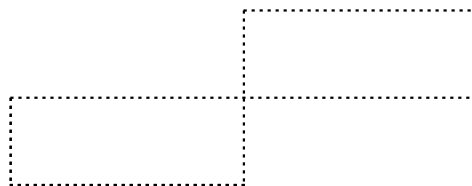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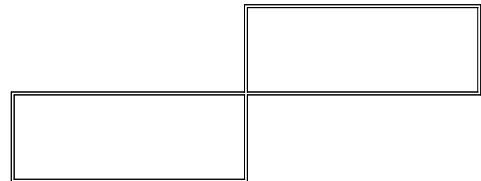
Section 1. 미국

.....
콜린 F. 잭슨, “한국전쟁 후기 미국의 전쟁규모
확대에 연계되는 선택들”

토론: 원태준(고려대)

.....
제임스 I. 매트레이, “아이젠하워와 한국전쟁:
계속되는 논쟁거리”

토론: 김정욱(고려대)
.....



한국전쟁 후기의 미국의 전쟁확대에 연계되는 선택들, 1951년 7월 - 1953년 7월

(US Escalatory Options in the Late Korean War, July 1953 - July 1953)

콜린 F. 잭슨
미 해군대

1951년 7월, 정전회담의 시작으로부터 1953년 7월에 전쟁이 끝나기까지 미국은 공산주의 연합이 38선 주변에서 전투를 종결하는 것을 원했다. 이 목적은 상당히 명확하고 일관되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결과로 전환시키는 것을 실패했다. 회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전을 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초기의 희망들은 좌절감으로 대체되었다. 전쟁의 마지막 2년 동안, 미국의 고위 군사지도자들은 회담에 필요한 군사적 압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견을 일치했다.¹⁾ 이는 1951년, 미국이 38선을 따라 전쟁을 종료시키는데 필요한 군사적 영향력을 전개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논문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이 사용하던 전략과 수단에 대해 검토한다. 그렇게 해서 이에 대한 세 가지 주요한 의문들을 다룰 것이다. 첫째, 어떤 전략이 사용되었으며, 이 전략들은 사용가능했는가? 둘째, 합의 조건들을 개선시키거나 종전을 가속화시킬만한 단독의, 혹은 조합된 선택들이 있는가? 셋째, 협상테이블에서 미국의 군사적 성공들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미국이 공산주의 연합에 대한 압력을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들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경제 전쟁과 중국 내부에서의 반란은 효과와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전략이었다. 수륙양용작전(amphibious operation)은 전쟁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가능성을 보유했지만, 가장 높은 피해와 위험을 수반했다. 수륙양용작전은 현지 지휘관들이 선호했지만, 워싱턴의 민간·군사지도자들은 선호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항공수단은 군사행동에 대한 위험과 피해를 계산했을 때, 낮은 대

1) Admiral C. Turner Joy, *Negotiating While Fighting: The Diary of Admiral C. Turner Joy at the Korean Armistice Conference* (Stanford: Hoover Institution, 1978), pp. 10; General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New York: Harper and Row, 1988), pp. 116-117.

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민간·군사지도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었다.

다른 의견들, 특히 미국의 현지 지휘관들은 전쟁의 확대를 지지한 반면에, 워싱턴의 민간·군사 정책 입안자들은 타협전략을 만들었다. 레슬리 길브(Leslie Gelb)와 리처드 베스(Richard Betts)가 베트남전에 대한 그들의 연구에서 주장한 것처럼, 미국은 유리한 결론을 강요하기 위해 한국에서 부족하더라도 패배하지 않을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을 수행했다.²⁾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전쟁 후반에서 공산주의 연합에 대항하여 제한전을 끝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군사작전이 정치적 결과로 전환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되는 전쟁들이 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최소한으로 요구된다. 공산주의 연합에 대항하는 전쟁에서, 미국은 공산주의 연합 각각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전쟁 종결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수많은 좌절들은 공산주의 연합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 가장 뚜렷한 것은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스탈린의 역할과 거부권행사자로서의 그의 역할 - 로부터 진행된다. 사실상, 미국의 전쟁 필승이론은 공산주의 연합의 중개자인 중국과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과 북한에 영향력을 가함으로써 공산주의 연합이 정전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전략은 소련과의 전쟁의 위협은 최소화했지만, 종전에 대한 스탈린의 거부권을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으며, 또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개별적 이해관계를 설명하는데 실패했다.

중국에 맞서는 경제전쟁

한국에서 미국이 확전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북한의 보호자인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중공)에 맞서는 경제전쟁이었다. 국공내전의 후기 단계부터,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봉쇄의 경제제재를 고려했다. 이 전략의 매력은 미국의 일본에 실시한 경제전쟁을 성공시킨 것처럼, 새로운 정권의 취약성을 노린 것이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중공은 10년 이상의 전쟁에 의해 파괴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고, 한국전쟁에 참전한다는 그들의 결정은 국가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다. 미국의

2) Leslie Gelb, Richard Betts, *The Irony of Vietnam: The System Worked*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79).

입장으로는 중공이 한국에서의 패배를 인정하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약화시키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입증된 방법들을 적용하기를 원했다. 강력한 국민당(Chinese Nationalist) 해군의 존재와 이에 대해 상대적인 열세를 보이는 중공의 해군은 미국의 전략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미국의 경제전쟁 전략은 적어도 네 가지의 각기 다른 목표를 가졌다. 1949년과 1950년 사이에, 미국의 계획자들은 서방 국가들에 의한 무역의 중단을 통해 도시의 불만을 선동하고 새로운 정권의 안정성을 위협하기를 원했다. 두 번째 목표는 중공과 이들을 지원하는 소련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셋째, 미국은 중공과 소련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힘으로써 그들이 한국과 다른 곳에서의 대외정책을 수정하도록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계획자들은 이와 같은 전략들이 중·소 동맹 내의 긴장을 유발시킬 것을 원했다. 미국은 중국이 소련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켜 군사·경제 원조 이상의 갈등을 조장하여 두 동맹이 적대시하기를 원했다.

중공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전, 트루먼 행정부는 중공에 대한 제재들에 대해 중도 노선을 추구했다. 딘 에치슨(Dean Acheson), 조지 케넌(George Kennan)과 다른 이들은 새로운 정권에 대해 비군사물품의 교역을 허가함으로써 중국에서 미국의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한편으로, 미국은 중공과 소련을 단절시켜 군사물품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³⁾

1950년 가을, 중공의 개입은 미국에게 중공을 상대로 그들의 경제활동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유발시켰다. 1951년부터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국의 지도자들은 전반적인 금수조치(general embargo)와 해상봉쇄(naval blockade)에 대한 피해, 이점,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따져보았다. 전반적인 금수조치에 따른 두 가지 장애물은 중공의 경제적 취약성이 낮다는 것과 서구 및 중립국의 협조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일본과 다르게, 중공의 경제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충분히 자급자족하고 있었다.⁴⁾ 이런 이유로, 서구의 무역중단은 중공의 회복과 산업발전을 둔화시킬지는 모르지만, 농업이나 산업화 이전 단계의 경제에는 손상을 줄 것 같지 않았다. 게다가 소련은 육상무역을 통해 서구에서의 무역중단에 대한 손실을 상쇄시키기 위한 이상적인 위치에 있었다.

1950년 12월, 미국은 중공에 대한 모든 무역과 금융관계를 중단했지만, 다른 거

3) ShuGuang Zhang, *Economic Cold War: America's Embargo against China and the Sino-Soviet Alliance, 1949-1963*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pp. 28-29.

4)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ume VII*, "Report Prepared by the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Trade of the Free World with the Soviet Bloc, February 1951," pp. 1908; *ibid.*, Zhang, pp. 35.

수 국가들은 지정된 군사물품 이외의 추가적인 제재에 대한 움직임을 하지 않았다. 전반적인 비 공산주의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 중공은 중립국이나 다른 서구 국가들로부터 군사물품을 얻음으로써 대미 무역에 대한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었다. 홍콩 식민지에 대한 보호와 중공에 대한 영향력을 보전하는 것을 원하는 영국은 금수조치를 강하게 하는 것에 반대했다. 미국 정부와의 교신에서 영국정부는 전반적인 금수조치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했으며, 이는 미·영 관계를 손상시키는데 잠재적인 역할을 했다.⁵⁾

이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1951년 초 미국은 전반적인 금수조치를 넘어 완전한 해상봉쇄를 통한 압박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했다. 해군참모총장(Chief of Naval Operations, CNO)의 1951년 보고서는 구모, 화학물질, 철도장비, 수입된 금융재, 석유에 대한 중공의 취약점들을 구체적으로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해안으로의 운송을 붕괴시키기 위한 도로망 및 철도망의 부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계획의 입안자들은 대만(Formosa)에 대한 중공의 침공을 단념시키는 것부터 중국 본토의 반공산주의 저항군들을 부추기는 등의 추가적인 이득을 지적했다.⁶⁾

금수조치 보고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군참모총장의 보고서는 실행에 대한 주요한 두 개의 장애물 - 영국과 소련 -을 인정했다. 계획자들은 이를 “봉쇄는 영국의 홍콩, 포르투갈의 마카오, 소련의 뤼순항에 적용하지 않는 한, 충분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봉쇄의 필수요소로 마카오와 홍콩의 봉쇄를 고려했다. : 계획자들은 뤼순항을 통한 무역을 봉쇄하는 것에 대한 위험과 이것이 소련으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⁷⁾

미국의 민간 지도자들은 중공의 영토에 대한 군사적 포위를 유도하거나 홍콩에 심각한 손상을 줄지도 모르는 움직임들에 대해 결국 머뭇거렸다. 부분적으로 이는 의도된 봉쇄에 대해 제한적이고 불확실한 이점을 반영한다. 1951년 12월, 특수정보 보고서(Special Intelligence Estimate)에서는 봉쇄의 이점이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보았다. : “이와 같은 차단은 중공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지만, 중공 정부를 압박하여 그들 정부의 안정성을 위협하거나 한국전쟁을 끝내게 하지는 못할

5) Bruce Elleman, “High Seas Buffer: The Taiwan Patrol Force, 1950-1979,” *Naval War College Newport Papers*, No. 38, pp. 49-50.

6) “Memorandum to the JCS from the CNO, Naval Blockade of China,” Strategic Plans Division, Box 266, Naval Historical Center, Navy Yard, Washington, D.C.

7) Ibid., CNO, “Naval Blockade of China,” pp. 2.

것이다.”⁸⁾ 영국과 겪었던 다른 갈등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확전에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얻는 이득보다는 유럽 동맹국(영국)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들의 거래에 직면하여, 미국은 경제전쟁 전략에서 중도입장을 추구하는 것을 선택했다. 미국은 중공에 대해 전반적인 금수조치를 유지했지만, 이는 중공이 영국과 중립국 세력들에게 더욱 선택적인 방법을 채용하는 것을 용인했다. 트루먼 행정부와 그 뒤의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홍콩의 예외에 대해 극도로 분노했지만, 이 일로 해서 영국과의 관계가 곤경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반면에, 미국은 국민당 정부의 금수조치를 지원하고 용인했으며, 중공 주변 해역에서의 사략행위를 고무시켰다. 비록 국민당 정부의 함선과 사략선들이 영국의 화물을 몰수하고 신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금수조치는 홍콩 무역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봉쇄에 대한 논의들은 공산주의 연합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려는 노력과 관련해서 한국전쟁 후기의 공통적인 요소로 유지되었지만, 다른 선택들 - 공중과 해상 폭격을 만주와 중공 본토로 확장시키는 것 - 의 부속물로서 자주 논의된다.⁹⁾ 불행하게도, 한국에서의 전쟁이 마음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미국은 좀 더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상황이었으며, 이것은 오히려 중공에게 해상봉쇄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켰다.

봉쇄에 대한 논의는 1953년 초, 한국에서의 확전 선택에 대한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조사와 함께 다시 등장한다. 1953년 3월 9일에 전달된 CIA 첩보 보고서에서는 한국에서 중공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미국의 경제전쟁에 대한 효과에 대해 비관적인 이전의 연구들을 입증했다. 이 보고서는 전반적인 미국의 금수조치와 중립국 및 서구 동맹국들의 약한 금수조치가 중공의 발전을 둔화시키는 중요한 피해를 가함으로써 소련에 대한 그들의 의존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미국의 노력이 중공의 산업을 재건하는 것과,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 중공이 한국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소련의 지원은 금수조치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적극적인 철도건설은 해상운송에 대한 중공

8) Special Estimate 20 (SE-20), "The probable consequences of certain possible US courses of action with respect to Communist China and Kore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December 22, 1951, pp. 2.

9) Special Estimate 37 (Se-37), "Probable Effects on the Soviet Bloc of Certain Courses of Action Directed at the Internal and External Commerce of Communist Chin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March 9, 1953, pp. 3.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2-54v14p1/d82>.

의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미국의 해상봉쇄에 대한 이점을 약화시켰다. 이와 같은 이유로, CIA는 완전한 미국의 봉쇄가 중공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증가시킬 것이며, 소련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킬 것이지만, 중공 정권을 위협하거나 한국에서 합의를 보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공의 운송체계에 대해 공중 및 해상폭격과 결합된 봉쇄는 중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미국은 희망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보국은 봉쇄와 폭격이 UN을 통한 해결로 이끌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 of Staff, JCS)와 해군은 정보부가 보고한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모든 논의자들은 전쟁의 확대가 소련과 서구 동맹국들에 대한 대립의 위험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에 동의했다.¹⁰⁾

미국은 봉쇄의 가능성을 결코 묵살시키지 않았지만, 미국의 경제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와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다. 만약 미국이 경제전쟁에 대한 네 개의 목표(정권을 불안하게 하는 것, 중공의 행동을 수정시키는 것, 피해를 입히는 것, 소련에 대한 의존을 증가시키는 것)를 가졌다면, 뒤의 두 가지 목표만이 성공했을 것이다. 증폭하는 국내의 불만을 통해 중공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초기의 희망은 중공이 정치적 불만을 성공적으로 진압함으로써 무익한 것이 되었다. 미국의 전략은 중공에게 재건의 어려움과 피해를 증가시켰지만, 그 대가로 한국, 인도차이나 혹은 다른 어느 곳에서나 중공의 입장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중공의 구조적인 이점은 대부분의 군사작전에 대한 실망적인 효과들을 가져왔다. : 전쟁 이전의 제한된 무역 의존도, 소련이라는 다른 준비된 무역상대국, 홍콩에 대한 미국과 영국 사이의 분열, 무역제한, 물물교환, 외화보유와 송금에 대한 신중한 절약과 같은 다양한 대책들을 통해 중공은 제재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켰다.¹¹⁾ 마지막으로, 1949년부터 1953년까지 미국의 제3국들의 제재에 대한 점진적이며 고르지 못한 적용은 중공이 대체자원을 개발하는 것과 필수적이지 않은 수입품의 축소를 더욱 쉽게 만들었다.

작전행동에 대한 최대한의 효과는 결국 간접적이며 지연되었다. 미국은 중공의 무역, 재건, 재무장, 전쟁에 대한 비용을 소련이 떠안게 시킴으로써 소련과 중공 사이의 근본적인 불화를 증폭시켰다. 중공의 무역 의존은 1950년과 1951년 사이의

10) Special Estimate 37, "Probable Effects on the Soviet Bloc of Certain Courses of Action Directed at the Internal and External Commerce of Communist Chin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March 9, 1953.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2-54v14p1/d82>.

11) Ibid., Zhang, pp. 84-91.

소련 블록(Soviet Bloc)에서 수출한 물품이 30%에서 60%로 증가함으로써 극적으로 증가했다.¹²⁾ 중공의 지도자들은 소련이 무기와 경제 재건에 대해 현금지불을 고집하는 것에 반발했다. 또한 소련은 기술이전과 군사·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소극적인 것에 반발했다.¹³⁾ 소련은 중국공산당(CCP)을 위한 백지수표에 서명하는 것을 주저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불필요한 위협을 노출시키는 것을 피했다. 마지막으로, 스탈린의 의사결정 패턴은 중요한 적수로 등장할지 모르는 중공을 가화시켜 주는 것에 대해 미심쩍어 했다. 이와 관련해서, 중공의 필요와 소련의 게임맨십(gamesmanship)이라 여겨지는 전략의 결합은 이후 중·소 분쟁에 대한 원인이 된다.

1951년 이후 한국에서 미국은 경제전쟁에 대한 방법으로 중공의 행동을 더 크게 변경시킬 수 있었는가? 금수조치와 예상된 피해, 봉쇄와 폭격에 대한 이득의 결과는 중공이나 소련의 전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정도로만 여겨졌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효과가 없는 방법들은 중·소 동맹의 불화에 장기적으로 기여했을 것 같다.

내란지원

이 기간 동안 미국이 시행한 다른 전략은 내란에 대한 지원이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저항활동에 의지한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에서, 미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에 투쟁하는 수단으로서 반공산주의 저항군의 활용을 연구했다. 미국은 공산주의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반란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한국 현지로부터 국경으로 중공군을 이동시키고, 중공 내부에서 다수의 전선을 열어 정권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을 원했다. 미국은 신장, 티벳, 버마, 중국 남부해안과 북한 등의 중공의 주변에서 게릴라 저항을 모색했다.

이러한 모험들은 모두 확실한 공동적인 요소들과 추정들을 공유했다. 본토에서의 불완전한 공산주의 통합은 효과적인 반란활동에 대한 기회를 열어 놓은 것으로 보였다. 1951년, 패배한 국민당군의 잔당들은 지역적인 반란활동을 위한 핵심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권위자들은 40만에서 190만 사이의 군대가

12) Ibid., Zhang, pp. 93-94.

13) Marshal XuXingqian, "The Purchase of Arms from Moscow" in Xiaobing Li, Allen Millett, Bin Yu, *Mao's Generals Remember Korea*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1), pp. 144-146; *ibid.*, Zhang, pp. 109.

본토에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¹⁴⁾ 이들의 군대에 더하여 준동하는 소수민족들과 불만을 품은 중국의 엘리트 및 단체들이 더해질 것이다. 미국의 전략가들의 핵심은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이들 저항군들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신장과 북서부

중국 북서부 지역의 무슬림 지역은 미국이 반란을 지원하기 위한 잠재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험한 지형, 광활한 공한, 인종 간 불만에 의한 호전적인 민족들은 중국공한당에 지속적인 저항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반란이 점화되고 지속된다면, 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 PLA)은 한국에서 떠날 것이며, 공산주의 정권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부과했을 것이다.

티벳, 몽골,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신장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의 가장자리에 있었다. 중국의 정부가 강했을 때, 이 지역의 튀르크(Turkic)민족들은 한(漢) 제국의 통제 하에 들어갔었다. 중국의 정부가 약하거나 혼란한 시기에는 중국의 영향력 밖으로 나가 강력한 자치를 가지며 강대국으로서 경쟁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소련은 한족 군벌지도자인 성세재(Sheng Shicai, 盛世才)를 지원하여 국민당 정권의 약점을 이용하고, 후에는 동터키공화국(East Turkestan Republic)으로 분리를 시도했었다. 이들의 움직임은 만주에서부터 몽골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이익을 재주장하기 위한 스탈린의 주요 노력과 함께 일관된다. 이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약했던 중국공한당은 다양한 수준의 자치를 지지함으로써 인종분리주의자들의 감정에 호소했었다.¹⁵⁾

국공내전의 종료 단계에 이르는 1949년에 미국은 반공산주의 저항운동에 대해 다양한 무슬림 군벌지도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인민해방군의 압력에 의해 국민당 연합이 해체되자, 다양한 무슬림 군벌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대안적인 후원자를 찾기 위해 미국 외교관에게 접근했다.¹⁶⁾ 미국은 반공산주의 단체에 10만 명에 가까운 군대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

14) Matthew Aid, Jeffrey Richelson, "U.S. Intelligence and China: Collection, Analysis, and Covert Action," National Security Archive Working Paper,

http://nsarchive.chadwyck.com/collections/content/CI/intell_and_china_essay.pdf.

15) Owen Lattimore, *Pivot of Asia: Sinkiang and the Inner Asian Frontiers of China and Russia*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1950), pp. 69-81; James Millward, NabijanTursun, "Political History and Strategies of Control, 1884-1978," in S. Frederick Starr (ed.) *Xinjiang: China's Muslim Borderland* (New York: M.E. Sharpe, 2004), pp. 79-81.

성에 강한 흥미를 가졌지만, 워싱턴의 지도자들은 이의를 제기했다.¹⁷⁾ 국민당의 붕괴를 둘러싼 전반적인 절망은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더 많은 재화를 낭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지만, 몇몇 정책입안자들은 신장에서의 중공과 소련의 충돌이 중·소 분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¹⁸⁾ 이 초기의 기회는 1949년 8월에 평더화이 휘하의 인민해방군이 국민당군과 란저우 외곽의 군벌군을 패배시킴으로써 많은 무슬림 지도자들이 추방당하거나 흩어지면서 없어졌다.¹⁹⁾

중공이 1950년 후반에 한국전쟁에 참전하자 미국은 신장전선(Xinjian front)을 재고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증가한 중공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서 공산주의 정권의 약화와 중공군의 진군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 신장에서의 저항을 이용할 것을 모색했다. 이를 위한 담당기구로는 중국 남부해안에서 반공산주의 게릴라를 지원하기 위해 CIA의 비밀활동회사로 이용된 웨스턴 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Western Enterprises Inc., WEI)가 있었다. 대만을 본거지로 활동해 온 WEI는 예전의 군벌지도자 마푸팡(Ma Pu fang)의 조카인 마취화(Ma Ch'i hua)의 지휘를 받는 저항군 집단과 접촉했고, 1951년부터 무기, 무전기, 그의 반란군 무리와의 연락을 위한 팀을 공수했다. WEI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이들의 전달은 인민해방군에 의해 결정적으로 제압될 때까지 1년이 넘도록 계속되었다.²⁰⁾

제2전선으로서 신장의 매력이 표면적으로는 좋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요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평더화이의 1949년 공세는 군벌군을 격파했고 남아 있는 전사들을 세력을 급격하게 약화시켰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인민해방군의 활동이 이 지역에 정치적, 사회적 통제를 설립하기 위한 중국공산당의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국공산당은 탄압받은 집단과의 협력과 조정을 결합하려고 노력했다. 이와 같이 혼합된 전략은 1949년과 1956년 사이의 조직적인 저항을 약화시키고,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게다가 신장의 병참과 정치적 지형은 미국의 대규모 반란을 유지하고 촉발시키기 위한 최악의 지역 중 하나였다. 소련과 중공은 모두 병참

16) "Telegram, The Consul at Tihwa (Paxton) to the Secretary of State," July 8, 1949, *FRUS*, 1949, Volume IX, pp. 1058.

17) Frank Holober, *Raiders of the China Coast: CIA Covert Operations during the Korean War*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9), pp. 173.

18)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 (Butterworth) to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Undersecretary of State (Webb), February 25, 1949," *FRUS*, 1949, Volume IX, pp. 1046-1047.

19) "Telegram, The Vice Consul at Tihwa (Mackiernan) to the Secretary of State," August 31, 1949, *FRUS*, 1949, Volume IX, pp. 1061; *ibid.*, Holober, pp. 174.

20) *Ibid.*, Holober, pp. 194.

적 접근, 정보, 그리고 엘리트들과의 관계에서 미국보다 막강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저항운동을 일으키려는 이 시기에 예상하던 중공과 소련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단기적으로 소련이 신장에 대한 지배권을 중공에게 넘겼다.) 이러한 이유들로, 신장에 대해 은밀한 지원을 하려던 미국의 시도는 한국전쟁에서 중공의 행동이나 중요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벳

이론상으로, 티벳은 중국에 대항하여 미국의 대리전을 치를 수 있는 다른 후보였다. 신장처럼, 티벳도 중국 제국에 대해 실질적인 자치와 속국을 계속 오가던 관계였으며, 인종적으로도 별개의 지역이었다. 티벳 민족은 외부의 통제에 저항하는 전쟁의 전통과 험한 지형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1949년과 1953 사이에 티벳 민족의 저항이 매력적인 기회로 여기게 만들었다.

티벳은 여러 측면에서 유망한 장소였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동맹국들과 중공의 전략에 대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티벳의 역사적인 후원자 중 하나인 영국은 홍콩을 방어하고 관계회복을 위해 티벳을 포기할 의향이 있었다.²¹⁾ 티벳에서의 저항을 위한 병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새로 독립한 인도 정부에 대한 보호와 암묵적인 지원이 필요했다. 이러한 이유들은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이 승리하고, 1950년 10월에 중공이 티벳을 침공했던 시기에는 인도의 도움이 없었다.

상대들을 분열시키는 마오쩌둥의 전략은 상대의 근본적인 분열을 활용했다. 마오쩌둥은 영국과 인도에게 화해를 요청함으로써 1949년에 티벳을 합병하는데 그들이 의도치 않게 기여하도록 만들었다. 영국과, 특히 인도의 지원이 없는 티벳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은 이득보다 손실이 더 많았다.²²⁾

한국전쟁은 미국이 티벳에 대한 이해관계를 재평가하게 만들었으며, 달라이라마 정권은 계획된 협상정책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1950년 10월, 마오쩌둥의 군사

21) QiangZhai, "Tibet and Chinese-British-American relations in the Early 1950s,"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ume 8, No. 3 (Summer 2006), pp. 38.

22) Chen Jian, The Tibetan Rebellion of 1959 and China's Changing Relations with India and the Soviet Union,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ume 8, No. 3 (Summer 2006), pp. 58; Michael Sheng, "Mao, Tibet, and the Korean War,"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ume 8, No. 3 (Summer 2006), pp. 22, 26.

활동은 티벳의 정규군을 진압했다. 마오쩌둥은 티벳의 엘리트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적 활동과 결합하여 달라이라마와 그의 동맹국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그다지 남겨놓지 않았다. 많은 티벳인들은 중공의 침략에 저항하는 것을 원했지만, 인도의 침묵과 들쭉날쭉하는 미국의 열정은 주요한 정치적 저항운동과 무장 저항운동을 만들어내는 데는 허약한 기반이었을 것이다. 1951년 8월 라사(Lhasa)로 돌아간다는 달라이라마의 결정과 중공이 티벳의 점령을 완화시키기 위한 시도는 한국전쟁의 남은 기간 동안,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대신할 후보로서 티벳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성공했다.²³⁾

버마와 운남

버마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반공산주의 반란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희망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다. 중국 남서부에서 철수한 국민당군은 1949년과 1950년에 버마로 들어왔으며, 운남에 있는 중국공산당을 공격할 기회를 미국에게 제공했다. 신장이나 티벳처럼, 1949년과 1950년 사이에 미국에 접촉한 버마의 현지 반공산주의 지도자들은 목살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공의 한국전쟁 참전 이전, 미국은 버마의 국민당군과 그들의 명목상의 후원자인 대만의 국민당(KMT)과 은밀한 대화를 시도하는데 만족했다.

중공이 한국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미국 정책협력국(Office of Policy Coordination, OPC)은 곧 버마의 국민당 군대를 위한 자문단을 중개할 것과 무기를 지원하는 정책에 착수했다. 작전계획 지시문에는 OPC와 국민당군이 이미(Li Mi, 李弥) 장군에게 자금, 무기를 제공하면서 이웃한 중국의 운남에 침공을 요청했다.²⁴⁾ 이미의 군대의 중심은 국민당군 93, 193사단의 잔당들로 구성되었다. 그는 다양한 중국 망명자들과 현지 버마인 민병대를 포함시켰고, 그의 운남 반공산주의 구원군(Yunnan Anti-Communist Salvation Army, YANSA)의 숫자는 총 12,500명이 되었다.²⁵⁾

미국, 국민당, 그리고 이미는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운남을 급습하기를 원했다. 미국은 인민해방군을 분열시키고 중공에 피해를 입히기 위한 제2전선을 원했다. 국민당은 국내정치적 이유로 본토에 되돌아간다는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기를 원했다. 이미는 자신의 군대의 존재함을 알리고 본토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미래의 자금 조달을 확고히 하기를 원했다. 이 세 집단들은 서두름

23)

24) Gibson, pp. 59-60.

25) Ibid., Aid, Richelson, pp. 27-28.

과 지연 사이의 균형을 인지했다. 초기 침공은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통제에 대한 불완전한 통합을 이용할지도 모르지만, 인민해방군과의 전투로 인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²⁶⁾

미국과 국민당 지원자들의 승인과 함께 이미는 1951년 5월과 6월, 두 번의 침략을 개시한다. 2개 연대 규모의 군이 운남으로 진군할 수 있었고, 현지 민병대와 치안군을 격파했다. 1951년 6월 28일, 인민해방군이 이미의 군대를 공격했을 때, YANSA는 버마의 피난처로 무질서하게 퇴각했다. 중공 주변부에서 반란을 지원하려는 국민당과 미국의 커다란 시험은 실패했다. 운남 침공의 실패와 함께 미국은 이미의 후원에서 버마의 반공산주의 정부를 안정화시키고 국민당군을 제거하려는 다양한 시도로 입장을 전환했다.²⁷⁾

1951년 이후 버마에서 이미의 군대가 완전하게 축출된 것에 대한 미국의 무능은 이미의 지원자들과 무장된 대리인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자금지원과 군대수송을 연기한다는 미국의 결정은 국민당군과 그들의 동맹들에게 지역적인 마약무역으로 자금지원을 다각화하도록 만들었다. 운남에서 새로운 국민당 통제지역을 얻을 수 없자, 그들은 버마의 산(Shan)정권으로 가서 통치지역을 만드는데 만족했다.²⁸⁾

북한의 게릴라

1951년에서 1953년까지 미국의 통제 하에 가장 거대한 반공산주의 반란집단이 북한에서 활동했다. 1950년 압록강까지 진출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요한 반공산주의 지지자들을 알았다. 이후 38선 이남으로의 후퇴는 이들 집단, 특히 황해도 출신들의 탈출을 촉발시켰다. 이 집단들은 한국의 서부해안에서 싸웠으며, 연안의 섬들을 은신처로 삼았다. 탈출기간 동안, 이들은 미국의 지원과 보호를 원했다.²⁹⁾

북한 정권에 대항하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그들의 존재와 의지를 안 미국 지휘부는 조직을 개발시키고 공식작전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미8군은 망명자 집

26) Richard M. Gibson, *The Secret Army: Chiang Kai-Shek and the Drug Warlords of the Golden Triangle* (Singapore: John Wiley, 2011), pp. 69, 71.

27) Ibid., Gibson, pp. 78, 90-91.

28) Alfred McCoy, *The Politics of Heroin: CIA Complicity in the Global Drug Trade* (Chicago: Lawrence Hill Press, 2003), pp. 172-173; ibid., Gibson, pp. 90-91, 108-109.

29) Michael Haas, *In the Devil's Shadow: UN Special Operations during the Korean War*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0), pp. 32, 44; Frederick W. Cleaver, George Fitzpatrick, John Ponturo, William Rossiter, C. Darwin Stolzenbah,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Johns Hopkins University, Operations Research Office, June 1956, pp. 29.

단의 통제를 CIA보다는 군대가 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후에 그들은 명확한 작전상의 역할보다는 G2 정보국(G-2 Intelligence Section)에 배속되었다. 전쟁 초기 단계에서, 미8군은 1951년 UN의 38선 북쪽에 대한 공격을 예상하면서 실행을 위해 약 7천명의 게릴라를 이용할 것을 구상했다. 그들의 이용에 대한 전례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유럽과 필리핀에서의 경험이었다. 38선 이북으로 움직이기 위한 계획은 1951년 여름에 축소되었으며, 미국은 해상기습 - 특히 서부해안 중심 - 으로 전환했다. 이와 같은 작전의 의도는 전방에서 후방으로 적의 군대를 이동시키는데 있었다.

게릴라들의 대한 미국의 관심은 38선 이북으로의 갱신된 공세의 고려사항으로 계속 오갔다. 1952년 가을, 주요 공세 행동을 위한 계획에 착수한 마크 클락(Mark Clack) 장군은 1953년 3월에 게릴라들의 병력을 1만에서 2만으로, 1953년 7월에는 4만으로 하는 게릴라 프로그램의 급속한 확장을 지시했다.³⁰⁾ 1953년 1월, 클락 장군은 여름에 38선 이북으로의 진군이 포함될 수 있는 계획을 개발해줄 것을 미국의 조언자들에게 요청했다. 계획이 형태를 갖추게 되자, 클락 장군은 미국의 조언들에게 동부해안에서 두만강까지의 지역을 포함하도록 작전지역을 확장하는 것을 인가했다. 이들 계획들은 평양-원산 라인을 향하고, 이를 넘어서는 미국의 합동공세작전에 대한 보조군으로서 게릴라에 대해 재고려하는 것이 되었다.³¹⁾

이후 클락 장군이 계획한 공세는 결코 실행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양쪽 해안에서 이행된 급습작전들에 기초한 게릴라 작전들을 지원했다. 게릴라들은 69,000명의 사상자와 중요한 물질적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지만, 미국은 이들의 주장이 3배에서 10배 더 높다고 생각했다.³²⁾ 이들의 작전은 적을 전선에서 분리시키는 데는 부분적으로 성공했으나, 예상된 만큼은 아니었다. 미국의 계획자들은 15만 명 이상의 군대를 분리시키는 것을 원했지만, 전후 분석가들은 실질적으로 2만에서 5만 사이의 군대가 분리되었다고 평가한다.³³⁾ 분석가들이 지적한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나 중국의 인력에 있어서 적군의 수가 큰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의 주요 공세의 부재에서, 더 큰 군대가 왔더라도 한국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전쟁 노력을 약화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³⁴⁾ 게릴라 작전들은 미국의 인력

30) Ibid., Cleaver, pp. 62.

31) "Operation Plan: Partisan Operations (K), Phase IIA," HQ, FEC, May 10, 1953 as cited in Cleaver, pp. 162-164.

32) Ibid., Cleaver, pp. 4, 183-185.

33) Ibid., Cleaver, pp. 17, 19, 132, 186, 191.

34) Ibid., Cleaver, pp. 19.

이나 재정적 조건들에 극도로 큰 부담을 주지는 않았지만(게릴라 1,000명 당 고문관 5명), 전후의 분석가들은 게릴라군이 기존의 한국군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³⁵⁾

돌이켜보면, 북한에서의 게릴라 작전과 전체적인 미국의 전략은 단지 느슨하게 연관되었다. 산발적인 해상공격을 통해 피해를 입히겠다는 전략은 미군과 중공군 사이의 교착상태에 주요한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았다. 이 전략의 추구는 향후 다른 미국의 공세에서 동일한 군대에 대한 유용성을 악화시켰다. 미국에게 돌파구를 만들어줄 성공적인 습격과 전환은 적에게 해안지역의 방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게릴라 군은 1951년 여름, 미국의 공세를 실행하거나, 1952년과 53년 동안의 향후 작전을 위한 전력을 보존하는데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대리전에 대한 어려움

한국에서 미국의 전쟁에 대한 일부로 반공산주의 반란을 지원한다는 생각은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엄청난 매력을 가졌지만, 이 환상에 대한 실현은 그들이 비라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고 일관성도 적었다. 반란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대규모 전쟁의 도구로서의 반란의 성공에 대한 네 가지의 주요한 장애물들을 드러냈다.

첫 번째 장애물은 타이밍이다. 모든 후보지 전체에 걸쳐, 공산주의자에 대한 성공적인 반란의 가능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감소했다. 국공내전 후기와 한국에서의 전쟁 활동을 하는 동안, 불완전한 공산주의자들의 통제가 대규모의 반란활동의 실현가능성을 만들었다. 중공과 북한 정권이 그들의 내부 정보망, 간부단, 의용군을 결속하기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국내 진압에 대한 핵심적인 기능을 실행할 수 있었다. 신장, 티벳, 운남, 그리고 북한에서, 반란을 위한 절호의 기회는 미국의 조언자들이 군대를 지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끝났다.

성공적인 지원은 또한 대응과정이었다. 대리 집단들과 그들의 지원자들은 동시에 협력하기를 원했다. 많은 사례에서, 대리자들의 잠재적인 이해관계는 그들이 다른 선택들을 다 써버리기까지는 드러나지 않으며, 대리자들의 능력이 급속히 떨어질 때, 미국의 관심은 증가했다. 결과는 최후의 수단과 그에 걸맞는 비관적인 결과의 결합이었다. 마지막으로, 반공산주의 반란에 큰 영향을 미치려면, 반란이 어느 정도 타이밍을 맞춰야 한다. 중공 주변에 개별적인 저항운동을 확대시키고

35) Ibid., Cleaver, pp. 18, 115.

진행시키는 노력은 조직화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의 처질이 말한 것처럼, 미국이 한 대륙을 전장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 것은 결코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지리는 반란의 성공에 대한 또 다른 어마어마한 장애를 제공했다. 미국은 티벳과 신장과 같은 먼 지역의 저항운동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놀랄 것 없이, 한국과 중국 남부해안에서의 미국의 은밀한 행동들은 상당히 쉬웠다. 중국의 가장자리의 정치적 지형은 훨씬 어려웠다. 성공적인 반란들은 대개 이웃국가들의 무언의 지원과 피난처가 요구되었다. 티벳, 신장 그리고 버마에서 이웃국가들의 의지의 부재는 최선의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대리전은 거의 언제나 대리자와 후원자 사이의 이해관계 차이를 드러낸다. 한국에서 망명 게릴라들은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길 원했다. 주요 공세 작전들을 중단시킨 미국의 결정은 해방운동의 일부라고 희망했던 이들의 사기를 필연적으로 침체시켰다. 신장과 티벳의 엘리트들은 잠재적으로 변덕스러운 미국의 후원을 대신하여 중공과의 협상을 선호했다. 버마에서는 운남의 재점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미와 그의 조력자들은 버마와 그의 미국 동맹들을 포기함으로써 이득을 얻기를 원했다.

이러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 미국이 한국에서의 전쟁에 영향을 주려는 수단으로서 반란에 대한 후원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 기회들은 공산주의 통제가 가장 약했던 대립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유용했다. 미국이 확전을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할 때, 이러한 노력들은 산발적이며, 조직적이지 않고 제한적이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서의 결정을 강요하기 위한 중국에 대한 충분한 저항을 고무시키는 합리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 없었다.

수륙양용작전의 위협

전쟁 후기 단계에 미국의 계획자들이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가 강습상륙(amphibious assault)이었다. 1950년 인천상륙에서 보였듯이, 적의 전선 뒤로 수많은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은 최고사령부에게 공산주의자들의 전선을 요동치게 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제공했다.

인천상륙 이후에 처음으로 고려한 공세는 1951년 봄에 미8군 지휘관인 제임스 반 플리트(James Van Fleet)중장이 부임함으로써 이루어진 수륙양용전략이었다.

1951년 4월 21일 반 플리트는 유엔 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 지휘관으로 새로 임명된 리지웨이(Ridgway) 장군에게 중공의 제5차 공세에 대항하는 UN군의 반격을 위해 한국 동해안의 원산 근처에 대한 상륙작전을 제안했다.³⁶⁾ 리지웨이는 이 제안을 즉시 묵살하지만, 반 플리트는 5월 28일에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그의 새로운 제안서에서, 원산 남쪽에 있는 통천에 상륙하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동해안의 후퇴하는 중공군을 포위하고 섬멸하는 것이 가능하며, UN군의 반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했다.³⁷⁾ 반 플리트는 원산으로 진격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성공한다면 통천 계획은 한국의 좁은 허리로 UN군의 전반적인 진군에 확실히 기여했을 것이다.

리지웨이는 반플리트의 통천 계획을 듣고 그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직접 날아왔다. 상륙에 대한 반 플리트의 사례를 듣고 리지웨이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1951년 5월 31일자 기록에 의하면, 그는 통천계획의 작전 수준을 매우 위험하고 “적은 보상”일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략적 수준에서 그의 전반적인 방향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또한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 JCS)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모든 적을 몰아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임무는 적에게 최대한의 사상자를 가하고, 최소한의 아군 사상자를 내고 “8군이 방어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38선 근처의 캔사스/와이오밍(Kansas/Wyoming) 확대 군사활동선(phase line)처럼.³⁸⁾

리지웨이의 묵살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거나 JCS에게 제안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했다는 것이다. 리지웨이가 반 플리트가 통천 계획을 논의한 그 주에, JCS는 맥아더의 교체에 대한 의회에서의 증언 속에 휘말려 있었다. 청문회에서 참모집단들의 종합적인 입장은 전쟁을 확대시키려는 맥아더의 주장은 무책임한 것이었으며, 행정부의 확전에 대한 제재는 신중했다. 인천 상륙작전 방식을 추구하는 작전을 제안하는 것은 참모들과 행정부를 불편했을 것이고, 리지웨이는 상부의 비판에 시달릴 것이다. 이들의 압력에 직면하여, 리지웨이는 JCS에게 통천 작전에 대해 전달하지 않고 이 제안을 거절했다.³⁹⁾

36)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pp. 819-820.

37) Radio message, GX-5-5099 KGOP, CG 8th Army to CINCFE, 28 May 1951.

38) “Conference between General Ridgway and General Van Fleet,” Memorandum for Record, May 31, 1951, Military History Institute (Carlisle Barracks), Ridgway Papers, Box 21.

39) For a more complete discussion of the Tongchon controversy, see Colin Jackson, “Lost Chance or Lost Horizon: Strategic Opportunity and Escalation Risk in the

통천 작전의 제안은 전쟁의 움직임을 끝내는데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상륙계획에 대한 원형을 제공했다. 통천작전에 대한 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리지웨이는 이미 1951년 6월 26일에 38선 부근에서 전진하여 평양-원산 라인에 다다르는 ‘제압작전계획’(Operation Overwhelming)을 준비하는 것을 그의 본부에 지시함으로써 반 플리트의 제안을 재검토했다. 제압작전계획은 통천과 원산에 강습상륙 후, 위스콘신(Wisconsin) 전선을 향해 전진하여 반도의 좁은 목(대략 평양-원산 라인의 15-20마일 북쪽)까지 전진한다는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⁴⁰⁾ 통천/원산 계획에서 변형된 계획에 대한 매력은 더욱 짧은 전선(100마일, 이후의 DMZ가 150마일)에 대한 유지와 점령, 이상적으로는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앞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정전협정의 시작되고 쉽게 방어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전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리지웨이는 제압작전계획을 보류시켰지만, 통천/원산 상륙작전과 동·서부에서의 전진에 대한 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은 극동사령부와 미8군의 보조적인 작전(수륙양용작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⁴¹⁾

정전협정의 시작과 1951년 여름에 주요 공세작전을 중단한 미국의 결정은 한국에서의 작전 수행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중공군은 재결합하고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제공받았고, 이는 2년 동안 지속되었다. 전쟁 이후 중국의 상세한 설명에 따르면, 미국의 화력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답은 야전축조(field fortification)였다. 1951년 여름과 1952년 가을 사이에, 중공은 흙으로 된 피난처와 방위거점, 참호선, 콘크리트로 된 지역의 세 가지 방법으로 요새화를 건설했다. 종합적으로 이들 전선은 20~30킬로미터 범위에 미국의 정면돌격, 공중공격, 포격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미군이 이것을 밀어붙이려 할 때, 중공군은 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⁴²⁾

중공과 북한은 엄청난 수의 인원과 물자를 반도에 밀어넣었다. 1951년 5월 중공

Korean War, April-July 1951,”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3, No. 2, pp. 255-289, April 2010.

40) Based on the operational sketch, phase line Wisconsin, the proposed limit of advance for Operation Overwhelming, stretched from Munchon, north of Wonsan, in the east to Sangil-li, near Sukchon, in the west. (Source: “Operational Concept: Operation Plan Overwhelming - June 1951,” Joint Special Plans and Operations Group (JSPOG), undated, Military History Institute (Carlisle Barracks, Ridgway Papers, Box 128.

41) Walter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66), pp. 80-81.

42) General (Ret.) Yang Dezhi, “Command Experience in China” in Xiaobing Li, Allen Millett, Bin Yu, *Mao’s Generals Remember Korea*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1), pp. 163-164.

의 제5차 공세 이후 그들은 대략 50만의 군대가 한국에 있었고, 1년 뒤에는 91만(중공군 63만, 북한군 28만), 전쟁이 끝났을 때는 백 만을 넘었다.⁴³⁾ 이 공산주의자 군대는 전쟁기간 동안 UN보다 수적으로 우세했다. 지상군의 균형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UN군의 정면 공격에 점점 더 적게 시도되었고, 중공에게 제한적인 전진공격을 허용하게 했다. 이러한 소모전에서 미국의 화력능력을 감소시킨 공산주의자들의 인력의 이점은 공세작전에 대한 미국의 재개를 매우 효과적으로 제지했다.

전쟁 후기에 중공의 군대는 더욱 많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소련은 많은 숫자의 대포를 그들의 동맹인 중공으로 이동시키고, 1951년 7월, 매일 8,000회에서 1952년 4월 43,000회 이상의 대포 발사 횟수를 가지는 능력을 주었다.⁴⁴⁾ 소련장비의 전달, 훈련, 그리고 은밀한 참여는 전쟁의 마지막 2년 동안 중공에게 어마어마한 공군력의 건설을 도와주었다. 1953년 중공은 1,460대 이상의 항공기가 만주에 배치되었고, 900대의 예비 기체를 본토에 배치시켰다. 미국은 제 공권에서 질적인 우위를 유지했지만, 공산주의자 공군의 규모의 성장은 한국에 있는 미군 비행장에 대해 위협적이었다.⁴⁵⁾

변화된 환경에 직면하여, 미국은 1951년 여름과 정전 사이에 세운 긴급 계획은 세 가지 넓은 범주로 나뉘었다. 첫째는 적군지역의 점령, UN군 전선을 강화, 적의 병참을 방해하기 위한 제한적인 공격을 포함한다. 아파치 작전(Operation Apache, 1951년 9월), 곤봉 작전(Cudge, 1951년 9월), 갈퀴 작전(Hay Rake, 1951년 10월), 강압 작전(Big Stick, 1952년 2월)은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간다. 두 번째 범주는 1951년 여름의 통천/원산 계획에 대한 변형들이다. 이러한 모든 계획들 - 탈론 작전(Operation Talons, 1951년 8월), 카우보이 작전(Wrangler, 1951년 10월), 곰 덫 작전(Bear Trap, 1952년 2월), 붉은피부 작전(Red Skin, 1952년 2월) - 은 적의 주요 부분들을 포위하며 중공의 방어를 요동치게 만들 수단으로서 원산 근처에 상륙하는 것을 감안했다.⁴⁶⁾ 반 플리트의 원래의 통천계획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계획은 좁은 길목(평양-원산)으로의 전진을 명쾌하게 포함하지 않았다. 세 번째 범주는 충분한, 다수의 사단들을 좁은 길목을 보강하기 위해 전진시키며, 전반적인 전진에 대한

43) *The Korean War*, Vol. 3, (Lincoln, Nebraska: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1), pp. 396; *ibid.*, Hermes, pp. 199-200, 284.

44) *Ibid.*, *The Korean War*, Volume 3, pp. 396.

45) James F. Schnabel, Robert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ume III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8), pp. 202.

46) The operational concepts and graphics for these operations are drawn from The Matthew Ridgway Papers, Box 128, United States Army History and Education Center, Carlisle Barracks.

수단으로서 상륙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들 계획들은 클라크(Clark) 장군의 작전 계획(OPLAN 8-52)으로 제압작전계획에 뒤늦게 포함되었다. 중공은 전쟁의 후기 단계에서 그들의 위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국의 강습상륙을 고려했다는 것은 현재 구할 수 있는 기록들로부터 명백히 알 수 있다. 1951년 여름부터 정전 협정의 마지막 단계까지 내내, 중공의 군사-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통신에서 한쪽해안 혹은 양쪽 해안에 미국의 상륙에 대한 위협을 반복해서 강조했다.⁴⁷⁾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스탈린은 아이젠하워의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가장 큰 위협은 핵 위협이 아니라 강습상륙이었다.⁴⁸⁾

미국의 상륙작전이 위협적인 것은 전쟁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UN의 해상지배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단지 UN군이 상륙할 때 대응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분야에서는 미국이 독보적인 존재였다. 상륙에 대한 이와 같은 위협은 공산주의자들이 38선에 접촉하는 150마일의 전선에 더하여 800마일이 넘는 해안을 방어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강습상륙은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중공군에게 미국에게 유리한 유동적인 전투를 강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근접항공지원, 차단, 포병, 그리고 기갑의 이점들은 중공군에게 더 많은 피해를 끼칠 것이다.

이러한 1951년에서 1953년 사이의 상황에서 미국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들은 무엇인가? 한편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상륙지점에 대한 준비를 위한 시간을 갖더라도, 상륙작전들은 중공군의 요새지역을 폭격하는 것보다는 더욱 유리하고 피해도 적었을 것이다. 상륙작전과 육상작전의 결합은 한국에서의 UN군의 진격에 대한 제한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항공, 핵, 경제, 그리고 다른 수단들은 피해를 증가시킬 수도 있었지만, 반도의 군사적 지형을 바꿀 수는 없었다.

47) 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s 6-7, (Winter 1995/1996), Doc. 71, "14 June 1951, handwritten letter from Gao Gang and Kim Il Sung to Stalin with 13 June 1951 handwritten letter from Mao Zedong to Gao Gang and Kim Il Sung," Doc. 79, "30 June 1951, ciphered telegram, Ma Zedong to Filippov (Stalin)," pp. 54, 58, 63; Bin Yu, "What China Learned from Its 'Forgotten War' in Korea" in Xiaobing Li, Allen Millett, Bin Yu, *Mao's Generals Remember Korea*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1), pp. 22; General (Ret.) Hong Xuezh, "The CVPF's Combat and Logistics" in *ibid.*, Li, Millett, Yu, pp. 137; General (Ret.) Yang Dezhi, "Command Experience in Korea" in *ibid.*, Li, Millett, Yu, pp. 163, 166; Shu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pp. 226.

48) Chen Jian, *Mao's China and the Cold War*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pp. 114; *ibid.*, Shu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pp. 233-238.

그런데도 1951년 여름 이후의 다른 상당한 규모의 수륙양용작전들은 상당한 지원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다. OPLAN 8-52라는 전반적인 공세에 대한 클라크 장군의 계획은 미군이나 UN군 3개 사단, 2개의 한국군 사단, 2개의 국민당군 사단에 더하여 12개의 포병대대와 20개의 방공대대를 추가적으로 필요로 했다.⁴⁹⁾ 그러나 많은 미국의 현장 지휘자들은 전장에서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것을 원했으며, 휴전천막에서 이와 같은 요구들은 많은 민간 정책입안자들에 대한 방해로 이어진다. 1952년 10월에 OPLAN 8-52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육군장관 프랭크 페이스(Frank Pace)는 “한국에서의 결정을 강제하기 위한 UN 지상군의 대규모 이용을 포함하는 행동방침은 추가적인 UN군, 예산 요구사항들, 우리의 기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유용성과 비교했을 때,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1954년 이전에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는 가능성은 그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⁵⁰⁾ 강렬한 한국 주변부와 냉정한 중부유럽 전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트루먼 행정부 말기의 군사·민간 정책결정의 핵심을 이루었다.

공군력

지상공세에 착수하는 것을 주저하는 미국 정책입안자들에게 공군력은 UN군의 전쟁의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전쟁의 마지막 2년 간, 미국의 공군작전들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목표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공군력은 특히 정치적으로 유리한 기회들과 작전의 위험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려는 고위 군사·민간 지도자들에게 매혹적이었다.

이러한 모든 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쟁 종료에 관한 항공전의 정치적 영향은 애매모호했다. 북한의 산업, 운송망, 그리고 도시 중심부에 대한 미국 공군력의 엄청난 영향은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비록 이 피해는 북한과 중공의 민간·군사지도자들에게 큰 고민거리였으나, 1953년 후반까지 교착상태를 종료시키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다. 작전상의 효과와 정치적 결과 사이의 차이는 확연했고, 한국에서의 미국의 승리이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논쟁을 유발시켰다.

근접항공지원

49) Ibid., Schnabel, Watson, pp. 192.

50) Ibid., Schnabel, Watson, pp. 193.

공군 지도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지상군을 위한 근접항공지원은 전쟁 시작 1년 동안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북한의 침공에 뒤이은 미국 공군의 개입은 부산으로의 동맹 지원군을 위한 시간을 벌었고, 북한의 접근을 지연시켰다.⁵¹⁾ 비록 공군력은 초기 중공군의 공세를 둔화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1951년 봄이 되면서 공군과 지상군 지휘관들의 증가된 협력은 기동성 있는 작전들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의 효율을 향상시켰다.⁵²⁾

중공의 제5차 공세는 중공군의 약점과 미국의 근접항공지원의 위력을 드러냈다. 공지협동의 향상과 미국 포병과 공중자산들의 증가는 미국 지휘관들에게 처음에는 서쪽에서, 그리고 동쪽에서 적군을 격파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레이다로 유도 받은 중공군의 집결지에 대한 B-29의 야간폭격은 적군의 전진을 계속하려는 시도를 방해하거나 망쳤다. UN군이 공세로 전환했을 때, 근접항공지원은 미국의 주력공격 방법이 되었다. 비록 작전활동에서 근접지원에 의한 사상자 수를 적절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관찰자들은 중공군에게 가해진 공중화력의 전례 없는 영향을 강조한다.⁵³⁾ 최소한 기동전에서, 포병과 근접항공지원에 대한 미국의 이점들은 중공군의 수적우세와 전술적 적응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켰다.⁵⁴⁾

1951년 후반, 양군 사이의 기동·지상전이 교착상태로 빠지면서 근접항공지원의 효과는 크게 감소되었다. 중공의 야전요새들과 대공포의 발전은 근접지원의 이점을 감소시키고 미국의 피해와 위험을 증가하게 만들었다. 이 기간의 기술을 고려할 때, 중공군은 미 공군의 폭격을 피해 더 깊게 팔 수 있었다. 중공군이 미국의 상륙작전을 격파하기 위해 그들의 요새를 떠나지 않는 한, 미국의 근접항공지원의 능력은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⁵⁵⁾

차단행동

미국의 지상군 지휘자들은 근접지원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지만, 공군은 공산주의자들의 보급을 위한 차단행동에 자신들의 화력을 사용하고자 했다.

51) William T. Y'Blood, *The U.S. Air Force in Korea, Down in the Weeds: Close Air Support in Korea* (Washington, D.C.: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2002), pp. 18.

52) J. Lawton Collins, *War in Peacetime: The History and Lessons of Korea* (Boston: Houghton-Mifflin, 1969), pp. 113.

53) Ibid., Y'Blood, pp. 32-33.

54) Robert Frank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6), pp. 364-369.

55) Ibid., Futrell, pp. 461.

공군 지도자들은 한국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철도와 도로 보급 노선에 대한 반복된 공격을 통해 공산세력의 보급을 방해하여 공세작전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원했다. 북한의 운송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된 공격의 결과들은 인상적이었다. 미국의 평가에 따르면 87,552회의 차단 출격으로 19,000회의 철도 전달 피해, “32,211대의 차량과 276대의 기관차, 3,820대의 철도차량”을 파괴했다.⁵⁶⁾ 중국의 기록에서는 이러한 공격이 중공군 자신의 보급을 지속하고 작전수행을 지원하는 자신들의 능력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1951년 5월 이후, 공산주의자의 공세작전들은 중공의 공격에 대항하는 미 공군의 차단과 근접항공지원에 대한 성공의 증거였다.

근접항공지원에 대한 사례에서 봤듯이, 기동전에서 고정전으로의 변화는 미국의 차단의 효과를 극적으로 감소시켰다. 우선, 중공군에게 차단작전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웠다. 중공군의 더 가벼운 구조와 더 적은 병참상의 요구들은 전쟁 첫해의 북한군보다 재보급에 관해 덜 의지하게 만들었다. 중공군이 자리를 잡았을 때, 그들의 보급 요구치는 훨씬 떨어졌으며, 차단 시도는 더욱 힘들어졌다. 방어에 관련된 부대들은 물자흐름에 대한 일시적 중단을 상쇄시키기 위해 물자를 비축할 수 있었다. 결국, 더 적은 보급 요구치, 비축, 그리고 수동 수리는 공산주의자들이 고정적인 환경에서 존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차단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투자는 이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⁵⁷⁾

전략 공격과 “공중압박(air pressure)”

근접항공지원과 차단에 대한 감소하는 유용성은 공군에게 한국에서의 공군력에 대한 전반적인 실행을 재평가하도록 했다. 1952년 3월, 자콥 스마트(Jacob Smart) 장군은 기존의 전략을 평가하고 공군력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 이론을 두 고위급 장교에게 제시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로 초래된 “공중압박”전략은 차단에서 공중우세로의 초점을 다시 두게 하고 적의 자산에 대한 선별적인 파괴를 했다. 이 이론은 명확하게 피해를 부담시키는 소모전 중 하나였다. 스마트의 계획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공중공격은 최대한의 선별적 파괴를 가하는 것이며, 적의 장비, 물자, 인력 면에서 가능한 한 많은 피해를 입도록 하는 것이다.⁵⁸⁾ 실제로 이 새로운 전략은 가치있는 자산들을 포

56) Ibid., Futrell, pp. 471.

57) Conrad Crane, *American Airpower Strategy in Korea, 1950-1953* (Lawrence: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0), pp. 112; *ibid.*, Futrell, pp. 478.

적화하고 확인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다. 가치있는 전략적 타겟이 없었으므로 적의 군대와 물자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공중압박전략의 첫 번째 적용은 압록강 주변의 수력발전시설에 대한 공격이었다. 정전협정이 지연됨과 함께, 클라크 장군과 그의 공군지휘관 웨이랜드(Wayland)은 발전시설에 대한 집중된 공격을 위한 허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1952년 7월 23일에서 24일에 미국은 북한의 발전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했다. 북한은 90%이상의 발전력을 잃었고, 2주 동안의 정전에 처하게 되었다. 공격은 만주에 있는 중공의 산업시설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무수한 공장을 기동을 중단 시켰으며, 공산주의자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대한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들이도록 강요했다.⁵⁹⁾

물질적인 영향은 명확했지만, 정치적인 결과는 명확하지 않았다. 첫째, 이 커다란 충격은 정전 교착상태에 대한 빠른 해결을 가져오지 못했다. 둘째, 영국과 다른 동맹국들은 이와 같은 공격이 의도치 않은 확대에 대한 기폭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충격과 경악을 보였다. 미국의 민간·군사 지도자들은 그들의 적들에게 압력을 증가시키고 피해를 가하기 위해 분투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대담한 움직임이 연합군의 협조를 깨뜨릴 수 있음을 발견했다.⁶⁰⁾ 미국은 우방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1952년 7월 11일, 평양을 공격하기 위한 압력펌프작전(Operation Pressure Pump)에 대한 반발을 무마할 수 있었다. 발전시설에 대한 이전의 공격들과 마찬가지로 1,254회의 출격을 수반한 집중된 미국의 공격은 큰 저항을 받지 않았고, 설비에 대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북한은 7천명의 사상자와 1,500개의 건물이 파괴되었다고 알렸다.⁶¹⁾

미국의 계획자들은 공중압박전략에 대해 집착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의 가치있는 자산에 대한 선택적인 파괴는 적의 정전회담에서의 적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미국이 북한의 운송망과 산업, 도시지역을 계속해서 파괴하면서, 새로운 목표에 대한 탐색에 더욱 어려워졌다. 1952년 8월 28일을 서신에서, 정보를 위한 극동 공군 정보담당 부지휘관인 반필(Banfill) 준장은 “제5공군과 폭격사령부의 초기활동에서 적의 발전시설의 파괴는 한국의 전략적이고 가치가 있는 목표를 제거한 것이다.”라고 인정했다.⁶²⁾ 한 달 후, 압록강의 남산리 화학공장에 대한 성공적인 파괴는 ”한국에 마지막으로 남은 미미한 전략적 유형의 목표“를 제거한

58) Ibid., Futrell, pp. 479.

59) Ibid., Futrell, pp. 487-489.

60) Ibid., Hermes, pp. 321-323.

61) Ibid., Crane, pp. 122-123; ibid., Futrell, pp. 517.

62) Ibid., Futrell, pp. 501.

것이다.⁶³⁾

전쟁 후기의 공군활동에 대한 전술적인 성공과 분명한 정치적 무력함은 수단의 유용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으로, 러시아의 기록보관소 자료들과 출판된 중국의 역사서들은 미국의 공군력이 공산주의자 연합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확인했다. 1951년 8월 11일, 마오쩌둥이 보낸 서신에서 고위 공산주의 측 협상가들은 전쟁의 빠른 종결을 제안하면서 중국과 북한에 입힌 피해를 주장했다. “부족한 자료에 기초하여, 전반적인 세계정세, 우리국가의 요구, 그리고 북한이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연구한 결과, 38선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면서 회담을 결렬시키기보다는 현재 전선에서의 군사작전의 중단을 고려해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⁶⁴⁾ 마오쩌둥은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그는 1951년 11월 14일에 기입된 스탈린에게로의 전보에서 중국이 입었던 전쟁의 피해를 강조했다.

미 제국에 대항하여 분투한 올해에 한국에 대한 원조를 해주고, 중공정부의 예산은 1950년과 비교하여 60% 증가했다. 총 예산의 32%는 한국 현지의 군사작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었다.(소련정부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군사 용자금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절약하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은 더욱더 증가해서 재정에 영향을 주어 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며, 전쟁수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후방에서의 복구가 어려울 것이다.⁶⁵⁾

1952년 2월에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식량 원조에 대한 북한의 요구는 미국의 공중작전이 근본적인 경제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아상태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⁶⁶⁾

만약 미국의 공군력이 매우 파괴적이고,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손익계산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왜 협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가? 가장 단순한 설명은 중공과 북한이 입은 피해가 공산주의 동맹의 주요 정책입안자(스탈린)에게

63) Ibid., Futrell, pp. 528.

64) 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s 6-7, (Winter 1995/1996), Doc. 87, "13 August 1951, ciphered telgram,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conveying 12 August 1951 telegram from Li Kenong to Mao re armistice talks," pp. 64-65.

65) Ibid.,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Doc. 93, "14 November 1951, ciphered telegram,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pp. 70.

66) Ibid.,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Doc. 102, "8 February 1952, ciphered telegram,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conveying 22 January 1952 telegram from PengDehuai to Mao and 4 February 1952 reply from Mao to PengDehuai," pp. 77-78.

영향을 미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김일성, 더 나아가 마오쩌둥조차 정전조건을 받아들여줄 수 있는 있었겠지만, 스탈린이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한, 이러한 효과는 의미가 없었다. 둘째, 공중작전의 정치적 영향은 대개 눈에 띄지 않았거나 떨 수 없었다. 하나 그 이상의 적군이 재원을 고갈시킴으로써 한국에서 떠나도록 하는 작전은 엄청난 정치적 정보를 요구했다.⁶⁷⁾ 상대방 연합에 대한 이해에 관련된 정보를 모으고 조합하는 것은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의 군사·정보 당국에게 엄청난 어려움이였다.

미국이 공산주의 지도자들에 대한 계산을 변화하고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는 양보를 얻어내기에는 부족했다. 미국이 평양을 공격한 이후 김일성은 정전협정에 대한 신속한 종결을 스탈린에게 요청했으며, “...적은 어떠한 손실없이 우리에게 막대한 인력과 물질적 가치의 손실을 지속적으로 입히고 있다.”라고 전했다.⁶⁸⁾ 마오쩌둥은 중공의 약점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여 김일성의 제안을 즉시 거절했다.

적의 제안에 대한 관련해서, 그것은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우선, 폭격의 영향 하에서 적으로부터의 도발적이며 부당한 제안을 수락하는 것은 우리를 정치적, 군사적 관계에서의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 것이다. 적은 이 이상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우리들의 약점을 틀림없이 이용할 것이며, 적에게서부터 새로운 도발로 연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여 적의 압박에 흡사당할 경우, 우리는 아마 고통받을 것이며, 심지어 커다란 실패를 겪을 것이고,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점들을 잃게 될 것이다. 이는 전체적인 게임에서 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한 방책이다.⁶⁹⁾

아이러니컬하게도, 평양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은 김일성의 종전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시켰지만, 마오쩌둥에게는 역효과였다. 마오쩌둥은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서 양보에 저항하는 것을 더욱 결심했다. 스탈린은 소련에 대한 피해와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한, 북한과 중공에 대한 피해를 증대하는 것을 납득할 의향이 있었다.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전쟁 마지막 해에 공군력은 미국의 무기 중에서 우

67) Ibid., Futrell, pp. 504.

68) Ibid.,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Doc. 106, “16 July 1952, ciphered telegram, Kim Il Sung to Stalin via Razuvaev,” pp. 80-81.

69) Ibid.,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Doc. 108, “18 July 1952, ciphered telegram,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conveying 15 July 1952 telegram from Mao to Kim Il Sung and 16 July 1952 reply from Kim to Mao,” pp. 82.

선적인 방법이 되었다. 지상전투, 상륙공격, 봉쇄나 반란과 비교할 때, 공중수단은 가격이 낮았고 가시적인 효과가 컸다. 공중수단은 위험과 보상을 저울질하는 것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상적인 도구였다. 프란시스 베이컨 경(Sir Francis Bacon)의 말에 따르면, 공중을 지배하는 자가 거대한 자유를 가지며, 전쟁에 자신의 의지를 투사할 것이다. 힘에 대한 적용을 통제하는 능력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은 전면전의 위험에 대항하여 한국에서의 전쟁에서 필요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보는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쟁의 마지막 2년 동안에 공중전과 관련한 기회들을 잃어버린 것인가? 고위 군사 지도자들은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서 지형상의 제약을 이유로 든다. 만주와 중국 본토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공군기지들은 미국의 공중 공격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이었다. 심지어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 공군은 병참상의 지역들을 만주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공격할 수 없었다. 지상군과 공군 지휘관들은 이들 제약들과 그것에 수반되는 보호구역은 공중공격에 대한 효과를 치명적으로 제한했다고 타당하게 주장했다.

전쟁의 마지막 해에 초래되었던 공중작전활동에 대한 지리적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만주에 있는 중공의 철도망이나 산업공장들의 파괴는 중공의 관점에서 전쟁의 피해를 확실히 증가시킬 것이다. 북한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이러한 목표들이 반도에서의 줄어드는 목표들을 공격하는 것 보다 중국의 목표를 공격하는 것이 더 높은 이익률을 제공해주는 것임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소련에 대한 중공의 의존은 확대된 경제전쟁의 잠재적인 영향을 제한했다. 중공이 그들의 군사물품을 수입하는 한, 또 미국이 소련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꺼리는 한, 이는 대리인을 경유하여 한국에서의 군사작전을 지속시키기 위한 소련의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중공의 경제를 불구로 만들 수 있었다. 확대된 공중작전활동은 중·소 분쟁을 촉발시키는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마오쩌둥의 논리는 소련이나 미국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보다 미국의 공중작전을 견뎌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공산주의 연합에 대한 제한전의 수행

전쟁 후기의 전략에 대한 검토가 드러났듯이, 미국은 한국에서 그들의 상대인 공산주의 연합에게 거대한 피해를 가하기를 원했고, 가할 수 있었다. 미국은 중공

과의 소모전으로 많은 사상자를 냈지만, 이는 미국이 소유한 힘(특히 공중지배)을 통해 적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것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군사적 업적들을 정치적 목표로 전환하지 못한 것이었다.

협상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지도자들은 판문점에서의 정치적 교착상태가 불충분한 군사적 압박의 결과라고 여겼다. 미국의 전쟁 후기 전략은 군사적 압력을 증폭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생각으로는 미국의 확전이 공산주의자들이 항복하면서 얻는 이득보다 저항할 때 생기는 피해가 더 크도록 함으로써 정전조건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암암리에 이들의 이론들은 공산주의 연합을 단일한 군대로 취급했다. 중공과 북한에 입히는 피해가 소련에 소련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추정 하에서 중공과 북한의 상위 파트너인 소련을 공격하지 못하거나 공격을 꺼리는 것을 납득할 수 있다. 대리전을 치르는 중공의 비용이 소련에게 넘어가면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에서 결국 무승부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전쟁 후 기록으로부터 드러난 것은 상당히 달랐다. 피해 부담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처음에는 북한을, 후에는 중공을 설득함으로써 종전을 하기 위한 양보책들을 검토하도록 했다. 공산주의 진영의 협상자로서 유일하게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던 스탈린에게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협상이 시작할 때부터 스탈린이 죽은 1953년 3월까지, 그는 정전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선호했다. 결정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스탈린의 행동은 미국뿐만 아니라 그의 잠재적인 상대인 마오쩌둥을 결속시키는 계산과 일맥상통했다. 미국의 전쟁을 확대하지 않는 한, 전면전으로의 이른 전환을 하지 않는 한, 그의 적들과 그의 상대를 약화시키는 전쟁으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추측은 북한과 중공이 입은 피해에 대해 스탈린이 신경쓰지 않은 것과 중공이 전쟁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이상을 대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스탈린은 한 번도 가치있는 군사기술을 중공에 전해주지 않았거나 재공세를 위한 충분한 물자를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에 스탈린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선으로 그의 하위 동맹으로부터 희귀자원과 경화를 요구하기 위해 그의 영향력을 이용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필승이론의 치명적인 약점은 중개자를 공격함으로써 종전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봉쇄부터 반란, 공중공격까지 대부분의 미국의 확전에 대한 공통점은 중공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정전의 교착상태를 풀다는 생각이었다. 만약, 사실은 스탈린이 피해가 큰 교착상태를 지속하는 것을 만족했

다면, 중공에 많은 피해를 입혀도 결과가 앞당겨지지 않는 것이다.

1953년 말까지 스탈린이 살아있었다면, 그의 계산된 비타협적인 태도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기싸움으로 끝날 수 있었을 것이다. 초기 아이젠하워 행정부 정책의 규명된 특징은 확전에 대한 선택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었다. 클라크 장군의 OPAN 8-52는 트루먼 행정부 후기에는 냉랭한 반응을 보였겠지만, 합동참모본부와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클라크의 계획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갱신했다. 초기 아이젠하워의 재평가는 공산주의 연합에 관해 증가하는 압력을 위한 일련의 행동양식들을 NSC-147에서 보여준다.⁷⁰⁾ 스탈린의 죽음 이후의 사건들이 정전을 향하여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도, 1953년 5월 20일 합동참모본부는 협상을 결렬할 경우에 강경파의 행동양식을 요청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만주와 중공에 대한 공중 및 해상 폭격과 함께 반도의 좁은 길목으로의 전면공세를 지지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에서 적에 대항하는 더욱 적극적인 행동”으로 돌아가야 할 경우, 그것이 가장 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아이젠하워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확전과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전쟁의 증대를 고려한 그의 의지는 진정한 확전으로 향하는 중요한 단계를 나타낸다.⁷¹⁾ 1953년 7월의 휴전협정이 타결됨으로써 이러한 선택들이 채택되지 않았던 것이다.

7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Volume XV*, “Note by the Executive Secretary (Lay)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147, Analysis of Possible Courses of Action in Korea, April 2, 1953,” pp. 838-850.

7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Volume XV*, “Memorandum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Secretary of Defense (Wilson), Washington, 19 May 1953,” pp. pp. 1059-1060; *ibid.*, FRUS, 1952-1954,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145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Wednesday, May 20, 1953,” pp. 1064-1065.

아이젠하워와 한국 : 계속되는 논쟁거리 (Eisenhower and Korea: Still a Matter of Debate)

제임스 I. 매트레이
캘리포니아주립대

역사가들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을 종료시킨 휴전협상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임기 중에 성취한 주요한 성과라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 성공의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아이젠하워는 취임식 2달 후에 왜 공산주의 측이 자발적 전쟁포로(POWs) 본국송환에 대한 완강한 반대를 버리고 휴전협상을 10개월간 교착상태에 빠지게 막았던 마지막 분쟁을 해결했는지에 대해 자신만의 설명을 가졌다. 그의 기억 속에(1963), 그는 그가 대통령이 되자 “휴전협상과 전쟁터에서의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끝내기 위한 뚜렷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회상했다. 그의 전략은 “만족스러운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기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단호히 움직일 것이며, 전쟁을 한반도에 한정시키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공산당 정부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아이크(Ike)는 원자폭탄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무기선택을 억제하려는 세계의 어떤 신사의 합의에도 제한되지 않은 초기 결정에 대한 그의 설명은 그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아니었다. 그가 주장했듯, “인도와 포모사(Formosa)해협, 그리고 판문점 휴전협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에 대한 말을 사려깊게 중단했기 때문에” 합의를 향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국무장관 존 덜레스(John Foster Dulles)은 1954년과 1956년에 같은 주장을 했다.

휴전협상에서 유엔군 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UNC)측 첫 번째 수석 협상 대표인 미국 해군중장 터너 조이(C. Turner Joy)(1955)는 훗날 어떻게 한국 전쟁을 끝냈나에 대한 아이젠하워의 설명에 완전히 동의했다. 반면에, 맥아더(Douglas MacArthur)장군에 이어 1951년 4월에 유엔군 사령부(UNC) 지휘관이 된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1967)장군은 전쟁에 대한 그의 역사에서 적군이 원자폭탄위협이라 말하는 것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이미 평화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조이와 리지웨이는 1952년 5월 한국을 떠났지만,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JCS)장인 오마 브래들리(Omar N. Bradley)장군, 미 육군 참모총장(US Army

Chief of staff) 콜린스(J. Lawton Collins)는 휴전협정을 성공시키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 브래들리(1983)는 후에 아이젠하워와 딜레스가 만약 공산주의자들이 협상을 연장시킨다면 한국을 넘어서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인명과 물자피해를 중지하려는 중국의 바람이 중요했다고 생각했다. 콜린스(1967)는 전쟁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1953년 3월 스탈린 사후에 평화를 추구하고자 한 소비에트의 결정에 휴전협상의 공을 돌렸다. 그는 "새로운 행정부는 한국전쟁에 대해 어떠한 빠르고 쉬운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증가시킬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Mark W. Clark)(1954)는 스탈린의 죽음이 "전 세계에 대한 적군의 전략에 전반적인 변화의 신호가 되었다"고 적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을 넘어선 전쟁의 확장은 나의 정부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 주요목적은 전쟁의 확장을 막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한국전쟁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군사 역사는 휴전협상의 성취에 대한 아이젠하워의 설명이 정확하다고 받아들인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연구들이 예외 없이 마지막 9달의 갈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러더퍼드 포에츠(Rutherford M. Poats)(1954)는 전쟁에 대한 첫 번째 전체 역사에서 그것의 종료의 이유에 대한 증거 없는 이야기체의 요약을 제공하였고, 동료 저널리스트 존 딜(John Dill)(1954)은 그의 연구 중간에서 그 주제를 두 페이지에서 다뤘다. 군 역사가 로버트 렉키(Robert Leckie)(1962)는 그의 400페이지 의 책에서 단지 36페이지에서 전쟁종료의 이유에 대해 다루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 육군 페렌바흐(T.R. Fehrenbach)(1963)는 원자폭탄의 위협이 공산주의 측으로 하여금 협상을 받아들이게 했다고 믿는 다소 긴 설명을 제공한다. 영국 역사가 데이비드 리스(David Rees)(1964)는 전투행위를 자세히 다루며 55페이지에 도달했지만, 그는 휴전협상 성공에 대한 클라크의 회상을 되풀이 했다. 해리 미들턴(Harry J. Middleton)(1965)과 에드가 벨런스(Edgar O'Ballance)(1969)는 1970년대에 한국 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되기 전에, 그 주제를 결과론으로서 다루었다. 조셉 골든(Joseph C. Goulden)(1982)은 어떻게 전쟁이 끝났냐에 대한 일차자료의 풍부하지만 정확한 설명에 의지한다. 베빈 알렉산더(Bevin Alexander)(1986)와 클레이 블레어(Clay Blair)(1987), 그리고 제임스 스톡버리(James Stokesbury)(1988)는 리처드 휠란(Richard Whelan)(1990), 리처드 톨란드(John Toland)(1991), 스탠리 샌들러(Stanley Sandler)(1999), 마이클 히키(Michael Hickey)(1999)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설명을 되풀이한다. 데이비드 할버스탐(David Halberstam)(2007)은 그의 책에서 아이젠하워가

전쟁을 다룬 것에 대한 논쟁을 단 2장에 다뤘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에 대한 초기 설명들은 호의적이지 않다. 작가들은 긍정적 성취가 부족했다고 보며, 이것을 대통령의 수동적이고, 독창성 없고, 그리고 (리처드 임머만 Richard Immerman(1979)가 설명하기에 그가 백악관 잔디밭에서 연습하는 동안 덜레스가 그의 외교정책을 결정하게 만든) 잘 모르는 리더십의 탓이라고 비난했다. 그의 빠른 전쟁 종료가 이러한 전통적 해석에 모순되기 때문에 한국은 그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매리 맥콜리프(Mary S. McAuliffe)(1981)는 1960년대 후반에 어떻게 학자들이 아이젠하워를 "똑똑하고, 결단력 있고, 통찰력 있고, 그의 정부를 재치 있게 다스리는 강인한 지도자"로 묘사하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정주의자들은 그들의 해석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전쟁을 끝낸 아이크의 리더십을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로, 빈센트 드산티스(Vincent P. DeSantis)(1976), 개리 리차드(Gary W. Reichard)(1978), 그리고 앤서니 조(Anthony James Joes)(1985)는 아이젠하워 수정주의에 대한 그들의 역사적 논쟁에서 한국전쟁을 끝낸 그의 성공을 단순하게 적는다. 건터 비쇼프(Guneter Bischof)와 스티븐 엠브로스(Stephen E. Ambrose)(1995)는 로즈마리 풋(Rosemary Foot)(1990)을 수정주의자 명단에 올렸지만, 정전협상에 대한 그녀의 연구는 공산주의 측이 휴전협정을 수용하게 만든 원자폭탄의 외교적 역할을 사실상 최소화 한다. 스티븐 라베(Stephen G. Rabe)(1993)는 아이젠하워의 스타일보다 그의 정책의 결과를 평가해온 더 최근의 학자들 사이에 풋을 적절히 포함시킨다. "아이러니하게" 로버트 버크(Robert F. Burk)(2007)는 포스트-수정주의자들이 아이젠하워 시기를 "엄청난 연기(Great Postponement)"라 하는 초기 자유주의적 묘사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이젠하워 수정주의자들은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통령의 원자폭탄 사용 위협을 공공연히 보여주는 것을 피해왔는데, 그것은 그것의 영향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의혹을 품은 사람들은 1991년 이후 소비에트와 중국의 일차자료 개방으로 새로운 공격수단을 얻었다. 역사 기록들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었지만, 한국전쟁 지휘와 결과에 있어 아이크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논쟁의 영역으로 남았다. 분쟁과 아이젠하워의 전기에 대한 초기 역사들은 덜 논쟁적이다. 그것들은 공문서들과 대통령 고문들 특히 그의 참모총장 설만 아담스(Sherman Adams)(1961)와 멜로 퓨지(Merlo J. Pusey)(1956)의 회상에 근거하고 있다. 학자들은 곧 한국전쟁에 대한 미군의 역사 마지막 권에 접근하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월터 에르메스(Walter G. Hermes)(1966)는 제한적인 미국 문서들의 언급으로

마지막 2년간의 분쟁을 묘사했다. 제임스 슈나벨(James F. Schnabel)과 로버 왓슨(Rober G. Watson)(1979)은 합동참모본부(JCS)가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서 수행했던 역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주는 『합동참모본부와 국가정책(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3권에서 훨씬 더 많은 일차자료를 참고문으로 인용한다. 더 중요한 것은, 1983년에 미국 국무부(State Department)가 『미국의 외교관계(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에 있는 1952~1953년 한국전쟁과 관련된 미국의 문서들을 재판(再版)한 책을 발간했다는 것이다. 이 책으로 대통령 도서관과 다른 정부의 기록보관소에 있는 일차자료에 대한 접근제한이 없어졌다.

아이젠하워는 1953년 1월 20일 대통령이 되었다. 칼럼 맥도날드(Callum A. Macdonald)(1986)와 풋(1900)은 공산주의자가 휴전을 받아들이도록 군사적 압력을 증가시켰던 전임자 트루먼 대통령의 정치에 아이젠하워의 취임이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윌리엄 배처(William H. Vatcher, Jr)(1958), 페렌바흐(Fehrenbach)(1963), 웰런(Whelan)(1990), 그리고 엘리자베스 스탠리(Elizabeth A. Stanley)(2009)는 교착상태를 깨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것 같은 강경과 공화당이 정권을 잡는 것에 대해 소비에트와 중국이 이제 더 걱정한다고 판단하며 중요한 차이를 강조했다. 이러한 세력을 이용하는데 있어, 아이젠하워는 만약 휴전 회담이 와해될 경우 공적위협을 행사해야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간접적인 경고를 발표했다. 프레드 그린스테인 (Fred. I. Greenstein)(1982)은 “북한에 대한 원치 않은 통제”를 위한 완전한 승리를 추구할 필요를 제거하는 “숨겨진 전략”을 그가 따랐다는 데, 이는 그에게 완전히 부적절해 보였다고 시인하며 적었다. 엠브로스(1984)는 “그의 위협 뒤에 있는 본질”은 “미국의 원자폭탄 무기가 뒷받침해주는 아이젠하워에 대한 평판”이었다. 찰스 알렉산더(Charles C. Alexander)(1975)는 이러한 논쟁에 대해 상세히 말하며 1953년 전장 포병대에서 사용하기 적당한 크기의 원자탄두의 성공적인 폭발을 지적했다. 이는 원자폭탄 무기가 전략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전술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페렌바흐, 밸런스, 그리고 굴든은 합동참모본부(JCS)가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원자폭탄의 사용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원자탄두를 실은 배를 오키나와로 보냈다고 보고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되자마자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는데, 러처드 댄스(Richard V. Damms)(2002)가 설명하기로, 그것이 “미국의 자원을 소모시키고... 결단력 있는 결정의 실패가 미국이 공산주의 측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신뢰성에 대한 의심을 발생시키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응집력을 손상시키며, 비동맹국들 사이의 중립주의를 조성한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로버트 도노반(Robert J. Donovan)(1956)과 마이클 코다(Micheal Korda)(2008)는 그가 한국에 더 많은 사브레(sabre) 제트기를 보낸 것을 지적하며, 굴든(1982), 하스팅스(Hastings), 엠브로스, 그리고 존 부코비츠(John Wukovits)(2006)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ROK) 군대를 확대시키고, 전쟁터에서 미군을 대체하는 데에 필요한 훈련과 장비를 제공했던 그의 행동을 강조했다. 포에츠는 공산주의자가 휴전협상에 동의하게 만든 주요요소로서 "한국화(Koreanization)"를 보았다. 하지만 발턴 번스타인(Barton J. Bernstein)(1983)은 이것이 어떻게 트루만 하에서 이미 시작했는지를 적는다. 2월 2일 아이젠하워는 트루만이 1950년 6월 중국 공산당 군과 국민당 군 사이의 충돌을 막기 위해 대만해협에 주둔시킨 미 제 7함대가 더 이상 중화인민공화국(PRC)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고 알렸다. 장제스의 "축발(unleashing)"은 미국이 이제 본토에 대한 공격을 지원할 거라는 것을 암시했다. 스티브 닐(Steve Neal)(1984), 피어스 브레돈(Piers Bredon)(1986), 시드니 베일리(Sidney D. Bailey)(1992), 그리고 스탠리(2009)는 아이크의 동기를 그의 안보 계산에서 유럽 이상으로 아시아의 중요성을 증가시키지 않아 화가 난 우파 공화당원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다. 피터 라이언(Peter Lyon)(1974), 마커스 차일드(Marcus W. Childs)(1958), 그리고 찰스 알렉산더(Charles C. Alexander)(1975)는 장제스의 군대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약화시키지 못하는 급습을 벌여왔기 때문에 “축발”이 별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제스처라고 목살했다.

굴든(1982)과 하스팅스는 아이젠하워가 만약 한국에서의 전쟁이 계속된다면 대만의 공격을 지원할거라 의도적으로 베이징에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후에 국민당의 급습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지적했다. 많은 작가들은 “축발”이 공산주의자들이 휴전협정을 받아들이게 강요하는 아이젠하워의 계획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본다. 국민당이 약했기 때문에 정책은 심각하지만 위험요소가 없는 경고를 전달했다. 도노반(1956)에 따르면, “아이젠하워와 덜레스는 만약 교착상태에 대한 대안이 두세 전선에서의 강력한 미국의 공격이라는 것을 중국 공산당이 확신한다면 그들이 한국에서 타협을 볼 것”이라 생각했다. 그린스테인(1982)은 “거의 즉각적으로 중국이 협상에 더 개방적으로 되었다”라고 적으며 동의한다. 렉키(1962)와 라이언(1974)은 오직 중국만이 아이젠하워의 위협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적는다. 하지만 미들턴(1965)과 윌리엄 스투크(William Stueck)(1995)은 중국이 자신들의 자발적 본국송환의 수용을 알리기까지 10개월이 넘게 걸렸다고 강조한다. 벨런스(1969)는 이러한 양보가 2월 중순에 있었던 아이젠하워의 고의적인 누설, 즉 그가 미국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들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없앨 것이라고 한 것에 기인한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은 유엔군 사령부(UNC)의 지상군 사령관인 제임스 밴 플리트(James A. Van Fleet)장군을 분쟁을 확대하기보다 제한하도록 한 그의 명령에 강하게 찬성하는 리투아니아 장군 맥스웰 테일러(Maxwell D. Taylor)(1972)로 교체했다.

에드워드 키퍼(Edward C. Keefer)(1986)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핵 위협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단호히 부인한다. 스티븐 캐시(Steven Casey)(2008)는 아이크가 그의 전략을 더디게 발전시켰다고 주장하며 키퍼에 동조하고, 대통령이 2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NSC)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클라크는 개성을 폭격하자는 자신의 요청에 대한 빠른 결정을 강요했었다. 키퍼(1986)는 한국에서 적은 비용의 해결책을 찾길 바라는 아이젠하워가 그의 소망을 반영하는 공격으로서 전술적인 핵무기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고 지적한다. 그와 버튼 코프만(Burton I. Kaufman)(1986) 둘 다 그의 확신에 의문을 던지며, 대통령의 독백하는 버릇에 대해 적고 있다. 로버트 디바인(Robert A. Divine)(1981)은 단단히 자리 잡은 적의 상태에 대항하는 그것의 효율성을 의심하는 합동참모본부(JCS)의 의문을 아이크가 공유했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의 적대적인 반응에 대해 걱정해 클라크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한다. 체스터 패치(Chester J. Pach, Jr.)와 엘모 리처드슨(Elmo Richardson)(1991)은 일련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국제주의 공화당원화와 함께 “중중 황설수설하고 막연하다”고 묘사한다. 로저 덩먼(Roger V. Dingman)(1988/1989)은 그 신중함을 “결단력 있기보다 산만하고”, 전쟁에 대해 어떤 것보다도 더 “황설수설한 대화들”이라고 묘사하며, “강압적인 핵무기 외교”는 아이젠하워의 전략이 아니라고 명확히 언급한다. 한국과 중국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거대한 타격의 충돌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기까지 6주가 흘렀다.

아이젠하워도 미국에서의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 캐롤라인 프루던(Caroline Pruden)(1998)은 그녀의 권위적인 연구에서 미국무부가 2월 24일 국제연합총회(General Assembly)가 다시 열렸을 때, 그것(국제연합총회)이 자발적 송환에 대한 입장을 약화시키는 타협을 승인할 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고 전한다. 그러므로 그것(국무부)은 미국 대표단이 새로운 방식..또는 인도의 결의안에 대한 어떤 대안을 약속하는 결의안의 도입도 막도록 지시했다. 트루먼과 같이 아이젠하워는 한국전쟁을 끝내려는 노력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 마오쩌둥(Mao Zedong)도 마찬가지였다. 도널드 부스(Donald W. Boose, Jr.)(2000)는 중국이 휴전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유엔군 사령부(UNC)

가 먼저 행동을 취하길 바랐다고 추측한다. 그것은 2월 22일 클라크가 부상당한 포로를 선의의 제스처로 교환할 것을 제안했을 때 시작했고, 적십자 연맹(league of Red Cross Societies)의 집행위원회가 12월 13일에 권할 때 제안이 반복되었다. 콜린스(1967)는 클라크에게 그 생각이 있다고 믿지만 굴든(1982)과 알렉산더(1986)는 그의 목적은 수용에 대한 기대라기보다 선전(propaganda)이었다고 주장한다. 클라크(1954)는 그것을 유엔에서 같은 제안이 먼저 개진되길 바랐던 국무부 덕분으로 돌렸다. 3월 28일 공산주의자들은 클라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전체 전쟁포로(POW) 문제를 확정하기 위한 휴전협상의 재개를 제안했다.

베빈 알렉산더(Bevin Alexander)(1986)는 휴전협정을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요소로서 부상당한 전쟁포로(POW)계획을 보며 클라크에 동조한다. 2주가 지나지 않은 3월 5일 스탈린이 죽었다. 예외 없이 작가들은 이 사건이 한국전쟁을 끝내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고 동의하지만 그것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스탈린은 전쟁이 대가가 큰 분쟁에 미국이 휘말리게 하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계속해서 싸우도록 압력을 가했었다. 그의 죽음은 크렘린(kremlin)에 권력공백 상태를 만들었고, 그의 후계자들은 공산주의 블록에 대한 소비에트의 통제력을 잃을까 걱정했다. 스탠리(2009)는 그들이 “정치적 힘과 자원을 전쟁으로부터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적는다. 3월 13일 게오르기 말렌코프(Georgi Malenkov)는 그가 “이혜관계가 있는 나라들의 상호 동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합의 되지 못할 논쟁이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은 없다”라고 공적으로 선언했을 때, 새로운 집단지도체제를 대변했다. 배처(1958), 페렌바흐(1963), 코프만(1986), 베일리(1992), 그리고 부스(2000)는 소비에트가 이제 중국과 북한이 합의를 보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한다. 알람 밀레(Allam R. Millet)(2001)는 3월 19일 모스크바가 베이징과 평양이 평화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전한다. 스톡(1995)은 모스크바가 클라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결정했다고 동의하였고, 그것을 죽기 전에 스탈린이 결정했던 외교정책 전술에서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의 일부로 묘사했다. 렉키(1962), 라이언(1974), 그리고 헬버스텨(2007)는 스탈린의 죽음이 휴전협상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도노반(1956), 미들턴(1965), 허버트 파멧(Herbert S. Parmet)(1972), 그리고 알렉산더(1975)는 어떤 누구도 무엇이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전쟁포로 교환에 동의하게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니엘 칼링거트(Daniel Calingaert)(1988)는 핵의 위압이 한국의 휴전협상에 대한 하나의 부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고 믿는다. 스탠리(2009)는 동의하지만 진짜 원인은 단지 모스크바와 워싱턴뿐만 아니라 베이징의 지도부 변화였다고 주장한다.

1952년 여름에 온건한 중국 지도자들이 마오보다 우세한 영향력을 얻었고 이는 휴전으로의 동의를 초래했다. 번스타인(1983)은 그 당시 베이징이 판문점에서 어떻게 유연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는지를 강조한다. 맥도날드(1986)는 1952년 10월 저우언라이(Zhou)가 모스크바에 있고, 스탈린이 새로운 숙청을 준비하고 있을 때, 공산주의자 측에서 초점을 안으로 맞출 것과 외교문제를 조용하게 만들 것은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톨란드(1991)는 같은 달 스탈린과 중국의 조정에 대한 대중의 요청을 지적하며 이 주장을 강화한다. 배처(1968), 페렌바흐(1963), 리스(1964)는 판문점에서 선전 포럼을 잃었던 중국이 감지되는 위신의 하락을 뒤집길 원했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이제 분명하다”, 존 루이스 개디스(John Lewis Gaddis)(2005)는 소비에트의 자료를 검토한 뒤 “중국과 북한의 기진맥진과 스탈린의 죽음이 휴전을 가져왔다”고 결론을 내린다. 풋(199)과 스톡(1995)은 어떻게 더 많은 공격적인 어조와 아이크의 안보정책의 내용이 새로운 소비에트 지도자들의 원조와 지원에 의지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걱정을 확대시켰는지를 언급한다. 로날드 카리디(Ronald J. Caridi)(1968)는 스탈린의 죽음을 최소화하며 그것은 오직 한국전쟁을 끝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의 시작이었다고 강조한다.

판문점에서 공산주의 대표단이 부상당한 전쟁포로 안을 받아드린 후 이틀이 지나 저우언라이는 그가 어떤 전쟁포로도 본국송환을 거절했다는 것을 부인한 라디오 베이징(Radio Beijing)에 연설 하나를 전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근본적으로 12월 3일 인도의 결의안을 수용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포로를 중립국으로 옮기는 것을 제안했다. 저우언라이는 스탈린의 장례식에서 돌아온 후 말했는데, 렉키(1962)가 주장하기에 그곳에서 그는 평화를 만들라는 소비에트의 승인을 확보했다. 3월 31일 한국은 공개적으로 이 정책을 지지했고, 소비에트 외무부장관 바체슬라프 몰로토프(Vyacheslav Molotov)는 다음날 저우언라이의 제안의 “완전한 공정성”을 찬양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협조를 간청했다. 스톡(1995)은 소비에트의 지도자들이 만약 중화인민공화국이 전쟁을 계속했다면 원조를 중단할거라 위협했을 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그들은 미국과 그들의 동맹국 사이에 틈을 만들기를 바랐고, 아이젠하워가 그의 공격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이유가 무엇이든, 4월 2일 공산주의자들은 연락장교(liaison officer)가 4일 후에 판문점에서 만나 부상당한 전쟁포로교환을 위한 자세한 사항에 합의를 볼 것을 제안했다. 유엔군 사령부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클라크는 적이 유엔군 사령부의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안에 건설적이지 않다면 전체 협상을 재개하길 원치 않았다. 하지만 "휴전의 흥분"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아이

젠하워는 이전의 의견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그가 적의 진심을 의심할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까지 평화를 위해 어떠한 제안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 공개적으로 말했다.

굴든(1982)은 델레스가 부상당한 포로의 교환을 제안했다고 믿지만 그가 어떻게 2번째 생각을 갖기 시작했는지 설명한다. 3월 중순, 아이젠하워의 연설 작성자인 에밋 휴즈(Emmett J. Hughes)(1963)는 국무장관이 "나는 우리가-전(全)아시아 앞에서-우리의 분명한 우월함이 중국에 엄청난 참패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까지 한국전쟁의 합의에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을 회상한다. 더욱이 베일리(1992)가 썼듯, 델레스는 단순히 트루먼의 휴전협상에 만족하길 원치 않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4월 8일 열렸을 때, 그는 더 많은 싸움이 현장에서 미국의 위치를 향상시켜주고, 마지막 합의에서 더 나은 조건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면서 회담 재개를 반대했다. 만약 한국을 통일시키는 정치적 합의가 휴전협상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는 전쟁을 재개하고 한국의 허리로 향하는 접촉선(接觸線)으로 이동하는 공격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국방장관 찰스 윌슨(Charles E. Wilson)은 이러한 권고를 지지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동맹국들로 부터 공산주의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그는 부상당한 포로의 교환이 완성되기 전까지, 비록 이러한 접근이 유엔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지만, 협상의 재개를 연기하도록 결정했다. 프루던(Pruden)(1998)은 아이젠하워와 델레스가 저우언라이의 선언이 유엔에서 어떠한 조건에서도 합의를 위한 경쟁을 선동할거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적는다. 영국과 인도에 대한 그들의 압력은 7월까지 (유엔)총회(General Assembly)가 재개되는 것을 막는데 성공했다.

토마스 알렌(Thomas Allen)(1994)은 교전국에 대한 국내외적 압력이 한국 휴전협상의 타이밍과 특히 싸움을 끝내기위해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베이징에 있는 모스크바의 새로운 지도자들의 로비활동에 영향을 끼쳤는지 기민하게 관찰한다. 예를 들어 세계의 여론은 아이젠하워가 냉전의 불화를 해결하자는 말렌코프의 제안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4월 16일 그는 아담스(1961)와 거의 모든 다른 작가들이 동의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아이젠하워의 공적 생애의 연설"인 "평화를 위한 기회"라는 연설을 보냈다. Klaus Larres(1995)는 연설이 냉전의 선전(propaganda)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군비감축에 대한 이상적 호소를 담고 있는지를 설명했고, 어떤 주제가 아이젠하워의 진정한 의도를 이루고 있느냐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었다. 각료 아더 라슨(Arthur Larson)(1968)은 그의 목적이 승리를 위해 전쟁을 계속하자고 주장하는 델레스의 견해를 거부하는 것이라 규정한다. 다

른 행동들 사이에서, 아이크는 소비에트가 평화에 대한 그들의 헌신의 표시로 한국전쟁을 끝낼 것을 청했다. 제프리 페렛(Geoffrey Perret)(1999)과 피터 보일(Peter G. Boyle)(2005)은 이러한 연설이 모스크바가 군비감축을 추구하도록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이러한 방향에서 과감한 단계를 밟고 있었다. 4월 6일, 연락장교는 판문점에서 부상당한 포로를 교환하는 조항에 대해 논의하기위해 만났다. 히키(1999)는 그 과정이 5일 후의 합의를 길고 복잡하게 만든 과정이라 묘사하지만 클라크(1954)는 그것이 신속함에 대한 “사상 최고 기록”이었다고 적는다. 리틀 스위치(LITTLE SWITCH)라고 별명 붙여진 2주간의 교환은 4월 20일에 시작했다. 3일 전에 평화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바람이 진실하다는 것에 만족한 유엔군 사령부(UNC)는 회담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다.

4월 26일, 공산주의자들은 1952년 12월 3일 유엔이 승인한 인도의 결의안의 부분들을 포함하는 6개의 계획을 제출하며 재개된 협상을 시작했다. 유엔군 사령부는 그들이 중립국을 명명하고 포로의 구금에 대한 일정한 시간제한을 설정하는 것에 실패한 것에 반대하며, 이러한 결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스위스와 60일을 추천했다. 또한 포로들을 한국 밖에 다시 위치시키고자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사람들이 조사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설득되는 동안에 어디에 그들을 수용해야하는 지, 누가 이 과정동안에 포로들을 보호할지, 얼마나 오래 “설득”의 기간이 지속되어야 하는지, 여전히 본국송환을 받아들일 것 이길 꺼리는 전쟁포로들의 운명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랑이와 혹평이 뒤따랐다. 5월 7일, 공산주의자들은 마지막 합의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8개의 계획을 상정했다. 그것은 마침내 포로들을 중립국으로 옮기는 성가신 절차에 대한 그들의 책무를 포기하고, 한국에서 조사하고 설득하는 것에 동의했다. 인도는 중립국 송환위원회(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ttee=NNRC)가 될 것이었고, 양측은 각각 두 명 이상의 구성원을 지명할 것이었다. 그것이 12월에 유엔이 투표했던 유엔의 결의안에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클라크는 이 제안을 논의의 기초로 받아들일 것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반대는 지속되었고, 비(非)본국송환자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전후 정치회담을 요구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요구에 관하여 그랬다.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아이젠하워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남한 대통령 이승만의 단호한 반대였다. 그의 통치 하에서 그는 한국에 통일을 가져오지 않는 어떠한 합의에도 반대했다. 보수적인 공화당원들, 특히 1953년 2월 한국을 분단하는 어떠한 합의도 “비 만족스럽다”고 규정한 로버트 태프트(Robert Taft)가 그를

지지했다. 이승만은 판문점에서의 교착상태를 반겼지만, 교전국들이 회담 재개에 합의했을 때 그는 휴전협상에 대항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다. 4월 21일 대한민국(ROK)의 국회가 만장일치로 강제적인 본국송환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틀 후,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에게 유엔은 절대 물리력에 의한 재통일에 기여하지 않을 거라 주장하며, 그가 병사들의 희생의 결실을 탕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편지를 보냈다. 4월 24일 한국의 대사는 아이크에게 만약 휴전협정이 중국의 군대가 북한에 남도록 허락한다면 이승만은 그의 군대를 유엔군 사령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라 말했다. 클라크는 4월 28일 서울로 가, 먼저 알리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승만은 휴전협상 회담을 막을 수 없었지만 그 과정을 면밀히 감시했다. 5월 2일 그는 그가 절대 한국 밖으로 포로를 옮기도록 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 대한 보호권을 인도에 줄 것이며, 클라크에게 그들이 각각의 결과를 피하도록 풀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만은 10일 후에 그의 위협을 되풀이 했고, 클라크에게 그는 인도의 군대가 그의 나라에 들어오거나 중립국이 남한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클라크는 합동참모본부(JCS)에게 이승만이 그의 지휘권으로부터 한국의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는 엄포를 놓고 있지만 포로해방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알렸다. 미국의 군 지도자들은 남한의 군대가 그리고 나서 전선의 3분의 2를 방어하고 곧 군대를 유엔군 사령부의 통제로부터 빼냈기 때문에 걱정했다. 클라크(1954) 나중에 “모든 가능한 종류의 악몽을 보여주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므로 합동참모본부(JCS)는 이승만을 권력으로부터 물리나게 할 사전대책인 에버레디(EVERREADY)라는 작전을 재개했다. 트루먼 행정부는 남한의 정치위기동안에 여름 이전에 그것을 시행하는 것을 생각했었다. 그것은 유엔에 대한 이승만의 반항에 따르는 일련의 옵션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한국 군대가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한국 정부가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독자적인 방향을 추구한다면 미 8군(U.S Eight Army)이 한국군대를 무장해제 시키고 군인과 시민의 움직임을 제한할 것이었다. 3번째 계획은 유엔군 사령부의 군대를 실제로 위협하는 대한민국의 관점을 다루었다. 만약에 그것이 발생한다면 미 8군은 쿠데타를 일으켜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휴전협상을 보장할 계엄령을 내릴 것이었다. 클라크는 비록 그가 3번째 옵션을 따르기를 주저하지만, 이미 에버레디 작전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4월 26일 워싱턴에 알렸다. 라이언(1974)이 설명하듯 클라크는 이러한 과정의 행동을 지지했기 때문에, 포로해방을 멈추기 위해 대한민국의 경비대에 맞서 미군의 물리력을 행사할 준비도 하지 않았다.

하스팅스(1987)와 캐시(2008)는 아이젠하워가 어떻게 이승만과 우파 공화당원을 달래기 위해 이승만의 몇몇의 요구에 맞는 적의 새로운 양보를 찾기로 결정했는지 설명한다. 포에츠(1954)는 단지 그것은 전술적 오류라고 언급한다. 하지만 유엔군 사령부의 계획 이전에 미국의 폭격기들은 5월 10일과 11일 처음으로 압록강(Yalu)에 있는 수력발전소를 파괴했다. 이틀 후에 유엔군 사령부는 평양 근처에 있는 관개용 댐(irrigation dams)을 공격하고, 6마일의 철로와 5개의 철로 다리 그리고 2마일의 길을 제거했다. 이러한 공습은 군대와 민간인으로서의 식량공급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3200에이커의 농지를 파괴하거나 손상 입혔다. 라이언(1974)은 알톤 리(R. Alton Lee)(1981) 그리고 브레돈과 함께 “그러한 관개용 댐들의 파괴는 뉘른베르크 재판에 의해 전쟁 범죄로 낙인찍혔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성공적으로 저수지 물을 뺏으므로 유엔군 사령부의 일련의 공습 효과를 상쇄시켰지만 이러한 공격은 북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켰다. 만약 적이 판문점에서 양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엔군 사령부가 전쟁을 확대시킬 거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5월 13일 유엔군 사령부는 휴전협상 때의 포로의 자동적인 해방, 인도가 단독 관리인으로, 그리고 90일 후의 망명의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역제안을 제출했다. 그것은 또한 중립국 송환 위원회(NNRC)가 만장일치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남한의 비(非)본국송환자들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않는다는 2가지 새로운 요구를 삽입했다.

예상대로, 공산주의자 측은 새로운 유엔군 사령부의 제안을 “퇴보적 조치”라고 비난하고 격노했다. 험악한 교환의 3일후, 회담은 5월 25일까지 휴회되었다. 코프만(1986)은 다음 달 동안에 아이젠하워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 “감언이설과 단호한 의지”를 혼합하여 사용했다고 적는다. 하지만 풋(1990)은 새롭고 더 위험한 적대감의 국면을 피하기 위해 양쪽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양보가 요구되었는지 강조한다. 5월 20일 아이젠하워와 그의 고문들은 NSC147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계획은 군사적 승리 또는 미국 관점의 승리에서의 휴전협상을 성취하기 위해 군대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5가지 옵션을 가졌다. 그것은 클라크가 이전 여름에 제안했던 OPLAN8-52의 수정본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PRC)에 대한 해상봉쇄를 확고히 한 후, 유엔군 사령부는 적의 하늘과 만주, 중국에서의 병참상의 능력을 파괴하기 위해 지상과 해상 공격을 벌일 것이었다. 지상에서의 옵션은 각각 20일씩 3개의 국면을 따랐다. 첫 번째는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탈취하기 위한 이중의 포위이다. 다음은 원산에서의 상륙강습(上陸強襲)이 한국의 동북쪽에 있는 적의 군대를 파괴하고 연락망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3번째 국면은,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의 협소

한 허리를 가로지르는 선으로 북을 향해 공격을 벌이는 것이다. OPLAN8-52의 핵심 가정은 비록 만주, 북중국에 있는 적의 비행장을 공격할 지라도 원자폭탄이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고, “임기표적(臨機標的)”이 만약 이 새로운 무기와 함께 지휘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NSC147이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 중공에 대항하는 원자폭탄 무기사용을 위한 조항을 특별히 추가했다는 것이다. 풋(1990)과 댄스(2002)는 아이젠하워와 합동참모본부가 미국의 동맹국과 합의한 후에, 만약 전쟁을 확대하기 위해 그것(원자폭탄)이 필요하다면 추진할 비상사태로서 그것을 승인했다고 강조한다. 알렉산더(1975)와 하스팅스(1987)는 둘 다 NSC147이 점진적인 시행보다 기습을 위한 필요성을 명시했고, 적에게 최후통첩의 발표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한다. 마이클 잭슨(Michael G. Jackson)(2005)은 아이젠하워가 그 계획의 실행을 결심했다고 적는다. 파멧(1972)은 대통령이 이제 위기정책(brinkmanship)을 채택했다고 주장하며 동의한다.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의 편을 들며 브레돈(1986)과 톰 위커(Tome Wicker)(2002)는 아이젠하워의 접근법이 무신경한 위협보다 힌트를 사용하고, 그의 옵션을 개방해 놓으면서 미묘하고 애매모호했다고 설명한다. 그의 의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채 중국은 아이젠하워가 핵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그의 관료들을 교묘하게 겁먹게 했기 때문에 신속히 타협을 보았다. 벨런스(1969)와 월란(1990), 그리고 파렛(Parret)(1999)에 따르면, 11월 이전의 성공적인 미국의 수소폭탄 폭발시험은 아이젠하워가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원자폭탄 공격을 할 준비를 하도록 대담하게 만들었다.

많은 작가들은 아이젠하워가 NSC-147을 승인하고 이틀 후, 인도를 통해 델레스에게서 중국에 대한 원자폭탄 위협을 전달받고, 그가 가진 새로운 결심에 대한 확증을 가진 것을 찾아냈다. 5월 22일 뉴델리를 방문한 3일 동안 델레스는 인도 수상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에게 만약 “휴전협상이 무너지면 미국은 아마 더 강한 군사력을 행사할 것이고, 이것은 충돌을 확장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핵무기 사용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루는 다음날 설명을 듣고 자 했으나 실패했다. 내부자 아담스(Adams)(1961)와 라슨(Larson)(1968)은 델레스가 위협을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베이징에 도달했고, 중국이 휴전협상을 받아들일도록 강요한 것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인다. 에릭 골드만(Eric Goldman)(1960), 카리디(1968), 파멧(1972), 제임스 토너(James H. Toner)(1976), 디바인(1981), 그리고 월란(199)은 방어약속 제공에 대한 소련의 거절이 놀란 중국으로 하여금 양보하도록 유도할거라 설명한 버크(1986), 위커(2002)와 같이 동의했다. 션 말로이(Shawn L.

Malloy)(2003/2004)는 어떠한 확실한 증거도 중국이 아이젠하워의 원자폭탄 외교에 굴복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암브로스(1984)와 코프만(1986)은 아이젠하워 딜러스가 최후통첩을 보내도록 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한다. 베이징이 그의 참을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전쟁을 끝내기 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는 증가하는 압력을 받으며 핵무기를 계속 붙들었다. 스톡(1995)은 동의하고 댐 급습을 촉발시키는 것에서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까지 열거했다.

배처(1958)는 딜레스의 위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반면 암브로스(1984)는 그가 그러한 위협을 절대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리스(1964)는 네루가 훗날 경고를 받은 것과 전달한 것을 부정했을 때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풋(1990)과 스톡(1995)은 동의하지 않은 반면, 키피(1986)와 덩먼(1988/1989), 그리고 패치와 리처드슨(1991)은 “핵위협이 베이징에서 잘못 이해됐고, 무시되기도 했다”고 믿는 가디스(2005)와 의견을 함께 했다. 마크 라이언(Mark A. Ryan)(1989)이 덧붙이길, 중국 지도자들은 어떠한 핵 위협도 믿을만하다고 보지 않았다. 전달을 가정하면서, 풋(1990), 댄스(2002), 그리고 스탠리(2009)는 딜레스가 네루를 만나기 전에 적이 주요 양보를 했다고 주장하며 아이크가 위협의 효과에 대해 과장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전쟁포로 논쟁을 해결하는 합의의 마지막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데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안다. 이라 체너스(Ira Chernus)(2008)와 캐시(2008)는 아이젠하워의 위협이 중화인민공화국(PRC)뿐만 아니라 5월 7일 공산주의 측이 엄청난 양보를 했다고 생각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군사군대의 단계적 확대를 준비하는 동안에 아이크는 이승만과 우파 공화당원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보였다. 클라크(1954)는 또한 마지막 양자택일의 제안을 제출하길 원했다. 5월 23일 합동참모본부(JCS)는 그의 바람을 승인했고, 만약 공산주의측이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가 영원히 회담을 종료해야 한다는 지시가 담긴 새로운 제안을 그에게 보냈다. 맥도날드(1986), 스톡(1995), 그리고 위커(2002)는 아이젠하워가 원자폭탄을 제외하고 이제 NSC147추진할 것과, 전쟁포로 해방을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5월 25일, 합동 참모 본부는 미공개로 마지막 제안이라 부르는 것을 보냈다. 새로운 조건들을 모두 뒤집으면서 합동참모본부는 휴전협상에 서명 한 후 60일 안에 모든 전쟁포로의 본국송환을 제안했다. 중립국 송환 위원회(NNRC)는 90일 동안 본국송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권을 가졌고, 그 동안 그들의 본국 대표들은 그들에게 접근해 귀환하도록 권장할 것이었다. 그 후에, 전후 정치회담은

남아있는 비(非)본국송환자들을 다룰 것이었지만 30일이 추가로 지난 후 그들은 해방되거나 유엔 총회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다. 클라크는 만약 적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엔군 사령부는 전쟁의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모스크바에서 미국의 사절 찰스 볼렌(Charles E. Bohlen)은 소비에트 외무장관에게 평화회담의 실패가 미국 정부가 가장 피하길 바라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측이 제안에 대해 생각해볼 두 번의 휴회기간을 요청했을 때, 알렉산더(1986)는 “분위기가 긍정적 장밋빛”이라고 전했다. 장슈광(Shu Guang Zhang)(1995)과 가디스(1997)은 델레스의 위협을 받지 않았던 중국의 지도자들이 미국의 핵무기 타격 가능성을 배제했는데, 그것은 세계 여론과 소비에트의 보복이 그러한 옵션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에드워드 프리드먼(Edward Friedman)(1975)과 풋(1988/1989)은 커다란 경제문제에 직면하고 서구와의 평화공존을 원하는 중국이 이미 트루먼이 대통령에서 물러났을 때 평화를 만들기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스톡(1995)은 전선에서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한 베이징이 “전쟁포로 문제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전쟁을 지속하고 확대하는 위험만한 가치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파멧(1972)은 “아이젠하워에게 불행하게도”, “어떠한 남한 버전의 원자폭탄 위협도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비통해한다. 5월 25일 클라크는 이승만을 만나 유엔군 사령부가 1시간 안에 적에게 보여줄 마지막 제안을 요약해주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이젠하워가 그를 달래기 위해 제안했던 조건들을 포기한 것에 격노했다. 그의 응답은 절망과 반항의 혼합이었고, 그는 홀로 계속해서 싸울 것을 선언했다. 그러자 클라크는 이승만이 휴전협상을 존중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승만(1964)이 “넘쳐흐르는 인센티브의 보고”라 묘사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상호방위조약(mutual security pact=MSP)을 보장할 수 없었지만, 20개 사단의 군대를 만들 기금과 10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제공했다. 이승만은 만족하지 않고, 그의 대표가 판문점에서 걸어 나오도록 명령했다. 클라크는 일어났던 것을 합동참모본부(JCS)에 보고하고 상호방위조약의 약속이 그의 지원을 성사 시킬 거라 조언했지만, 아이젠하워는 만약 그가 휴전협상 전에 그렇게 한다면 그가 이승만의 지속적인 협조를 확실할 수 없을 거라 걱정했다. 키퍼가 설명하기로, 5월 29일 합동참모본부는 국무부 관료들을 만났고 상호방위조약을 제공하고 에버레디 작전을 제정하거나 만약 이승만이 그의 군대를 철수한다면 한국을 떠나는 것으로 그들의 대안을 정했다. 아이젠하워는 첫 번째 옵션을 선택했고, 클라크에게 만약 남한에서 새로 전개된 사건들이 유엔군사령부의 군대를 위협한다면 그가 알맞다고 보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권을 주었다.

이승만의 로비와 위협의 긍정적인 결과는 그것이 합의를 협상하려는 교전국들의 결심을 굳혔다는 것이다. 카프만(1986)이 주장하길, 6월 4일 공산주의자들은 핵전쟁의 위협에 반응해, 핵전쟁 위협에도 불구하고 5월 25일의 유엔군 사령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권한위임사항(the Terms of Reference)은 만약 전후 어떠한 정치협회의가 없다면 모든 비 본국송환자들이 120일 이후 해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참모장교는 6월 17일 휴전협상 표현의 마지막 확인을 마쳤다. 판문점에서 합의할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날짜와 양식에 서명할 준비에 대한 세부사항이었다. 휴전을 막는 마지막 장벽은 서울에 있었다. 6월 5일 클라크는 이승만을 만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의논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제 휴전협상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이전의 인센티브에 덧붙여 상호방위조약과 중국군의 철수를 열거했다. 이틀이 지나 클라크는 이승만에게 아이젠하워의 편지를 전했다. 그 편지는 군대와 경제원조의 약속을 되풀이하고, 만약 이승만이 휴전협상을 받아들인다면 한국의 재통일과 협상 이후 상호방위조약의 상원비준을 위해 노력할 거라 약속했다. 유감스럽게도, 이승만은 6월 16일 클라크와의 만남에서 공격적이고 융통성이 없었는데, 그는 절대로 휴전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것이 민족의 자살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싸움을 계속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엔군 사령부의 지휘관은 미국이 휴전협상 서명에 전념할 것이라 대응했다.

이승만이 방침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데에 필사적이었기 때문에, 아이젠하워는 개인적 만남을 위해 그를 워싱턴으로 초청했지만, 한국의 대통령은 아마도 감금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절했다. 그는 델레스가 서울로 올 것을 제안했지만 아이젠하워는 장제스의 영웅으로 잘 알려진 국무부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State) 월터 로버스톤(Walter S. Roberston)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6월 17일 이승만은 받아들였지만, 다음날 한국의 경호원이 25000명의 반공 포로들의 탈출을 허용했을 때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클라크는 회상한다. 클라크가 통제하기위해 미군을 배치할 수 있기 전에 2000명이 더 남한 사회로 쏟아져 나왔다. 700명 이하가 다시 잡혔고, 8600명의 한국 전쟁포로가 아직도 투옥된 채 남아있었다. 수톡(1995)이 주장하기에, 클라크가 승인할거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휴전협상의 합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해방을 명했다. 봄에, 클라크는 중립국 송환 위원회(NNRC)가 자발적 본국송환을 시행할거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 포로들의 해방을 제안했었다. 코프만(1986)은 유럽인들이 미국의 공모를 의심했다고 전하지만 그와 다른 모든 작가들은 미국 공무원의 공모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

다고 베일리에 동의한다. 클라크는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를 공표했는데, 편지는 협의 없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그의 약속을 저버린 것을 비난했다. 아이젠하워는 단호한 질책을 보내고 그가 반드시 “즉각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유엔군 사령부(UNC)의 권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 이상의 반항은 그로 하여금 “또 다른 방식을 수행”하게 할 것이고, 그것은 대한민국이 협상 이후 미국의 보호와 도움 없이 홀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암시했다.

역사가들은 이승만의 행동이 6월 18일 새벽 이전에 해방의 말을 들은 델레스를 놀라게 했다는 것에 동의한다. 도노반(1956)과 아담스(1961)가 전하길, 그는 아이젠하워에게 그 소식을 빠르게 전했고, 아이젠하워는 놀라고 화가 났다. 골드만(1960)은 그들이 공산주의 측이 판문점에서 걸어 나올 것을 예상하며 만주를 폭격할 준비가 되어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월란(1990)은 그들이 에버레디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이승만이 휴전협상을 받아들일 기회를 하나 더 주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휴즈(1963)는 “이러한 위기의 처음부터”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이 합리적으로 돌아오게 강요할 것을 결심하고 태세를 갖추었다.” 그날 이후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맞닥뜨렸고, 암브로스(1984)가 실수로 그곳에서 그가 처음으로 해방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아이젠하워는 회답이 와해 될 거라 확신했고, 남한을 떠나는 것과 3년의 노력 이후 공산주의 측에게 승리를 내주는 옵션을 제외시켰다. 그리고 나서 아이크는 남한이 이승만을 타도하는 바람을 표출했다. 그는 “이것은 환상적일 정도로 어리석다”, “만약 누군가 제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막지마라”라고 선언했다. 델레스와 다른 고문들은 공산주의 측이 분명 협의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을 눈감아 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승만이 휴전협정의 조항을 존중할 것을 보장할 강한 행동이 필요했다. 라이언(1974)와 리(1981)는 어떻게 그의 행동이 만약 공산주의자들이 휴전협상을 지연시킨다면 아이젠하워가 그의 원자폭탄 위협을 실시할지 안할지에 대한 핵심 질문을 제기했는지에 대해 주목한다.

그 동안, 이승만은 인도를 비난하고 영국에 격분하면서 해방에 대한 책임감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였고, 한국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겠다고 협박했다. 상원 의원 조지프 레이먼드 매카시(Joseph R. McCarthy), 윌리엄 노울랜드(William F. Knowland), 그리고 다른 우파 공화당원은 포로해방에 갈채를 보냈다. 그들은 처음부터 휴전협상 회담을 반대했고, 다른 아닌 군사적 승리를 주장했다. 아담스(1961)는 아이젠하워가 한국의 재통일을 위해 싸우자는 이승만의 요구를 거절한 것을 칭송하는데, 그것이 아주 비용이 많이 들고, 세계 핵전쟁을 위협하고, 중립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을 소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는 클라크에게 협상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공산주의자 연락담당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유엔군 사령부(UNC)는 해방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 책임을 남한에 돌리고, 과실을 부인했다. 6월 20일 다음 만남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이 이승만과 공모했다고 비난했다. 적은 유엔군 사령부가 휴전에 대한 존중을 보증할 수 있는지 물었고, 미래에 되풀이 되는 것을 막는 약속과 탈옥수들의 회수를 요구했다. 4일 후 로버트슨(Robertson)은 서울에 도착해서 참관인들이 곧 이승만의 휴전협정 수용을 확보하기 위한 “작은 휴전 회담”이라 부르는 것을 시작했다. 그의 지시는 만약 한국의 대통령이 그의 반대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미국은 협상에 서명하고 그들의 군대를 철수시켜 한국이 혼자 싸우도록 남겨 둘 거라 경고하면서 이전의 인센티브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7월 29일 클라크는 적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미국이 포로해방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을 다시 잡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즉각 대응하지 않았지만 렉키(1962)는 그들이 얼마나 이승만과 로버트슨의 회담을 주의 깊게 감시했는지를 언급한다. 한국의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곧 그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게 만든다. 아이젠하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이승만을 위협하고 유엔군 사령부의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군사적 수단의 힘을 빌었다. 7월 6일 공산주의 측의 군대가 전선, 특히 폭 참 힐(Pork Chop Hill)을 따라 몇몇의 지점에 대한 주요 공격에 착수했다. 이틀 후 공산주의 측은 마침내 클라크에게 대답했다. 비록 논쟁적이고 모욕적이었지만, 적은 협상 재개에 동의했고, 진정한 본국송환 문제는 내내 북한보다는 중국의 전쟁포로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7월 10일 공산주의자들은 유엔군 사령부로부터 한국이 휴전협정을 존중할 거라는 확실한 보장을 요구했다. 로버트슨은 이승만과 계속해서 만났지만, 심지어 클라크가 합동참모본부가 떠날 것을 준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명령을 내린 후에도 완벽한 약속을 얻어낼 수 없었다. 굴든(1982)과 번스타인(1978)이 설명하기에 그와 로버트슨은 또한 한국의 장군과 이승만을 타도하는 것에 대해 사적인 대화를 시작했지만 그들은 미국의 지원에 대한 보장 없이 행동하기를 주저했다. 토너(1976)는 이승만이 이러한 중대한 상황에서 다루기 쉽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아이젠하워가 에버레디 작전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7월 12일 18일간의 설득 이후 로버트슨은 마침내 이승만으로부터 휴전협정을 받아들인다고 작성된 약속을 받아내는 데에 성공했지만, 그는 합의에 서명하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었다. 도노반(1956), 굴든(1982) 그리고 톨란드(1991)는 그의 참을성과 인내, 재치를 찬양하면서 이승만의 반대를 끝낸 것에 대해 로버트슨에게 모든 찬사를 보냈다. 아담스는 그를 기적을 행하는 자라 부르며 동의했다. 파멧(1972)과 알렉산더(1975)는 클라크가 칭송의 일부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버크(1986)는 아이젠하워를 주요 인물로 보며 그가 “당근과 채찍”을 능숙하게 사용한 것을 지적한다. 번스타인은(1978)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며, 미국의 지원 없이 국가가 생존할 수 없다고 경고했던 한국의 군장교가 그의 모험심에 반대한 것이 이승만의 후퇴에 기여했다고 보았다. 더욱이 우파 공화당원은 이제 그가 휴전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주고 있었다. 갈채가 잠잠해지면서 코프만(1986)은 이승만이 “고집과 완고함”을 통해 경제원조와 1년의 장기간 계획안에서의 2억 6천만 달러를 포함하는 주요한 양보를 어떻게 얻어냈는지 강조한다. 맥도날드(1986)가 쓰기에, 미국은 권위주의적인 통치자의 체면을 위해 아주 큰 몸값을 지불했다. 페렌바프(1964), 리스(1964), 벨런스(1969) 그리고 알렉산더(1975)는 상호방위조약(MSP)을 뇌물로 사용하는 것이 한국이 미국의 영원한 피보호자로 이끌었다고 덧붙인다. 비록 번스타인(1978)은 동의하지만, 그는 이승만의 허세와 협박이 거의 그의 타도를 초래했다고 덧붙인다. 대신에 남한은 그를 민족의 영웅으로 껴안았다.

6월 12일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부(UNC)는 적에게 휴전협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는 이승만의 편지를 알렸지만 공산주의자들은 회의적이었다. 다음날 그들은 2개의 공적인 대답을 요구했다. 첫째, 만약 한국이 휴전을 해친다면 유엔군 사령부는 계속해서 휴전을 이행할 것인가? 둘째, 한국이 전쟁을 재개하면 미국은 원조 제공을 중단할 것인가? 유엔군 사령부의 대답은 두 질문에 대해 모두 예라고 하며 평화에 대한 마지막 장벽을 제거했다. 불행히도 이승만은 이미 그의 약속에 관해 모호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휴전협정을 깨는 것은 엄청난 위협을 수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7월 13일 공산주의자들은 대규모 경주(kumsong)공격을 전선의 오른쪽 끝에서 벌였다. 오직 테일러의 빠른 미 증강병력의 헌신이 한국의 3개의 사단을 말살로부터 구했다. 이승만은 휴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이제 그의 약속을 되풀이했다. 한국군대와 싸우는 동안 공산주의자들은 판문점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틀 후에 유엔군 사령부는 휴회를 선언했다. 아이젠하워는 만약 회담이 재개 되었을 때 자연이 계속된다면 유엔군 사령부가 걸어 나오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나서 연락장교는 휴전선과 포로의 이동에 관한 세부사항에 동의했다. 1953년 7월 27일, 교전국은 분리된 양식에서 클라크는 문산에서 김일성 원수(Marshal)와 펑더화이(Peng Dehuai)장군은 판문점 근처에서 휴전에 서명했다. 잔인한 물리적 충돌이었

던 한국전쟁은 33000명 이상의 미국인, 152000명의 중국인, 300만의 한국인을 죽이고서 끝났다.

만약 과한 찬양이 아니라면 아이젠하워가 한국전쟁을 끝낸 것에 대해 인정받을 만하다는 합의가 존재한다. 위커(2002)는 그것은 “인상적인 승리”라고 이름 붙였다. 디바인(1981)은 공개적인 핵 대결에 대한 극단주의자들의 주장과 중국이 싸움을 그만두게 하기위해 원자폭탄의 위협을 사용하면서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는 딜레스 사이의 신중한 과정을 그가 어떻게 조정했는지에 감탄한다. “대통령의 정책의 빈틈없음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는 그가 보기에, “그가 허세를 부렸는지 안 부렸는지를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른 작가들 사이에서 David B. Capitanchik(1969)는 한국을 통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협정 이후 우파로부터 받는 비판을 견뎌내는 그의 능력에 감탄한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아이젠하워가 트루먼이 추구했던 것 보다 덜한 조건에 합의를 얻어냈지만 오직 공화당의 대통령만이 휴전협정에 대한 양당의 승인을 얻어낼 수 있었다는 것에 동의한다. 암브로스(1984)는 의회가 만약 트루먼이 전쟁을 동일한 조건에서 끝냈다면 그를 탄핵을 것이라 직설적으로 언급한다. 하지만 닐(1984)은 “트루먼, 에치슨(Acheson), 그리고 맥아더(MacArthur)가 더 많은 유혈사태를 주도했을지도 모르지만 아이젠하워는 ‘평화와 세계의 축소된 긴장들을 지켜내면서’ 그들의 강경한 군사정책을 뒤집어 놨다”고 적으면서 아이크의 성공을 제한하는 것을 거절한다. 반면에 스톡(1995)은 그가 평화를 위해 지불한 대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고, 풋(1990)은 오직 “손상된 승리들”로만 보았다. 한국의 “중요한 교훈은...아이젠하워가 전쟁의 대의와 지위, 결과에서 가졌던 개인적 영향력이 얼마나 작았나이며, 그것이 현대 미국 대통령직의 한계에 대해 말해주는 교훈”이라고 말한 밀레(2001)가 맞을지도 모른다.

References

- Adams, Sherman. *Firsthand Report: The Story of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New York: Harper, 1961.
- Alexander, Bevin. *Korea: The First War We Lost*. New York: Hippocrene, 1986.
- Alexander, Charles C. *Holding the Line: The Eisenhower Era, 1952-1961*.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5.
- Allen, Thomas. “No Winners, Many Losers: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Phil

- Williams, Donald M. Goldstein, and Henry L. Andrews, Jr., Eds. *Security in Korea: War, Stalemate, and Negotiation*, 110-126.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4.
- Ambrose, Stephen E. *Eisenhower: The President*.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4.
- Bailey, Sidney D. *The Korean Armistice*. New York: St. Martin's, 1992.
- Bernstein, Barton J. (1983), "The Struggle over the Korean Armistice: Prisoners of Repatriation." In Bruce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5-1953*, 261-307.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 _____. "Syngman Rhee: The Pawn as Rook: The Struggle to End the Korean War."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10 (1978): 38-47.
- Bischof, Gunther and Stephen E. Ambrose, Eds. *Eisenhower: A Centenary Assessment*.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95.
- Blair, Clay. *The Forgotten War: America in Korea, 1950-1953*. New York: Times Books, 1987.
- Boose, Donald W., Jr. "The Korean War Truce Talks: A Study in Conflict Termination." *Parameters* 30 (Spring 2000): 102-16.
- Boyle, Peter G. *Eisenhower*. New York: Longman Pearson, 2005.
- Bradley, Omar N. and Clay Blair *A General's Life: An Autobiograph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3.
- Brendon, Piers. *Ike: His Life and Times*. New York: Harper and Row, 1986.
- Burk, Robert F. *Dwight D. Eisenhower: Hero and Politician*. Boston: Twayne, 1986.
- _____. "Eisenhower Revisionism Revisited: Reflections on Eisenhower Scholarship." *Historian* 50 (February 1988): 196-209.
- Calingaert, David. "Nuclear Weapons and the Korean War."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11 (June 1988): 177-202.
- Capitanchik, David B. *The Eisenhower Presidency and American Foreign Policy*.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1969.
- Caridi, Ronald J. *The Korean War and American Politics: The Republican Party as a Case Stud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68.
- Casey, Steven. *Selling the Korean War: Propaganda, Politics, and Public Opinion in the United States, 1950-195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Chernus, Ira. *Apolcalypse Management: Eisenhower and the Discourse of National Insecuri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8.
- Childs, Marcus W. *Eisenhower: Captive Hero: A Critical Study of the General and the President*. New York: Harcourt Brace, 1958.
- Clark, Mark W. *From the Danube to the Yalu*. New York: Harper, 1954.
- Collins, J. Lawton. *War in Peacetime: The History and Lessons of the Korean War*. Boston: Houghton Mifflin, 1969.
- Crane, Conrad. "To Avert Impending Disaster: American Military Plans to Use Atomic Weapons During the Korean War."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23 (June 2000): 72-88.
- Damms, Richard V. *The Eisenhower Presidency, 1953-1961*. New York: Longman, 2000.
- DeSantis, Vincent P. "Eisenhower Revisionism." *Review of Politics* 38 (April 1976): 190-208.

- Dille, John. *Substitute for Victory*. Garden City, NY: Doubleday, 1954.
- Dingman, Roger V. "Atomic Diplomacy during the Korean War." *International Security* 13 (Winter 1988/1989): 61-89.
- Divine, Robert A. *Eisenhower and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 Donovan, Robert J. *Eisenhower: The Inside Story*. New York: Harper, 1956.
- Eisenhower, Dwight D. *The White House Years*. Vol. I: *Mandate for Change, 1953-1956*. Garden City, NY: Doubleday, 1963.
- Fehrenbach, T.R. *This Kind of War: A Study of Unpreparedness*. New York: Macmillan, 1963.
- Foot, Rosemary. "Nuclear Coercion and the Ending of the Korean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13 (Winter 1988/1989): 92-112.
- _____. *A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tics of Peace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Talk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 Friedman, Edward. "Nuclear Blackmail and the End of the Korean War." *Modern China* 1 (January 1975): 75-91.
- Gaddis, John L.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Postwar American National Secur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_____. *We Now Know: Rethinking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Goldman, Eric F. *The Crucial Decade—and After: America, 1945-1960*. New York: Vintage Books, 1960.
- Goulden, Joseph C. *Korea: The Untold Story*. New York: Times Books, 1982.
- Greenstein, Fred I. *The Hidden-Hand Presidency: Eisenhower as Leader*. New York: Basic Books, 1982.
- Halberstam, David. *The Coldest Winter: America and the Korean War*. New York: Hyperion, 2007.
- Hastings, Max. *The Korean Wa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7.
- Hermes, Walter G., J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6.
- Hickey, Michael. *The Korean War: The West Confronts Communism, 1950-1953*. London: John Murray, 1999.
- Hughes, Emmet J. *The Ordeal of Power: A Political Memoir of the Eisenhower Years*. New York: Atheneum, 1963.
- Immerman, Richard H. "Eisenhower and Dulles: Who Made the Decisions?" *Political Psychology* 1 (Autumn 1979): 21-38.
- Jackson, Michael G. "Beyond Brinkmanship: Eisenhower, Nuclear War Fighting, and Korea, 1953-1968."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5 (March 2005): 52-75.
- Joes, Anthony James. "Eisenhower Revisionism: The Tide Comes In."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15 (Summer 1985): 561-71.
- Joy, C. Turner. *How Communists Negotiate*. New York: Macmillan, 1955.
- Kaufman, Burton I. *The Korean War: Challenges in Crisis, Credibility, and Command*.

-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6.
- Keefer, Edward C. "President Dwight D. Eisenhower and the End of the Korean War." *Diplomatic History* 10 (Summer 1986): 267-89.
- Korda, Michael. *Ike: An American Hero*. New York: Harper Perennial, 2008.
- Larres, Klaus. "Eisenhower and the First Forty Days after Stalin's Death: The Incompatibility of Detente and Political Warfare." *Diplomacy and Statecraft* 6 (July 1995): 431-469.
- Larson, Arthur. *Eisenhower: The President Nobody Knew*. New York: Scribner, 1968.
- Leckie, Robert. *Conflict: The History of the Korean War, 1950-1953*. New York: Putnam, 1962.
- Lee, R. Alton. *Dwight D. Eisenhower: Soldier and Statesman*. Chicago: Nelson-Hall, 1981.
- Lyon, Peter. *Eisenhower: Portrait of the Hero*. Boston: Little, Brown, 1974.
- MacDonald, Callum A. *Korea: The War Before Vietnam*. New York: Free Press, 1986.
- Malloy, Sean L. "A 'Paper Tiger?': Nuclear Weapons, Atomic Diplomacy and the Korean War." *The New England Journal of History* 60 (Fall 2003-Spring 2004): 227-252.
- McAuliffe, Mary S. "Eisenhower, the President," *Journal of American History* 68 (December 1981): 625-632.
- Middleton, Harry J. *The Compact History of the Korean War*. New York: Hawthorne, 1965.
- Millett, Allan R. "Dwight D. Eisenhower and the Korean War: Cautionary Tale and Hopeful Precedent."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10 (January 2001): 155-174.
- Neal, Steve. *The Eisenhowers*.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84.
- O'Ballance, Edgar. *Korea 1950-1953*. London: Faber, 1969.
- Pach, Chester J., Jr. and Elmo Richardson. *The Presidency of Dwight D. Eisenhower*.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1.
- Parment, Herbert S. *Eisenhower and the American Crusades*. New York: Macmillan, 1972.
- Perret, Geoffrey. *Eisenhower*. New York: Random House, 1999.
- Poats, Rutherford M. *Decision in Korea*. New York: McBride, 1954.
- Pruden, Caroline. *Conditional Partners: Eisenhower, the United Nations, and the Search for a Permanent Peace*.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98.
- Pusey, Merlo J. *Eisenhower the President*. New York: Macmillan, 1956.
- Rabe, Stephen G. "Eisenhower Revisionism: A Decade of Scholarship." *Diplomatic History* 17 (Winter 1993): 97-115.
- Rees, David. *Korea: The Limited War*. New York: Macmillan, 1964.
- Reichard, Gary W. "Eisenhower as President: The Changing View." *South Atlantic Quarterly* 77 (Summer 1978): 265-282.
- Ridgway, Matthew B. *The Korean War*. Garden City, NY: Doubleday, 1967.
- Rovere, Richard H. *Affairs of State: The Eisenhower Years*. New York: Farrar, Straus and Cudahy, 1956.
- Ryan, Mark A. *Chinese Attitudes toward Nuclear Weapon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Korean War*. Armonk, NY: M.E. Sharpe, 1989.
- Sandler, Stanley. *The Korean War: No Victors, No Vanquished*. 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9.

- Schnabel, James F.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III: *The Korean War*. Wilmington, DE: Michael Glazier, 1979.
- Stanley, Elizabeth A. *Paths to Peace: Domestic Coalition Shifts, War Termination and the Korean War*.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 Stokesbury, James. *A Short History of the Korean War*. New York: William Morrow, 1988.
- Stueck, William.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Taylor, Maxwell D. *Swords and Plowshares*. New York: Norton, 1972.
- Toland, John. *In Mortal Combat: Korea, 1950-1953*. New York: William Morrow, 1991.
- Toner, James H. "Exceptional War, Exceptional Peace: The 1953 Cease-Fire in Korea." *Military Review* 56 (July 1976): 3-13.
- Vatcher, William H., Jr. *Panmunjom: The Story of the Korean Military Armistice Negotiations*. New York: Praeger, 1968.
- Whelan, Richard L. *Drawing the Line: The Korean War, 1950-1953*. Boston: Little, Brown, 1990.
- Wicker, Tom. *Dwight D. Eisenhower*. New York: Times Books, 2002.
- Wukovits, John. *Eisenhower: A Biograph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6.
- Zhang, Shu Gu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53*. Lawrence: University of Kansas Press,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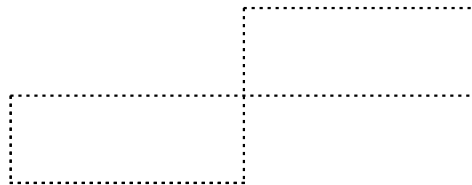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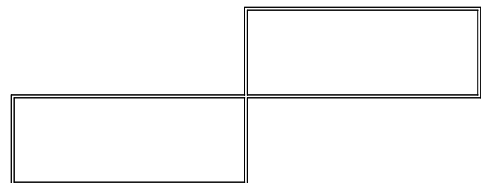
Section 2. 소련

민경현(고려대 역사연구소장), “스탈린과 한국전쟁”
토론: 황동하 (한국방송통신대)

캐서린 웨더스비(존스홉킨스대), “북한과 정전협상”
토론: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마크 크레이머(하버드대 데이비스센터 냉전 연구
프로젝트), “스탈린의 죽음과 한국 전쟁 종결의
결과”

토론: 구자정(대전대)



스탈린과 한국전쟁의 기원-I

민경현

고려대 역사연구소장

I.

한국 분단이 없었다면 한국 전쟁은 없었다. 올해는 38선 주변에 군사분계선을 정하고 한국전쟁이 일단 멈춘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반도의 남과 북에 각각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1948년 8월과 9월이니 38선으로 한반도가 공식적으로 분단된 것은 65주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남과 북에 국민의 이름으로 주권을 행사할 정부가 구성되기 이전 이미 38선은 남북을 분할했고, 통행도 금지했다.

패망한 일본제국을 몰아내고 한반도 이북에 주둔한 소련군의 지도자, 스탈린의 한반도 정책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스탈린은 한반도를 분할하고 세계 차원에서 공산주의를 한반도에 실현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었을까? 한국전쟁은 소련의 세계 적화라는 거대한 음모 속에서 발발한 것이고 겉으로는 북한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련이 주동자였을까? 스탈린의 정책은 본래부터 세계 적화를 위한 대회 침략의 하나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스탈린은 한국전쟁의 발발에서 단지 부수적 역할을 했을까? 그리고 한국전쟁은 기본적으로 김일성이 소련의 의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한국인이 한국을 침략한” ‘내전’이었을까? 스탈린은 신중하고 사려 깊은 외교가였을까?¹⁾

한국전쟁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분단은 한반도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변 강대국의 지정학적 판단과 전략적 이해관계 안에서 결정되었다. 한국전쟁의 전개과정도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들의 한반도 전략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발표문은 냉전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시기 스탈린과 루즈벨트 그리고 스탈린과 트루만의 세계 전략과 협상 과정을 분석하여 한국전쟁의 뿌리인 한반도 분단 과정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1) 황동하, 「스탈린과 한국전쟁의 발발」, 서양사론 제79호, 2003, p.88

II.

1945년 8월 8일 북한으로 이동한 소련군은 8월 25일 평양에 입성하여 북한을 점령했고 미군은 9월 8일 남한에 상륙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반도는 남, 북 2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점령군 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38선이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점령 경계선으로 확정된 것은 트루만의 ‘맥아더 일반명령 1호’에 대해 스탈린이 긍정적으로 회신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애초 38선은 미국과 소련이 조선에서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군사 점령을 하는 분계선으로 작용했다.²⁾ 통설에 의하면 38선은 미국의 3개 부처 조정위원회(The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에서 근무하던 러스크(D. Rusk) 대령과 본스틸(C. Bonsteel) 대령이 1945년 8월 10일 자정 무렵 30분 만에 확정했다. 이렇게 황급하게 결정된 38선을 트루만은 8월 15일 스탈린에게 비밀전보를 통해 제안했고 스탈린은 이에 대해 하루도 주저하지 않고 시급하게 동의했다.

어떤 정치적 고려 때문에 미국은 38선을 이토록 황급하게 확정했고 소련은 주저 없이 동의했을까? 이미 그 전에 38선 확정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 결정되었다는 음모론은 크게 두 가지다.³⁾ 하나는 38선 결정이 알타 회담에서 밀약으로 진행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음모론은 처음 제기한 인물은 이승만이다. 이승만은 소련에게 한반도의 반을 양보한 38선 결정이 알타회담의 밀약에서 비롯되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승만은 더 나아가 알타회담에서 한반도가 미소에 의해 분할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소련의 참전에 대한 대가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소련에 이양했다고 주장했다.⁴⁾ 또 하나는 포츠담 합의설이다. 이는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38선 분할이 결정되었다는 주장이다. 포츠담 밀약설은 1946년 맥쿤(G. McCune) 등이 제기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라우터백(R. Lauterbach) 등은 알타에서 시작된 미소의 한반도 분할 논의가 포츠담에서 38선 분할로 이어졌다는 알타-포츠담 혼합설을 주장했다.

일본 음모설도 있다. 일본이 소련에 점령될 것을 두려워해 일부러 군 작전 관찰 지역을 변경하고 정보를 누설하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38선 분할을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고준석, 김기조, 하리마오 박, 도진순 등이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을 두

2) АВПРФ, Ф. 102 Оп. 1. Д.9 Л. 34

3) 정병준, 『한국전쟁』, 돌베개, 2006, pp. 125-126

4)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pp. 261-271

고 있다. 북한 역시 1945년 2월 일본 대본영이 38도선 이북의 일본군은 관동군 지휘하로, 이남의 일본군은 대본영 직할 야전군인 조선 주둔 제17방면군의 휘하에 두게 했고, 이러한 배치 변경에 따라 38선 분할이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⁵⁾

38선 분할의 발안자는 헐(G. Hull) 중장과 링컨(G. Lincoln) 준장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완범의 연구에 의하면 전략 정책 단장이었던 링컨 준장이 1944-1945년 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한반도 분할안을 준비했다. 미국은 1945년 초부터 한반도의 분할과 소련의 영향력 저지를 기획해, 한반도의 분할은 미국의 현실적 힘의 한계와 정치군사적 최대 목표를 적절히 타협하고 조정된 과정에서 파생되었다.⁶⁾

III.

알타협정을 통해 스탈린이 기획했던 강대국들의 협력 체제는 주요 전승국들이 세계 규모에서 전리품을 분할하고, 세계의 전장을 세력 범위별로 구분하고, 자국 주변에 우호지역 또는 중립지대를 확장하는 전통적 방식이었다. 스탈린의 외교 구상은 제정 러시아의 외교정책과 아주 유사했다. 스탈린의 주요 관심은 우선 유럽이었다. 2차세계대전 독일과의 전쟁에서 미국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소련에게 동유럽은 소련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공간이었다. 동유럽은 소련의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세계혁명을 실현하는 목표를 동시에 완성시킬 수 있는 지역이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소련은 동유럽 문제에서 미국에게 조금도 양보할 수 없었다. 반면에 극동의 전장에서 미국이 일본과 격렬한 전쟁을 치렀던 시기 군사적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던 소련에게 극동 문제는 동유럽 문제에 비해 부차적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유럽에서 소련이 경쟁해야 했던 국가들은 전쟁 승전국이지만 전쟁으로 심각하게 약화된 프랑스와 영국이지만, 극동에서 소련이 상대해야 하는 경쟁 국가는 초강대국 미국이었다.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뚜렷한 영토 야욕을 지니고 있었다. 루즈벨트는 미국이 일본을 단독으로 관리하기를 원했고, 전쟁 기간 일본이 점령한 섬들에 대한 관할권(jurisdiction)도 획득하기를 원했으며 중국에도 미국에 의존적인 통일 정부가 구성되기를 바랐다. 스탈린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소련의 팽창주의 전략을 유럽과 극동에서 다르게 조절함으로써 미국과 균형을

5) 허종호, 『미제의 극동침략정책과 조선전쟁』, 사회과학출판사, 1993, p.47

6) 이완범, 『삼팔선 확정의 진실』, 지식산업사, 2001

이루려고 구상했다.⁷⁾

알타회의에서 스탈린이 대일전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1904년 러일전쟁 패전으로 러시아가 상실했던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은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미 소련대사 리트비노프(M. Litvinov)에게 소련군의 참전 필요성을 시사했을 만큼⁸⁾ 미국에게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1943년 테헤란 회담에서 스탈린은 루즈벨트에게 현재는 소련군이 서부전선에 얽매어 있지만 독일이 패망하면 극동에서 시베리아군을 3 배로 증강하여 연합군에 합류할 것이라고 했다.⁹⁾ 그러나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소일중립조약이 아직 유효했다. 남방으로 진출하려는 일본과 서부전선에서 막대한 군사력이 요구되던 소련은 1941년 4월 13일 모스크바에서 5년 기한의 소일중립조약을 체결했다. 소일중립조약 과기를 무릅쓰고 대일전에 참가하기로 한 스탈린의 구상은 무엇일까?

미국은 1944년 9월 28일 소련측에 대일전에 참전하는 소련군의 주요 목표가 관동군을 괴멸시키는 작전이고, 이 작전을 통해 일본 본토와 만주 간 보급로가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1944년 10월 17일 해리만(W. A. Harriman) 대사에게 아시아에서의 대규모 지상작전 계획을 설명하면서, 미군이 소련군과 함께 합동작전을 고려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에 대해 해리만 대사가 미국은 그런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오직 소련군만이 만주에 동원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일본군을 패퇴시키려면 소련군이 만주 지역 안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여러 방향으로 만주에 공격을 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북부 항구들을 소련군이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 해군은 동해(Sea of Japan)에 머무르기를 원했다.¹⁰⁾ 알타 회담 시 참모총장 회의에서 미국 측은 소련측에게 이 공격 계획의 변경 여부를 문의했고, 소련 측은 이 공격 계획에 관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하고 기정사실화했다.

7) Kathryn Weathersby,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1945-1950: New Evidence from the Russian Archives", CWIHP Working Paper, N.8, 1993, pp. 9-10

8) World Peace Foundation, 1952, Documents on American Foreign Relations, 1941-42, vol. IV, pp. 609-610

9) FRUS, Cairo and Tehran, pp. 478-480

10) Herbert Feis, *Churchill-Roosevelt-Stalin: The War They Waged and The Peace They Sought*, Princeton, 1967, pp.464-5

IV.

스탈린은 중국 지역에서 만주의 대련항과 여순항 그리고 동청철도에 대해 영향력을 회복하고 외몽고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를 원했다. 외몽고의 현상 유지란 외몽골이 중국에서 독립해 소련의 안보권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물론 동유럽 지역에 대한 소련의 팽창주의 전략에 비교하면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의 국민당 지도자인 장제스(蔣介石)에게는 치욕이며 재앙이었다.¹¹⁾ 스탈린은 소련과 중국 국민당이 우호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얄타협정의 결정에 의해 1945년 국민당과 우호조약을 협상하는 자리에서 중국측 협상단 대표인 외무부장 쑹즈윈(宋子文)에게 이렇게 말했다. “과거 러시아는 중국을 분할하기 위해 일본과 동맹을 맺고자 했다. 이제 우리는 일본을 제압하기 위해 중국과 동맹을 맺으려 한다.”¹²⁾

일본 지역에 대한 스탈린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일본에 대한 소련의 목표는 쿠릴열도와 남사할린섬을 되찾는 일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스탈린은 얄타협정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일본 본토에 관한 일이었다. 이에 대해 양자는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했다.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단독 점령하는 것만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소련의 확장을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소련의 목표는 일본 본토를 점령하고 관리하는 일을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합의가 아니라 협의할 수도 없을 만큼 상이한 양국의 목표는 향후 각각의 전장에서 힘겨루기를 통해서 조정될 수 있었다.

얄타 회담 시기 스탈린은 한반도에 관해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단지 스탈린은 루즈벨트로부터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고, 루즈벨트의 신탁통치 안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러나 신탁통치 안은 구두로 동의되었을 뿐 명확하게 규정되지는 않았다.¹³⁾ 루즈벨트와 스탈린의 시선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미국은 한반도를 고려했고, 스탈린의 관심은 일본 본토에 있었다.

얄타 회담에 대비하여 미 전쟁부의 작전국 전략정책단(Strategy and Policy Group)이 1945년 1월 ‘전후 일본의 점령과 관리(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 in the Post Defeat Period)’라는 이름으로 준비한 보고서는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한 후

11) J. Garver, *Chinese-Soviet Relation, 1937-1945: The Diplomacy of Chinese Nationalism*, New York, 1988, pp.212-214

12) FRUS, 1945, pp. 910-914

13) FRUS, 1945, p.770

한반도에서 지역분할체제(system of zoning)가 미국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한반도에 관해 소련의 단독 지배를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소련에게는 동북방 2-3 개 도, 영국에게는 서북방 3 개 도, 중국에게는 제주도 포함하여 서남방 3 개 도, 미국은 나머지 5 개 도를 각기 점령하게 한다는 것이다. 알타 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이 한국 문제에 관해 유일하게 합의한 신탁통치 안이 미국 측에게 소련의 한반도 단독 점령을 방지하는 한 수단이었던 것처럼 소련 측에게도 신탁통치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견제하고 극동 지역에서 소련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1945년 6월 소련 외교부 제2극동아시아국에서 작성한 보고서¹⁴⁾에는 한국인들이 완전한 주권 회복과 독립을 위한 조건들을 회복하기를 희망하면서, 소련 정부가 당연히 제안해야 할 내용은 한반도에 대한 연합군 점령 이후 한반도는 반드시 미국, 소련, 영국, 중국 등 4 개 강국의 신탁통치를 받아야 하고, 이 신탁 통치의 목적은 한국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독립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독립은 한국이 미래에 일본 또는 극동 지역에서 소련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어떤 다른 세력의 침략 기지로 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독립과 소련 극동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소련과 한국이 밀접한 우호관계를 수립하는 일이다. 이 보고서는 1945년 소련의 목표가 단지 조선에 대한 공동관리라는 방식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소련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었음을 보여준다. 1945년 소련의 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소련에게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은 통일 정부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1945년 12월 20일 소련 외무부 장관 몰로토프가 미국 국무장관 번스(J. F. Byrnes)와 영국 외무부장관 베빈(E. Bevin)에게 보낸 문서는 당시 소련이 조선에서 선거를 통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독립국가를 재건하려는 계획의 내용을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한반도 남북에 각각 진주한 미군과 소련군 사령부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정당과 사회단체와 협의하고 임시정부에 이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가 민주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해 독립국가를 건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¹⁵⁾ 스탈린의 목표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었다. 스탈린의 전략은 오히려 더 복잡했는데 그것은 일부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는 것을 전제로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의 이익과 영향력이 균형을 이

14) Kathryn Weathersby, op.cit., pp. 11-12

15) ABПPΦ, Ф. 102 Оп. 1. Д.1, Л. 2-4

루도록 하는 것이다.

루즈벨트는 전시 소련과 유지했던 협력 관계가 전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러한 태도는 대소 관계에서 강경책을 선호했던 국무부를 자주 회의에 배제시키면서까지 유지되었다. 루즈벨트는 미국이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전후 처리문제와 관해 발언권과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지만, 그 무게는 미국의 군사적 성취에 비례할 것이므로 미군이 특정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 그 지역의 미래를 논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다.¹⁶⁾ 한편 스탈린이 한국 문제에 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이유는 소련이 대일전에 참가할 경우 한반도의 북쪽 항구들을 점령할 의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문제의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소련군의 한반도 점령 계획에 제약 조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더욱이 한반도는 소련과 인접했기에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단지 두만강만 건너면 되었으므로 한반도를 점령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V.

알타 회담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 체제는 곧 난관에 봉착했다. 우선 서부 전선에서 소련의 승리가 점점 확실해지면서 외교 무대에서 소련의 태도가 점점 더 경직되기 시작했다.¹⁷⁾ 또 하나는 소련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루즈벨트의 사망과 트루만 행정부의 출범이다. 트루만의 주요 참모들은 팽창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소련에 대한 불신으로 대소 강경책을 건의했고 트루만 역시 이를 수락했기 때문이다.¹⁸⁾

트루만 행정부의 대소정책을 실행에 옮기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 문제였다. 루즈벨트 행정부가 그토록 희망했던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이 시점에도 계속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트루만의 참모들은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다. 모스크바 주재 미국 군사사절단 단장인 딘(W. Dean) 장군은 1945년 4월 16일 보고서에서 소련과의 군사적 협력은 미국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¹⁹⁾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 전쟁부(War Department)와 현지 사령관의 의견은

16) A. Iriye, *The cold war in Asia : A Historical Introduction*, New Jersey, 1974, p.72

17) H. Feis, op. cit., pp. 561-570

18) H. Truman, *Memoirs: Year of Decisions*, vol. 1., New York, pp.70-72

19) U. S. Department of Defense, "The Entry of the Soviet Union into the War against Japan", pp. 60-61

달랐다. 1945년 5월 전쟁부 장관 스티imson(H. Stimson)은 소련의 참전은 전쟁 기간을 단축시키고 많은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맥아더 장군도 1945년 2월 미군이 일본 본토를 공격하기 전에 최대한 일본군이 아시아 대륙에서 발목이 잡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미군의 전략상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렸다.²⁰⁾

트루만은 이 중에서 전쟁부와 현지 사령관들의 견해를 더 중시했다. 트루만은 대소 강경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못지않게 태평양전쟁의 조속한 종결을 희망했기 때문이다. 트루만이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필요로 한 이상, 이제는 이로 인해 야기되는 정치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당시 전쟁부와 맥아더는 소련군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만주와 한국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었다.²¹⁾ 국무부 또한 소련의 대일전 참전으로 이러한 상황이 야기될 것을 우려했다. 그류(J. Grew) 국무부 장관 대리는 스티imson 전쟁부 장관에게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기 전에 소련 정부로부터 4대국(미, 영, 중, 소) 신탁 통치 실시에 대해 명백한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스티imson도 이에 동의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트루만은 소련측과의 협상 대표로 홉킨스(H. Hopkins)를 선정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친소파였으며 1941년 7월부터 줄곧 스탈린의 특별한 신임을 받았던 홉킨스는 1945년 5월 25일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스탈린과 여러 차례 장시간 회담을 진행했다. 우선 이 회담에서 두 사람은 한국에 미, 영, 중, 소 4 대국 신탁통치를 실시할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도 스탈린이 홉킨스의 주장에 단순히 동의해 준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스탈린은 이 회담에서도 한국 신탁통치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으로부터 한국에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확인을 다시 받음으로써 소련을 정치적으로 구속하는 데 일단은 성공했다. 이 회담 중에 스탈린은 홉킨스에게 소련이 대일전에 8월 8일자로 참전하겠다는 극비 정보를 전달했다. 스탈린은 그 정보와 함께 중요한 질문을 던져 소련의 의사를 미국에 전달하고자 했다. 홉킨스에게 스탈린은 소련이 일본 본토 점령에 참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본 본토 분할에 참가할 수 있는지를 질문했다.²²⁾

포츠담 회담 직전까지 한반도 점령 문제는 다시 한 번 미국 행정부 내의 중요한 의제였다. 육군 참모총장 마셜(G. Marshall) 등 주요 군부 지도자들은 한반도에

20) Ibid. pp. 50-51

21) Ibid. 51-52

22) Jean-Baptist Duroselle, André Kaspi, *Histoire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e 1919-1945*, Paris, 2008, p.414

서의 군사작전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련군에게 군사작전 일체를 맡기기로 결정했다.²³⁾ 소련군이 한반도를 점령할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신탁통치라는 장치를 통해 소련에 대한 한국의 예속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판단이었다. 홉킨스와 스탈린이 모스크바에서 계획했던 포츠담 회담에서 한국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신탁통치 문제를 놓고 스탈린과 처칠 사이에 논쟁이 있었지만 주요한 대립은 한국 보다는 이탈리아 식민지 리비아의 신탁통치 문제였다.²⁴⁾ 포츠담 회담은 연합국의 전시 회담 가운데 마지막 회담이었지만 한국의 신탁통치 문제를 미국이 거론하지 않은 첫 번째 회담이기도 하다. 포츠담 회담은 또한 공군과 해군 작전에 제한되었지만 한반도에서 미국의 진격작전이 언급된 최초의 회담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소련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던 신탁통치 문제를 트루만은 왜 애써 외면했을까? 한반도에서 미군의 군사작전이 최초로 계획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포츠담에 도착한 다음 날 트루만에게 원자폭탄 실험 성공 소식이 도착했다. 이때부터 트루만은 일본을 패배시키는 데 더 이상 소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트루만은 소련의 한반도 단독 점령을 방지할 방법으로 고안된 신탁통치 안을 고려하는 대신 한반도 군사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포츠담 회담 진행 중에 마샬은 전쟁부 작전국장인 헐(J. Hull) 중장에게 미군을 한국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 한반도 진격 작전을 위해 헐은 이때부터 미국과 소련의 군사 경계선 획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²⁵⁾

VI.

소련의 참전은 예정대로 8월 8일이었고, 최초의 원폭 투하는 8월 6일이었다. 8월 15일 38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는다는 내용의 항복명령서가 스탈린에게 전달되었을 때 소련군은 이미 38선을 넘어 서울로 진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스탈린은 이 명령서를 받자마자 38선 이북으로 소련군을 철수시켰다. 미군은 아직 600 마일 떨어진 오키나와에 있었다.

스탈린은 왜 38선 안을 받아들였을까? 스탈린이 38선 안을 받아들인 데에는

23) U. S. Department of Defense, "The Entry of the Soviet Union into the War against Japan", pp. 77-80

24) Jean-Baptist Duroselle, André Kaspi, op. cit., p.414

25) R.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1961, pp.2-3

조건이 있었다. 일본의 쿠릴 열도에 속하는 모든 섬과 일본 본토의 후카이도 북부 점령이었다. 스탈린은 트루만에게 보낸 8월 16일 서한에서 만약 이 요구를 거절한다면 러시아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이 의견에 대해 트루만이 반대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강력히 표현했다. 스탈린은 일본 본토 38선 이북 지역을 소련군이 점령함으로써 미국의 한반도 38선 이남 지역 점령을 교환하려 했다. 그러나 트루만은 일본 본토에 대한 소련의 개입을 용납할 수 없었다. 원자폭탄 투하 이후 미국 행정부의 대소 외교는 전례 없이 강경해졌고 스탈린은 한반도 남부를 미국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오는 데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북한과 정전 협상 (North Korea and the Armistice)

캐서린 웨더스비
존스홉킨스대

한국전쟁이 가지고 온 수많은 결과들 가운데, 지속적인 추세는 전쟁 기간 동안 북한 지도부가 동맹국들에게 취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과 그의 측근들이 공산권의 예하 일원으로써 자신 있게 전쟁을 일으켰지만, 비참한 전쟁의 결과로 인해 그들은 명백히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동맹국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무시한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그들은 적어도 전쟁이 북한 인민들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라고 선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북한은 동맹국들이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원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대범한 원조 요구를 제시했다. 외부 세력에 대한 원망과 특권의식에 대한 평양의 독특한 조합은 전후 기간 동안 심화되었고, 동맹국들의 분노와 반발을 샀다.

본고는 2년 동안의 정전 협상 기간 동안 공산권의 전쟁 수행 방식이 북한의 동맹국에 대한 독특한 자세를 형성해왔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양은 협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북한에게 발생하게 될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강요에 의해서 전쟁을 지속해야만 했다. 동시에, 사회주의권이 재무장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미군을 한국에 묶어놓으려고 했던 소련과 중공의 결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충분한 원조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했다. 그런 고로, 북한 지도부는 그들의 무력함에 분노했더라도, “미국 제국주의”의 첫 번째 희생양이자 전 지구적인 반제국주의 투쟁의 최전선이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수한 지위”가 명백하게 무제한적인 원조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믿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위는 나아가 그들이 공산권 동맹국들과의 필수적인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자립”-주체-라는 이단적인 이념적 입장을 취하도록 만들었다.

본고는 주로 필자가 모스크바 소재 문서보관소에서 확보한 러시아 문서에 기반을 두고 작성했다. 필자가 조사한 문서보관소는 다음과 같다: 소련 외무성의 기록

을 보관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 대외 정책 문서보관소, 러시아 현대사 문서 보존 및 연구소,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문서 저장소,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된 소련의 한국 개입과 관련된 고위급 문서 모음집. 처음 두 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문서의 대부분은 본 논고에서 처음 논의되고 있다. 본고의 러시아 연방 대외 정책 문서보관소와, 러시아 현대사 문서 보존 및 연구소 자료는 최초로 소개된다. 대통령 기록관의 자료는 최근에 다른 글에서 소개되었지만 본고에서는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정전 협상에서 공산권 동맹국의 역할

중국의 역사학자 선지화(沈志華)가 제시하였듯이, 중공군이 1950년 10월에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키려고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은 전쟁의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이 과정은 남한에서 미국이 참전한 것처럼 매우 예측 가능한 것이었지만, 김일성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초기에 김일성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합지휘권체계 수립 요구를 반대했다. 스탈린이 중국의 계획에 찬성하고 나서야 김일성은 평더화이(彭德懷)가 지휘를 주도하고 북한이 보조하는 합동 지휘권체제 구축에 동의했다. 거기에다가 중국 지휘관들과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얼마나 전진할 것인지, 철도에 중점을 둔 북한 인프라 시설 관리 등과 같은 문제 해결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중국과 북한 지도부들이 갈등할 때마다 쟁점의 해결은 스탈린에게 맡겨졌고 소련 지도부는 항상 중국을 지지하였다.¹⁾

동맹국의 기본적인 의사결정구조는 정전 협상에서도 유지되었지만, 예외적으로 스탈린이 이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소련 지도부가 외교적 협상에 있어서 마오쩌둥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고 소련의 이해관계가 UN 사령부와의 협상에 더욱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은 군사전략보다 협상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 그런 이유로 UN 군 사령관 매튜 리지웨이(Matthew Ridgway)가 1951년 6월 김일성에게 협상을 제의했을 때 (당시 중공군은 “의용군”의 자격으로 참전하였고 소련은 공식적인 교전국이 아니었다.)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대응책을 요구하는 서신을 작성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 지도부는 북한 지도자만이 합의한다면 미국이 이를 심각하게

1) Shen Zhihua, “Sino-North Korean Conflict and its Resolution during the Korean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14/15 (Winter 2003/Spring 2004): 9-21.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조약은 김일성과 평덕화이(彭德懷) 양측 모두가 서명해야 한다는 문안을 보냈다.²⁾ 중국과 북한이 협상 준비에 착수하면서, 그들은 조선인민군 참모총장인 남일이 대표단을 이끄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북한이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협상 의제 허락을 요청했을 때, 소련의 지도부는 그가 협상안을 중국과 논의하지 않았음을 질타했다.³⁾

협상이 시작되자, 의사소통 채널은 논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고서와 지령사항 요청서를 마오쩌둥에게 보낸 중국측 수석 대표 이극농(李克农)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보고서 사본들이 김일성과 평덕화이(彭德懷)에게 전달되었다. 마오쩌둥은 이 보고서와 요청서들과 더불어 자신이 이극농에게 보낸 답신을 스탈린에게 전달했다.⁴⁾ 평양 주재 기자들의 기사에서 언급 되었듯이, 마오쩌둥은 이극농에게 확실히 낮은 수준의 사안은 김일성의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했다.⁵⁾ 그러나 특정 중요 사항들에 대해 이극농은 이따금 마오쩌둥과 논의했고, 김일성에게 보고서의 사본을 보내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51년 8월 13일, 이극농은 마오쩌둥에게 군사분계선 결정을 둘러싼 논쟁에서 적군의 의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공산권 측이 펼쳐야 하는 전술을 담은 장문의 서신을 보냈다. 이극농은 이 문제에 관해서 마오쩌둥의 지

2) Ciphred telegram from Stalin to Mao Zedong, 30 June 1951, Archive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hereafter APRF], Fond 45, Opis 1, Delo 339, Listy 95-96. Also found in Archive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hereafter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4, Papka 11, Listy 14-15. For the text of the document see 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6/7 (Winter 1995/1996): 64-65. This document, as well as others cited below, has two archive locations because copies of the collection of documents on the war assembled in preparation for President Yeltsin's gift of such documents to ROK President Kim Young Sam in July 1994 were deposited in the Foreign Ministry Archive, Fond 059a. Since foreign researchers do not have access to the Presidential Archive, it is particularly helpful that a copy of this collection was placed in the Foreign Ministry archive.

3) Ciphred telegram from Stalin to [Soviet Ambassdor to the DPRK] Razuvaev with a message for Kim Il Sung, 1 July 1951, APRF, Fond 45, Opis 1, Delo 340, List 5. For the text of the document, see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p. 65.

4) See, for example, Ciphred telegrams from Mao Zedong to Stalin, 31 July 1951 (APRF, N 67 II, N 68 II, N 69 II); 2 August, N 70 II); 3 August 1951 (APRF, N 72 II); 4 August 1951 (APRF, N 73 II); 5 August 1951 (APRF, N 74 II, N 75 II); 11 August 1951 (APRF, N 77 II); 12 August 1951 (APRF, N 78 II, N 79 II, N 80 II); 13 August 1951 (APRF, N 81 II, N 83 II); 15 August 1951 (APRF, N 84 II); 17 August 1951 (APRF, N 85 II, N 86 II, N 87 II, N 88 II, N 89 II); 20 August 1951 (APRF N 91 II); 19 October 1951 (APRF, N 95 II); 25 October 1951 (APRF, N97 II, N 99 II, N 100 II); 26 October 1951 (APRF, N 101 II, N 102 II); 31 October 1951 (APRF, N 103 II); 1 November 1951 (APRF, N 105 II, N 106 II); 22 November 1951 (APRF, N 108 II, N 109 II); 30 July 1951 (APRF, N 65, II).

5) Ciphred telegram from Mao Zedong to Stalin, 2 August 1951 (APRF, N 71 II).

령을 긴급하게 요청했고, 이를 북한과 상의했다고 기록하지 않았다.⁶⁾ 이후 협상과정 도중에서, 1952년 9월에 멕시코가 전쟁포로의 본국 송환 문제 해결안을 제시했을 때,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대응책 지시를 요청했다. 스탈린은 이에 답했지만, 김일성의 의견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⁷⁾

다른 중요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스탈린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김일성의 제안을 포함시켰지만, 소련 지도자들은 북한의 견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51년 8월 22일 개성의 협상 장소에 대한 공격 이후에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대표단이 일시적으로 협상을 중단했음을 알렸고, 자신들이 중립국 대표단을 초청하여 협상 장소를 감시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제안과 더불어 당시 상황에 대한 중국의 평가를 전달했다.⁸⁾ 스탈린은 중국 지도부의 협상 장소 공격에 관한 정황 평가에 동의하였지만, 중립국 대표자들을 감독관으로 초대하자는 김일성의 제안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이 중국-북한 측이 자신들보다 더욱 급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찬성하지 않았다. 스탈린은 만약 마오쩌둥이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다면, 마오쩌둥이 이 견해를 김일성과 논의했을 것이라고 비웃었다.⁹⁾ 예상대로, 마오쩌둥은 소련 지도부의 입장에 동의하고 자신이 이와 관해서 “이미 김일성 동무와 논의했다”고 스탈린에게 전했다.¹⁰⁾ 즉, 스탈린은 주요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마오쩌둥과 논의했고, 중국 측이 스탈린의 결정을 김일성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6) Ciphred telegram from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conveying the 12 August 1951 telegram from Li Kenong to Mao regarding the armistice talks (APRF, Fond 45, Opis 1, Delo 341, Listy 56-58). For the full text see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pp. 67-68.

7) Hand-delivered note from Zhou Enlai to Stalin conveying telegram from Mao to Zhou, 16 September 1952, APRF, Fond 45, Opis 1, Delo 343, Listy 94-96, and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5, Papka 11, Listy 96-98. Hand delivered letter from Filippov [Stalin] to Mao Zedong, 17 September 1952, APRF, Fond 45, Opis 1, Delo 343, Listy 97-103 and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5, Papka 11, List 99. For the full text see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p. 79.

8) Ciphred telegram from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APRF, Fond 45 Opis 1, Delo 340, Listy 86-88 and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5, Papka 11, Listy 51-53. For the text of the document, see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pp. 68-69.

9) VSP9b) CC Politburo decision with approved message from Filippov [Stalin] to Mao Zedong, 28 August 1951, APRF, Fond 3, Opis 65, Delo 829, Listy 4-5 and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5, Papka 11, Listy 54-55. The telegram was sent to Beijing on 29 August. For the text of the document, see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pp. 69-70.

10) Ciphred telegram from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30 August 1951, APRF, Fond 45, Opis 1, Delo 340, List 97 and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5, Papka 11, List 56. For the text of the document, see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p.70.

이따금 마오쩌둥은 1951년 10월의 경우처럼 이극농에게 회담 재개 시점 등의 사항에 관하여 김일성의 입장을 베이징에 알려달라고 지시했다.¹¹⁾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김일성의 답변은 그가 이 요청을 형식적인 것으로 보았음을 시사한다. 마오쩌둥에게 보낸 그의 서신은 “나는 10월 24일 협상 과정에 대한 당신의 전보를 받았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한다.”¹²⁾라고 적혀있을 뿐이었다. 마찬가지로, 38선을 분계선으로 삼으라는 예전의 주장을 거절한 이유에 관한 1951년 11월 14일 스탈린에게 보낸 장문의 서신에서, 마오쩌둥은 김일성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에는 그가 동의한 것이다.”¹³⁾

간혹 동맹국이 김일성의 의견을 고려했지만, 소련은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북한의 노력을 강제로 저지했다. 1951년 11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박헌영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허락 없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UN에게 즉각적인 군사 활동 중지를 제안했다. 박헌영은 군대의 전선 철수, 2킬로미터 폭의 비무장지대 창설, 그리고 전쟁의 장기화라는 죄를 범한 자들의 행동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박헌영의 호소에 놀란 소련 정치국은 그 방송을 허용한 책임을 물어 평양 주재 소련 대사를 즉각적으로 해임했고, 북한에게 그 공세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 소련 정치국은 라주바예프(Razuvaev)대사에게 박헌영의 이러한 성명은 “미국의 협박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불리한 중국-북한 측에 대한 나약함의 상징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해명하였다.¹⁴⁾

1953년 3월 5일 스탈린 사망 이후 전쟁 관련 러시아 기록은 모스크바에서 정권을 잡은 새로운 집단 체제의 지도부가 김일성의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했음을 보여준다. 1953년 3월 25일, 스탈린의 측근이었던 몰로토프(V. Molotov)는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에게 자국 전쟁 포로 정보를 요구하는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수긍하라는 모스크바의 제안에 대한 김일성의 답변을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¹⁵⁾

11) Ciphared telegram from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25 October 1951 (APRF, N 98 II).

12) Ciphared telegram from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31 October 1951, transmitting the reply from Kim Il Sung (APRF, N104 II).

13) Ciphared telegram from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14 November 1951, APRF, Fond 45, Opis 1, Delo 342, Listy 16-19. For the text of the document, see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pp. 70-71.

14) Politburo decision with approved message from Gromyko to Razuvaev, 19 November 1951, APRF, Fond 3, Opis 65, Delo 829, Listy 44-45 and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5, Papka 11, Listy 65-66. Gromyko to G.M. Malenkov, attaching draft telegram to Razuvaev, APRF, Fond 3, Opis 65, Delo 829, Listy 46-48 and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4, Papka 11, Listy 27-29. For the text of the documents, see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pp. 72-73.

15) Ciphared telegram from Molotov to Soviet Ambassador in North Korea, 25 March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소련은 의사 결정 과정을 통제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기로 결정한 3월 19일에 소련 장관급 회의는 정전에 동의해야만 하는 단계까지 다다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침이 담긴 서한을 마오쩌둥과 김일성에게 전달할 것을 승인했다.¹⁶⁾

정전 협약 서명 이전에 모스크바는 북한에게 김일성이 판문점을 방문하여 조약을 체결하지 말도록 요청했는데, 이는 남한이 반 김일성 도발을 일으킬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¹⁷⁾

장기화된 전쟁의 효용성

모스크바는 앞서 언급한 1951년 11월 박헌영의 즉각적인 전시상황 중지 요청에 당황했다. 그 이유는 1951년 초반에 중공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점령 위협을 제거하자마자 스탈린이 한국에서의 전쟁을 소련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루마니아 문서보관소 자료에 따르면 1951년 1월 스탈린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실패에 따라 야기된 기회를 논의하고자 동유럽 동맹국의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과의 모스크바 비밀 회담을 소집했음을 보여준다. 소련의 독재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이 무적의 강대국이고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견이 최근에 제기되었다.”

하지만, 미국이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국과 같은 소규모 전쟁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국이 전쟁준비에 몇 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아시아에 빠져 있으며 몇 년 동안은 그곳에 묶여있을 것이다.

미국이 향후 2~3년 동안 아시아에 묶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와 세계의

1953, APRF, N 78, I.

16) Resolution, USSR Council of Ministers with draft letters from Soviet Government to Mao Zedong and Kim Il Sung and directive to Soviet delegation at United Nations. 19 March 1953, APRF, Fond 3, Opis 65, Delo 830, Listy 60-67, and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4, Papka 11, Listy 54-65. For text of the document, see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pp. 80-83. For a report on Kim Il Sung’s statement of full agreement with Moscow’s decision, see Ciphred telegram from Kuznetsov and Fedorenko in Pyongyang, 29 March 1953,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5, Papka 11, Listy 120-122.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p. 83.

17) To Presidium of the TsK KPSS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to Comrade G. M. Malenkov and Comrade N.S. Khrushchev, from V. Molotov, 23 July 1953, APRF, No 88, I.

혁명적 운동에 있어서 유리한 상황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2~3년은 우리가 반드시 요긴하게 활용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도 그러하다. 미국은 거대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의 해군은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을 수가 없다. 미군은 현대적인 공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들 보다 약하다.

우리의 과제는 앞으로의 2~3년을 우리의 의지에 따라 활용하여 현대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실현할 수 있고, 모든 조건들을 갖추었다. 중국은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보다 더 나은 육군을 만들어냈다. 약한 군대를 갖는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 상황은 반드시 역전되어야만 한다.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의 당신들은, 2~3년 이내에, 반드시 3년 이내에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된 현대적이고 강력한 육군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스탈린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3년은 숙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장, 바람직한 무장을 위한 것이다. ... 이는 제국주의자들의 사고방식에 비춰보았을 때 필요하다. 그들은 무장하지 않거나 약한 무장 국가들을 침략하여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데 익숙하지만, 무장한 나라들에게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휴식 기간 동안 잘 무장하여 제국주의자들이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으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¹⁸⁾ 1951년 동유럽 공산국들과 소련은 이에 따라 급속하고 거대한 재무장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해에 최고조에 달하였다.

스탈린이 2~3년을 언급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전쟁에 개입할 기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예측으로 보여진다. 결국, 그는 1951년 봄에 중공/북한의 완벽한 승리를 방해할 수 있을 만큼 UN군이 반등할 것을 알지 못했거나 미국이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전 협상 조건을 요구할 것임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스탈린은 한국전쟁이 공산주의권에게 안겨준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쟁을 2~3년 연장하려는 의도를 언급했을 때, 앞으로의 전쟁 전개 과정을 충분히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오쩌둥이 1951년 11월 14일 예상된 회담이 1년 반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것임을 소련 지도자에게 알렸을 때 스탈린은 이미 이를 인정했고, “비

18) Notes by Emil Bodnaras on the meeting with Stalin in Moscow, 9-12 January 1951, published in C. Cristescu, “Ianuarie 1951: Stalin decide inarmarea Romanei” [January 1951: Stalin Decides to Arm Romania], *Magazin Istoric* [Bucharest], no. 10 (1995): 15-23. Translated by Vladimir Socor. The author is grateful to Vojtech Mastny for providing a copy of this document.

록 미국이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협상을 우선적으로 끝내야만 하는 이유를 갖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국제 정세를 고려한 것이다.” 미국이 전쟁의 재빠른 종식을 거부한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소련 지도부가 “중국/북한 측이, 유연한 전술을 펼치고 ... 강경노선을 지속하며 주저하거나, 협상의 빠른 종결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달했다.¹⁹⁾

마오쩌둥 또한 중국이 전쟁 이후 정치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지속하기로 결심했지만, 1952년 초반 북한 지도부는 그들의 고난을 끝내려는 열망을 담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의 폭격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952년 1월 16일 박헌영은 평더화이에게 “온 나라의 조선인들은 평화를 원하며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충성스런 공산주의자인 박헌영은 “만약 소련과 중국이 전쟁을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북조선] 노동당의 중앙 위원회는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것이자 자신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²⁰⁾

또 다른 6개월 동안, 진전 없는 협상과 지독한 폭격을 겪으면서,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대공 방어 강화와 공세적인 지상 및 항공 작전 준비를 통해서 북한의 고통을 덜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일성은 지난 1년간의 협상 기간 동안 “우리는 사실상 군사 작전을 축소시켰고 수동적인 방어 태세로 전환했으며,” 그 결과로 “적군은 어떠한 손실도 거의 입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커다란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의 사례로써 얼마 전에 발생한 북한의 모든 발전소 파괴를 들었다. 김일성은 미국의 폭격으로 인해 발전소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북한 경제는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일성은 6,000명의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7월 11-12일 평양 폭격을 언급했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서 적군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중국의 견해를 받아들였

19) Politburo decision of 19 November 1951, approving the attached answer to Comrade Mao Zedong, APRF, Fond 3, Opis 65, Delo 828[9], Listy 42-43, and AVPRF, Fond 059a, Opis 5a, Papka 11, Delo 5, List 64. For the text of the document, see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p. 72. For a more extensive discussion of the Soviet role in prolonging the armistice negotiations, see K. Weathersby “Stalin, Mao, and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Odd Arne Westad, ed., *Brothers in Arms: The Rise and Fall of the Sino-Soviet Alliance, 1945-1963* (Washington DC and Stanford CA: Woodrow Wilson Center Press an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90-116.

20) Ciphred telegram from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8 February 1952 conveying telegram of 22 January 1952 from Peng Dehuai to Mao and 4 February 1952 reply from Mao to Peng Duhuai. APRF, Fond 45, Opis 1, Delo 342, Listy 81-83. For the text of the document, see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pp. 75-76.

지만, 더욱 공세적인 군사 작전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동시에 가장 빨리 정전, 사격중지 그리고 제네바 협정에 따라 전쟁 포로 교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표명했다.²¹⁾ 김일성은 분명한 자기 의사를 이극농에게도 알렸는데, 이는 마오쩌둥이 곧바로 정전협정의 즉각적인 체결에 대한 북한 지도자의 제안을 거절한다고 전달했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은 “우리가 적의 폭격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적의 도발적이고 기만적인 제안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다.” 마오쩌둥은 적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단점은 더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의 인명손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에 개입한 이후로, 마오쩌둥은 “전 세계 평화 진영에 대한 최전선 방어”에 한국 인민들이 선봉에 서 있으며 한국 인민들의 희생을 통해, 북한과 중국 동북부 지역이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방어되었다고 주장했다. 부수적인 이익은 바로 “한국과 중국의 인민들이, 특히 그들의 무장 병력이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의 경험을 획득하고 그 경험을 통해 단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었다.²²⁾

나아가 마오쩌둥은 한국 전쟁의 국제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쟁의 과정 속에서 강화된 조선 인민과 중국 인민들의 힘이 침략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전 세계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전 세계 평화를 지키려는 운동의 발전을 원활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지원은 “미국 제국주의의 원동력이 움직이는 것을 가로막고 동양에서 미 제국주의의 지속적인 패배로 이어질 것이다.” 나아가, 한국에 묶인 미군으로 인해 “전 세계 평화의 본거지”인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재건을 앞당길 수 있으며 “모든 국가의 인민들의 혁명적 운동 발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 대전의 지연을 의미할 것이다.”²³⁾

국제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었기 때문에, 마오쩌둥은 적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자신의 조선 “동생”을 나무랐다. “폭격의

21) Ciphred telegram from Kim Il Sung to Stalin via Razuvaev, 16 July 1952, APRF, Fond 45, Opis 1, Delo 348, Listy 65-68 and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4, Papka 11, Listy 40-43. For the text of the document, see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p. 77.

22) Ciphred telegram from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18 July 1952, conveying the telegram from Mao to Kim Il Sung on 15 July 1952 and the reply from Kim to Mao on 16 July 1952. APRF, Fond 45, Opis 1, Delo 343, Listy 72-75 and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5, Papka 11, Listy 90-93. For the text of the document, see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pp. 78-79.

23) *Ibid.*

압박 속에서 적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정치적이자 군사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을 것이었다. 적들은 영속적인 평화보다는 자신들을 더욱 압박하여 새로운 도발을 전개할 것이었다.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은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고, 적의 새로운 도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이 경우, 미국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전 지구적인 투쟁으로부터 얻은 이점을 상실하게 될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비록 적이 양보하지 않고 협상이 더욱더 연기되더라도, 혹은 적이 협상을 거부하더라도, 북한과 중국은 그들이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을 찾을 때까지 군사 작전을 지속해야만 했다.²⁴⁾

김일성은 마오쩌둥의 분석을 구체적으로 상술하지 않으면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동시에, 그는 또한 마오쩌둥의 “우리가 필요한 원조를 요청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마오쩌둥의 독려를 수용했다. 후자를 군사적 원조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한다면, 김일성은 자신들이 더욱 적극적인 군사 작전을 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들이 우리에게 군사적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악랄한 폭격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김일성은 대공포 화력 강화, 더욱 공세적인 북한 및 중국 공군 전술 도입과 더불어 지휘 능력 향상을 제안했다. 비록 스탈린이 1950년 11월에 소련 공군을 참전하게 했을 때 그 작전 범위를 압록강 인근으로 제한을 두었지만,²⁵⁾ 김일성은 동맹국의 전투기들이 이제는 작전 범위를 평양 근처까지 확대해야만 한다고 과감하게 선언했다. 동시에, 폭격기들 또한 적의 영역 깊이 들어가야 하며 보병 또한 전선을 따라 몇몇 지역에서 공세를 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²⁶⁾

마오쩌둥이 더욱 공세적인 작전에 관한 김일성의 제안에 답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 다음 달에 있었던 베이징에서의 국제 및 국내 문제들을 다루는 일련의 회담에서 저우언라이는 스탈린과 전황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그는 북한이 83,000명에 달하는 전쟁 포로들을 송환하라는 UN의 제안을 수용하여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²⁷⁾ 저우언라이는 중국이 북한의 견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24) *Ibid.*

25) For an examination of the Soviet air war based on documents from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se, see Mark O'Neill, “The Other Side of the Yalu: Soviet Pilots in the Korean War Phase One, November 1950–April 1951,” PhD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1996.

26) Ciphred telegram from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18 July 1952, conveying the telegram from Mao to Kim Il Sung on 15 July 1952 and the reply from Kim to Mao on 16 July 1952. APRF, Fond 45, Opis 1, Delo 343, Listy 72–75 and AVPRF, Fond 059a, Opis 5a, Delo 5, Papka 11, Listy 90–93. For the text of the document, see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pp. 78–79.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역사학자 첸 지안(Chen Jian)이 입증했듯이, 마오쩌둥은 전쟁포로 송환의 문제를 자신들의 이득으로 삼기 위해 전쟁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심각한 정치적 투쟁으로 받아들였다.²⁸⁾ 그리하여 저우언라이는 스탈린에게 북한이 “미국이 여기에서 벌이고 있는 교활한 계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83,000명 중 단지 6,400명만이 중국인이고 나머지는 조선인이다. ... 이는 그들이 중국과 북한을 분열시켜서 우리를 도발하려는 분명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저우언라이는 마오쩌둥이 모든 전쟁포로들이 송환되어야만 한다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송환이 논의되는 전쟁포로의 숫자보다 일상적인 인력의 손실이 더욱 크기 때문에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믿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마오쩌둥은 “전쟁의 지속은 미국이 새로운 세계 대전을 준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믿었다.”²⁹⁾

스탈린은 전쟁의 지속이 유리하다는 마오쩌둥의 의견에 찬성했고 북한이 “우리는 인민 말고는 잃은 것이 없다”³⁰⁾라는 인상적인 언급과 관련된 문제들을 무시해 버렸다. 중국과 북한은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스탈린은 선언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전쟁을 끝내야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공산권 동맹국들은 견디고 참아야만 했다. “물론” 그가 인정하길 “한국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그들은 수많은 희생을 치렀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사건임을 그들에게 설명해야한다. 그들에게는 끈기와 큰 인내심이 필요하다. 24개국의 군대는 한국에서의 전쟁을 영원히 지속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고 이 문제에 대한 성공을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³¹⁾

미국이 포기할 때까지 전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스탈린은 추가적인 무기와 보급품 제공으로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저우언라이에게 중국의 식량 상황을 문의했고, 소련이 북한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우언라이는 북한이 “이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7) Record of Conversation between Comrade I.V. Stalin and Zhou Enlai, 20 August 1952, APRF, Fond 45, Opis 1, Delo 329, Listy 54-72. Translation by Danny Rozas. For the full text of the document see “Stalin’s Conversations with Chinese Leaders,” *CWIHP Bulletin* 6/7 (Winter 1995/1996): 10-14.

28) Chian Jian, *Mao’s China and the Cold War* (Chapel Hill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arolina Press, 2001): 109.

29) Record of Conversation between Comrade I.V. Stalin and Zhou Enlai, 20 August 1952, APRF, Fond 45, Opis 1, Delo 329, Listy 54-72. Translation by Danny Rozas. *CWIHP Bulletin* 6/7 (Winter 1995/1996):12.

30) *Ibid.* Translation by the author.

31) *Ibid*

중국은 김일성에게 식량과 의복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무기는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보고했다. 스탈린은 재빠르게 북한에게 추가적인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그 틈을 매웠다. 소련 독재자는 “우리는 북한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³²⁾

정전 협상 관련 문제로 돌아와서, 저우언라이는 자신들이 미국에 양보할 수 없음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스탈린은 “만약 미국이 조금이라도 물러선다면, 협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둘러싸고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반대하였다. 저우언라이는 이에 동의했지만 “만약 미국이 평화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일 년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전쟁 지속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스탈린은 전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중국의 결심에 동의하였다. 그러자 저우언라이는 “본 전쟁은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자 미합중국은 세계 대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소련 지도자의 견해에 자신이 동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당하게 “이 전쟁에서 선봉대의 역할을 맡아서,” 중국이 15년에서 20년 동안 또 다른 세계 대전을 저지하고 있다고 더했다. 그 시점에서 “미합중국은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³³⁾

전쟁을 지속하겠다고 결심한 저우언라이의 선언에 만족하지 못한 스탈린은 “만약 미국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결코 대만을 되찾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더욱이, 중국의 자부심에 호소하면서, 스탈린은 심지어 미국은 상대가 될 가치조차 없다고 과장된 방식으로 주장했다.

미국인들은 상인이다. 모든 미국 병사들은 구매와 판매에 몰두하는 투기꾼이다. 독일은 20일 만에 프랑스를 점령했다. 이미 2년이 지났고, 미합중국은 여전히 작은 한국을 정복하지 못했다. 도대체 이게 어떤 힘이란 말인가? 스탈린 동무가 농담하길 미국의 주요 무기는 스타킹과 담배, 그리고 다른 상품들이다.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길 원하지만 작은 한국을 정복할 수 없다. 아니, 미국은 싸우는 법을 모른다. 특히 한국 전쟁 이후에 그들은 대규모 전쟁을 벌일 능력을 상실했다. 그들은 핵무기와 공군력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하지만 전쟁은 그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보병이 필요하지만 그들에게는 보병이 많지 않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병은 약하다. 그들은 작은 한국과 싸우고 있으며, 이미 미국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만약 그들이 대전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에는, 아마도, 모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³⁴⁾

32) *Ibid.* p. 13.

33) *Ibid.*

전쟁포로 송환 합의 도달을 위한 전략을 논의한 이후에 저우언라이는 남한에 폭격을 시작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제안을 전달했다. 이에 관한 조언을 구한다고 밝히면서 그는 북한은 “이것이 올바른 길인지 확신하지 못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당시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 공군은 중국 및 북한 비행사들이 전투를 맡아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교육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동맹국 비행사들이 남한 영토내의 적군과 교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또한 새로운 공세를 펼쳐야 한다는 김일성의 제안을 거절했다. 스탈린은 “정전 협정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전략적 혹은 전술적 공세를 펼쳐서는 안 된다.”³⁵⁾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련 지도자는 저우언라이에게 자신은 중국에게 전쟁의 지속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알려주었고, 북한의 사기에 관해 물어보았다. 저우언라이는 압록강 지역 전력 발전소 폭격이 북한군의 사기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비록 미국이 폭격으로 북한을 위협할 수는 없었지만, “북한은 어느 정도 흔들리고 있다. 그들은 약간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북한 지도부 중 일부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스탈린은 자신이 이런 상황을 보고 받았음을 인정했다.³⁶⁾

북한의 태도

소련 지도자는, 사실, 북한 지도부와 인민들의 사기 수준과 협상이 진전되어 가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1951년 7월과 8월의 제1차 회담 이후에 라주바예프(Razuvaev) 대사는 소련이 정전 협상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북한 지도부가 접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 소식을 “조심스럽게” 환영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비록 그들 중 대다수가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정전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관찰에 따르면 북한 지도자들은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전쟁이 한국의 통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전쟁 이전 시기의 상태로 자신들을 되돌려 놓아야만 한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있음을 결론 내릴 수 있었다.³⁷⁾

34) *Ibid.*

35) *Ibid.*

36) *Ibid.*, p. 14.

37) Report from Soviet Ambassador to the DPRK Razuvaev, “The Political Mood and Korean-Chinese Rel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Negotiations for an Armistice.”

스탈린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김일성은 중국을 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명했다. 그는 6월 23일 협상 개시 의지를 전달한 소련의 UN 대사 말리크(Ia Malik)의 발언이 북한에 대한 지원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려는 중국이 이를 위해 정전에 합의하려고 한다는 징표라고 기술했다. 라주바예프(Razuvaev)는 김일성이 협상을 논의하기 위한 7월 베이징 방문에서 중국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국의 역량, 가능성과 이해관계, 그리고 동등하게 민주 진영의 전반적인 투쟁에서 한국의 역할을 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보고했다.³⁸⁾

김일성의 “객관적” 태도는 소련이 남한 공격에 대한 스탈린이 내세운 첫 번째 제재 조건을 유지하면서도 소련이 지상군을 한국으로 파병하여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³⁹⁾ 라주바예프(Razuvaev)는 김일성이 반복적으로 소련에 대해 “민주 진영의 핵심 예비군을 대표한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소련군을 갈등지역으로 유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언했다고 보고했다. 대사는 북한 사람들의 유사한 태도 또한 언급했다. 한편, “광범위한 전쟁 피로가 느껴지며, 앞으로의 심판을 회피하려는 희망”과 더불어 “광범위한 실망이 만연”했는데 이는 정전이 “최종 승리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친구들”은 가능한 빨리 정전협상이 체결되기를 희망했다.⁴⁰⁾ 남은 협상 기간 동안, 평양 대사관은 북한 주민들과 지도부의 사기 등을 포함한 북한의 상황과 관련된 정기적인 보고서를 올렸다.⁴¹⁾

38) *Ibid.*

39) For documentation of the terms Stalin laid out to Kim Il Sung in April 1950 see K. Weathersby “Should We Fear This? Stalin and the Danger of War with America,” Working Paper No. 39,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July 2002).

40) *Ibid.*

41) See, for example, “On the Political Mood of the Popul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negotiations in Kaesong,” sent to the Foreign Ministry 11 September 1951 by B. Ivanenko, Advisor of the Soviet Embassy in the DPRK, AVPRF, Fond 0102, Opis 7, Delo 54, Papka 30, Listy 93-114; “Notes of Conversation of Advisor of the Soviet Embassy in the DPRK Comrade Ivanenko with the Secretary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Comrade Li Syn Ep” 1 October 1952, AVPRF, Fond 0102, Opis 8, Delo 7, Papka 3a, Listy 22-27; “Report on the Political Mood of the Population of the DPRK, January-June 1951” AVPRF, Fond 0102, Opis 7, Por. 53, Papka 30, Listy 107-127; “Report on the Trip to South Pyongan Province 17-19 September 1951,” by Adviser of the Embassy of the USSR in the DPRK, V. Ivanenko, AVPRF, Fond 0102, Opis 7, Delo 54, Papka 30, Listy 126-140; “Report on the Trip from 15-20 November 1951 to North Pyongan Province” by Adviser of the Embassy of the USSR in the DPRK, V. Ivanenko AVPRF, Fond 0102, Opis 7, Delo 7, Papka 25, Listy 2-4, 25-47; “Report on the Meetings of the Activist Workers in Industry and Transport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Industry of the DPRK in the First Quarter of 1952,” by Attache of the Embassy of the USSR in the DPRK, A. Yulin, AVPRF, Fond 0102, Opis 8, Por. 63, Papka 41, Listy 34-49.

대사관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가 전쟁에 관한 소련의 전략에 의문을 품는 것을 회피해왔지만, 그들은 후원국으로부터 받아오고 있는 지원을 신랄하게 외면하기 시작했다. 1952년 6월 소련의 외무성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제시한 정전 협상 기간 동안 노동당의 과제와 관련된 결의안 초고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소련이 주도하는 한국 인민에 대한 원조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적었다. 수정된 원고는 다음과 같다. “한국 인민들에게 중국 인민 자원군의 형제와도 같은 도움과, 위대한 소련이 이끄는 평화와 민주주의 진영에서 한국 인민들에게 제공하는 물질적이며 도덕적인 지원 덕분에 그들이 미국 침략자들과 위성국들에 대항하는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⁴²⁾

또한 소련 외무성은 조선 노동당의 결의안이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모스크바의 수정안은 다음과 같이 조선노동당의 과제를 밝히고 있다.

민주주의 진영의 인민들과의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연결 고리, 무엇보다도 위대한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들, 그리고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인민들과의 관계를 모든 방면에 있어서 강화시킨다. 민주주의 진영 인민들의 단결은 제국주의 강도들의 침략에 대항하는 희망의 보장이다. 위대한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인민들과의 우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유, 독립 및 성공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희망이다.⁴³⁾

매우 드물게 북한은 소련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1951년 10월, 스탈린이 50,000 톤 가량의 밀가루를 선사했을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스탈린, 만수무강하소서”라는 외침으로 가득 찬, 인민들의 감사 표현을 허가한” 6,255 회의 집회를 열었다. 북한 언론은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의 국제적 연대의 강력한 시위들”에 관한 수많은 기사를 써내려 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과 사회 조직들은 성공적으로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과 북한 인민에

42) From V. Zorin to Grigorian at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sending the comments of MI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n the draft resolution of the Politsovie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bout the tasks in the period of the armistice. Russian Center for the Preservation and Study of Documents of Recent History [hereafter RTsKhIDNI], Fond 17, Opis 137, Delo 947, Listy 82-86. This repository holds the records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Soviet Communist Party though the Stalin era.

43) *Ibid.* For other examples of Soviet supervision see “Annotations of Bulletins No. 8 and No. 9 of the North Korean Press for the Period from 15 April to 15 May 1951, dated 15 August 1951, AVPRF Fond 102, Opis 11, Delo 2, Papka 14, Listy 10, 14, 15.

게 있어서 스탈린주의의 선물의 엄청난 중요성, 소련의 이 행동을 북한 인민들에 대한 이타적인 도움과 크고 작은 인민들의 주권에 대한 평화와 존중의 정책”을 설명했다. 더욱이, 대사관은 스탈린의 선물과 그와 관련된 조치들이 인구와 군대의 전투 사기를 진작시켰다고 보고했다.⁴⁴⁾

소련으로의 전시 수출

정전 협상 기간 동안,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은 미국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의 성격과 규모와 함께 동맹국의 재건 노력 결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편찬하였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1951년 상반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신부 작업 기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북한의 철도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 전쟁 이전 559개의 공장 중 452개, 624개 중 396개 역사, 878개 중 543개의 공공사업소, 2410개 중 1928개의 창고; 12개 중 11개의 학교 건물, 43개 중 40개의 병원, 4500개 중 3687개의 주거지, 5644km 중 2779km의 철로, 508개 중 67개의 터널, 1861개 중 443개의 다리, 99,000km 중 73,500km의 전화/전신선, 2760km 중 2320km의 전기선, 방송국과 지국, 368개 중 114개의 급수시설, 1249개 중 1036개의 기관차, 945량 중 830량의 일등석 열차, 16,986량 중 13,114량의 화물 기차 등이 손실되었다. 통신부는 재건에 15,000명의 인력을 동원했으며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은 중국 측의 철도 재건 노동자들과 함께, 철도 운행을 성공적으로 유지했다. 보고서는 또한 이 목표를 위해 노동자를 동원하려는 통신부의 이런 임무와 이를 위해 도입한 조직적 수단들을 자세하게 기록했다.⁴⁵⁾

44) “About the Political Mood and Response of the Population of the DPRK in Connection with the Receipt from Gen. Stalin of the Gift to the Korean People of 50,000 Tons of Flour,” RTsKhIDNI, Fond 17, Opis 137, Delo 947, Listy 114-119.

45) “Account of the Work of the DPRK Ministry of Communications for the First Half of 1951,” by S. Lazarev, First Secretary of the Embassy of the USSR in the DPRK, 7 September 1951, AVPRF, Fond 0102, Opis 7, Por 54, Papka 30, Listy 45-54. See also “Report on the Damages to the National Economy of the DPRK by the American Interventionists,” by Third Secretary of the Embassy of the USSR in the DPRK B. Akimov, 6 June 1951, AVPRF, Fond 0102, Opis 77, Por. 64, Papka, 32, Listy 7-25; “Report on the Condition of Agriculture of the DPRK in the Period of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Spring Sowing,” by First Secretary of the Embassy of the USSR in the DPRK S. Lazarev, 2 September 1951, AVPRF, Fond 0102, Opis 7, Por. 54, Papka 30, Listy 55-76; “Gross Output of Production in the First Half of 1951 by Branch of Industry,” AVPRF, Fond 0102, Opis 7, Por. 54, Papka 30, Listy 29-44; “Results of the Work of the Industry of the DPRK for the First Half of 1951,” by Advisor to the Ministry of Industry, M. I. Ivliev, AVPRF, Fond 0102, Opis 7, Por. 54, Papka 30, Listy 1-28; “Measures of the DPRK Government in the Area of the Economy for the First Quarter of 1952,” by First Secretary S. Lazarev, 2 April 1952, AVPRF, Fond 0102, Opis 8, Por. 63, Papka 41, Listy 20-32; “Report on the Energy Resources of the DPRK and

막대한 피해 규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소련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천연 자원 수출을 유지해야만 했다. 1950년 1월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결국 남한에 대한 공격을 지지하겠다고 최초로 알렸을 때, 그는 이 제안과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소비에트 연합에게 매년 최소한 25,000톤 상당의 납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동시에 제시했다.⁴⁶⁾ 비록 전쟁이 전개되면서 그 피해 규모는 김일성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지만, 소련의 후견인은 그가 약속을 지켜야 함을 고수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신국의 사업에 관한 보고서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통신국은 납의 운송과 다른 광물의 수출이 지체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⁴⁷⁾

그런 고로 중국에 대한 수출 계획이 전쟁 기간 동안 중단되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속해서 상당한 양의 주요 광물들을 소련에 전달했다. 1951년 1월부터 8월까지, 다음과 같은 광물들이 소비에트 연방으로 전달되었다. 5,346톤의 금/은 광물 (1951년 계획량의 52.7%), 37,840톤의 구리원석(계획량의 32.6%), 902톤의 텅스텐 (계획량의 50.8%), 7,600톤의 비철 금속 원석 (계획량의 58.8%), 22톤의 농축 몰리브덴(계획량의 30.5%), 0.84톤의 농축 베릴륨 (계획량의 2.8%), 1.29톤의 농축 니오븀(계획량의 32%), 13,290톤의 아연 부산물(계획량의 122%), 186톤의 아연(계획량의 143%), 75톤의 카바이드(계획량의 15%), 588톤의 규소(계획량의 106.9%), 978톤의 생산용 철(계획량의 133%), 13,322 톤의 농축 납(계획량의 86%), 1,062 톤의 납광석(계획량의 44%), 그리고 8,443톤의 납 (계획량의 120.4%).⁴⁸⁾

북한이 소련 기술자들의 도움 없이 필요한 양의 광물 수출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스크바는 1950년4월 15명의 탐사 작업을 실시할 지질학자들을 북한으로

the Consequences of the American Bombardment of the Hydroelectric Stations of the DPRK,” by A. Yulin, 1 October 1952 , AVPRF, Fond 102, Opus 8, Por. 63, Papka 41, Listy 80-108; “Brief Report on the Circulation of Money in the DPRK,” by First Secretary S. Lazarev, 3 December 1951, AVPRF, Fond 0102, Opus 7, Por. 54, Papka 30, Listy 222-227; “Brief Report on the Collection of Tax in Kind in the DPRK for 1951” by Third Secretary of the Embassy of the USSR in the DPRK, G. Soldatov AVPRF, Fond 0102, Opus 7, Por. 54, Papka 30, Listy 228-236; “Brief Survey of the Condition of the Mining Industry of the DPRK, by First Secretary of the Embassy S. Lazarov, December 1951, AVPRF, Fond 0102, Opus 7, Por. 54, Papka 30, Listy 192-221 .

46) Kathryn Weathersby, “To Attack or Not to Attack? Stalin, Kim Il Sung and the Prelude to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5 (Spring 1995): 9.

47) “Account of the Work of the DPRK Ministry of Communications for the First Half of 1951,” p. 52.

48) “On the Fulfillment of the Export-Import Plan of the DPRK for 1951, as of 1 September 1951,” by B. Akimov, Third Secretary of the Embassy of the USSR in the DPRK, AVPRF, Fond 0102, Opus 7, Delo 54, Papka 30, Listy 77-92.

파견했다. 폭격에 따른 심각한 인력 및 기자재 손실에도 불구하고 소련 팀은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문가들을 훈련시켰는데, 1951-1952년의 기간 동안 총 161명이 이들로부터 훈련 받았다.⁴⁹⁾

공제적 지원

폭격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쟁수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련은 다양한 분야에 기술자들과 조교들을 보냈다. 예를 들어, 1951년 9월 모스크바는 인공 의수 생산에 필요한 3명의 전문가들을 파견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서 및 장비들까지도 제공했다.⁵⁰⁾ 1952년과 1953년 소련 통신성은 평양 외곽 지역에 지하 라디오 방송국 설립을 위한 기술자들과 장비를 보냈다.⁵¹⁾ 소련의 방위산업성은 두 개의 지하 방산 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다.⁵²⁾

소련은 또한 중국과 동유럽 지원국들이 북한에 필수적인 물품을 보내도록 하였다. 1951년의 매우 인상적인 전달 물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중국이 보내온 240,000톤의 석탄, 300톤의 코크스용 석탄, 300톤의 아역 청탄, 12,000톤의 주철, 200톤의 못, 300톤의 전선. 폴란드에서 보내온 2,100톤의 이음쇠, 헝가리에서 보내온 260톤의 철 파이프, 80톤의 증기 파이프, 330톤의 가스 파이프, 430톤의 수로 파이프, 그리고 840톤의 굴뚝. 루마니아에서 보내온 4기의 공기 압축기, 1150개의 전류계측기, 350개의 건전지 계량기, 250개의 볼트 계량기와 1,000개의 만능 렌치.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에서 각각 보내온 25량과 22량의 기관차. 폴란드에서 보내온 15량의 화물 기관차.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에서 각각 보내온 25량과 3량의 여객 기관차.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보내온 20개의 4톤 수레, 500개의 손수레, 그리고 380개의 기압 브레이크.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보내온 1,000개의 재봉틀, 100개의 스타킹 제작기계, 100개의 직물 기계, 그리고 45개의 실크 제작기계. 루마니아에서 보내온

49) "Report on the Technical Assistance of the Soviet Un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y Second Secretary of the Embassy P. M. Petrov, January 1954, AVPRF, Fond 0102, Opis 10, Por. 22, Papka 53, Listy 1-39. The report giv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mineral resources in the regions of the DPRK where the teams worked and the results of their work

50) *Ibid.* pp. 4-5.

51) *Ibid.* pp. 23-27.

52) *Ibid.* pp. 27-30.

2개의 단추 프레스 기계, 27톤의 오프셋 잉크 기계, 그리고 32,500 미터의 운전 벨트. 중국에서 보내온 27,000 톤의 자동차 부품과 1,250,000 톤의 수공 부품. 폴란드에서 보내온 80개의 전화 스위치보드와 5,500개의 전화기. 체코슬로바키아와 중국에서 각각 보내온 5,000대와 500대의 자전거. 헝가리에서 보내온 5,000개의 라디오 수신기.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보내온 6개의 오프셋 기계와 6개의 엑스레이 측정기. 루마니아에서 보내온 150개의 부칭, 헝가리에서 보내온 150기의 엑스레이 기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보내온 치과 용품 150세트, 5기의 이동식 치과 진료기기, 100개의 현미경과 50개의 소독기. 헝가리에서 보내온 10,000개의 주사기와 20,000 다스의 바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보내온 페니실린 1000만개. 헝가리에서 보내온 500kg의 에테르 알코올, 2,000kg의 과망간산 칼륨, 21,500,000 복용량의 의약품, 50톤의 면화, 1,000,000 미터의 거즈, 1,000,000 미터의 붕대. 루마니아에서 보내온 500톤의 백지, 20톤의 인쇄용지 그리고 중국에서 보내온 1,000톤의 신문용지. 루마니아에서 보내온 500톤의 포장지와 2,000톤의 교과서용 종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각각 보내온 500톤의 판지 바인딩. 루마니아에서 보내온 10,000 미터의 모조가죽과 1,000톤의 면. 불가리아에서 보내온 100톤의 면직사. 폴란드에서 보내온 2,000,000 미터의 면직물.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서 보내온 각각 80,000 롤과 700,000롤의 봉사. 불가리아에서 보내온 100,000장의 수건과 3,000,000켄레의 강력 스타킹.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각각 보내온 100,000 미터의 방모직물. 헝가리에서 보내온 1,000,000 미터의 다양한 직물. 불가리아에서 보내온 작업용 텐트 5,000기. 루마니아에서 보내온 500,000켄레의 군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보내온 500,000켄레의 작업화와 폴란드에서 보내온 100,000켄레의 노동자용 신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보내온 2,000,000 다스의 연필과, 237,000개의 칫솔. 중국에서 보내온 500,000개의 바느질 바늘과 40,000톤의 기장과 20톤의 야채 종자.⁵³⁾ 비록 필자가 1952년과 1953년의 물품 목록

53) "List of Goods Delivered to the DPRK in 1952 by China, Czechoslovakia, Poland, Hungary, Romania, and Bulgaria," AVPRF, Fond 0102, Opis 7, "On the Fulfillment of the Export-Import Plan of the DPRK for 1951, as of 1 September 1951," by B. Akimov, Third Secretary of the Embassy of the USSR in the DPRK, APRF, Fond 0102, Opis 7, Delo 54, Papka 30, Listy 77-92.

53) "Report on the Technical Assistance of the Soviet Un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y Second Secretary of the Embassy P. M. Petrov, January 1954, AVPRF, Fond 0102, Opis 10, Por. 22, Papka 53, Listy 1-39. The report giv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mineral resources in the regions of the DPRK where the teams worked and the results of their work.

53) *Ibid.* pp. 4-5.

53) *Ibid.* pp. 23-27.

53) *Ibid.* pp. 27-30.

53) "List of Goods Delivered to the DPRK in 1952 by China, Czechoslovakia, Poland,

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원조가 남은 전쟁 기간 동안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전후 재건 원조 요청

정전협정이 체결되자마자, 김일성은 전후 재건과 관련하여 모스크바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 당시 김일성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 미루어 보면 북한 지도자는 자신의 동맹국들이 자신의 국가를 재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입은 대부분의 피해는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전쟁을 계속해야만 한다는 주장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었다. 전쟁 기간 동안 자리 잡은 원조의 양상은 이 견해를 강화시켜주었고 스탈린의 사망은 젊은 북한 지도자를 더욱 대범하게 만들었음이 틀림없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 정전협정이 조인된 지 단지 4일 만에, 김일성은 라주바예프(Razuvaev)의 후임자로 평양 대사관에 부임한 수즈다레프(Suzdalev)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2명의 소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재건 작업의 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장비와 물자 및 노동자의 규모를 규명할 것이며, 산업 재건의 계획안을 제시하고 우선 순위를 설정함과 동시에 다른 작업들의 수행을 위해 6개월 동안 머무를 것이라고 알렸다.⁵⁴⁾

1주일 후에 수즈다레프(Suzdalev)는 북한의 재건 원조 요청과 관련하여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모스크바의 집단 지도부에 전달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소련 정부와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파괴된 산업에 대한 재건에 필요한 도움을 얻고자 설득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알렸다. 소련에게 할당된 사항은 6개의 거대 기업(청진 소재 김책 제철소, 송진의 철강 주조소, 흥남의 화학 공장, 순천의 시멘트 공장, 그리고 수풍의 수력발전소)의 재건이 될 것이었다. 더욱이, 김일성은 소련 정부에게 아오지의 액체연료 공장을 재건할 소련-북한 합자회사의 설립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이 공장이 석탄으로부터 액체 연료를 생산하고 사할린

Hungary, Romania, and Bulgaria.” AVPRF, Fond 0102, Opis 7, Delo 5, Papka 75, Listy 15-18.

54) Letter from Kim Il Sung to S.P. Suzdalev, Charge d’Affaires of the USSR in the DPRK, 31 July 1953. Attached to the letter is information on the most important enterprises of the Ministry of Heavy Industry that are targets for restoration and a detailed plan for placement of the Soviet specialists. AVPRF, Fond 0102, Opis 9, Por. 4, Papka 44, Listy 55-70.

섬으로부터 전달받은 석유를 정제할 것이라 기대했다.⁵⁵⁾

수즈다레프(Suzdalev)는 북한이 “소련이 위에서 언급한 6개의 회사 재건, 즉 엔지니어링-기술 인력, 장비와 원료의 약속된 지원을 명백히 이행하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4년 소련에게 요청하는 총 재화의 규모가 부분적인 북한의 수출과 장기 신용을 통해서 조달될 것이라 기대했다. 수즈다레프(Suzdalev)는 북한의 계획에서 “기본적인 계산이 국내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고 최대한 많은 양의 소련과 인민 민주주의국가들의 원조를 지원받는 것으로부터 산출되었다”라고 냉소적으로 기록했다.⁵⁶⁾

김일성의 자신감은 소련과 다른 지원국들이 사실상 상당한 양의 지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면서 더 큰 힘을 얻게 되었다. 이 지원은 북한 경제가 남한보다 더욱 빠르게 전쟁으로부터 복구하는데 기여했고, 그 과정에서 몇몇 서구 관찰자들에게 개도국의 모델로 여겨지기도 했다.⁵⁷⁾ 소련 학자들에 따르면, 첫 번째 전후 계획 기간인 1954-1956년 3개년 계획 기간 동안, 75.1%의 자본 투자가 공산권의 지원금을 통해서 조달되었고, 국가 예산의 24.6%가 주로 신용으로 구성된 직접 원조를 통해서 조달되었다. 그리고 원조 및 신용을 통해서 수입의 81.5%에 상당하는 자금을 감당했다.⁵⁸⁾ 더욱이, 중국인민의용군 중 34개 사단이 전후 재건에 무료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북한에 머물렀다.⁵⁹⁾

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북한 경제와 다른 공산권 동맹국의 통합을 의심했던 김일성은 스탈린 사후에 모스크바의 지도부가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이유로 폐기했던 스탈린 시기 소련의 경제 자립 정책을 고수했다. 소련과 동유럽 지도자

55) Ciphred telegram from Suzdalev on 7 August 1953 to Malenkov, Molotov, Voroshilov, Khrushchev, Bulganin, Kaganovich, Mikoyan, Saburov, Pervukhin, Gromyko, Zorin, Pushkin, Podtserob, Ilichev. APRF, No. 24, I.

56) *Ibid.*

57) For example, British scholar Gordon White concluded that the DPRK was “a model in the application of economic policy to safeguard and extend national political independence.” See “North Korean Chuch’e: The Political Economy of Independence,” *BCAS* (April-June 1975): 44-53.

58) Erik van Ree, “The Limits of *Juche*: North Korea’s Dependence on Soviet Industrial Aid, 1953-76,” *The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Vol. 5, No. 1 (March 1989):50-73. See also Karoly Fendler, “Economic Assistance and Loans from Socialist Countries to North Korea in the Postwar Years, 1953-1963,” *Asien* (Hamburg), No. 42 (January 1992): 39-45.

59) Shen Zhihua and Yafeng Xia, “China and the Postwar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 1953-1961,” Working Paper No.4,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May 2012. For a discussion of fraternal aid as a whole, see Charles K. Armstrong, “‘Fraternal Socialism’ The International Reconstruction of Korea, 1953-62,” *Cold War History* 5, No. 2 (May 2005).

들은 김일성이 정전 직후와 전후 기간 동안 고집스럽게 경제자립 전략을 고수한다고 비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⁶⁰⁾

결론

1951년 7월 정전협상이 시작되자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한국에서의 전쟁에 대한 전략을 세워가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그 전략에 대해 북한의 대응이 파생시킬 장기적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대신에, 자신의 이념적 방향이 올바르다는 확신에 가득 찬 그들은 논리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한국 상황에 대한 전술을 임시변통으로나마 마련했다. 그러나 그들의 인민에 대한 처우와 마찬가지로, 북한 동맹국의 복지에 대한 그들의 외면은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전쟁은 모스크바, 베이징, 그리고 다른 북한 지원 국가들에게 심각하게 파괴된, 분개했지만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동맹국을 남겨주었을 뿐이다.

또한 김일성이 집요하게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전면적인 남한 침략을 지원해 달라고 압박했을 때, 그는 일 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그의 후원국과 동맹국이 공산권의 전 세계적인 대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피해가 지속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전협정이 논의된 2년의 기간 동안에서 지원국과의 공제 관계에 대한 북한의 경험은 악성의 모순적인 전통을 남겨버렸다. 한편으로, 이 관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의심과 적개심을 갖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원조 유입을 가능하게 하여 북한이 그러한 해로운 자세를 지속하도록 만들었다.

60) For a discussion of East German aid and criticisms of Kim Il Sung's policies, see Bernd Schaefer, "Weathering the Sino-Soviet Conflict: the GDR and North Korea, 1949-1989,"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14/15 (Winter 2003/Spring 2004): 25-71. For a detailed discussion of Soviet interactions with the DPRK see Balazs Szalontai,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Soviet-DPRK Relations and the Roots of North Korean Despotism, 1953-1964* (Washington, DC and Stanford, CA: Woodrow Wilson Center Press an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and Andrei Lankov, *Crisis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de-Stalinization, 1956*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스탈린의 죽음과 한국전쟁 종결의 결과

(Stalin's Death and the Implications for Ending the Korean War)

마크 크레이머

하버드대 데이비스센터 냉전 연구 프로젝트

1953년 3월 5일 소련을 장기간 통치했던 이오시프 스탈린(Iosif Stalin)이 사망하면서 공산 세계는 중요한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미국과 남한 군대와 전투를 지속하고 있던 북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스탈린이 죽기 몇 시간 전에 소련 내무성 장관인 세르게이 크루글로프(Sergei Kruglov)는 소련 공산당(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CPSU) 지도자들에게 기밀각서를 보냈는데 이 각서는 스탈린이 매우 심각하게 위중하다는 소식에 대한 군 인사들의 반응을 담고 있었다. 스탈린은 실제로 5일 모스크바 시각으로 9시 50분까지도 생존해 있었고, 그의 죽음은 7일에 공식적으로 공표되었지만 크루글로프의 각서에 등장하는 군 인사들은 스탈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각서에서 인용되는 장교들 중 한 명인 은퇴한 육군 대령은 스탈린의 서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숙고하였다.

내분과 권력을 향한 투쟁이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중앙 위원회(CPSU Central Committee) 내에서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제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CPSU)의 모든 서기들은 그 자신을 위한 독재적인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그들과 밀접하게 제휴하고 있는 관료들을 최고위 지도자의 지위에 앉히려 애를 쓸 것이다. 우리는 이제 1920년대 스탈린의 권력 투쟁의 시기 동안에 벌여졌던 것과 유사한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련의 지위와 권위 또한 대외 정책 면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저하될 것이다. 예를 들면, 동-중부 유럽에서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은 당연히 독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 국가들은 그들 스스로 우리(소련)의 일상적인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시도할 것이다...이점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은 대외 정책의 영역에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양보를 하도록 만들 것이다.¹⁾

1) "O reagirovanii voennosluzhashchikh i vol'nonaemnykh Sovetskoï Armii i Voenno-Morskogo Flota na bolezni t. I. V. Stalin," Memorandum (Top Secret) from Kruglov to Georgii Malenkov, Lavrentii Beria, Nikolai Bulganin, and Nikita Khrushchev, 5 March 1953, in Tsentral'nyi Arkhiv Federal'noi Sluzhby Bezopasnosti (TsAFSB), reproduced by Valerii Lazarev in V. A. Kozlov, ed., *Neizvestnaya Rossiya*: XX

크루글로프(Sergei Kruglov)는 승계권 투쟁과 소비에트 대외정책에서 스탈린의 죽음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던 대령의 발언을 숙고하지는 않고 있었다.

스탈린 사후 5개월 동안 벌어진 사건들은 지난 60년 간 지속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1990년대 초 이래 공개된 새로운 문서와 메모들은 후기 스탈린 시대(post-Stalin period)의 초반부를 재평가하려는 시도를 고무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1953년 소비에트 대외정책은 전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적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의 평가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필자의 분석은 최근에 기밀 해제된 기록 자료와 서구와 전 공산국가들로부터 직접 획득한 보고서를 비중 있게 참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소비에트 연방 내 정책형성 구조, 정책적 고려들과 절차들에 대한 미묘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이 발표는 스탈린 정책의 주요한 요소들의 변화 혹은 방기가 정전을 촉진시킨 측면들을 고려함으로써 스탈린 죽음 이후의 정치적 변동이 소비에트 대외 정책에 미친 영향력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국내-대외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은 구 소비에트 블록의 권력 역학뿐만이 아니라 세계 정책들 내에서 국내·대외적 연계 문제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의문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은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를 비롯한 국제관계에서 몇몇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t) 이론에 대한 지지자들이 국내정치에 대한 이해가 (대외정치) 구조적 수준의 변환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유용성이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함²⁾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953년 한국전쟁에 관한 소비에트 정책의 재평가에 대한 목적들 중 하나는 A라는 국가 내부의 정치적 변화·이 경우에는 소비에트 국내 변화들·가 A라는 국가의 대외정책뿐 아니라 세계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vek,4vols.(Moscow: Istoricheskoe nasledie, 1992), Vol. 2, 253-258 (quoted portion on 256-257). Lazarev misidentifies Kruglov as the minister for state security, a post actually held at that time by Semen Ignat'ev

2)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NewYork:McGraw-Hill,1979), pp.71-73. For a convincing argument that structural realism need not exclude the analysis of foreign policymaking and its domestic context, see Colin Elman, "Horses for Courses: Why *Not* Neo-Realist Theories of ForeignPolicy?", *Security Studies*, Vol.6, No.1(Fall1996), pp.7-51, as well as the reply by Waltz, "International Politics Is Not Foreign Policy," *SecurityStudies*, Vol. 6, No. 1 (Fall 1996), pp. 54--57, and a rejoinder by Elman, "Cause, Effect, and Consistency: A Response to Kenneth Waltz," *Security Studies*,Vol.6, No.1(Fall1996), pp.58-61.

스탈린주의의 유산

소비에트 대외정책에서 스탈린주의의 영향은 오랫동안 교착된 정전 협정과 관련한 소련 측의 태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캐서린 웨더스비(Kathryn Weathersby)의 글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스탈린은 휴전협정에 있어서 주요 장애물이었다.³⁾ 비록 중국과 북한 지도자들이 휴전 동의에 대한 소망에 관해 양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증가하고 있는 전쟁 사상자 수를 제한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한반도에 내의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에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정전회담 관계자였던 소련 외무성(Soviet Foreign Ministry) 관료인 미카일 자이체프(Mikhail Zaitsev)는 후에 회상하기를 스탈린은 ‘미국의 군사력이 극동에 발이 묶여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인과 한국인의 막대한 희생에 개의치 않고 있었다.’⁴⁾ 따라서 휴전을 중용하는 국제 여론에 맞서 스탈린은 휴전의 가능성을 무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자이체프(Mikhail Zaitsev)가 언급했듯이, 한국에서 전투를 연장하려는 스탈린의 소망은 곧 도래할 유럽 내 거대한 규모의 전쟁에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결정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그의 믿음에 부분적으로 기초하고 있었다. 실제 1951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고기밀회담(a top-secret meeting)에서 스탈린은 참석자들에게 유럽 내 전쟁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소비에트 블록 내 모든 국가에 군사력을 증강하도록 요구한 바 있었다.⁵⁾ 스탈린은 이 미래의 전

3) Kathryn Weathersby, “Stalin, Mao, and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Odd Arne Westad, ed. *Brothers in Arms: The Rise and Fall of the Sino-Soviet Alliance, 1945-1963*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1998), pp.107-132.

4) Interview in Moscow, 17 July 1997, with Mikhail Zaitsev, who in the 1950s headed the Korean sector of the Soviet Foreign Ministry’s Far East first directorate.

5) The official Soviet transcript of this meeting has not yet been released, but fortunately several of the East European participants took detailed notes, which have recently become available. The most extensive notes were taken by the Romanian defense minister, Emil Bodnăraș, and by the Hungarian Communist party leader, Mátyás Rákosi, both of whom recorded Stalin’s comments and provided many other details of the proceedings. Bodnăraș’s notes were declassified in the 1990s and published in a monthly Romanian historical journal. See C. Cristescu, “Strict Secret de importanță deosebită - Ianuarie 1951: Stalin decide înarmarea României,” *Magazin istoric* (Bucharest), Vol. 29, No. 10 (October 1995), pp. 15-23. Rákosi’s detailed account, evidently based on the contemporaneous notes he was able to take with him to Moscow in 1956, can be found in his memoirs, *Visszaemlékezések, Vol. 2: 1940-1956* (Budapest: Napvilág Kiadó, 1997), pp. 860-866, esp. 860-862. A shorter account, attributed to the Czechoslovak defense minister, Alexej Čepička, was published by the historian Karel Kaplan in *Dans les archives du Comité Central* (Paris:

쟁에 대비하여 소비에트 블록의 국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하기 위해 한국의 상황을 이용하고자 했다. 1951년 1월 회의에서 그는 미국이 “한국에서의 조그만 전쟁조차도 대처하는데 실패했다는 것”과 “미국 군대가 향후 2-3년 동안 아시아에서 발목을 잡힐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스탈린은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고전이 “미국이 제3세계의 전쟁을 시작하는데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심지어 조그만 전쟁에서 싸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동유럽 지도자들에게 “이런 천재일우의 상황”이 그들에게 전쟁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⁶⁾

이런 이유로 이후 2년 동안 스탈린은 한국전쟁 종결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그는 미국과 나토(NATO) 내 미국의 동맹들에 대항하는 유럽에서의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전쟁이 장기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스탈린은 미군의 한국 개입이 유럽에서의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고 유럽 내에서 소련의 결정적인 승리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이 소련 독재자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스탈린의 참모들 중 그 누구도 이러한 원칙에 도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근래 기밀 해제된 기록들에 의하면 스탈린을 승계한 고위 관료들은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의 수정을 희망하고 있었다. 스탈린 사후, 소련 고위층 내부에서 발생한 정치적 변화들은 한국전쟁을 연장하려는 스탈린의 희망을 포함한 스탈린의 대외정책 목표들이 포기되면서 이러한 방기가 필수적으로 여겨지게 되는 내부 환경을 만들었던 것이다.

정치적 맥락 변화

Ed. Albin Michel, 1978), pp. 164-166. See also the brief but interesting retrospective comments of Edward Ochab in Teresa Torańska, *Oni* (London: Aneks, 1985), pp. 46-47. Although Ochab was not the leader of the Polish United Workers' Party in 1951, he attended the conference in place of Bolesław Bierut, the party leader, who apparently was ill. Because Stalin had not yet decided how far he would go in allowing East Germany to deploy a regular army, no East German officials took part in the conference. Albania also was not represented at the conference, but Stalin and several other high-ranking Soviet officials met in Moscow in early April 1951 with the Albanian Communist leader, Enver Hoxha, and the chief of the Albanian General Staff, General Bekir Baluku, and discussed the need to strengthen the Albanian armed forces, particularly by equipping them with more tanks and combat aircraft. For a summary transcript of the meeting, see “Zapis' besedy I. V. Stalina s E. Khodzei, 2 aprelya 1951 g.,” Memorandum of Conversation (Top Secret), 2 April 1951, in APRF, F. 558, Op. 1, D. 249, Ll. 90-97.

6) Cristescu, “Strict Secret de importanță deosebită - Ianuarie 1951,” p. 20

스탈린의 죽음이 소비에트 대외 정책의 중요한 변화들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후 모스크바 내부 정치는 여전히 승계 투쟁의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⁷⁾ 스탈린이 너무 오랫동안 소련 내에서 지배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인이 그를 대체할 수는 없었다. 대신 1953년 일단의 고위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권력을 승계했다. 공식적으로 이들 모두는 집단지도체제의 원칙을 존중하는 듯했지만 이러한 집단 지배가 단지 잠정적일 뿐이며 새로운 일인 권력자가 등장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소수의 스탈린 최측근 인사들은 3월 2일 스탈린이 뇌출혈로 쇠약해지고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을 알게된 후 급작스럽게 권력 승계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3월 4일 수차의 초안 작업 이후에 이들은 소비에트 공산당 최고 간부회의 사무국(Bureau of the CPSU Presidium)에 제출되어 스탈린이 죽기 몇 시간 전에 그 합의를 승인하는 데에 이르렀다.⁸⁾ 이 초안은 게오르기 말렌코프(Georgii Malenkov)를 소련 정부 수장으로 승진시켰고 비체슬라프 몰로토프(Vyacheslav Molotov)를 그의 관례적 업무인 외무장관으로 복귀시켰으며, 비밀 경찰의 장기 수장인 라브렌티 베리야(Lavrentii Beria)에게 확대된 권력을 부여했는데, 여기에 더하여 스탈린의 권한을 지탱하기 위해 과도하게 확대된 공산당의 통치 조직들의 구성원 수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었다.⁹⁾ 10명의 스탈린 측근 인사들; 말렌코프(Malenkov), 베리야(Beria), 몰로

7) The impact of the succession struggle on Soviet foreign policy was a key concern for the U.S. government at the time, and the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undertook several detailed analyses of the matter in its highly classified Caesar papers. These were released in somewhat sanitized form in 2007 and are available in the very useful electronic reading room on the CIA's website (www.foia.cia.gov). See, for example, CIA, Office of Current Intelligence, "The Death of Stalin," Caesar-2, 16 July 1953.

8) See the handwritten drafts with cross-outs and scribbled revisions in Rossiiskii Gosudarstvennyi Arkhiv Sotsial'no-Politicheskoi Istorii (RGASPI), Fond (F.) 83, Opis' (Op.) 1, Delo (D.) 3, Listy (Ll.) 1-18. On the approval of the pact, see "Vypiska iz protokola No. 13 zasedaniya Byuro Prezidiuma TsK ot 4-5 marta 1953 g.: O sovместnom zasedanii Plenuma TsK KPSS, Soveta Ministrov SSSR i Prezidiuma Verkhovnogo Soveta SSSR," No. BP13/XIII (Strictly Secret), 5 March 1953, in Arkhiv Prezidenta Rossiiskoi Federatsii (APRF), F. 45, Op. 1, D. 1485, L. 13.

9) "Protokol sovместnogo zasedaniya Plenuma Tsentral'nogo Komiteta KPSS, Soveta Ministrov Soyuzov SSR i Prezidiuma Verkhovnogo Soveta SSSR ot 4 marta 1953 goda," Protocol Account (Strictly Secret), 5 March 1953, in RGANI, F. 2, Op. 1, D. 23, Ll. 1-7. The appointments and transfers announced at this joint meeting had first been approved by the Bureau of the CPSU Presidium (the equivalent of what later was renamed the Politburo) on 4 and 5 March 1953. See "Vypiska iz protokola No. 13 zasedaniya Byuro Prezidiuma TsK ot 4-5 marta 1953 g.: O sovместnom zasedanii Plenuma TsK KPSS, Soveta Ministrov SSSR i Prezidiuma Verkhovnogo Soveta SSSR,"

토프(Molotov), 클리멘트 보로실로프(Kliment Voroshilov), 니키타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ev), 니콜라이 불가닌(Nikolai Bulganin), 라자르 카가노비치(Lazar Kaganovich), 아나스타스 미코얀(Anastas Mikoyan), 막심 사부로프(Maksim Saburov), 미카일 페르부킨(Mikhail Pervukhin)은 새로이 만들어진 소련 공산당 최고 간부 회의(CPSU Presidium)에 내정된 회원들이었다. (소련 공산당 정치국(the CPSU Politburo)은 1952년 10월에 소련 공산당 최고 간부 회의(CPSU Presidium)로 개칭되었고 1966년 초기까지 그 이름을 유지했다.)

어느 누구도 소련 공산당 제1서기로써 스탈린을 대신할 후보지명을 받지 않았지만 신임 공산당 서기 명단에서 말렌코프(Malenkov)의 이름이 알파벳 순서를 무시하고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말렌코프가 동료 중에서 제1인자(primus inter pares)로 부상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게다가 말렌코프(Malenkov), 베리야(Beria), 흐루시초프(Khrushchev)는 스탈린 문건과 개인 문서를 감독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 문건들은 권력 투쟁에서 중요한 무기가 되었음을 증명했다.¹⁰⁾ 스탈린 그 자신도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에, 말렌코프(Malenkov)에게 상당한 권력을 위임한 바 있었는데 이 역시 말렌코프(Malenkov)의 부상을 도왔던 것이다.

3월 5일 저녁 스탈린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동안 말렌코프(Malenkov)와 베리야(Beria)는 소련 공산당과 소련 정부의 최고위 관료들의 이례적인 공동회합에 새로운 정치적 합의 사항을 제출하였다.¹¹⁾ 참석자들은 즉각적으로 그들의 전원 만장일

No. BP13/XIII (Strictly Secret), 5 March 1953, in Arkhiv Prezidenta Rossiiskoi Federatsii (APRF), F. 45, Op. 1, D. 1485, L. 13. Under the agreement, the Bureau of the CPSU Presidium was abolished, and the CPSU Presidium took over its responsibilities. The ten members of the CPSU Presidium are listed in the order presented at the joint meeting. (Stalin's name originally was listed first among the Presidium members, but it was removed when he died less than an hour after the conclusion of the joint meeting.) Because the listing is not alphabetical, it presumably represents some sort of pecking order.

10) "Postanovlenie Byuro Prezidiuma TsK KPSS ot 4-5 marta 1953 g. o dokumentakh i bumagakh tovarishcha Stalina I. V.," Resolution No. BP13/XIII (Strictly Secret), 5 March 1953, in APRF, F. 45, Op. 1, D. 1486, L. 136. See also "Postanovlenie sovместного zasedaniya Plenuma TsK KPSS, Soveta Ministrov SSSR, Prezidiuma Verkhovnogo Soveta SSSR o dokumentakh i bumagakh Stalina I.V." Joint Resolution (Strictly Secret), 5 March 1953, in APRF, F. 45, Op. 1, D. 1486, L. 145; and "Vypiska iz protokola No. 34 zasedaniya Prezidiuma TsK ot 18 sentyabrya 1953 g.: O materialakh lichnogo arkhiva Iosifa Vissarionovicha Stalina," No. P34/III (Strictly Secret), 19 September 1953, in APRF, F. 45, Op. 1, D. 1485, L. 109.

11) "Protokol sovместного zasedaniya Plenuma Tsentral'nogo Komiteta KPSS, Soveta Ministrov Soyuzov SSR i Prezidiuma Verkhovnogo Soveta SSSR ot 5 marta 1953 goda," Ll. 1-7.

치 승인을 구두로 표했다. 그러나 막후에서는 스탈린의 동료 여러 명 사이에서 죽어가는 지도자의 독점적 권력을 승계하고자 하는 맹렬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들의 관점에서 집단 지도체제(collective leadership)는 결국에는 권력을 독점하는 인물의 등장으로 종식될 타협 수단일 뿐이었다.¹²⁾ 특히 그의 역할이 스탈린 사후의 새로운 권력구조의 형성을 돕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흐루시초프(Khrushchev)는 이러한 권력구조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그는 소련 공산당에서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말렌코프(Malenkov), 베리야(Beria)와 더불어 스탈린 문서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는 흐루시초프(Khrushchev)로 하여금 그의 정적들이 이들 문서들을 이용하는 것을 막게 하고 반대로 정적들의 유죄 입증을 위하여 이들 문서들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흐루시초프(Khrushchev)는 1953년 일시적으로 보다 중요한 중요성과 가시성을 획득했던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의 최고 간부회의(the Presidium of the USSR Council of Ministers)에서 배제되었다.¹³⁾ 공산당 최고 간부회의(the CPSU Presidium)가 스탈린 사후 소련에서 최고 의사결정형 기구로 존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에서의 최고 간부회의(the Presidium of the USSR Council of Ministers)는 일시적이거나 중요한 보조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이는 과거에는 좀처럼 향유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양 조직에서 직위를 자지고 있는 관료들이 권력과 지위에서 우위를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 말렌코프(Malenkov)는 3월 5일자로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의 최고 간부회의 의장에 임명되었으며, 베리

12) See the retrospective account by Dmitrii Shepilov, the editor-in-chief of *Pravda* in 1953 who later became Soviet foreign minister and a member of the CPSU Presidium: "Vospominaniya," *Voprosy istorii* (Moscow), No.8 (August 1998), esp. pp.11-12.

13) The Presidium of the Council of Ministers was an important collective decision-making body during the brief period when Malenkov was regarded as the top official in Moscow from March 1953 until at least September 1953, but the CPSU Presidium (whose key members other than Khrushchev and Voroshilov were also on the Presidium of the Council of Ministers) remained the paramount organ in the USSR even after Malenkov was forced to relinquish his post as a CPSU Secretary on 14 March. For a while afterward, Malenkov continued to chair meetings of the CPSU Presidium, but eventually he had to relinquish that function to Khrushchev. (Malenkov retained his membership on the CPSU Presidium until 1957.) The CPSU Presidium continued to decide issues that, in principle, should have been handled by the Soviet government, and it also continued to issue orders and directives to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The fact that the CPSU Presidium regained clear-cut supremacy over the Presidium of the Council of Ministers in the late summer of 1953 was an adumbration of Khrushchev's eventual success in displacing Malenkov altogether.

야(Beria), 몰로토프(Molotov), 불가닌(Bulganin), 카가노비치(Kaganovich)는 1등 보좌관에 내정되었다.(다섯 명 모두가 또한 새로이 구성된 소련 공산당 최고 간부회의(CPSU Presidium) 구성원들이었다.) 각료회의 최고간부회의(the Presidium of the Council of Ministers)에서 흐루시초프의 배제는 그를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흐루시초프 지위의 불명확성은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특히 흐루시초프가 1953년 11월 소련 공산당 1등 서기에 임명된 이후에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스탈린 사후 초기 이는 권력의 차이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는데, 특히 3월 9일 스탈린 장례식에서의 연설자 선정에서도 그러하였다. 말렌코프(Malenkov), 베리야(Beria)와 몰로토프(Molotov)는 장례식에서 유일하게 연설을 했던 이들이었지만, 반면에 조직위원회 의장으로써 흐루시초프(Khrushchev)의 유일한 역할은 말렌코프(Malenkov)를 소개하는 것이었다.¹⁴⁾ 이와 같은 상황은 말렌코프(Malenkov), 베리야(Beria), 몰로토프(Molotov)가 적어도 잠시 동안은, 흐루시초프(Khrushchev)와 다른 이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흐루시초프(Khrushchev)는 궁극적으로 최고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제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스탈린에게 비판 받고 가까스로 숙청을 모면했던 1951년의 경험은 흐루시초프(Khrushchev)로 하여금 그가 틈을 보이게 되면 그의 정적들이 그를 제거하려 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였다. 새롭게 등장한 다른 권력자들 역시 스탈린 통치 하에서 그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그들의 정치적 지위가 급작스럽게 변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례로 말렌코프(Malenkov)는 1946년에 소위 ‘비행사 사건’(Aviators’ Affair)의 결과로 인해 체포될 뻔 했고, 수년 후에 스탈린의 호의로 복권되었음에도 스탈린의 측근 중 그 누구도 이러한 음모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¹⁵⁾

14) “Pokhorony Iosifa Vissarionovicha Stalina: Traurnyi miting na Krasnoi ploschadi 9 marta 1953 goda,” *Pravda* (Moscow), 10 March 1953, pp. 1-2. Malenkov’s speech was printed in full on page 1. Beria’s and Molotov’s speeches were printed side by side on page 2. All three officials were identified solely by their positions on the Presidium of the USSR Council of Ministers. See also the declassified preparatory documents from the funeral organizing committee, chaired by Khrushchev, in RGASPI, F. 558, Op. 1, D. 1486, Ll. 148-202; and the account by a senior party official who attended the funeral, Nuriddin Mukhitdinov, *Gody, provedennye v Kremle*, 3 vols. (Tashkent: Izdatel’stvo Narodnogo Naslediya, 1994), Vol. 1 (*O deyatel’nost: TsK KPSS i ego Politbyuro v 50-e gody*), pp. 87-95.

15) Yoram Gorlizki and Oleg Khlevniuk, *ColdPeace: Stalin and the Soviet Ruling Circle, 1945-1953*(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26-28.

베리야(Beria) 또한 1951년과 1952년에 그의 고향 밉그렐리(Mingrelia)에서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관료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과 관련하여 스탈린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었고 이후 스탈린이 소련 공산당 고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려고 계획한 대규모 숙청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자숙하고 있는 상태였다.¹⁶⁾ 몰로토프(Molotov)와 미코얀(Mikoyan) 역시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이들은 스탈린의 충실한 조력자들이었으나 집권 말기 수년 간 스탈린은 이들을 배척했고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1952년 10월의 19차 전당대회가 특히 그러했다.¹⁷⁾ 만일 스탈린이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이들을 다른 고위관료들과 함께 숙청하거나 처형했을 것이다.¹⁸⁾ 이러한 몰로토프(Molotov)와 미코얀(Mikoyan)의 경험은 스탈린 권력 내 핵심 세력의 모든 구성원들이 직면했던 잠재적 위험을 대변하고 있었다. 비록 몰로토프와 미코얀이 3월 5일에 정치적 지위를 다시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1952년 후반과 1953년 초반에 경험했던 상황들은 이들에게 그 어느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새로운 정치적 합의의 불안정성과 모스크바 내에서 권력 투쟁의 격렬함은 정책적 차이라기보다는 주로 개인적 야망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견해가 정책적 이견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새로운 권력 집단 내부에 특정 정책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 권력을 위해 투쟁하는 관료(특히 흐루시초프)들의 입장이 자주 유동적이었고 이는 정적들을 압도하기 위한 결의를 반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로버트 컨퀘스트(Robert Conquest)는 흐루시초프를 ‘강한 권력욕’과 ‘상황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성향’을 가진 ‘유연한 전략가’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특질을 스탈린 사후에 부상한 인사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¹⁹⁾ 권력 투쟁 과정에서 등장한 실질적인 쟁점들은 대부분 국내적인 것이었다. 가령 이러한 쟁점들은 폭력적인 테러가 영구적으로 끝내야만 하는 건지 아닌지, 정치적 자유화가 얼마나 진전되어야 하는지, 공산당과 소련 정부 사이에서 권력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 강제노동수용소로부터 정치적 수감자들을 석방시킬 것인지, 농업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경공업 또는

16) Ibid., pp. 109-113.

17) See the fascinating account by Konstantin Simonov, *Glazami cheloveka moego pokoleniya* (FILL IN), pp.

18) Ibid., pp. 145-163. See also A. V. Pyzhikov, “Poslednie mesyatsy diktatora (1952-1953 gody),” *Otechestvennaya istoriya*(Moscow), No.2(March-April 2002), pp.152-158.

19) Conquest, *Power and Policy in the USSR*, p.29.

중공업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스탈린이 착수한 건설 계획 일부를 끝낼 것인지, 비러시아계 민족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탄압의 희생자들을 복권시킬지 말지 등등의 문제들이었다. 대외 정책에 관한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외적인 쟁점들은 새로운 권력집단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었다.

새로운 소련 지도자들이 국내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구조의 자유화와 스탈린 시대의 테러정치 종식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었다. 스탈린은 집권 말년 시기에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의 독재적 통제들에 대한 부분적 완화를 뒤엎고 억압적으로 소련을 통치하였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국내 개혁과 보다 관용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스탈린주의적 정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는 스탈린의 사후에 즉각적으로 시작되었다. 스탈린 사후 수일 이내에, 소련 공산당 최고 간부회의(the CPSU Presidium)와 소비에트 각료회의(the Soviet Council of Ministers)는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다수의 정치적이고 경제적 개혁을 도입하였다. 말렌코프(Malenkov)와 베리야(Beria)는 이런 개혁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는데, 심지어 말렌코프(Malenkov)는 1953년 4월에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CPSU Central Committee plenum)에서 소련의 인쇄 매체와 방송 선전에서 스탈린 영웅화를 ‘개인숭배’라고 묘사하는 연설을 하였다.²⁰⁾ 말렌코프(Malenkov)의 연설은 직접적으로 스탈린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만일 스탈린이 살아 있었다면 “스탈린 동지 자신은 이런 개인숭배를 비난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의에 있던 모든 이들은 말렌코프(Malenkov)가 스탈린 자신이 고의적으로 조성한 개인숭배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중앙위원회 총회(CPSU Central Committee plenum)는 소집되지는 않았지만, 말렌코프(Malenkov)가 스탈린 사후 거의 한 달 만에 스탈린주의의 주요한 특성에 대해 이렇듯 강한 비판을 담은 연설을 했다는 사실은 1953년 봄의 정치구조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말렌코프(Malenkov)는 또한 국내 안보기관들과 경찰의 광범위한 개혁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베리야(Beria)의 활동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 국내 안보조직과 경찰은 내무성의 베리야(Beria) 아래에서 통합되어 있었다. 여러 가지 단계들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들은 신체적 고문의 일상적 사용을 금지했고 법무성으로의 굴락 체계(Gulag system) 관할을 이전하였으며, 국내 안보기관의 규모를 축소하였고, 노동

20) Untitled typescript of Malenkov's draft remarks, April 1953, in RGASPI, F. 83, Op. 1, D. 3, Ll. 26-30, esp. 28.

강제수용소의 경제적 기능들을 약화시켰으며, 여권 규제와 국내 여행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을 승인했다.²¹⁾ 또한 베리야는 소위 내무성의 특별위원회(Special Board (OsoboeSoveshchanie) of the Internal Affairs Ministry(MVD)로 지칭되던 기구의 권한들을 축소시키려는 계획들도 고안했다.²²⁾ 특별위원회는 1934년 이래로 거의 완벽한 면책권을 가지고 운영되었는데, 수많은 독단적인 체포와 처형을 감독해 오고 있었다.(베리야 스스로도 이에 연루되어 있었다.) 특별위원회의 규모 축소는 대량 숙청의 정책으로의 복귀를 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었다.

새로운 소련 지도자들은 스탈린이 도입한 사악한 반유대주의적 정책들 역시 신속히 철폐하였다. 1953년 4월 3일에 소련공산당 최고 간부회의(the CPSU Presidium)는 다음날 ‘의료진 음모’(Doctors’ Plot)가 조작된 것임을 밝히는 성명을 2개의 소비에트 주요 신문인 프라우다(Pravda), 이즈베스티야 지(Izvestiya)에 게재하는 베리야의 제안을 승인했다. 이 음모는 1953년 초 스탈린에 의해 날조된 것이었는데, 스탈린 말년의 시기에 그가 추진했던 반유대주의 운동의 일환이었다. 내무성의 이름으로 공표된 4월 4일 성명은 이 음모를 날조된 거짓으로 규정하고 이 음모에 관련하여 기소된 이들에게 사과를 표명했다.²³⁾ 그리고 이틀 뒤 프라우다지(Pravda)에는 이 음모의 조작의 책임자를 1953년 3월 5일 저녁까지 국가안보기관 장관이었던 세미온 이그나체프(Semyon Ignat’ev)로 지목하는 장문의 제1면 사설이 게재되었다. 사설은 이그나체프(Semyon Ignat’ev)와 그의 수하들이 ‘범죄적 모험주

21) For a valuable selection of declassified materials pertaining to many of the domestic political reforms introduced in the USSR in the spring of 1953, with an interesting (albeit at times overly generous and inaccurate) introduction by A. I. Pozharov, see “‘Novyi kurs’ L. P. Berii 1953 g.,” *Istoricheskii arkhiv* (Moscow), No. 4 (1996), pp. 132-164. The reforms covered in Pozharov’s survey were promoted by Beria. Many other formerly secret documents relating to Beria’s proposals for reforms of the state security apparatus, MVD, and administrative structures are available in Gosudarstvennyi Arkhiv Rossiiskoi Federatsii (GARF), F. 9401, Op. 2, Dd. 416, 1299, 1300, 1329, and 1337.

22) “V Prezidium TsK KPSS,” No. 109/B (Top Secret), 15 June 1953, in Gosudarstvennyi Arkhiv Rossiiskoi Federatsii (GARF), F. R-9401, Op. 2, D. 416, Ll. 123-125, accompanied by a draft resolution of the CPSU Presidium, a draft decree of the Presidium of the USSR Supreme Soviet, and draft guidelines for the MVD’s Special Board, Ll. 126-127, 128, and 129-131, respectively. Many other documents relating to Beria’s proposals for the MVD, internal security, and administrative matters are available at GARF in F. 9401, Op. 2, Dd. 416, 1299, 1300, 1329, and 1337.

23) “Soobshchenie Ministerstva vnutrennikh del,” *Pravda* (Moscow), 4 April 1953, p. 2. For the CPSU Presidium’s resolution authorizing publication of the announcement, see “Vypiska iz protokola No. 3 zasedaniya Prezidiuma TsK KPSS 3 aprelya 1953 goda: O doklade MVD SSSR po ‘delu vrachakh-vreditelyakh’,” No. P3/IV (Strictly Secret), 3 April 1953, in APRF, F. 3, Op. 58, D. 423, L. 17.

의’,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거짓말들’, ‘권력의 고의적인 남용’, ‘정치적 맹목성’ 그리고 ‘소비에트 법에 대한 혐오스러운 위반’을 자행한 것으로 고발하였다.²⁴⁾ 의료진 음모의 공개적 부정은 스탈린의 말년 시기 동안에 조직된, 점점 더 불길해져 가는 반유대주의 운동을 종결시켰다.

스탈린 사망 수주 안에 총체적 개혁을 위한 제안들이 정책 논점들이 되었다. 특히 소련 지도자들은 서부 우크라이나, 서부 벨로루시, 그리고 발트 해 3국 등 2차 세계대전 종결 당시 소련에 합병된 모든 국가들내에서의 벌어진 스탈린 정책의 ‘단점과 오류’를 시정할 것을 약속했다.²⁵⁾ 중앙정부는 이들 외곽 지역에서 강요된 러시아화를 중단할 것이고, 토착민 출신의 간부들을 지방 언어를 구사할 줄 모르는 러시아 간부들 대신 지역정부(특히 국가안보조직)에 등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정책 변화들은 베리야가 지적한 것처럼 ‘지역주민들은 소비에트 국가안보 관료보다 그들 서로를 더 잘 신뢰할 것이다’는 기대만큼이나 스탈린 정책이 야기한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목적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²⁶⁾ 스탈린의 승계자들은 최근에 합병된 영토에서의 관용적인 정책이 지하 저항 운동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를 약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스탈린 사후 몇 주 동안 소련 국내에서 발생한 변화들은 소련 사회에 일대 지각변동을 야기하였다. 엘리트, 지식인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도 스탈린 생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사건들을 목격하였다. 2차 세계대전 종전 때 잠시간 존재했었던 희망이-스탈린주의의 억압과 고난이 다시 증가하면서 사라져 버린 희망이- 서서히 다시 나타나고 있었다. ²⁷⁾ 지역과 지방의 당 관료들이 모스크바 중앙정부에 전달한 보고서에는 시민들이 정치적 개혁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으며 개혁이 더욱 광범위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²⁸⁾

24) “Sovetskaya sotsialisticheskaya zakonnost’ neprikosnovenna,” *Pravda*(Moscow),6, April, 1953, p.1.

25) “V Prezidium TsK KPSS,” No. 31/B (Top Secret), 8 May 1953, in GARF, F. R9401, Op. 2, D. 416, Ll. 72-74; “V Prezidium TsK KPSS,” No. 42/B (Top Secret), 16 May 1953, in GARF, F. R9401, Op. 2, D. 416, Ll. 79-82; and “V Prezidium TsK KPSS,” No. 98/B (Top Secret), 8 June 1953, in GARF, F. R9401, Op. 2, D. 416, Ll. 113-116. These dealt, respectively, with Lithuania, western Ukraine, and Belorussia.

26) Quoted by A. Snečkus, first secretary of the Lithuanian Communist Party, in “Plenum Tsentral’nogo Komiteta KPSS, 2-7 iyulya 1953 g.: Zasedanie vtoroe,” 2 July 1953 (Strictly Secret), in RGANI, F. 2, Op. 1, D. 32, Ll. 212-213.

27) Elena Zubkova, *Poslevoennoe sovetskoe obshchestvo: Politika i povsednevnost’, 1945-1953* (Moscow: ROSSPEN, 2000). For a valuable collection of declassified documents attesting to the revival of hope, see E. Yu. Zubkova et al., eds., *Sovetskaya zhizn’, 1945-1953* (Moscow: ROSSPEN, 2003).

28) See, for example, “O reagirovanii trudyashchikhsya Ukrainskoi SSR na Ukaz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 시대의 가혹한 억압 이후 정치적 통제에 대한 완화는 위협을 야기하고 있었다. 사회적 동요는 1953년 봄에 점차적으로 증가했고, 폭력적 소요가 굴락(Gulag)의 정치수용범들 같은 소련 사회 내에서 고립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²⁹⁾ 1953년 3월 27일에 소련 공산당 최고 간부회의(the CPSU Presidium)는 굴락(Gulag)의 일반 죄수들 대다수를 위한 사면을 승인하였는데 이는 120만 명의, 즉 굴락에 수감된 전체 인원의 54%를 석방하는 것이었다.³⁰⁾ 그러나 사면은 교묘하게 일반 죄수보다 장기형을 선고받은 정치 수용범들을 제외하고 있었다. 그 결과, 많은 강제노동 수용소의 정치범들은 집단적 저항을 시작하였다.³¹⁾ 1953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카라간다(Karaganda)와 이르쿠스크 주(Irkutsk oblast)에 있는 수용소들의 정치범들은 파업과 대규모 유혈 폭동에 참여했다.³²⁾ 곧이어 노릴스크(Noril'sk)의 수용소에서도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였는데 여러 주에 걸쳐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막대한 유혈사태를 야기하였다.³³⁾ 1953년 봄 수많은 다른 수용소들도-특히 아크투바(Akhtuba), 페코라(Pechora), 볼고다 주(Vologda oblast), 아르항겔스크 주(Arkhangel'sk oblast)의 수용소들-많은 사망자를 낸 소요에 휘말려 들어갔다.

굴락(Gulag)에서 벌어진 봉기들은 즉각적으로 소련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스탈린 시대의 압박과 제한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발생 가능한

Prezidiuma Verkhovnogo Soveta SSSR ob amnistii," Memorandum 11-sv (Top Secret) from L. G. Mel'nykov, first secretary of the Ukrainian Communist Party, to Soviet Prime Minister G. M. Malenkov, 1 April 1953, in APRF, F. 3, Op. 52, D. 101, Ll. 12-16.

29) For a first-rate collection of recently declassified documents from GARF on the uprisings, strikes, and riots in the Gulag in 1953, see Vol. 6 (*Vosstaniya, bunty i zabastovki zaklyuchennykh*, ed. by V. A. Kozlov) of V. P. Kozlov et al., eds., *Istoriya stalinskogo Gulaga: Konets 1920kh-pervaya polovina 1950kh godov - Sobranie dokumentov*, 7 vols. (Moscow: ROSSPEN, 2004), esp. pp. 85-101, 309 ff.

30) "Postanovlenie Prezidiuma TsK KPSS 'Ob amnistii,'" No. 2, p. 1 (Top Secret), 27 March 1953, in RGANI, F. 3, Op. 8, D. 20, L. 2. The amnesty was published in the main Soviet newspapers the next day as a decree of the Soviet legislature, "Ukaz Prezidiuma Verkhovnogo Soveta SSSR 'Ob Amnistii,'" *Pravda* (Moscow), 28 March 1953, p. 1.

31) "Ob obostrenii obstanoki v lageryakh posle amnistii v aktivizatsii pretypnnykh gruppirovok," Draft Instructions (Top Secret) from Soviet Minister of Justice K. P. Gorshenin, 12 May 1953, and "O merakh po obespecheniyu soblyudeniya sovetskoi zakonnosti v ispravitel'no-trudovykh lageryakh i koloniyakh Ministerstva Yustitsii SSSR," Draft Directive (Top Secret) from Soviet Minister of Justice K. P. Gorshenin, 18 May 1953, in GARF, F. R-9414, Op. 1, D. 664, Ll. 131-137 and 149-150, respectively.

32) "O predvaritel'nykh rezul'tatakh spetsial'nogo rassledovaniya gruppovoi draki i ubiistva zaklyuchennykh v 8-m lagernom otdelenii ITL stroitel'stva No. 16 MVD 4 maya 1953 g.," Encrypted Telegram (Top Secret) to Soviet Minister of Justice K. P. Gorshenin and Gulag Administration Head I. I. Dolgikh, 9 May 1953, in GARF, F. R-9414, Op. 1, D. 664, Ll. 154-158.

33) See Kozlov, ed., *Vosstaniya, bunty i zabastovkizaklyuchennykh*, pp. 320-355.

소요와 혼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폭력적 억압은 이제껏 공산블록을 유지시켜 왔을 뿐 아니라 소련 국내 정책의 필수적인 요소였었다. 모스크바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국내와 해외 양측에서 억압적 수단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시키기를 원했던 정도에서, 소련 지도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개인과 사회집단들로 하여금 직접적 행위들을 통해 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인식하도록 만들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였던 것이다. 내부 소요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후 스탈린 승계투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1953년 3월 5일 최고위 정당과 정부 조직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공동 결의안은 소련 사회 내부의 ‘모든 종류의 혼란과 소요’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력의 거대한 통합’을 요구했던 것이다.³⁴⁾ 스탈린 사후 몇 달 동안 새로운 권력 추구자들은 가까스로 ‘국가의 전반적 일상에서의 연속되고 엄격한 지도력’과 ‘통합’에 대한 공식적 이미지를 대중에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막후에서의 권력투쟁은 1953년 봄 지속적으로 격화되고 있었는데 소련공산당 최고 간부회의(CPSU Presidium session) 회기 중인 6월 26일 베리야의 체포는 그 전조가 되었던 것이다.

베리야의 제거

스탈린 사후 초기 몇 주 동안 소련공산당 최고 간부회의(the CPSU Presidium)의 수뇌부 중 3명은-말렌코프, 베리야, 흐루시초프-거의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³⁵⁾ 이 3명은 서로 함께 일했고 자주 대화에 몰두하면서 크레믈린 궁내를 함께 거닐고 있는 것이 목격되곤 하였다.³⁶⁾ 그러나 이들의 동반자 관계는 순수한 우정

34) “Protokol sovместnogo zasedaniya Plenuma Tsentral’nogo Komiteta KPSS, Soveta Ministrov Soyuzo SSR i Prezidiuma Verkhovnogo Soveta SSSR ot 5 marta 1953 goda,” L 1.

35) The account here is derived from an analysis and cross-checking of all available memoirs and newly declassified sources, including documents from the 26 June meeting of the CPSU Presidium (cited below); the proceedings of three CPSU Central Committee plenums (in July 1953, January 1955, and June 1957); Beria’s prison letters; and a large volume of materials from the investigation and trial of Beria.

36) See “Vesna 1953 goda: Diktovka t. Mikoyana A. I., 30.IV.60g.,” Aide-mémoire by A. I. Mikoyan, No. 231-op (Secret/Special Dossier), 30 April 1960, in RGASPI, F. 39, Op. 3, D. 119, Ll. 57-58. Most of this document, which was highly classified until very recently, is featured in chapter 49 (“Kollektivnoe rukovodstvo i bor’ba za vlast’ posle smerti Stalina”) of Mikoyan’s newly published memoirs, *Tak bylo* (Moscow: Vagrius, 1999). This volume of memoirs is far more valuable than the two volumes published during Mikoyan’s lifetime.

이나 충성심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³⁷⁾ 이미 3월 14일에, 즉 스탈린이 죽은 지 겨우 1주일 후 흐루시초프와 베리야는 ‘소련 각료회의의 의장직(the chairman of the USSR Council of Ministers)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CPSU CC Secretary)직을 겸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소련 공산당 사무국(the CPSU Secretariat)에서 말렌코프를 제거하였다.³⁸⁾ 이 조치는 소련공산당 최고 간부회의(the CPSU Presidium)의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a plenum of the CPSU Central Committee)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이 결의안이 중요한 정치지도자로서의 말렌코프의 지위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하는 신호는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국무총리(prime minister)와 소련공산당 최고 간부회의(the CPSU Presidium)의 정회원의 지위를 유지했고, 결의안은 그에게 소련 공산당 최고 간부회의의 의장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잠시 동안 말렌코프는 정부와 당 양 측에서 ‘동료들 중 제1인자’(primus inter pares)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소련 공산당 사무국(the CPSU Secretariat)으로부터 갑작스런 축출은 명백하게 그의 권한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하였고 당 위계구조 속에서 효과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박탈하였다. 반면 총회 결의안은 흐루시초프에게 공산당 중앙위원회 사무국(the CPSU CC Secretariat)과 공산당 중앙위원회 사무국 회의의 지도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흐루시초프의 지위를 강화시켰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스탈린 부재 시 말렌코프에 의해 수행되어 왔던 것이었다.

흐루시초프가 사무국에서 말렌코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베리야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그럼으로써 조만간 말렌코프가 가질 법한 일인 지도자로 부상하려는 계획을 미연에 방지했다라도 이는 흐루시초프가 베리야와 무기한의 동맹을 추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와는 반대로, 흐루시초프는 베리야가 고위 각료들을 서로 반목시켜서 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베리야에

37) This is evident from memoir accounts on all sides as well as from events in 1953-1955.

38) “Protokol No. 2 zasedaniya Plenuma Tsentral’nogo Komiteta ot 14 marta 1953 goda,” Plenum Record (Top Secret), 14 March 1953, in RGANI, F. 2, Op. 1, D. 25, Ll. 1-10. Whether Malenkov was actually intending to try to concentrate all power in his own hands is far from clear. A considerable amount of evidence suggests that he might have been genuinely willing to stick with a collective leadership structure for a long while and perhaps indefinitely. The ambition that drove Khrushchev (and evidently Beria) to seek untrammelled power appeared to be much less pronounced in Malenkov’s case. Malenkov was ambitious, but he, unlike his main rivals, may have been willing to accept the principle of collective leadership.

대한 경계를 높여가고 있었다. 심지어 흐루시초프는 말렌코프를 불신하면서도 베리야를 보다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흐루시초프의 조력자들 중 한 명의(나중에 흐루시초프에게 축출됨) 회상에 의하면 스탈린 사후 초기 몇 달 동안 강조된 ‘집단지도체제’(collective leadership)는 흐루시초프로 하여금 베리야와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만들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

새로운 지도자들의 다수는 지속적으로 과거(스탈린의 권력 장악 이전)의 집단 지도체제로 돌아가기를 원했다....그러나 지도부에는 모든 종류의 낭만주의와 감상주의를 배제한 채 문제를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두 명이 있었다. 이들이 흐루시초프와 베리야이었다. 양 측은 모두 권력을 열망하였다. 그들은 스탈린 사후에도 일인 지배의 권력구조가 붕괴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이 과거의 유물이 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권력구조는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이 구조의 통제력을 획득하는 것이며 작동시키는 것 뿐이었다...흐루시초프는 타인에 협조적인 말렌코프가 최고 권력을 얻는 도상에서 주된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흐루시초프는 권력 핵심에 있는 인물 중 베리야가 유일한 적수이고 그의 야망에 대한 유일한 장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 적수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다.³⁹⁾

6월의 둘째 주까지 흐루시초프는 말렌코프와 함께 베리야를 축출하기 위한 세력에 합류했다. 6월 12일에 극비리에서 문제를 협의한 뒤에 두 사람은 그들의 적수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⁴⁰⁾ 베리야는 그에 대항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한동안 그는 안보기관을 개혁하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흐루시초프와 말렌코프는 소련 공산당 최고 간부회의(the CPSU Presidium)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의 목인 또는 지원을 획득해야만 베리야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일 최고 간부회의의 어느 누구라도 이 생각에 반대를 했더라면, 그 상황은 베리야에게 역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고 아마도 그에 대항하는 모든 행위가 좌절되었을 것이었다. 이러한 음모는 책략의 때 이른 누설의 위험을 안고 있었는데 최악의 경우 음모자들은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비밀리에 계획을 진행시키면서 흐루시초프와 말렌코프는 몰로토프의 지지를

39) D. T. Shepilov, "Vospominaniya," *Voprosyistorii*(Moscow),No.8(August1998),pp.11-12.

40) See the comments by Malenkov in "Plenum Tsentral'nogo Komiteta KPSS, 2-7 iyulya 1953 g.: Zasedanie pervoe," 2 July 1953 (Strictly Secret), in RGANI, F. 2, Op. 1, D. 29, Ll. 22-23.

획득하는데 성공했고 그의 지지는 다른 소련 공산당 최고 간부회의 구성원들, 특히 보로실로프(Voroshilov) 같은 이들을 설득하는데 중요하였다. 보로실로프(Voroshilov)는 처음에 베리야 제거 계획에 반대했었지만 (부분적으로는 그 계획을 자신을 제거하려는 거짓 음모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 마지못해 말렌코프와 몰로토프를 지지하게 되었다. 흐루시초프와 말렌코프는 보다 손쉽게 국방장관 니콜라이 불가닌(Nikolai Bulganin)의 승인을 확보하였는데 그의 참여는 군사령관들이 베리야 제거 음모를 지지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였다. 또한 그들은 막심 사부로프로(Maksim Saburov)를 지지자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목재 산업 시찰을 하기 위한 시베리아로의 단기 공식 방문에서 돌아온 직후 음모에 대해 알게 된 카가노비치(Kaganovich) 역시 이를 지지하였다. 최고 간부회의 대다수가 이 음모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난 뒤 그는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했던 것이다.⁴¹⁾

흐루시초프와 말렌코프가 맞닥뜨린 유일한 문제들은 보로실로프(Voroshilov), 미카일 페르부킨(Mikhail Pervukhin), 아나스타스 미코얀(Anastas Mikoyan)에게서 지지를 얻는 것이었다. 페르부킨(Pervukhin)은 처음에 꺼려했지만 계획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미코얀(Mikoyan)은 흐루시초프와 긴밀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미코얀(Mikoyan)은 베리야의 ‘부정적 특성들’(negative characteristics)로 인해 베리야를 내무성과 소련공산당 최고 간부회의의 지위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동의를 했으나, 여전히 베리야를 정부 고위층에 남겨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²⁾ 흐루시초프는 미코얀의 ‘특별한 입장’(special position)에 불만을 가졌으나 (동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부정하는) 미코얀의 입장은 음모가들이 계획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명분이 되었다. 이로써 모두 베리야의 권력을 축소시키려는 목표에 동의한 것이다.

흐루시초프와 말렌코프는 그들의 목표가 베리야를 단순히 강등시키는 것이 아

41) Khrushchev provides an amusing account of his meeting with Kaganovich: “When Kaganovich returned [from Siberia], I requested that he come by the Central Committee headquarters. By the time he got there, it was evening. He and I met for a very long time. He recounted to me in elaborate detail his trip to Siberia and the lumber sites. I did not interrupt him, but I was completely distracted by something very different. Displaying politeness and tact, I waited until he finally paused for breath and was finishing his report to me. When I saw that he had actually stopped speaking, I said to him: ‘That’s all good what you’ve said, but now I want to tell you what’s going on here.’” Quoted from N. S. Khrushchev, “Aktsiya,” in V. F. Nekrasov, eds., *Beriya: Konets kar’ery* (Moscow: Politizdat, 1991), p. 272.

42) *Ibid.*, pp. 274-275. See also Shepilov, “Vospominaniya,” pp. 15-16.

닌 그를 체포하는 것임을 숨기고 있었다. 몰로토프, 불가닌, 사부로프는 궁극적인 목표가 베리야를 체포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를 비밀로 하였다. 흐루시초프와 말렌코프는 다른 이들 중 몇몇이, 특히 미코얀과 보로실로프가 그들 계획의 전모를 알게 되었을 때 음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처음부터 미코얀은 베리야를 내무성(the MVD) 책임자로부터 경제 분야를 책임지는 장관 중 한명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흐루시초프와 말렌코프는 이를 받아들여 베리야를 석유산업 장관(minister of the oil industry)에 임명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6월 26일 소련공산당 최고 간부회의는 베리야의 죄목을 열거하고 참석자들이 기소에 동의를 표명한 이후 갑작스럽게 베리야의 체포를 지시하였다. 흐루시초프와 말렌코프는 회의에서 베리야에 대한 비판의 여세를 몰아 그의 체포를 기정사실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⁴³⁾

한국에서의 급격한 전환

국내의 정치적 내분이 1953년 봄의 모스크바에서의 정책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만들었지만, 한국관련 정책을 포함한 소련 대외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다. 정책에 관한 합의가 점차 확고해져 갔다는 사실 자체는 주목할 만한 성과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 스탈린의 후계자들 모두가 소련이 서구에 우위를 확보하면서 자국의 안전과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몰로토프, 베리야, 말렌코프는 1945년 말 이래(스탈린, 즈다노프, 미코얀과 더불어) 1953년까지 존재했던 외무성 소비에트 정치국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래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며 대외 정책문제를 다루어 오고 있었다.⁴⁴⁾ 이들은 스탈린 말년의 문제들, 특히 한국전쟁 같은 문제들

43) For a much fuller account of the downfall of Beria, see Mark Kramer, "Leadership Succession and Political Violence in the USSR after Stalin's Death," in Paul Hollander, ed., *Political Violence: Belief, Behavior, and Legitima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pp. 69-106.

44) "Protokol No. 47 zasedaniya Politbyuro TsK VKP(b) 29 dekabrya 1945 goda: O podgotovke rukovodyashchikh politicheskikh rabotnikov v oblasti vneshnikh snoshenii," Postanovlenie No. 5 (Strictly Secret), 29 December 1945, in Rossiiskii Gosudarstvennyi Arkhiv Sotsial'no-Politicheskoi Istorii (RGASPI), F. 17, Op. 3, D. 1054, L. 2. The Politburo commission was later converted into a Permanent Commission on Foreign Affairs, and its membership changed somewhat after Zhdanov's death;

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몰로토프와 그의 동료들은 다른 여타 문제들에 관해서 의견을 달리 했을 수도 있겠지만, 1953년 봄 한국전쟁 문제의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였다.⁴⁵⁾ 실례로 1953년 5월 초 말렌코프, 베리야와 긴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던 숙련된 외무 관료인 베간 그리고리안(Vagan Grigor'yan)이 외무성을 관장하는 몰로토프의 수석 보좌로서 다시 발탁된 것은 이러한 합의의 존재를 대변하고 있었다.⁴⁶⁾ (그리고리안 Grigor'yan이 다양한 직함을 가지고 여러 해 동안 이끌었던) 해외 공산당과의 연대를 위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the CPSU Central Committee (CC) Commission on Ties with Foreign Communist Parties)이 같은 명칭의 중앙위원회 부(Central Committee department)로 변경된 직후에 발생한 이러한 자리이동은 한국전쟁과 같은 중요 사안들에 대한 모스크바 지도부 내의 폭넓은 합의가 없었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⁴⁷⁾ 1953년 5월, 소련 지도부 인사 어느 누구도 한국에서 분쟁이 종결되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것이었다.

however, Stalin's chief successors (other than Khrushchev) remained members throughout this time. The Permanent Commission was abolished on 5 March 1953 in accordance with the initial agreement on post-Stalin ruling structures. See "Protokol sovmeistnogo zasedaniya Plenuma Tsentral'nogo Komiteta KPSS, Soveta Ministrov Soyuzo SSR i Prezidiuma Verkhovnogo Soveta SSSR ot 4 marta 1953 goda," Ll. 1-7.

45) Dmitrii Shepilov's retrospective account suggests en passant that in the spring of 1953, a brief disagreement arose within the CPSU Presidium--for political, not substantive, reasons--about U.S.-Soviet relations. (See Shepilov, "Vospominaniya," pp. 12-13.) However, there is no documentary evidence to corroborate Shepilov's vague and sketchy recollection. (Numerous other parts of Shepilov's account are also unreliable, based wholly or mainly on what he was told afterward by Khrushchev, who had a stake in conveying a tendentious version of events.) Even if Shepilov's memoir is accurate on this point, it does not alter the fact that a consensus emerged about Soviet policy vis-à-vis the Korean War.

46) The extent of Grigoryan's influence at the Foreign Ministry is evident from the routing slips of documents pertaining to a wide range of sensitive issues. His name invariably is listed among those of the deputy foreign ministers (even though he himself did not formally hold that rank). The dating of Grigoryan's shift to the Foreign Ministry can be derived from "Tov. Grigor'yanu V. G.," Memorandum No. 97vkh (Top Secret), 3 April 1953, in RGASPI, F. 575, Op. 1, D. 277, L. 34. Grigoryan's previous ties with Beria and Malenkov worked to his detriment after Beria's arrest, when he was demoted to the editorship of a provincial newspaper.

47)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PSU CC Department for Ties with Foreign Communist Parties, see "Prezidium: Ob Otdel' TsK KPSS po svyazyam s inostrannymi kompartiyami," S-T 15/118-gs (Top Secret), 18 March 1953, in RGANI, F. 4, Op. 9, D. 709, Ll. 1-2, 4-5. The directive was approved by the CPSU Presidium the following day; see "Vypiska iz protokola No. 2 zasedaniya Prezidiuma TsK ot 19 marta 1953 g.," in RGANI, F. 4, Op. 9, D. 709, L. 3.

이렇듯 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는 소비에트 대외 정책 형성 구조의 최상위 조직들 속에서 주로 구체화되었는데 여기에서 관료들은 그들 부하들보다 대담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비록 소련 해외 정보기관에서 모스크바로 흘러들어가는 정보와 외교 자료가 소비에트 지도자들에게(수백 명의 소비에트 최고 전투조종사들의 희생을 포함한) 한국전쟁에서의 막대한 인적, 경제적 희생을 파악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데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끔찍한 유혈사태를 어떻게 종결시킬지에 대한 결정은 직접적으로 최고지도자들에 의해 다루어졌다. 스탈린 시기와 마찬가지로 아래로부터의 정책 조언은 여전히 항상 조심스럽고 지엽적인 것이었지만 권력 상층부의 관료들은 스탈린 시대의 보신주의를 탈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소련 대외 정책의 심대한 변화를 추진한 세력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상층부가 주도하는 소련 정책의 방향전환(The top-down reorientation of Soviet policy)은 이후 여러 달에 걸쳐서 지속되는 가운데 몰로토프와 그의 동료들은 판문점에서 진행 중인 협상에 관한 소련의 근본적인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길고 절망적인 수개월의 교착 상황 이후의 스탈린의 죽음은 정전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 지도자들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전쟁을 연장시키려 했던 스탈린의 ‘잘못된 정책’을 버리기로 결정하였고 5월 중반 이후 몰로토프의 권유에 따라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을 고려하였다.⁴⁸⁾ 중국 지도자들은 소련의 새로운 정책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저우언라이는 이를 지지했으나 마오쩌둥은 심각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마오쩌둥의 동요는 전쟁을 무기한으로 지속하고 싶어 하는 열망에서가 아니라 전투를 성급히 종결하는 것이 중국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희생한 것에 비해 실질적인 대가가 적어 보일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구심은 한국에서 휴전을 성사시키려는 소련의 노력을 방해하지는 못했다.⁴⁹⁾

48) "Rasporyazhenie Soveta Ministrov SSSR ot 19 marta 1953 g.," No. 858-372ss (Top Secret), 19 March 1953, in APRF, F. 3, Op. 65, D. 830, Ll. 60-71. For an illuminating discussion of the change in Soviet policy, see Kathryn Weathersby, "Stalin, Mao, and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Odd Arne Westad, ed., *Brothers in Arms: The Rise and Fall of the Sino-Soviet Alliance*(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1998), pp. 90-116.

49) Mao's position is well conveyed in "Shifrtelgramma," 29 July 1953 (Strictly Secret/Special Dossier) from V. Kuznetsov, Soviet ambassador in Beijing, to V. M. Molotov, in AVPRF, F. 059a, Op. 5a, D. 5, Pa. 11, Ll. 156-158. See also Chai Chengwen and Zhao Yongtian, *Banmendiantanpan*(Beijing: Jiefangjunchubanshe, 1992), esp. pp. 246-252.

이 학술회의를 위한 원고에서 캐서린 웨더스비(Kathryn Weathersby)가 논의했듯이, 소련의 정책은 1953년 봄과 초여름 단기간 사이에 급변하여 과거 스탈린의 정책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6월 21일 판문점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소련 관료들은 공개적으로 남한 내 ‘반동파벌’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난관의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베이징과 평양 양 측에서 상당한 정도의 압박과 설득을 필요로 하였다.⁵⁰⁾ 다음 수 주간 휴전협상은 소련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결국 7월 26일에 정전 협상이 조인되었던 것이다.

50) “Kraakh avantury inostrannykh naimitov v Berline,” *Pravda*(Moscow), 23June1953,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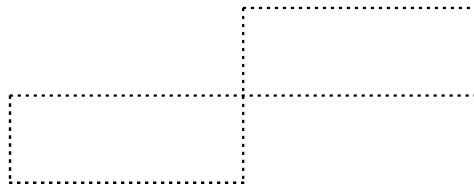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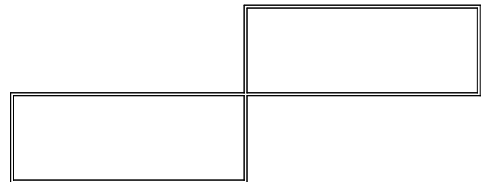
Section 3. 중국

첸 지안(코넬대), “정전은 베이징의 제1선택지가
아니었다: 중국의 한국전쟁 종전전략을 다시
생각하다”

토론: 김은기(고려대)

김정현(동북아역사재단), “중국의 한국전쟁 기억과
기념: 抗美援朝紀念館을 중심으로”

토론: 하세봉(고려대)



정전은 베이징의 제1선택지가 아니었다 :
중국의 한국전쟁 종전전략을 다시 생각하다
(The Armistice That Was Not Beijing's First Choice:
Revisiting China's Strategies to End the Korean War)

첸 지안
코넬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과 함께 한국전쟁이 종결되었을 때, 두 적대 세력 간의 경계선은 38도선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실제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38도선을 넘어 남측을 침공한 것은 북측의 공산주의 세력이었다. 3년이 지나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은 뒤 경계선은 기존의 38도선과 비슷하게 그려졌다. 휴전협정으로부터 60년이 지난 현재 38도선은 한반도를 나누는 선으로 남아 가장 극명하고, 오래 지속되며, ‘바뀌지 않는’ 전쟁의 유산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보다 공식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의 합의 혹은 구조가 한국의 ‘휴전 체제’를 대체하지 않았다.

20년 전 정전 40주년 즈음, 나는 「한국전쟁 기간 중국의 목표 변화」 (“China’s Changing Aims during the Korean War”), 『중국의 한국전쟁으로 향하는 길』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중국의 한국전쟁 종전 전략」 (“China’s Strategies to End the Korean War”)이라는 글을 쓴 바 있다.¹⁾ 나는 당시 공개되기 시작한 냉전 후 러시아 문서들에 의해 보충된 새롭게 공개된 중국 사료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베이징의 지도부와 마오쩌둥(毛澤東)이 한국전쟁에서 “미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에 맞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도록 중공군을 파병했다. 파병의 목적은 중국의 (넓은 의미의) “근본적 국익”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마오쩌둥의 중국 국가 및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혁명 프로그램의 탄력을 만들고 강화시키는 데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참혹한 전장의 현실을 맞아 중국의 목적과 종전 전략을 수정

1) Chen Jian, “China’s Changing Aims during the Korean War,”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spring 1992), vol. 1, no. 1, pp. 8-41;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Chen Jian, “China’s Strategies to End the Korean War,” 1994년 아시아연구회 연례발표에서 발표된 후 Chen Jian, *Mao’s China and the Col War*(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의 4장으로 출판.

해야 했지만, 동시에 참전을 통해 충족하고자 했던 기본적인 정치적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료들이 한국전쟁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었고, 따라서 한국전쟁 기간의 중국의 경험에 대한 나의 지난 연구들을 다시 검토할 필요와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 글에서 나는 새롭게 공개된 중국과 러시아의 사료에 의지하여 특히 38도선이 베이징의 지도부에게 가졌던 의미를 논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중국의 변화하는 한국전쟁 종전전략을 다시 검토해 볼 것이다.

I.

한국전쟁은 38도선의 파괴와 함께 시작되어, 대략 그와 비슷하게 경계선이 그려지면서 종결되었다. 중국의 한국전쟁 경험과 변화하는 전쟁 목적, 그리고 종전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지도부에게 38도선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38도선은 “지역적 산물”이 아니었으며, 중국인이나 한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다. 38도선은 제2차 세계대전의 끝에 거대 열강들 간의 정치적 결과로 만들어졌다. 상당 부분 알타회담에 의거하여 미국과 소련은 한국을 분단국가로 만들었고, 꽤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38도선이 한반도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전후 질서에서 주요 후원자였고, 38도선은 그 질서의 일부 부분으로서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을 명확하게 정했다. 중국 공산혁명의 승리, 혹은 몇몇 미국인들이 말하는 “중국의 상실”에 뒤이어 미국 내에서 트루먼(H. S. Truman)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지 못한 것 때문에 지지율에 압박을 받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정책결정자들과 군사기획자들은 만약 그들이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에 맞서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국제적 지도 위치를 규정하고 지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미국의 신용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여겼다.¹⁾ 돌이켜 보건대, 트루먼 정부가 북한의 남한 침공에 대응

1)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훌륭한 연구는 내가 보기에 William W. Stueck, *The Road to Confrontation: American Policy toward China and Korea, 1947-1950*(Chape Hill, NC: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1)이다.

할 방법은 군사적 개입 외에는 없었다.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I. V. Stalin)은 38도선에 대해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소련 또한 38도선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결과로 전후 동북아시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스탈린에게 38도선은 실제적인 의미에서나 상징적인 의미에서나 중요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38도선은 전후 동북아시아 질서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기 때문이었다. 스탈린의 말년에 그가 가장 중요하게 고수한 전략과 정책의 목표는 “대조국전쟁(great patriotic war)”에서 소련이 얻어낸 것들을, 가능하다면 타국의 혁명을 지원함으로써, 혹은 필요할 경우 현상을 고착시킴으로써 강화하는 것이었다. 한국과 38도선에 대한 모스크바의 정책에는 소련의 이러한 태도가 반영되었다.

베이징의 38도선에 대한 태도는 모스크바의 그것과는 상당히 달랐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East and Northeast Asia)의 전후 질서를 만드는 데 아무런 발언권을 갖지 못했다. 중국공산당은 동아시아에 대한 알타회담의 결정들을 위배하면서 자신들의 혁명전쟁을 수행했다.²⁾ 따라서 그들은 38도선을 도전할 수 없는 심원한 적법성을 갖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여러 중요한 승리들을 거둔 후, 중국군 야전사령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은 중국군에게 지체 없이 38도선을 넘어 계속 남쪽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은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이 지점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더욱 논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38도선의 실질적인 냉전의 전선, 즉 공산주의 혁명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을 나누는 선이라는 복잡한 의미들을 무시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38도선을 “새로운 중국의” (중국의 물리적 안전보다 더 넓은 의미로 정의되어야 할) 국가 안보적 이익의 확장된 경계선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공산주의가 근대성으로 향하는 선취적 길이라고 믿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중국공산주의자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념적으로 완고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실제적 도전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서 혁명에 성공했다. 따라서 그들은 냉전의 “분쟁지대(hotspot)”로서 한반도의 가운데에 그려진 38도선에 관여된 위험과 기회들을 직시하고, 이해하고 이익을 취하는 데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발표문이 밝히는 바와 같

2) 이 주제의 논의에 대해서는, Odd Arne Westad, *Cold War and Revolution: Soviet-American Rivalry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를 보라. 또한 Chen Jian, *Mao's China and the Cold War* 제1장을 보라.

이, 마오쩌둥과 그의 동료들이 한국위기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38도선을 미리 결정되고 바뀌지 않는 의미와 함축을 지닌 것으로 다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II.

한국전쟁은 가장 먼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의 지도자 김일성의 전쟁이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남한의 혁명적 상황에 대한 이해(혹은 오해)를 따라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한 보다 큰 맥락에서 보면 중국혁명과 냉전이라는 큰 요소들의 영향 또한 존재했다.

돌이켜 보건대, 1949년 중국공산주의 혁명의 승리는 전 세계의, 특히 동아시아의 공산주의자와 그 동조자들에게 역사가 실로 그들 편에 있다는 신념을 강화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김일성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공산주의 혁명가들에게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자신들의 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이 고취되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38도선의 침범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공산주의자들이 1949년 중반에 혁명전쟁을 통한 한국통일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들의 계획을 지원하는 것을 거부했다.³⁾ 1950년 1월 10일,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D. Acheson)이 미국의 태평양 서부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후, 그 달이 지나기 전에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한을 공격한다는 계획을 지지했다.⁴⁾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태도는 복잡했다. 한편으로 그들이 타국(특히 동아시아)의 혁명운동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중심적 위치를 회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공산주의자 간에 깊은 관계(특히 한국공산주의자들이 중국 내전 기간 동안 상당한 지원을 제공한 것과 같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 지도부에게 한국 동지들의 혁명전쟁을 통한 그들 국가의 통일 계획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다.⁵⁾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마오

3) "Politburo decision to confirm the following directive to the Soviet ambassador in Korea," September 24, 1949,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no. 5(Spring 1995), pp. 6-7.

4) Telegram, Stalin to Shtykov, January 30, 1950, CWIHP *Bulletin*, no. 5 (Spring 1995), p. 9.

5) 이 두 주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제1장과 제4장을 보라.

쩌둥과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그들이 중국국민당 지배 하의 대만을 해방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그 시기에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 않았다.

1949년과 1950년 초기에 이르는 동안, 중국 공산당지도부는 김일성의 혁명전쟁을 통한 국가 통일 계획을 지원하는 한편, 계속해서 지나치게 이른 시간에 공세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시했다.⁶⁾ 여전히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인민해방군(PLA)의 모든 한국인 군인들을 한국에 되돌려 보내는 데 동의했다. 1949년 여름, 인민해방군의 가장 우수한 부대이며 주로 한국인으로 구성된 164, 166사단이 한국으로 귀환했다.⁷⁾ 1950년 봄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이미 김일성의 남한 공격 의도를 아주 잘 알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한국인 군인들을(포병장비와 같은 중장비를 포함한 그들의 무기와 함께) 156사단과 여러 다른 부대에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데 동의했다.⁸⁾ 이 부대들은 북한의 남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할 것이었다. 이 부대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데 동의한 것이 반드시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김일성의 남한 공격계획에 동의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노련한 부대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평양에게 있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스탈린이 김일성의 계획에 찬성했을 때, 마오쩌둥은 두 달 간의 소련 방문 기간 중 모스크바에 있었다. 현재 우리는 마오쩌둥이 스탈린과 김일성의 남한 공격 의도에 대해 논의했지만, 김일성의 계획에 찬성하진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⁹⁾ 하지만 이것이 소련과 북한 간에 김일성의 계획에 대한 동의를 이루어졌음을 마오쩌둥이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마오쩌둥이 김일성의 계획에 대해 완전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6) Telegram, Kovalev to Stalin, May 18, 1949; telegram, Shtykov to Vyshinsky, May 15, 1949; telegram, telegram, Gromyko to Kovalev, conveying Stalin's message to Mao, November 5, 1949, cited from Shen Zhihua, ed. *Chaoxian zhanzheng: guo dang'anguan de jiemi wenjian* (The Korean War: Declassified Documents from Archives in Russian, hereafter *Chaoxian zhanzheng*) 3 vols. (Taipei: Institute of Modern History, Academia Sinica, 2003), vol. 1, pp. 187-188, 189-190, 276.

7) 새로운 중국 및 러시아 측 사료에 근거한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Kim Dong-jil, "Some New Insights into the Return of the Ethnic Korean Divisions in the PLA to North Korea," *Lishi yanjiu* (Historical Research), No. 6 (2006), pp. 103-114)을 보라. 또한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제4장의 논의를 보라.

8) Report, Nie Rongzhen to Liu Shaoqi and Zhu De, January 20, 1950, *Nie Rongzhen nianpu* (A Chronological Record of Nie Rongzhen, Beijing: Renmin, 1999), p. 525; 또한 *Jianguo yilai Liu Shaoqi wengao* (Liu Shaoqi's Manuscripts since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Beijing, Zhongyang wenxian, 2005), vol. 1, pp. 319-321)을 보라.

9) Telegram, Stalin to Shtykov, February 3, 1950. 전보의 중국어 번역 사본을 제공해준 셴지휘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1950년 3월 말, 김일성이 스탈린과의 회담을 위해 모스크바로 가기 전에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중국주재 북한대사 이주용(Yi Chu-yon)의 요청에 의해 그와 만나,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회담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마오쩌둥은 김일성과의 회담에 찬성했고, “만나는 시기는 4월 말 혹은 5월 초로 정해졌다.” 마오쩌둥은 이주용에게 “(당신들은) 언제 조국을 통일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주용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마오쩌둥은 만약 “한국을 통일할 구체적인 계획”이 이미 있다면 김일성과의 회담은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만약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공식적으로(즉,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분명히 이주용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저우언라이는 회담이 “공식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마오는 이어서 “만약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남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일으킬 계획을 갖고 있다면, 회담은 공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비공식적으로 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오쩌둥은 이주용에게 다음과 같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한국의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될 수 없다. 한국의 통일은 무력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 미국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미국인들은 이 같이 작은 곳에서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¹⁰⁾

마오쩌둥의 언급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로, 마오쩌둥의 언급은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김일성의 남한침공 계획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한국의 통일”이 오직 혁명전쟁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둘째로, 그의 언급은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중국혁명의 승리 이후 미국이 한국과 동아시아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저평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50년 4월 김일성은 “조국의 북쪽과 남쪽을 통일하는 길과 방법의 문제”에 대해 스탈린과 논의하기 위해 소련에 방문했다.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남한을 공격한다는 그의 계획에 찬성함을 확인해줬다.¹¹⁾ 또한 동시에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당신이 결단내린다 하더라도, 나는 손가락 까닥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모든 원조에 대해 마오쩌둥에게 요청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밝혔다.¹²⁾ 다시 말해서 스탈

10) Telegram, A. Ignatiev to Vyshinskii, April 10, 1950; telegram, Shitykov to Vyshinsky, May 12, 1950, cited from Shen ed., *Chaoxian zhanzheng*, vol. 1, pp. 336, 381.

11) Telegram, Vyshinskii to Shitykov, conveying Stalin's message to Mao, May 14, 1950, cited from Shen ed., *Chaoxian zhanzheng*, vol. 1, p. 384.

린은 마오쩌둥에게 “거부권”을 준 것이다.

1950년 5월 김일성은 비밀리에 베이징을 방문했다.¹²⁾ 위에서 인용한 마오쩌둥과 이주용의 대화에서 이어진 이 회담은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이미 김일성이 “한국통일의 구체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왔고, 그들이 아마도 스탈린의 승인 없이 김일성이 이와 같이 추진하지 않았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회담 내용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회담에 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회담 이후의 보고서나 회고에 근거한다. 마오쩌둥이 김일성의 계획에 의구심을 가졌고, 모스크바와 평양이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불쾌함을 느꼈다.¹⁴⁾ 그러나 그는 김일성에게 심각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스탈린이 그에게 주었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신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중국의 군사적 지원과 중국군을 지원세력으로서 한국과의 경계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하지만 김일성은 오만한 태도로(마오쩌둥의 러시아어 통역이었던 쉬쯔에 따르면 마오쩌둥 본인의 표현이었다) 마오쩌둥의 제안을 거절했다.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북한 스스로의 군사력과 남한의 게릴라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또한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일성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고, 마오쩌둥은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사안에 대한 논의를 정말로 진전시키지는 않았다. 또한 마오쩌둥은 미국보다 일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¹⁵⁾

회담 중 38도선 사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다음과 같이

12) Sergey Goncharov, John Lewis, Xu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 145.

13) Telegram, Shitykov to Vyshinsky, May 12, 1950, cited from Shen ed., *Chaoxian zhanzheng*, vol. 1, p. 381. 쉬티코프는 전보에서 “오늘, 5월 12일, 이주용은 마오쩌둥과 만났고 마오쩌둥이 김일성은 (베이징에) 정해진 날짜에 방문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음을 보고했다.”라고 보고했다.

14) 김일성이 베이징에 도착해서 마오쩌둥과 그의 동료 중국공산당 지도부에게 그가 통일전쟁을 일으킬 계획을 갖고 있으며, 스탈린이 그의 계획에 동의했음을 알리자, 중국지도부는 즉시 소련대사 N. V. 로쉬친을 통해서 스탈린에게 김일성의 언급에 대한 설명과 확인을 요청했다. Telegram, Roshchin to Stalin, May 15, 1950, Shen, ed. *Chaoxian zhanzheng*, vol. 1, p. 383.

15) Interviews with Shi Zhe in August 1992. 또한 Telegram, Roshchin to Stalin, May 13, 1950; telegram, Stalin to Mao on May 14, 1950, in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no.4 (Fall 1994), p. 61; telegram Roshchin to Stalin, May 16, 1950, cited from Evgeniy P. Bajanov and Natalia Bajanova.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The Most Mysterious War of the 20th Century - Based on Secret Soviet Archive”(unpublished manuscript, copy in author’s possession), pp. 52-53을 보라.

말했다.

소련이 전투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힘들다. 왜냐하면 소련은 38도선에 대한 미국과의 협정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 같은 의무에 매어있지 않고 따라서 북한에 쉽게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¹⁶⁾

그 결과로 마오쩌둥이 5월 15일에 김일성을 위해 저녁식사를 주최했을 때, 김일성은 마오쩌둥이 있는 자리에서 로쉬친(N. V. Roshchin)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우리와 마오쩌둥 동지의 협상은 매우 부드럽게 진행되었다. 마오쩌둥 동지는 모스크바에서 스탈린 동지와 합의했던 바를 지지했다.¹⁷⁾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아마 여전히 김일성의 남한공격 계획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김일성의 계획을 거부하지 않았고, 실제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계획을 지지했다. 김일성의 관점에서 그의 남한공격 계획은 모스크바와 베이징 양측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 당연하게도 김일성이 비밀리에 베이징에 다녀온 이후, 평양은 베이징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더 알리지 않은 채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더욱 빠르게 진행했다.

III.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했다. 중국은 전쟁 발발 4개월 후에 참전했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에서의 군사작전 준비는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시작되었다. 중국의 참전 준비는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쟁의 기본적인 의미가 변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서 9월 초까지의 기간이었다. 이 단계의 주된 양상은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북한공산당의 전쟁 승리를 돕기 위해, 혹은 최

16) Roshchin to Stalin, May 16, 1950, cited from Bajanov et al.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pp. 52-53.

17) Telegram, Roshchin to Stalin, May 16, 1950, cited from Bajanov et al.,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p. 53.

소한 전쟁 상황의 역전을 막기 위해 한국에 중국군을 파견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7월 초 이전에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대만 침공을 미루고 한국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¹⁸⁾ 7월 2일 아침에 중국공산당 정치국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논의하고 어떤 결정에 이르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날 오후 저우언라이가 중국주재 소련 대사 로쉬친과 만난 사실을 알고 있다. 저우언라이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모스크바의 평가를 물었다. 저우언라이는 북한인민군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진군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미국군의 수륙 양면의 상륙작전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인천과 같은 장소의 방어를 단단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동북부에 미국군이 38도선을 넘어설 경우에 쓸 수 있는 12만 명의 군대를 집결시켰다고 말했다.¹⁹⁾ 7월 7일, 저우언라이는 “국방위원회”의 의장을 맡아 국경방어군 창설을 결정했고, 이를 6일 후에 발표할 것을 명령했다.²⁰⁾ 8월 초까지 26만 명 이상의 중국군이 북한과의 국경에 배치되었다.²¹⁾

국경방어군 창설 이후, 중국 지도부가 북한에 가장 먼저 알린 것들 중 하나는 중국이 기꺼이 참전하여 북한을 돕겠다는 것이었다. 7월 13일 저우언라이는 북한에 한국의 전장지도와 북한인민군의 군복 견본을 달라고 요청했다.²²⁾ 비슷한 시기에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김일성의 대리인을 만났다. 마오쩌둥은 그에게 “병력에게 공세를 중단하여 우리의 주력 부대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마오쩌둥은 한국과의 경계에 32만 명 이상의 군대를 집결시켰다고 말했다. 마오쩌둥의 언급을 정확히 옮기면 다음과 같다. “만약 북한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중국은 한국에 군대를 보낼 수 있다.”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8월 1일까지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를 베이징에” 파견할 것과 8월 10일까지 한국에 파병 제안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²³⁾

1950년 8월 4일, 중국공산당 정치국은 한국의 상황과 중국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마오쩌둥은 그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8) Xiao Jinguang, *Xiao Jinguang huiyilu* (Xiao Jinguang's Memoirs) (Beijing: Jiefangjun, 1990), vol.2, pp. 8, 26.

19) Telegram, Roshchin to Phillipov (Stalin), July 2, 1950, APRF, 45/1/331/75-78. (센지휘 제공 중국어 번역 사본)

20) Letter, Mao Zedong to Nie Rongzhen, July 7, 1950, *Mao wengao*, vol.1, p. 428.

21) Han Huanzhi and Tai Jinqiao et al., *Dangdai zhongguo jundui de junshi gongzuo*, vol.1, 449-450.

22) Skykov to Stalin, July 15, 1950.

23) Telegram, Shtykov to Stalin, July 20, 1950, cited from *Zhongyang yanjiu yuan jindaishi yanjiusuo jikan* (Collection of Papers by Institute of Modern History of Academic Sinica), no. 63 (March 2009), p. 156.

만약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들은 더욱 오만해질 것이고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을 원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자원군을 한국에 파견하는 형태로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 그 시점은 나중에 정해지겠지만, 우리는 이를 대비해야 한다.²⁴⁾

저우언라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북한에게 승리한다면 평화의 대의는 무너질 것이고 미국인들은 보다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힘이 투쟁에 더해져야 한다. 중국의 힘이 더해진다면 모든 국제적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넓은 관점을 취해야 한다.²⁵⁾

그 회의 후 8월 5일에 마오쩌둥은 동북부에 배치된 중국군의 작전 준비를 8월 말까지 마치도록 했다. 또한 그는 동북부의 중국공산당 수장 가오강(高崗)에게 병력동원을 책임지고 “9월 초까지 싸울 준비를 마치”라고 명령했다.²⁶⁾

8월 13일 가오강은 마오쩌둥의 지시를 따라 국경방어군 사단장급 회의를 소집하여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한국의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졌고, “미국 제국주의자들은 한국 인민의 혁명적 승리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들의 패배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한국에 보다 많은 군대를 보내 전쟁을 확장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오강은 “만약 미국 침략군이 한국을 차지한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그들은 중국 동북부와 북부, 그리고 조국을 공격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오강은 중국이 “지금 선제권을 취하고 적극적으로 한국 인민을 지원하고 한국인민이 자유를 획득하도록 돕고, 한국을 독립된 민주주의 통일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의 중국의 군사작전 형태에 대해서 가오강은 중국군이 자원군의 이름을 사용하고, 북한군복을 입고, 북한인민군의 직함을 쓰고, 모든 고급장교들은 한국식 이름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²⁷⁾

24) Bo Yibo, *Ruogan zhongda juece he shijian de huigu* (Recollection of Several Important Decisions and Events, Beijing: Zhonggong zhongyang dangxiao, 1991), p. 42.

25) Ibid., p. 42.

26) Telegram Mao Zedong to Gao Gang, 5 August 1950, *Jianguo yilai Mao Zedong wengao*, vol.1, p. 454.

27) Gao Gang's speech, August 13, cited from the Military History Institute of the Chinese Academy of Military Science ed., *Kangmei yuanchao zhanzheng shi* (A History of the War to Resist America and Assist Korea)(Beijing: Junshi kexue, 2000), pp. 91-92.

회의가 끝난 후 가오강은 마오쩌둥에게 이를 보고했다. 가오강은 또한 8월 말까지 진입작전 준비를 완료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8월 18일, 마오쩌둥은 “국경방어군의 훈련 및 준비 완료 기한을 9월 말까지 늦추는 것”을 허락한다고 대답했다.²⁸⁾

8월 26일, 저우언라이는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의 연설에서 “한국이 세계적 투쟁의 중심”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개입의 결과로 한국전쟁이 연장되어 “우리의 책임이 커졌고, (한국에서 우리가 취할 행동의)전망이 곧 현실이 되도록 우리는 빠르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한편으로 우리는 몇 달 내에 한국에 갈 준비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한국인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 때에 적들이 이를 너무 빨리 파악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행동을 취했을 때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고 지적했다.²⁹⁾

이 모든 것들은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베이징의 지도부가 한국전쟁에 중국군을 파병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중국은 북한의 후방 방어를 강화함으로써(따라서 아마도 중국군은 전방에 배치되지 않을 것이었다), 북한이 전투에 집중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도록, 혹은 최소한 전쟁 상황이 뒤집히고 적에게 패배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었다.

38도선이 베이징의 한국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검토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까? 실제로 그러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7월 2일 저우언라이는 로쉬친과의 회담에서 미국군이 38도선이 넘으면 한국에 중국군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회담 문건(저우언라이와 로쉬친의 회담 내용이 완벽히 옮겨진 것은 아니다)을 주의 깊게 읽으면, 그 회담이 저우언라이가 한국의 상황에 대한 소련의 평가를 물어봄으로써 시작되었고, 위에서 저우언라이가 말한 것은 로쉬친의 질문 혹은 논평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8도선에 대한 언급은 중국의 관심과 태도를 반영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스탈린의 관심과 태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최고위 중국지도자들 간에 중국이 북한의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그리고 그 결과로서 간접적으로 북한의 공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에 파병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의견차이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28) Telebram, Mao to Gao Gang, August 18, 1950, *Mao wengao*, vol. 1, p. 469.

29) Zhou Enlai speech, August 26, *Zhou Enlai junshi wenxuan* (Selected Military Papers of Zhou Enlai) (Beijing: Renmin, 1997), vol. 4, pp. 43-50.

그렇다면 왜 중국군은 인천상륙작전 이전에 한국에 투입되지 않았을까? 가장 주된 원인은 김일성이 중국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³⁰⁾ 동시에 새롭게 공개된 러시아 사료는 또한 중국군의 개입이 늦어진 것은 스탈린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7월 초에 김일성은 수차례 소련에 중국에 파병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매번 모스크바는 김일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묵살했다.³¹⁾ 결과적으로 중국의 개입은 인천상륙작전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IV.

9월 15일, 미국/UN군은 성공적으로 인천에 상륙했고, 전장의 양상을 완벽하게 바꿨다. 베이징의 가장 두려운 악몽이 현실이 되었고, 중국의 한국 위기에 대한 대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거의 곧바로 베이징의 지도부는 다시 북한에 이제 중국군이 가능한 한 빠르게 참전해야 할지 의사를 타진했다. 김일성은 중국의 개입에 약간의 관심을 보였지만, 다른 여러 북한지도부(특히 박헌영)는 중국의 개입을 강하게 원했다. 하지만 스탈린은 여전히 중국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중국은 두 주 동안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³²⁾

중국군 개입에 관한 결정적 변화의 순간은 9월 말, 즉 남한군이 38도선을 넘고 남한의 레지스탕스가 거의 괴멸된 것이 분명해졌을 때 찾아왔다.

북한 전역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마침내 스탈린과 김일성의 중국 개입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9월 29일, 김일성은 모스크바에 소련의 즉각적이고 중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³³⁾ 이때, 스탈린은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30) 밑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일성은 10월 1일에 남한군이 38도선을 넘어 평양 방어가 심각한 위협에 처하기 전까지 개입을 요청하지 않았다.

31) Telegram, Shtykov to Stalin, July 15, 1950; telegram, Shtykov to Stalin, July 20, 1950; telegram, Shtykov to Vinsinskii, August 29, 1950. Cited from Shen Zhihua " 'An Alliance of Teeth and Lips' or a 'Political Marriage': The Establishment and Extension of the Sino-Korean Alliance, 1946-1960," *Zhongyang yanjiu yuan jindaishi yanjiusuo jikan* (Collection of Papers by Institute of Modern History of Academic Sinica), no. 63 (March 2009), pp. 154, 155, 158.

32) 필자가 인용문 제공 예정.

33) Telegram, Shtykov to Gromyko, conveying Kim Il-sung and Pak Hon-yong's letter to Stalin, September 30, 1950, cited from Shen ed. *Chaoxian zhanzheng*, vol. 2, pp. 563-565.

결정했고 김일성에게도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10월 1일,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한국의 동지들에게 중국군의 보호 하에 전투예비병력을 조직할 기회를 주도록” 전쟁에 참가하길 원하는 전보를 보냈다.³⁴⁾ 같은 날, 김일성은 박헌영과 함께 마오쩌둥에게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청하는 긴급 편지를 보냈다.

마오쩌둥은 빠르게 반응했다. 같은 날 저녁,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1주년 기념행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천안문의 꼭대기에서 다른 최고위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간단한 회의를 열었다. 그 얼마 후 마오쩌둥은 개인적으로 스탈린에게 보낼 장문의 전보 초고를 작성했다. 그 전보에서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한국의 동지들이 미국과 그 주구 이승만과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한국에 의용군의 이름으로 파병할 것을” 결정했다고 썼다. 그는 파병이 한국과 동아시아의 혁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오쩌둥은 중국의 참전 목표가 “문제 해결, 즉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온 침략자들을 전멸시키고 [한국으로부터] 몰아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오쩌둥은 이 모든 것들이 “미국 공군의 중국 도시들, 산업기지에 대한 폭격과 미국 해군의 해안 공격”으로 이어질 “미국의 대(對)중국 선전포고”를 야기할지도 모른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미국이 중국에게 선전포고한다고 해도, 중국과 미국의 대립은 큰 규모, 장기간의 전쟁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마오쩌둥은 또한 한국에서 미국군을 패퇴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소련의 실질적인 군사지원, 특히 공중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³⁵⁾

하지만 마오쩌둥은 분명히 그 전보를 보내지 않았다. 10월 2일 오후 3시, 중국공산당 정치국은 한국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보다 확장된 회의를 열었다. 그날 늦은 시각에 마오쩌둥은 로쉬친을 만났다.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중국의 한국 파병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 도발”을 포함하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수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중국지도부가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데에 “조심해야” 한다고 믿고 있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중국지도부가 한국에 파병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았음을 스탈린에게 알리라고 요청한 것이다.³⁶⁾

34) Telegram, Stalin to Mao Zedong and Zhou Enlai, October 1, 1950, CWIHP *Bulletin*, nos. 6-7 (Winter 1995-1996), pp. 114.

35) Telegram, Mao Zedong to Stalin, October 2, 1950, *Jianguo yilai Mao Zedong wengao*, vol. 1, pp.539-540.

36) Telegram, telegram, Roshchin to Stalin, October 3, 1950, CWIHP *Bulletin*, nos. 6-7 (Winter 1995/96): 114-116. 마오쩌둥이 말한 것은 중국지도부가 “참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중국지도부가 “참전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어떻게, 그리고 왜 10월 2일 마오쩌둥의 두 메시지 간에 중요한 차이가 생긴 것일까? 1990년대 중반에 학자들은 이와 같이 중요한 투쟁을 기초적인 역사적 증거에서 연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원인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논쟁했다. 여기서 나는 동료 학자들에게 위에서 언급한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썼지만 실제로는 보내지 않았던 전보에서 보여준 개념과 평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어떤 의미에서 마오쩌둥은 이 전보에서 인천상륙작전 이전부터 그와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군 파병에 대해 계속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인천상륙작전 이전에 북한군이 아직 공세를 취하고 있을 때,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중국“의용군”을 북한인민군 부대로 위장함으로써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참전하는 것을 계획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전쟁 개입이 중국과 미국 간의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 전보 초고에서 마오쩌둥은 실제로 중국군의 주된 임무를 한국에서 싸우는 것으로 설정했고, 그는 또한 이것이 중국 북부와 남부 깊숙한 해안의 도시들에 대한 미국 공군과 해군의 공격을 야기할 중국-미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는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인천상륙작전 이전에 가졌던 한국 파병에 대한 태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필연적으로 10월 3일 오후에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마오쩌둥의 동료들 간에 심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오쩌둥의 동료들이 이전에 그들이 지지했던 계획과 완전히 다른 전쟁 개입안에 대해 의구심 혹은 반대를 표명하자,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그 초고를 보내는 대신에 다른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0월 4일과 5일 동안에 중국공산당 정치국의 확장된 회의를 다루는 방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마오쩌둥은 전쟁에 개입하기를 원했다.³⁷⁾ 마오쩌둥은 동료 중국공산당 지도부 인물들의 다수가 미국과의 전면전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국 파병을 지지하는 데에 주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마오쩌둥은 10월 4일 첫날의 회의에서 왜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를 주저하는 이들을 격려했다. 그날 회의의 마지막에 마오쩌둥은 그의 동료들에게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이 합리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이웃 국가가 위협에 처했을 때 무슨 이유에서든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매우 슬플

37) 그 회의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회의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상당 부분 참석자의 회고에 근거한다.

것이다.”라고 말했다.³⁸⁾ 다음 날 아침, 마오쩌둥은 개인적으로 평더화이(彭德懷)에게 한국으로 가는 중국의용군의 사령관이 되라고 설득했다. 오후에 회의가 재개된 후, 마오쩌둥은 노련하게 논의를 왜 중국이 참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끌었다. 평더화이가 전쟁 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했을 때,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마침내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한국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했다.³⁹⁾

10월 3일 이른 아침에 저우언라이는 K. M. 파니카르 중국주재 인도대사를 만나 미국군의 38도선 침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관련하여 다음의 유명한 경고를 했다.

미국군은 38도선을 침범하고 전쟁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진정 이러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쟁에 개입할 것이다.⁴⁰⁾

저우언라이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만약 미국/UN군이 38도선의 지속적 침범을 멈췄다면 중국은 한국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을까? 이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내가 위에서 설명한 맥락에서 답을 해야 하는 질문이다. 중국지도부가 한국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워싱턴에 경고를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시나리오 또한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남한군이 이미 38도선을 넘고 북한의 레지스탕스가 궤멸한 상황에서 베이징의 지도부가 적군의 계속되는 진군을 막으라는 매우 벅찬 임무를 지시했으리라고 상상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나는 저우언라이가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위해 그 메시지를 전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저우언라이의 메시지가 실제로 미국/UN군의 진군을 막는 역할을 했다면, 베이징은 전쟁에 대비해서 군대를 완벽히 동원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워싱턴이 저우언라이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중국-한국의 경계로 진군했다면, 중국지도부는 중국 인민과 세계여론에 대해서 중국의 물리적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 때문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중요한 정당성을 확보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38도선은 오직 중국지도부가 어떻게 중국인민들에

38) Pang Xianzhi and Li Jie, *Mao Zedong yu Kangmei yuanchao*, p. 20.

39) 이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Chapter 5, see also Zhang Xi, "Peng Dehuai and China's Entry into the Korean War," pp. 9-15을 보라.

40) Minute, Zhou Enlai's talks with K. M. Panikkar, October 3, 1950, *Zhou Enlai wajijiao wenxuan* (Selected diplomatic documents of Zhou Enlai, Beijing: Zhongyang Wenxian, 1990), 25-27.

게 전쟁 결정을 가장 잘 정당화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만 중요했다.

10월 8일, 마오쩌둥은 공식적으로 평터화이를 사령관으로 하는 중국인민의용군 창설을 명령했다.⁴¹⁾ 하지만 그 후에 마오쩌둥은 두 번이나 그 명령을 보류했다. 중국인민의용군 창설 명령이 내려지고 10일이 지난 후 10월 18일이 되어서야 참전의 최종적인 “최종결정”(the final "final decision")이 내려졌다. 이는 38도선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 때문이 아니라, 베이징과 모스크바 간에 주고받은, 주로 소련이 한국에서 싸우는 중국군에 대해 공중지원을 제공할지 말지에 관한 논쟁과 책략들 때문이었다.

전쟁 초기부터 기본적으로 베이징의 한국 위기 대처방안은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해야 한다면 소련으로부터 탄약, 군수장비, 지상군에 대한 공중지원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지원을 받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천상륙작전 이후로 스탈린의 태도가 이점에 있어서 변했다. 10월 1일에 중국지도부에 보내는 전보에서 스탈린은 한국에 파병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스탈린은 소련이 공중지원은 고사하고 중국에 무슨 지원을 할 것인지 말하지 못했다.⁴²⁾

따라서 10월 8일, 저우언라이는 소련의 지원, 특히 공중지원을 명확히 하고 마무리 짓기 위해서 소련을 방문했다. 저우언라이는 10월 10일과 11일에 흑해의 스탈린 소유의 별장에서 스탈린과 만났다. 저우언라이는 계속해서 소련의 군사적 원조, 특히 공중지원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지만 스탈린의 태도는 모호했다. 비록 스탈린이 저우언라이가 계속된 요청에 의해 중국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동의했지만, 전쟁 초기 국면에서 소련 공군이 한국에서의 전투에 참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⁴³⁾ 회담 후에 스탈린과 저우언라이는 함께 마오쩌둥에게 “소련은 중국의 탄약 보급, 탱크, 비행기, 그리고 다른 군수장비의 필요를 완벽히 채워줄 것”이지만, “소련 공군이 한국에서 중국의 작전을 지원하는 데에는 최소한 2개월 혹은 2개월 반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보를 보냈다.⁴⁴⁾

스탈린이 공중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어기자, 마오쩌둥은 10월 12일 중국

41) “Mao Zedong’s Order to Establish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ctober 8, 1950; see also telegram, Mao Zedong to Kim Il-sung, October 8, 1950, *Mao wengao*, vol. 1, pp. 543-544, 545.

42) Telegram, Stalin to Mao Zedong and Zhou Enlai, October 1, 1950, *CWIHP Bulletin*, no.6-7, pp. 114.

43) For a more detailed discussion based on Shi Zhe’s recollections, the validity of which were checked against other Chinese sources, see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pp. 197-200.

44) Telegram, Stalin and Zhou Enlai to Mao Zedong, October 12, 1950.

군에게 참전준비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⁴⁵⁾ 다음날 중국공산당 정치국은 다시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다시 참전이 결정되었다. 회의 후 마오쩌둥은 저우언라이를 통해 스탈린에게 “우리는 한국에 파병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데에 동의했다.”라고 알렸다. 마오쩌둥은 그 결정의 이유로 다음의 사항들을 말했다.

우리가 위에서 언급된 전향적인 정책을 채택한 것은 중국, 한국, 동양, 그리고 세계 전체에 아주 큰 이익이 된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파병하지 않고 적군이 압록강 안(岸)에 다다르도록 둔다면,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분명히 반동적 운동이 거세질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며 동북방면에 대해서는 더더욱 좋지 않다. 동북부경계방어군 전군(全軍)은 동북부에 발이 묶일 것이며, 만주 남부의 발전 시설은 [적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참전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참전해야 한다. 참전이 가장 유익할 것이지만, 참전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⁴⁶⁾

마오쩌둥은 이 전보 어디에서도 38도선을 언급하지 않았다.

마오쩌둥은 또한 저우언라이에게 “며칠 더 모스크바에 머물러 소련의 동지들과 더 상의”하고, 중국에 제공할 소련의 재정적, 그리고 여타 물질적 지원에 관한 문제들을 결정하도록 지시했다.⁴⁷⁾ 10월 17일, 저우언라이가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마오쩌둥은 저우언라이로부터 스탈린의 정확한 태도를 듣기 위해서 다시 군대에 움직임을 멈추라고 지시했다.⁴⁸⁾ 다음날 마오쩌둥은 소련이 전쟁의 나중 단계에 중국에 주요 도시들에 대한 방공망과 한국의 중국군에 대한 공중지원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확신하자, 마침내 중국군을 한국전쟁에 참전시켰다.⁴⁹⁾ 1950년 10월 19일, 중국군은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45) Telegram, Mao to Peng Dehuai and others, October 12, 1950, *Mao wengao*, vol. 1, p. 552.

46) Telegram, Mao to Zhou, October 13, 1950, *Jianguo yilai Mao Zedong junshi wengao* (Mao Zedong's Military Manuscripts since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Beijing: Junshi kexue, Zhongyang wenxian, 2009), vol. 1, pp. 252-253.

47) Ibid., p. 253.

48) Telegram, Mao to Peng Dehuai and Gao Gang, October 17, 1950, *Mao wengao*, vol. 1, p. 567.

49) Telegram, Mao to Deng Hua, Hong Xuezhong, Han Xianchu, and Xie Fang, October 18, 1950, *Mao wengao*, vol. 1, pp. 567-568.

V.

중국의 참전은 즉각적으로 한국의 전장에서 힘의 균형을 변화시켰다. 19월 25일, 중국군은 남한군을 기습했고, 두 주가 지나기 전에 적군을 압록강 인근에서 청천강까지 후퇴시켰다.⁵⁰⁾ 이 후퇴는 미국/UN군에 심각한 위협이었지만, 맥아더 사령관은 오만하게도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11월 중순에 맥아더는 “종전” 공세를 재개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맞서 펑더화이는 “적군을 아군 지역 깊숙이 유인하는” 전략을 택했고, 최적의 반격 기회가 이르기를 기다렸다.⁵¹⁾ 11월 말, 진격하던 미국/UN군이 중국군이 준비해둔 함정에 빠지자 펑더화이는 격렬한 반격을 명령했다. 12월 중순까지 중국군과 재조직된 북한군은 38도선 이북의 대부분 영역에 대한 통제력을 다시 획득했다.

중국의 한국에서의 군사적 승리는 만약 베이징의 지도부가 원했다면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했다. 12월 5일, 인도를 대표로 하는 13개 비서구국가 대표단이 베이징에 평화 협상을 제의했다. 그들은 중국이 38도선에서 공세를 멈출 것과, 정전을 기초로 한국에 이해를 가진 강대국들이 한국전쟁의 최종 해결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⁵²⁾ 9일 후, UN은 13개국의 해결책을 통과시키고 “한국에서 정전이 만족스럽게 준비될 수 있는 기초”를 찾기 위해 3인의 그룹을 만들었다.⁵³⁾ 인도는 또한 계속해서 중국에게 13개국의 제안이 서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베이징이 정전을 받아들인다면 그 대가로 중국에게 다른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⁵⁴⁾

그러나 베이징은 총체적 승리 외에 그 무엇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12월 8일 중국 고위직 외교부원 첸지아캉(陳家康)은 인도에 왜 13개국이 미국/UN군이 38도선을 넘었을 때에는 정전을 제의하지 않고, 중국/북한군이 진격할 때에 정전을 요청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3일 후, 저우언라이는 인도대사 파니카르와의 회담에서 미국인들이 38도선을 침범한 만큼 중국이 이를 존중할 필요는 없음을 강조했다.⁵⁵⁾

50) Peng Dehuai, *Peng Dehuai zishu* (An Autobiography of Peng Dehuai, Beijing: Renmin, 1981), p. 259.

51) Peng Dehuai, *Peng Dehuai zishu*, p. 259-260.

52)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139-140.

53) *FRUS*, 1950, vol. 7, part 1, p. 1542.

54) Stueck, *The Korean War*, 140-141.

사실 펑더화이와 다른 중국군 야전사령관들은 자신들의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이 빈약한 병참체계와 공중지원의 부족 때문에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본국으로부터 증원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진격을 멈추기를 원했다.⁵⁶⁾ 하지만 마오쩌둥은 “적군을 전멸시키고 미국인을 한국에서 일소”하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마오쩌둥은 중국이 더욱 강하게 압박한다면 미국인들이 정전을 요청할 것이라고 믿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는 미국에게 한국에서 철수하고, 정전의 첫 단계로서 UN군이 38도선 이남으로 후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었다.⁵⁷⁾ 마오쩌둥은 적군에게 보다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 전에 “정치적인 의미에서 [우리 군대가] 39도선에 이르러 그 이북에 멈춰서는 것은 가장 나쁜 결과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협상을 통해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한 그 어떠한 제안도 고려하기를 거부했다.⁵⁸⁾ 12월 21일, 마오쩌둥은 “또 다른 작전을 세우고”, “38도선을 넘”으라고 지시했다.⁵⁹⁾ 다음날 저우언라이는 공식적으로 13개국의 정전 해결책을 한국에서 군사적 공세를 재개할 시간을 벌기 위한 미국의 음모라고 비난하면서 해결책의 수용을 거부했다.⁶⁰⁾ 1950년 12월 31일, 중국군이 다시 진격하기 시작하여 1951년 1월 4일에는 서울을 점령했다. 1월 8일까지 중국의 선발부대가 37도선까지 이르렀다.

1월 11일, UN의 3인 정전그룹은 한국전쟁 해결을 위한 5개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들은 한국에서의 즉각적인 정전을 제의하면서 한국에서의 점진적인 외국군 철수, 중요 극동 문제해결을 위한 4강(소련, 미국, 영국, 중국) 회담 개최, 대만 문제와 중화인민공화국의 UN대표 파견 문제를 4강 회담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약속했다.⁶¹⁾

55) K. M. Panikkar, *In Two Chinas* (London: Allen and Unwin, 1955), p. 118; Chai Chengwen and Zhao Yongtian, *Kangmei yuanchao jishi* (A Chronological Record of The War to Resist America and Assist Korea, Beijing: Zhonggong dangshi ziliao, 1987), 69-70.

56) Telegram, Peng Dehuai to Mao Zedong, December 8, 1950, *Peng Dehuai nianpu* (A Chronological Record of Peng Dehuai, Beijing: Renmin, 1998), pp. 453-454.

57) Mao's talks with Kim Il-sung, December 3, 1950, *Jianguo yilai Mao Zedong junshi wengao*, vol. 1, p. 388.

58) Telegram, Mao Zedong to Peng Dehuai, December 13, 1950, Zhang Shuguang and Chen Jian eds., *Chinese Communist Foreign Policy and the Cold War in Asia: New Documentary Evidence* (Chicago: Imprint, 1996), p. 215.

59) Telegram, Mao Zedong to Peng Dehuai, December 21, 1950, *ibid.*, pp. 216-218.

60) Chai and Zhao, *Kangmei yuanchao jishi*, 71; *FRUS*, 1950, vol. 7, pp. 1594-1598.

61) 제안서에 대해서는 *FRUS*, 1951, vol. 7, p. 64을 보라. 제안의 배경에 대해서는 Stueck, *The Korean War*, 152-154을 보라. 제안의 중국어 서술에 대해서는 Chai and Zhao, *Kangmei yuanchao jishi*, 75을 보라.

돌이켜 보건대, 이 해결책은 베이징에게 있어서 전쟁을 끝낼 황금기회였을 것이다. 중국/북한군이 전장에서 거둔 성과는 대단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 능력은 과도하게 길어진 보급선, 공중지원의 부재, 엄청난 사상자 때문에 거의 소진된 상태였다. 평터화이는 중국/북한군이 더 진격했다가는 적의 측면 공격에 당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공세를 멈추고 그때까지 얻은 이익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다.⁶²⁾ 중국/북한군은 즉각적인 정전을 통해 자리를 지고, 만약 정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공세를 취할 힘을 다시 만들어낼 유용한 시간을 벌 수 있게 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공산주의 세력의 이 해결책 수용은 분명히 워싱턴을 외교적 딜레마에 빠지게 했을 것이다. 이후 애치슨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워싱턴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 13개국의 해결책을 지원하는 것은 “한국의 상실과 의회와 언론의 분노”를 이끌어 낼 터였다. 13개국의 해결책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도적 위치와 UN의 지지를 상실”로 이어질 것이었다. 애치슨은 워싱턴이 13개국의 제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 상당 부분 중국이 이를 거절할 것이라는 희망에 근거한 것이라고 고백했다.⁶³⁾

실제로 베이징은 이 해결책을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1월 17일 저우언라이는 그 해결책이 한국에서 “미국군에게 숨 쉴 틈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베이징의 협상 조건들을 제시했다. 저우언라이는 중국에서 열리는 7강 회담, 즉각적인 중국의 UN 가입, 한국과 대만에서의 모든 외국군 철수를 요구했다.⁶⁴⁾ 이 조건들은 당시에 협상을 통한 종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다시, 마오쩌둥과 중국지도부는 38도선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북한군은 베이징의 야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었다. 한국의 중국군 사령관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1월 25일에 미국/UN군이 반격을 시작했다. 평터화이는 중국군이 탄약과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했고, 따라서 1월 27일에 마오쩌둥에게 후퇴를 제안했다. 그는 또한 “제국주의자 진영의 내적 모순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북한이 특정 시점까지 정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화인민지원군과 북한인민군이 15-30킬로미터를 후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⁶⁵⁾ 아직 총체적 승리의 환상을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마오쩌둥은 평

62) Telegram, Peng Dehuai to Han Xianchu, Wu Ruilin and Pang Hushan, January 7, 1951, *Peng Dehuai nianpu*, p. 465.

63) Dean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 (New York: North, 1969), p. 513; Stueck, *The Korean War*, 153-154; Foot, *A Substitute for Victory*, 31-32.

64) Chai and Zhao, *Kangmei yuanchao jishi*, p. 76; *FRUS*, 1951, vol. 7, pp. 91-92.

65) Telegram, Peng Dehuai to Mao Zedong, January 27, 1951, *Peng Dehuai nianpu*, p.

더화이에게 다음 날 미국의 공격을 (한국에서의 네 번째 공세가 될)반격으로 답하라고 명령했다. 마오쩌둥은 심지어 중화인민지원군/북한인민군이 37도선 혹은 36도선까지도 다다를 힘이 있다고 믿었다.⁶⁶⁾ 평더화이는 마오쩌둥의 명령을 이행해야만 했다.

중국의 반격은 평더화이가 예견했던대로 빠르게 미국/UN군에 의해 격퇴되었고, 중국군은 후퇴해야만 했다. 2월 21일 평더화이는 직접 마오쩌둥에게 전장의 실제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귀환했다. 평더화이는 중국/북한군이 수비적 위치에 서서 봄의 반격을 준비하기 위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믿었다.⁶⁷⁾ 평더화이의 보고를 감안하여 마오쩌둥은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미국이 심각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이 소모전을 통해서 미국/UN군을 한국에서 몰아낼 수 있다고 믿었다.⁶⁸⁾

4월 말 중국/북한군은 UN군의 대부분을 박살내고 전장에서의 확실한 우위에 서기 위해서 또 다시 중대한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충분한 공중지원과 신뢰할 만한 보급선을 갖추지 못했던 이 공격은 빠르게 실패했다. 잔혹한 현실은 베이징의 지도부로 하여금 중국의 전쟁 목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중국지도부는 중국과 북한의 총체적 승리를 축소시키더라도 전쟁을 종결짓기를 원하기 시작했다.⁶⁹⁾ 1951년 7월 10일, 중국/북한의 대표단과 미국/UN의 대표단이 휴전 조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개성에서 만났다.

VI.

중국 협상단이 개성에 도착했을 때, 마오쩌둥과 중국지도부는 휴전협정이 몇 주 안에 맺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마오쩌둥은 중국 협상단에게 “군사작전의 중단 협정에 서명한 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필요한 모든 일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⁷⁰⁾ 마오쩌둥과 그의 동지들은 그들의 휴전 조건들이 -

469.

66) Telegram, Mao Zedong to Peng Dehuai, January 28, 1951, *Jianguo yilai Mao Zedong junshi wengao*, vol. 1, pp. 454-455.

67) *Peng Dehuai nianpu*, pp. 480-481.

68) Telegram, Mao to Stalin, March 1, 1951, *Mao wengao*, vol. 2, pp. 151-153.

69) Telegram, Mao Zedong to Peng Dehuai, May 26, 1951, *Mao wengao*, vol. 2, pp. 331-332.

70) Telegram, Mao to Peng Dehuai, Gao Gang, and convey to Kim Il-sung, 2 July 1951, *Mao wengao*, vol. 2, p. 381.

양측 세력 모두 38도선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전쟁 이전의 상태 회복 - (반드시 환영받지는 못하더라도)미국인들이 수용할 만하다고 믿었다. 베이징의 시각에서 협상의 최대 난점은 휴전협정 체결이 아니라 모든 외국군의 한국에서의 철수, 대만 문제의 해결, 그리고 중국의 UN 가입이었다. 중국지도부가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만큼, 그들은 휴전 협상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⁷¹⁾

하지만 휴전협상은 거의 2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협상은 빠르게 여러 문제점에 봉착했다. 양측이 지속적인 협상을 위한 다음의 5개 안건에 동의하는 데만 두 주가 걸렸다. (1) 안건 채택, (2) 군사분계선 설정, (3) 한국에서의 휴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정 체결, (4) 전쟁포로에 관련된 협정 체결, (5) 양측 당사국 정부에 대한 권고.⁷²⁾

군사분계선 설정에 초점이 맞춰진 협상의 다음 단계는 어렵게 진행되었다. 중국/북한 측은 경계선이 38도선을 기초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UN 측은 현재 양측 간의 전선에서 북쪽으로 약 23킬로미터(몇몇 위치에서는 40킬로미터) 더 올라간 평양-원산 선을 기초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는 중국/북한에게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영토의 13,000제곱킬로미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⁷³⁾ 미국/UN 협상단 대표 찰스 터너 조이 제독은 UN군이 한국 전역의 제공권과 한반도 주변의 제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휴전협정에서 자신들이 육상의 더 많은 영역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⁷⁴⁾ 양측은 쉽사리 타협에 이를 수 없었다. 8월 말 한 중국군 소대장이 개성의 중립지대에서 총격을 당한 후, 중국/북한 측은 협상을 중단했다.

협상을 중단한 후 베이징의 지도부와 중화인민지원군 사령관들은 중국의 협상 전략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협상이 “위신”의 다툼이며, 그들이 이 의지의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된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전장에서 중국/북한의 위치에 약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한 지점에서 그들은 “전쟁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또 다른 대공세를 펼치는 것을 고려했다. 그러나 이후 그러한 공세로 추정되는 목적들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포기했다. 결국 그들은 미국/UN군이 계속되는 전쟁에서 증가하는 사상자 때문에 필연적으로 협상 태이

71) Ciphred telegram, Mao to Filippov (Stalin), 3 July 1951, *CWIHPB*, nos. 6-7 (Winter 1995/96), p. 66.

72) *FRUS, 1951*, vol. 7: p. 735.

73) *FRUS, 1951*, vol. 7, pp.739-745.

74) *FRUS, 1951*, vol. 7, p.743.

블에서 베이징의 최소한의 요구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전장에서 공격적 방어 전략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10월 25일, 휴전협상이 판문점에서 재개되었다. 11월 27일, 그리고 협상이 시작되고 5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양측은 실제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는 데 동의했다. 이제 휴전협정 체결이 머지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내 진정한 장애는 38도선과 관계된 그 어떠한 것도 아님이 드러났다. 그것은 네 번째 안건, 즉 전쟁포로 문제였다. 미국/UN 측이 전쟁포로 송환은 자발성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만약 이 원칙이 채택된다면 공산주의 포로들의 상당수가 송환되지 않을 것이었다), 전쟁포로 문제는 즉각적으로 협상을 난항에 빠트렸다. 베이징의 지도부는 전쟁포로 문제를 중국의 한국문제 개입의 본질에 관련된 “심각한 정치적 투쟁”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그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의 전쟁포로 문제에 대한 비타협적인 접근은 마찬가지로 완고한 미국의 정책과 함께 협상의 진전을 막았다. 동시에 전장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결과적으로 1951년 12월 11일에 시작된 전쟁포로 문제 협상은 17개월 동안이나 해결되지 않았다.

1953년 3월 스탈린이 죽은 후 돌파구가 열렸다. 저우언라이는 스탈린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3월 7일부터 24일까지 소련에 머물렀다. 그는 소련의 새 지도부와 광범위하게 의논했고, 그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한국의 휴전협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3월 21일 저녁, 저우언라이는 한국전쟁의 가장 좋은 가능성 있는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거의 모든 소련의 신지도부 구성원과 긴 회의를 가졌다. 논의의 결과로 그들은 “중국/북한 측이 현재 합리적인 타협을 기초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협상에 박차를 가하여 휴전협정 체결에 이르러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⁷⁵⁾

이 지점에서 중국과 미국은 이전보다 더 휴전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했고, 협상은 부드럽게 진행되었다. 비록 어느 쪽도 다시 대화가 중단될 경우에 대한 군사적 대비를 결코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양측은 전쟁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7월 8일 자발적 송환의 원칙에 대한 동의에 이르렀다.⁷⁶⁾ 7월 15일까지 양측의 군 참모들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계선을 설정했다. 23개월 동안의 지난한 협상 후, 평화가 눈앞에 찾아온 듯했다.

75) The staff of the foreign ministry of the Soviet Union, “Background Report on the Korean War, 9 August 1966,”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2 (Winter 1993): 445.

76) *FRUS*, 1952-54, vol.15, p.1151.

7월 18일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다. 이승만은 남한에 억류된 25만 명 이상의 반(反)공산주의 포로를 석방시켰다. 마오쩌둥과 중국군 사령관들은 이승만의 행동이 워싱턴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며,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군사행동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기회를 얻었다고 믿었다. 비록 김일성이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공세를 취하는 데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⁷⁷⁾

3주 간의 준비 후에, 7월 13일 남한군이 자신들의 영역을 장악하기 이전에 중국군은 남한을 응징하기 위해 공격을 시작했고, 수도방위사단과 3사단에게 압승을 거뒀다. 7월 20일 중국/북한군은 공격을 중지했다. 7일 후, 마침내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3년 동안의 한국전쟁이 끝났다.

VII.

한국전쟁은 중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전쟁은 중국이 가장 원한 방식으로 끝나지도 않았다. 베이징의 지도부는 김일성이 한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혁명 전쟁”을 일으킨다는 계획을 들었을 때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 중국은 김일성의 계획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그 계획에 반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에게 실질적으로 “초록불”을 켜주는 것을 선택했다. 중국지도부가 그렇게 한 것은 결국 중국혁명의 모델을 따라 타국의 혁명 운동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중심적 위치를 되찾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는 효과적으로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이 김일성의 혁명 전쟁을 통해 한국을 통일한 다는 계획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38도선은 베이징의 한국 문제 대처에서 우선적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김일성이 그의 중국 동지들에게 그 시점과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숨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거의 즉각적으로 참전 준비를 시작했다. 인천상륙작전 이전에 중국지도부는 중국군을 북한군 부대로 위장하여 참전 시킴으로써 북한의 후방방어능력을 진작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을 세웠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그리고 1950년 10월의 중요한 몇 주 동안 마오

77) Peng Dehuai, *Peng Dehuai zishu, neibu*, p. 352.

쩌둥과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만약 중국이 한국에 군대를 파견한다면 미국과의 공식적이고 총체적인 전쟁에 휘말릴 심각한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인식했고, 이에 따라 최고위 중국공산당 지도부 간에 이견이 생겼다. 동시에 스탈린은 중국에게 참전하도록 압력을 가했지만, 한국의 중국군에게 공중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었다. 여전히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참전을 결정하도록 노력했고 결국 이를 이뤄냈다. 내가 이 발표문과 이전의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접근에는 한국의 위기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내고자 한, 또한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 마오쩌둥의 - 결국에는 중국공산당 지도부 동료들도 공유하게 될 - 욕망이 내재해 있었다. 베이징의 결정 과정에서 38도선은 다시 한번 아무런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지 않았다.

전쟁 기간에 베이징은 본래 “미국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주구”에 대한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했다. 중국군이 전장에서 초기의 일련의 승리를 거뒀을 때 베이징의 지도부는 분명히 38도선을 그 어떠한 정당성을 가지는 실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군이 한국에서 실패를 겪은 후에야 마오쩌둥과 그의 동지들은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길 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시에 베이징의 지도부는 중국군이 미국/UN군을 38도선으로 후퇴시키면서 중국이 이미 한국에서의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고 주장함으로써 “중국의 한국에서의 승리”에 대한 그들의 정의를 바꿨다. 휴전협상은 2년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협상 안건 중 단 한 가지 주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38도선은 오직 양측 간의 실질적인 전선과 관련된 주제에서만 협상에 관련되었다. 베이징의 지도부에게는 의외로, 전쟁포로문제가 협상을 난항에 빠트리는 장애가 되었다. 베이징의 지도부는 협상 테이블에서의 투쟁이 중국의 한국에서의 전쟁 경험의 본질과 관련된다고 여겼고, 이 “심각한 정치적 투쟁”에서 승리하기로 결심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접근은 마찬가지로 비타협적인 미국의 정책과 혼합되어 1953년 7월 27일까지 한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지속시켰다.

중국의 한국전쟁 기억과 기념 - 抗美援朝紀念館을 중심으로

김정현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중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조선전쟁’이라 칭하였으나, 중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抗美援朝戰爭’으로 호칭하였다. 항미원조전쟁의 ‘抗美援朝’는 ‘保家衛國’이라는 애국주의 구호이고, ‘援朝’는 위협에 처한 형제나라 ‘조선’을 도와준다는 국제주의 구호이다. ‘항미원조’는 중국 참전의 슬로건을 넘어 당시 중국이 추진한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건설, 국내경제건설, 대중동원, 애국주의 정신, 중국의 대국지위’ 등 정치·외교·군사적으로 중요한 여러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중국에서 ‘항미원조’의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항미원조기념관이다. 중국은 ‘항미원조전쟁기념관’이 아닌 ‘항미원조기념관’을 건립하였다.¹⁾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미원조의 승리와, 항미원조 과정에서 이룩한 군사·경제 발전과 애국주의교육 등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기념공간을 통해 전달되는 기억은 특정한 이해관계에 의해 선별된 기억’²⁾이라고 할 때, 본고는 중국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가장 전문적이고 대표적인 공식기관인 항미원조기념관이 전시·전달하고 있는 기억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 항미원조기념관 건립은 누가 어떤 전시원칙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건립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념관이 ‘항미’와 ‘원조’를 서술하는 논리는 무엇이고, ‘정의로운 승리’의 전쟁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정전’협상에서 중국은 무엇을 주장하였고, 정전협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해온 항미원조 ‘운동’과 ‘기념’ 활동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石善福 宋群基 唐慶雄 編著, 『抗美援朝紀念館』, 臺海出版社, 2000. p.42. (이하 『抗美援朝紀念館』)

2) 김형곤, 「전쟁기념관의 한국전쟁 상징물에 대한 연구」, 『언론학연구』8-1, 2004. p.41.

II. 항미원조기념관 건립과 전시 원칙

1. 기념관 건립과 구성

抗美援朝紀念館은 1953년 8월 遼東省地志博物館籌備處로 출발, 1954년 安東市 歷史文物陳列館, 1958년 9월 항미원조기념관으로 이름을 바꾸어 한국전쟁을 전문으로 하는 기념관이 되었다. 1965년 安東시가 丹東시로 바뀌면서 丹東항미원조기념관으로 바뀌고, 문화대혁명기에 한동안 폐쇄되었다가 1972년 재개관하였으며, 1993년 정전협정 체결 40주년에 맞추어 새롭게 현재의 모습으로 확장 개관하였다.³⁾ 기념관 확장은 당중앙·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에서 책임자를 정하였고, 군과 요녕성 각급 지도자들이 참여하였다.⁴⁾ 그중 큰 역할을 한 인물은 지원군 고위장교 출신의 전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 洪學智로서, 1983년부터 기념관설립을 제안하고 설계에 참여하였다.⁵⁾ 기념관은 사방이 보이는 해발 64미터의 단동시 桃源山 정상부에 건립되었다. 桃源山에 존재했던 지원군 지휘소는 역사적 터였다는 점에서 항미원조의 장소성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⁶⁾ 특히 압록강철교와 가까운 곳으로, 중국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중조양국의 주요 통로인 압록강철교 보호를 중요시하였다.⁷⁾

기념관은 많은 관람객들이 참관하기 좋도록 공원식으로 조성되었으며, 실물·문헌·사진·모형·회화·조각·경관 등의 전시 수단을 운용하여 항미원조 전쟁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준다. 크게 기념탑·전시관·파노라마관(全景畫館) 등 3개의 주요 건축물로 이루어졌고, 노천광장에 대형 무기설비 병기가 전시되어 있다.⁸⁾ 기념관 건축의

3) 『抗美援朝紀念館』, pp.1-3.

4) 1990년 10월 24일 거행된 기념관 확장공사 정초식에 심양군구·요녕성군구·요녕성 정협 대표를 비롯, 단동의 각계대표 2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抗美援朝紀念館』, p.11.

5) 洪學智부장이 군사위원회 부주석 楊尙昆에게 보내는 편지(1983년 11월 3일), 『抗美援朝紀念館』, p.113.

6) 도원산에 위치해있는 지원군 13병단 지휘소는 1950년 7월부터 8월에 동북군구에서 세운 것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중국인민해방군 제13병단을 동북변방군으로 개편하였고 10월 8일 동북변방군을 중국인민지원군으로 편입하였다. 북한에 들어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동에 彭德懷를 위한 지휘소를 설립했지만 10월 19일 彭德懷는 지원군을 거느리고 직접 북한에 들어갔기에 이 지휘소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 항미원조 기간 압록강 철교를 지키던 포병부대가 이 지휘소에 주둔한 적이 있다. 『抗美援朝紀念館』, p.17.

7) 조선전쟁 폭발 이후 우리는 곧바로 압록강 대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것이 중조양국의 주요한 통로였으며 그 대교를 잘 보호하는 것이 우리 양국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聶榮臻, 『在抗美援朝戰爭中』, 『聶榮臻回憶錄』, 북경:해방군출판사, pp.733-761; 정부기록보존소 편, 『韓國戰爭과 中國-韓國戰爭關聯 中國資料選集』 대전: 정부기록보존소, 2002. p.203.

8) 노천광장에 전시된 대형폭격기 한대는 공군항공박물관에 소장된 것을 전문가들이 해제한 후, 네대의 대형트럭으로 기념관으로 운반하고 다시 조립하였다고 한다. 또한 해방군총참모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에서 수집해온 '카츄사' 로켓포가 전시되어 있다. 이는 구소련이 1939년에 만든

상징인 기념탑은 북한 신의주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고, 탑의 정면이 압록강을 향하게 하여 지원군 희생자들을 기리도록 제작되었다.⁹⁾ 53미터의 기념탑은 1953년 항미원조전쟁의 승리를 의미하고, 기념탑 기단 넓이는 10.25미터로 10월 25일 참전 기념일을 의미한다.¹⁰⁾ 기념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5번 허리지게 만들었는데 이는 항미원조전쟁의 5차례 전역을 의미한다. 계단을 쌓은 돌(條石)을 1014장을 사용하여, 지원군이 조선에서 1014일의 밤낮동안 전투한 것을 상징하였다. 탑신에는 등소평이 쓴 ‘항미원조기념탑’ 7자를 금박으로 부착했다. 기단에는 백옥으로 깃발·꽃·리본 조각을 만들어, 평화·승리·우의라는 주제를 표현했다.¹¹⁾ 전시관은 항미원조전쟁관, 항미원조운동관, 中朝人民友誼館, 영웅열사관 등 4개로 구성되었다. 파노라마관은 직경 44미터 높이 24미터의 둥근 원주 건축으로, 첨단기술을 동원한 전쟁 재현 장면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관에서 파노라마관으로 향하는 통로에는 공군이 자체 설계하고 제작한 지원군 공군전시관이 있다.¹²⁾

2. 전시물 수집과 전시원칙

丹東은 인민지원군이 철수할 때 반드시 거쳤던 곳이자, 철수하는 부대로부터 전쟁 유물을 수집하여 대량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기념관설립 도시로 가장 적합하였다. 기념관에는 12,000점의 항미원조전쟁 문물과 7,000점의 역사문물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물 수집은 군부뿐 아니라 문화계, 조선족문화관, 평안북도 신의주화교연합회, 지원군 출신의 개인기부자 등 중국 각계의 금전적 물질적 기부로 이루어졌다.¹³⁾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은 세계에서 단 두대밖에 없는 폭격

것으로 1952년 중국이 소련에서 72대의 ‘카츄사’를 구매하여 항미원조 전장에서 맹위를 떨쳤다고 한다.『抗美援朝紀念館』, pp.58-60.

9) 洪學智 등 지원군 전직 고위장성들의 기념관설계안에 대한 의견(1990년 9월 19일), 『抗美援朝紀念館』, p.132. p.135.

10) 기념탑은 기단이 3미터이고, 탑의 높이가 50미터로, 1950년 시작된 항미원조 보가위국운동을 상징한다. 중국인민지원군은 1950년 10월 19일 압록강을 넘었고,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북한 운산일대에서 처음으로 미군과 한국군과의 전투를 치러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10월 25일을 항미원조기념일로 제정하였다.『抗美援朝紀念館』, p.13. p.147.

11) 탑문에는 “1950년 한반도에 내전이 발발했다. 미국은 즉각 무장간섭을 하는 동시에 제7함대를 파견하여 타이완을 침범하였다. 같은 해 10월 19일 彭德懷가 지원군을 이끌고 북한에 가서 영웅적인 북한인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침략자에 저항하여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적군 109만 명을 소멸하였다. 지원군은 영웅적인 기개로 세인들의 존경을 받아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불리웠다. 지원군 사상자와 실종자는 모두 36만 명이다”라고 적혀있다.

12) 공군전시관은 편년순서에 맞춰 참전준비(1950.7~1951.9), 교대참전(1951.9~1952.6), 치열한 참전(1952.6~1953.7), 빛나는 전적(1950.10~1953.7) 으로 구성되었다.『抗美援朝紀念館』, p.57.

13) 기념관 건립예산은 요녕성이 일정액을 배정하였으나, 부족분은 심양군구·남경군구·공군·해군을 비롯하여 정부산하 기업, 철도관계자들, 지원군 출신 개인들로부터 지원받았다. 특히 지원군 포로출신 張達은 기금모집 최다액수인 6,674원을 기부하였는데, 이 액수는 지원군 포로 2만중 대만과

기 한대를, 심양군구는 탱크·대포 등 무기를, 洪學智등 지원군 고위장교 가족들은 훈장 등 소장문물을 기증하였고, 지원군 부사령관인 鄧華에게 김일성이 준 코트, 포로수용소 문물, 연합국 사무국이 38선 부근에서 발굴한 지원군 유물 등도 기증 받았다. 기념관은 문물수집 전담반이 각지에서 향미원조 시기 문물자료 40여 톤을 싣고 왔으며, 지원군열사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범인물의 사진 중 구하지 못한 것은 북한의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사진을 얻어서 56명의 사진이 전부 전시될 수 있었다. 김일성이 毛澤東에게 출병을 요청하는 친필 서한은 국가당안관에서 복제하여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한 의미가 있다.¹⁴⁾ 파노라마전시관 제작팀은 사람들이 당시 치열한 전장에 있는 듯한 현장성을 체험하게 위하여, 참전자들의 회고록·영상자료·사진자료를 참고하였고, 북한의 청천강부근 전쟁유적지를 고찰하였으며, 전투에 참가한 제38군 군인들에게 1차 사료를 대량으로 입수하였다.¹⁵⁾

기념관의 전시원칙은 ‘抗美援朝, 保家衛國’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상을 기반으로, 중공중앙과 毛澤東의 정책을 부각시키고, 彭德懷와 인민지원군의 업적과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정신을 강조하며, 중·조 양국민의 우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기념관은 全黨·全軍·전국민의 단결을 위해 향미원조에 참여한 모든 분야·성·시·부대가 각각 전시관 한자리를 차지하도록 하고, 각 성·시·자치구별로 희생자명단과 통계숫자를 나열하였고,¹⁶⁾ 上甘嶺 등 중요 전투를 입체적으로 전시하여 전쟁의 승리감이 잘 묘사되도록 하였다. 특히 毛澤東과 周恩來의 회의 사진, 미공군의 108차 변경 폭격 통계표, 미공군 폭격작전도, 김일성 친필서한, 단동투하 시한폭탄 실물 등을 유기적으로 조합해 ‘향미원조, 보가위국’의 결단에 충분한 증거와 이유를 제공하고자 하였다.¹⁷⁾ 기념관은 화살표를 따라 이어지는 관람방식에 의해 각 전시실의 디오라마들을 연결시켜 봄으로써 한 편의 극적인 이야기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미리 정해진 전시와 관람 방식은 관람객에게 전쟁의 기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의 전쟁기념관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전쟁기념관이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쟁 행위를 정당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선별된 한국전쟁 기억을 전달하고 있다면,¹⁸⁾ 중국의 향미

동남아 지역으로 간 1만 4천 포로를 제외하고, 대륙으로 돌아온 6,674명 포로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한다.『抗美援朝記念館』, pp.22-29.

14)『抗美援朝記念館』, pp.31-35.

15)『抗美援朝記念館』, pp.67-68.

16) 참전부대와 주요 지휘관 모두 각 단계의 전투서열표에 열거하고, 영웅·모범·공신은 명단으로 묘사하고, 특급과 일급영웅은 두상을 세우도록 하였다.『抗美援朝記念館』, p.51.

17)『抗美援朝記念館』, p.54.

18) 김형곤, 「한국전쟁의 공식기억과 전쟁기념관」, 『한국언론정보학보』40, 2007. pp.215-217.

원조기념관 전시가 보여주고 전달하고자 하는 기억은 무엇인지 이하에서 알아보
고자 한다.

III. 항미원조전쟁 전시와 서술

기념관 개관식¹⁹⁾에서 당시 중공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 서기 胡錦濤는 “항미원
조전쟁은 반침략의 정의로운 전쟁”이고 ‘당중앙과 毛澤東 주석이 “抗美援朝, 保家
衛國”의 영명한 결정을 내렸고, 彭德懷와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인민과 함께 승리
를 거두었다²⁰⁾고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전시관 입구홀에는 이러한 원칙
을 잘 반영하여 毛澤東주석과 彭德懷의 대형조각이 ‘위기의 상황에서 명을 받들
다’는 제목으로 세워져있다.²¹⁾ 배경은 천군만마가 압록강을 건너가는 장면이고, 양
측면은 ‘志願軍戰歌’와 ‘志願序列表’로 나누고, ‘和平萬歲 紀念章’과 ‘抗美援朝紀念
章’이 서로 조응하게 했다. 전시관 입구 상단에 毛澤東 친필의 ‘항미원조, 보가위
국’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다.²²⁾ 전시관은 항미원조전쟁관 6실, 항미원조운동관 2실,
中朝人民友誼館 1실, 영웅열사관 1실의 10개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전시관이 강조하는 ‘항미’ ‘원조’ ‘정의’ ‘승리’ 그리고 ‘정전협정’ 전시 내용을 중심
으로 전시관 서술의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抗美와 동북방위

육군·공군·병참 등을 담고 있는 항미원조전쟁관은 미군 제7함대 배치그림을 전
시, 참전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중국이 抗美를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 트루먼대통
령이 본토와 타이완 사이에 제7함대를 배치하여 중국 내전에 개입했기 때문이
다.²³⁾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 미국의 무장간섭이 불법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7

19) 개관식은 원래 정전협정 40주년인 1993년 7월 27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胡錦濤가 북한에서
거행되는 기념행사에 가야 하기에 이를 앞당겨 7월 25일 열렸다. 개막식에는 인민대표대회 부위
원장, 중앙군사위원, 전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북한 평안북도 우호대표단, 주중 북한대사관의 대
표 등이 참석하였다. 『抗美援朝紀念館』, p.89.

20) 1993년 7월 25일 胡錦濤의 연설문, 『抗美援朝紀念館』, p.160.

21) 두 명의 위인을 조각상의 형태로 함께 배치한 것은 지원군 원로들의 ‘彭德懷를 부각시키라’는 요
구와 毛澤東 조각상만 세우면 ‘항미원조’의 특징을 살릴 수 없다는 주장에 부응한 결과이다. 『抗
美援朝紀念館』, p.42.

22) 이 글씨는 毛澤東이 40년 전에 쓴 것으로, 군사과학원의 관계자가 毛澤東이 작성한 문건에서 발
견하여, 처음으로 항미원조기념관 전시관에서 선을 보이게 되었다고 한다. 『抗美援朝紀念館』, p.45,
p.48.

월 8일 트루먼이 유엔군사령관으로 맥아더를 임명한 같은 날 동북변방군을 창설하고 동북지역에 배치하였다.²⁴⁾ 8월 26일 미공군의 폭격이 동북지역에 이르자, 중국국방회의는 대만공격을 연기하고 东北边防军准备工作会议를 소집하였고, 8월 27일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에게 미군의 중국영공 침해행위에 항의하였다.²⁵⁾

전쟁관은 미군 공습으로 파괴된 도시와 실물등 피해 사진을 통해 전쟁개입의 정당함을 주장한다. 중국 동북지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통해 외세의 침입을 받은 공간이며, 중국인들이 ‘중국의 생명선’으로 지칭할 정도로 동북의 안전문제는 중요한 관심사항이었다.²⁶⁾ 동북지역은 특히 당시 중국공산당의 권력기반이자 신중국의 경제기반이었다. 周恩來는 “미 제국주의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생산과 건설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하고,²⁷⁾ “미 제국주의는 동방에서 일본의 군사기지를 이용하고 일본 군국주의를 계승하여, 청일전쟁 이래의 역사를 답습하고 있다.”²⁸⁾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한국전 개입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였지만, 중국은 참전을 선포하였다.²⁹⁾ 중국인민지원군의 출병은 미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한다면 모든 동북변방군이 흡수될 것이고, 남만주의 電力을 빼앗길 것이므로 꼭 참전해야만 하며 참전하지 않으면 최대의 손실이라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다.³⁰⁾ 참전 결정시 毛澤東은 미국과 대치하는 경색 국면이 되리라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결국 전쟁은 사실상

23) 트루먼이 타이완에 제7함대를 배치하자, 마오쩌둥은 “미국은 우리 몸에 세 개의 칼을 꽂아 넣으려고 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에서 우리의 머리를 향해, 다른 하나는 대만에서 우리의 허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 우리의 발을 향해 찌르려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이 공세를 단호히 물리칠 수 있게 된다면 향후 전방위적으로 펼쳐질 수없이 많은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24) 周恩來軍事活動紀事編寫組編, 『周恩來軍事活動紀事(1918-1975)』下卷,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0. pp.128-129.; 대만 작전의 총사령관이 동북국경수비대 총사령관이 되었다. 중국은 처음 3개 군단을 이동시켰다가 나중에 2개군단을 추가하여 총 5개군단을 압록강을 따라 배치하였다. 시메이 칭·김기근 역,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위기의 시대 양국은 서로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정치와 평론』10, 2012. pp.179-180.

25)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周恩來年譜(1949-1976)』上卷, 中央文獻出版社, 1997. p.70.;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전보를 보내 미국 공군의 침입행위에 제재조치를 요구하였다. 周恩來軍事活動紀事編寫組編, 『周恩來軍事活動紀事(1918-1975)』下卷,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0. p.139.

26) 박두복,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원인-개입결정의 피동적 능동적 측면」, 박두복 편저,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2001. p.158.

27) 周恩來, 「抗美援朝, 평화를 지킨다(1950.10.13)」, 『周恩來軍事文選』, 人民出版社, 1997, pp.73~74.

28) 『周恩來文選』, 下卷, 人民出版社, 1984, pp.50-54.

29) 1950년 10월 24일 중국인민협상회의 제1차 전국위원회 제18차 상무위원회에서 周恩來가 ‘미국을 막고 조선을 도우며 평화를 보위하자’(抗美援朝 保衛和平)라는 제목으로 한국전쟁 참전보고를 하였다. 『周恩來外交文選』, pp.28-33.

30) 毛澤東, 「我軍應當和必須入朝參戰」(1950.10.13), 中華人民共和國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著, 『毛澤東外交文選』, 北京: 中央文獻出版社·世界知識出版社, 1994. p.144.

승리로 마치게 되리라고 확신하였다.³¹⁾ 동북지역 연변 조선족 역시 동북지방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위기의식에 고무되어 참전하였다.³²⁾ 중국은 미국을 일본제국주의와 동일시함으로써 반미감정을 극대화하였고, 抗美的 정당성을 확보하였다.³³⁾ 전시관의 침략자에 대한 호칭은 유엔군 보다는 미군을 더 많이 서술하고 있고 한국군에 대한 언급도 별로 없다.³⁴⁾ 특히 동북지역에 대한 미공군의 세균탄 투하사실 폭로와 항의³⁵⁾ 등 세균전을 크게 전시함으로써, 미군의 부도덕성과 전쟁범죄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2. 인민지원군 출병과 38선

중국지도부가 참전여부를 결정할 때 핵심 고려사항은 미군이 과연 38선을 넘을 것인가에 있었다. 毛澤東과 周恩來는 중국의 한국전 참전은 38선이 결정적 변수임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³⁶⁾ 10월 7일 맥아더 군이 38선을 넘자, 毛澤東은 10월 8일 유엔군의 진격을 저지하라는 지시와 함께 중국인민지원군 편성을 명령하였다.³⁷⁾ 미국은 대중국정책을 수립하면서 소련·중국·북한의 이념적 연대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한 것과 달리, 중국의 인민지원군 파견은 소련·북한과의 이념적 연대보다는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 전쟁관 제2세션은 “미

31) 스탈린도 중국의 참전 소식을 듣고 감격했다고 한다. 洪學智 지음·홍인표 옮김, 『중국이 본 한국전쟁』, 고려원, 1992. p.45.

32) 연변조선족 사회가 한국전쟁을 사회주의 정권 북한에 의한 통일전쟁이라는 의미보다는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중국동북을 방위한다는 ‘保家自衛’의 전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박정수, 『동북조선인민보』를 통해서 본 연변조선족의 6·25전쟁, 『한국사학보』37, 2009. p.365.

33) 傅焜, 「抗美援朝運動期 중국공산당의 한국 이미지 만들기 : 인민일보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p.14, pp.38-39.

34) ‘미군·유엔군·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 등으로 침략자에 대한 호칭이 혼재되어 있지만, 주로 미군으로 표기하고 있다. 한국군을 언급하는 경우는 패널의 설명 속에 ‘남조선(군)’이 종종 등장하나, 전쟁의 경과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정도이다. 유일하게 한국 국기가 등장하는 곳은 유엔과 한국군의 요새를 공략하는 장면을 디오라마로 재현한 코너로, 한국국기와 유엔가 함께 등장한다. 한국군이 기념관의 전시에서 가려진 것은, 중국이 전쟁의 당사자로 한국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를 보여준다. 하세봉, 「중국의 한국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는가-抗美援朝紀念館의 경우」,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선인, 2013. p.240.

35) 周恩來 외교부장이 미국의 세균전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각급단위 인민단체도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을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하였다. 정부기록보존소, 『한국전쟁과 중국』, pp.213~214.

36) 周恩來는 10월 3일 주중 인도대사 파니카(Panikar)에게 미군이 38선을 넘을 때 중국이 반드시 전쟁에 참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周恩來, 「미군이 만약 38선을 넘는다면, 우리는 관여해야 한다」, 『周恩來軍事文選』, 人民出版社, 1997, pp.66-68.; 『周恩來年譜』, p.83.; 毛澤東은 1956년 소련중앙위원회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중국참전을 결정하는 핵심 사항은 ‘미군의 38선 돌파여부’였다고 명확히 밝혔다.

37) 毛澤東은 ‘동북변방군을 중국인민지원군으로 개편하고 즉각 북한변경으로 출동하여 북한동지들과 협력하면서 침략군과 전투를 벌여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한다.’고 지시하였다. 周恩來軍事活動紀事編寫組編, 『周恩來軍事活動紀事(1918-1975)』下卷,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0. p.148.

국 침략자가 중국정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8선을 넘어 침략전쟁을 확대하였지만 격퇴”하였다는 내용이고, 제3세션 ‘적을 38선으로 돌려보내다’는 “1950년 10월에서 1951년 6월까지 연속적인 5차 대규모 전역을 진행, 23만 적군을 사살하여 침략군을 압록강에서 38선지구로 몰아내고, 미국침략자가 정전협상에 동의하도록 압박하여, 전쟁승리의 기초가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³⁸⁾

중국이 파병하면서 ‘志願軍’이라 명명한 의도는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인민이 지원해 북한을 지원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였다.³⁹⁾ 원래 문건에는 支援軍으로 써어 있었으나 후에 毛澤東이 志願軍으로 고쳐 쓴 것이다.⁴⁰⁾ 지원군 지휘관들은 毛澤東의 전술대로 “미국이 북진하면 중국에까지 전쟁의 불똥이 튀리라는 점을 주지시켰고, 특히 항일투쟁이나 국민당과의 전투에서 경험했듯 강한 정신력은 충분히 열세를 메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병사들에게 수궁시켰다.⁴¹⁾ 彭德懷가 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전쟁에서 열세한 병력을 가지고 우세한 병력을 수차례 이긴 경험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유엔군은 중국이 정규군이 아닌 志願軍을 파견하였다고 강조하는 것을 보고 제한적인 개입을 할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毛澤東은 彭德懷에게 미군을 압박하여 한반도에서 축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⁴²⁾

3. 승리한 정의로운 전쟁

전시관이 강조하는 “반침략전쟁이자 중국이 승리한 정의로운 전쟁”이란 표현은 인민지원군 사령관 彭德懷가 작성한 1953년 9월 지원군 활동보고⁴³⁾와 일치하고, 중국 역사교과서의 항미원조전쟁 서술과도 거의 동일하다. 인민지원군이 승리한

38) 『抗美援朝記念館』, pp.166-171.

39) 병사들은 처음에는 志願軍으로 불릴 줄 몰랐으며, 참전하면서 모두 인민해방군 모표·흉장을 떼냈고, 간부들은 조선인민군의 군복으로 갈아입고 선서의식을 거행하였다. 이는 비밀 유지 필요성과 함께 중국의 참전으로 미국에게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라는 선전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洪學智 지음·홍인표 옮김, 『잊혀진 기록』, p.46.

40) 당 중앙군사위원회 작전부장 李燾가 작성했던 원래 문건에는 支援軍이었다. 徐焰, 『毛澤東與抗美援朝戰爭』北京, 解放軍出版社, 2003, p.102.

41) 洪學智 지음·홍인표 옮김, 『잊혀진 기록』, p.25.

42) 毛澤東은 한국군을 공격해야 한다는 彭德懷에게 미국과 영국 격퇴를 지시하면서, 4-5만 정도의 미영군을 격퇴할 수 없으면 한국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전쟁 형세와 아군전투 부서에 대해 彭德懷 등에게 보낸 전보(1950.12.21), 제2차전역 승리후 전군의 주력을 후방지역으로 철수시켜 휴식 및 재정비를 하는데 대한 전보(1950.12.26), 제3차 전역에서의 선전과 춘계공세를 준비하는 것에 관해 彭德懷에게 보낸 전보(1950.12.29) 『建國以來毛澤東文庫』, 제1책, pp.731-741.; 楊奎松, 『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1, 서울 :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2001. pp.523-524.

43) 중앙인민정부 위원회 제24차 회의 ‘중국 인민지원군의 미국을 막고 조선을 도운 활동에 관한 보고’ 劉金質·楊淮生主編,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 I (1949-1952),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pp.535-550.

전투모습은 파노라마 전시관에 잘 묘사되어 있다. 파노라마 전시관은 제2차 전역의 ‘청천강전투’를 소재로, 그림·조각·조명·음향 등을 이용하여 전쟁장면을 재현하였다. 청천강전투는 항미원조전쟁 제2차 전역이 승리를 거두어 미국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신화를 타파하고, 지원군이 열악한 장비로 최첨단의 무기와 온 국력을 투입한 미국과 싸워 이긴 전쟁이라는 특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⁴⁴⁾ 전쟁관은 지원군이 모든 전역에서 성공하였고 미국이 종이호랑이임을 밝혀냈다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지지휘관 彭德懷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종 정책결정자인 毛澤東이 미군과 정면승부를 명령하여 4,5차 전역이 실패한 내용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⁴⁵⁾ 전시관은 지원군 전술의 우수함을 서술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쟁’이란 의미에는 정의롭지 못한 적의 군사적 질적 우세를 양적 우세로 압도할 수 있다는 毛澤東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전시관은 무장하지 않은 인민지원군에도 놀라고 두려워하는 미군 모습을 그려놓았고, 각종 생산량에서 중미의 현격한 차이를 막대그래프로 제시했다. 갱도 사진과 도구들 전시는 미군폭격을 지원군의 우수한 방어체계로 잘 버티어내었음으로 보여준다. 정의로운 전쟁의 이미지는 ‘평화와 정의를 위해 중국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志願軍 참가에 서명하는 모습’으로도 표상된다. 전시물 중에는 연출된 기념사진도 있다. ‘지원군 전사들 휴식시간에 참호 안이 손풍금과 웃음소리로 가득하다’는 사진은 동굴 속에서 전우애와 즐거운 시간 보내는 전쟁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중국군을 환영하고 환송하거나 중국군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진이나 그림은 전쟁개입의 정당성을 시각화하기 위한 것이다.⁴⁶⁾ 전시관의 中朝人民友誼館 역시 침략자에 대항하는 약자인 ‘조선인민의 풍속습관 존중’ ‘조선인민 국가재건’을 위한 활동을 강조하고, 북한에서 받은 각종 표창과 뺏지 등을 전시하여 양국 우호관계를 드러내고 있다.⁴⁷⁾ 정의로운 전쟁임을 강조하는 전시는 ‘침략에 대한 방어’;

44) 전투는 미군 제2사와 미군 기병 제1사, 제25사를 타격하였고, 터어키 여대 등 2만 3천여 적군을 사살하였으며, 각종 화포 500여문, 탱크 100여량, 각종 병기 5000여기를 파괴하거나 획득하는 등이 전장에서 인민지원군은 영웅적 쾌거를 이루었다. 파노라마 전시관은 미공군의 참혹한 파괴를 표현하고, 지원군에 의해 격추된 대량의 비행기·탱크·대포·트럭 등과 무장해제된 미군포로 등 미군의 낭패상을 부각시켰으며, 인민지원군이 적을 저격하는 다양한 장면을 묘사하였다. 『抗美援朝紀念館』, p.71.

45) 미군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제4차 전역에서 지원군 부대는 5만 여명의 병력손실을 입었다. 제4,5차 전역의 실패는 인민지원군이 미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楊奎松, 위글, 2001. p.535.; 毛澤東은 4차(1951.1.27~4.21), 5차전역(1951.4.22~6.10)의 개시를 연속적으로 명령하였지만, 4차 공세 개시후 彭德懷는 김일성에게 2월 4일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적을 경시하는 풍조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여, 작전에 무리가 있음을 토로하였다. 「彭德懷가 金日成에게」(1951.2.4),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 II』, p.328.

46) 중국해방군화보사·노동환 역, 『그들이 본 한국전쟁 1-抗美援朝-중국인민지원군』, 눈빛출판사, 2005. p.161. p.165.

미군의 ‘폭력에 대한 평화세력’, 미군폭격의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첨단무기의 미군의 ‘강자에 대한 약자’ 등 이항대립구도이다.⁴⁸⁾ 이항대립 구도는 중국과 북한의 우호협력만 부각할 뿐, 실제로 중국과 북한지도부 사이에 있었던 작전통수권 문제, 철로관할권을 둘러싼 갈등 등은 설명이 없다.⁴⁹⁾

4. 정전협상과 협정체결

‘싸우면서 담판하다’는 제목의 전쟁관 제4세션은 ‘열세의 장비로 현대기술 장비를 갖고 있는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을 물리치고, 정전협정을 맺도록 만들었다’⁵⁰⁾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정전협정은 중국과 유엔 양측 모두 전쟁 조기종결의 기회를 여러 번 놓치면서 2년 이상 지연된 것이다.⁵¹⁾ 제3차 전역(1950.12.31~1951.1.8) 성공으로 중국-북한군이 37도선에 이르자 유엔이 ‘先停戰 後對話’를 제의했지만, 중국은 ‘외국군대 철수, 중국의 유엔참가’ 등을 주장하면서 유엔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중국은 ‘선정전 후협상’은 미국이 호흡을 가다듬은 후 다시 전쟁을 치르려는

47) 『抗美援朝記念館』, p.174. 그밖에도 북한 국민과 협력관계 보여주는 사진과 그림, 인간적 대우를 받는 미군 혹은 포로들 사진, 전쟁에서 승리한 후의 모습으로 북한의 재건공사에 참여하는 지원군 사진, 영애와 우정을 가득 싣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지원군, 북한에서의 환송, 조국에서의 환영, 가족과의 만남 등을 담은 사진과 그림, 실물 등이 정의로운 전쟁의 모습으로 전시되고 있다. 중국해방군화보사·노동환 역, 윗책, pp.162-163.

48) 이항대립은 우리의 6.25전쟁 전시도 마찬가지로이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미군의 모습과 폭력적 이미지로 묘사되는 중공군 포로의 모습’을 평화와 폭력의 이항대립으로, ‘끊어진 철교 넘어 남으로 내려오는 북한 피난민의 모습과 대비되는 북으로 진격하는 국군을 환영하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평화를 옹호하는 이미지’로 묘사하고, 구식군대 중국군의 ‘육박전과 인해전술, 땅굴생활’ 등을 통해 ‘문명-야만’이라는 대립항으로 묘사하고 있다. 김형곤(2004) 윗글, p.74.

49) 1951년 4월 周恩來는 김일성에게 ‘전쟁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북한철로는 반드시 군사관리제도 아래 통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즉각 연합사령부의 지도 아래 중국과 북한 연합의 군사 운수 사령부를 조직하고, 북한 철로에 대한 관리 운수 보수와 보호 등의 작업을 통일적으로 집행할 것을 제의한다’고 전했다. 『周恩來軍事活動記事』, 下卷, p.204.; 중국이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전쟁승패의 문제였기에, 현실이익 측면에서 지휘권이 지원군인 중국군 손에 들어가는 것은 필연적 결과였다. 북한은 조중연합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중국군의 지휘를 받는 위치가 되었고, 철로관할권은 중국과 북한이 논쟁을 벌였던 북한의 내정과 주권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중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이후 중국은 북한 철로와 관계된 모든 지휘권을 넘겨주었다. 梁鎮三, 윗글, p.612.

50) 이 세션은 적의 교살전과 세균전 분쇄, 後勤부대, 지원군 공군, 각 병종부대, 지하장성 건축, 上甘嶺 방어작전, 포로우대, 적 포로부대내의 투쟁, 정전실현, 위대한 승리와 인민지원군 철병 등을 전시하고 있다. 철병과 관련하여서는 3년 1개월의 전쟁과 2년의 정전담판을 통한 정전 실현, 중조인민과 군대 위대한 승리 획득, 조선의 평화와 통일 촉진 및 동아시아와 세계 긴장국면 완화 위해, 중국인민지원군은 중조 양국정부의 ‘일체 외국군대 조선철병’ 건의에 호응하여, 1958년 3월에서 10월 전체 조선에서 철병. 조국인민의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이 적을 무찌르고 친구를 돕고 조국을 보위하고, 평화를 이룬 위대한 업적 찬양, 항미원조의 위대한 승리 열렬 환호 등이 서술되어 있다. 『抗美援朝記念館』, pp.165-171.

51) 먼저 중국은 미군이 38선을 넘으면 개입할 것을 경고하고, 미국 제7함대의 대만해협 철수와 蔣介石정부 지원이 철회된다면 압록강 남쪽의 비무장 완충지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미국이 이를 무시하여 전쟁 조기종결의 기회가 사라졌다.

음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⁵²⁾ 당시 중국은 인민지원군 병사의 감소와 피로, 병참선 연장과 군량공급 곤란에 처해 있었고, 미군의 반격능력과 자신들의 전쟁수행 능력을 분명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정전을 유리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⁵³⁾ 중국은 4.5차 전역에서 막대한 피해와 후퇴, 1951년 5월 유엔의 경제 봉쇄조치로 인한 타격으로 인해 결국 7월 10일 정전대화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미국이 포괄적 평화협상이 아닌 한국에서의 군사적인 정전협상으로 한정했기에, 중국은 대만 문제와 유엔에서 중국의 합법적 지위문제 등을 포기해야 했다.⁵⁴⁾

전시관에는 개성의 정전협상 사진이 크게 확대되어 걸려있다. 지원군은 평범한 군복을 입는데 반해, 북한군은 칼라를 세운 정장군복에 휘장을 달고 긴 가죽장화를 신고 있어서 비교된다. 이들의 복장과는 달리 정전협상은 북경에서 毛澤東과 周恩來가 모든 것을 지휘하였고, 협상지도를 위해 국제외교문제 전문가를 배치하였다.⁵⁵⁾ 7월 26일 양측은 5개의 협상항목을 확정하여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⁵⁶⁾ 군사분계선과 외국군 철군문제에서 충돌하였다. 협상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또 다른 승리를 위한 전쟁의 연장이었다. 미군은 협상과정 중 계속 전투기를 출격시켜 폭격하였다. 전시관은 동북지역과 북한의 폭격 피해상황을 그림으로 전시하고, 중국도 공군을 출동해 미군전투기를 격추시킨 전과를 올린 사진과 통계표 등을 전시하였다. 정전협상이 진행된 기간이 전쟁기간의 2/3 이상이라는 점에 비하면 관련 전시물은 많지 않다. 다만 미군과 유엔군 포로 사진과 ‘포로수용소에서의 투쟁’이란 제목으로 지원군 포로출신 張達이 수집하고 제작한 전시물 등 전쟁포로 관련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⁵⁷⁾

52)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周恩來年譜(1949-1976)』 上卷, 中央文獻出版社, pp.118-119.

53) 중국이 유엔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군사분계선 설정 역시 중국과 북한에 유리할 것이었지만, 중국이 유엔 제의를 거부해 미군이 반격을 개시한 이후 병력손실도 커졌다 沈志華,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결정에 대한 평가」, 박두복 편저, 『잊혀진 기록』, p.268.; 중국의 정전 기회상실에 대해서는 楊奎松, 「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1, 서울 :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2001. pp.528-529. 沈志華 저·최만원 역,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2010. 참조.

54) 楊奎松, 「중국의 한국전 출병 시말」, 박두복 편저, 『잊혀진 기록』, pp.324-325.

55)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협상전략과 지휘체계」, 『史學研究』90, 2008. p.338.; 周恩來는 협상을 이끄는 鄧華와 解方, 북한의 南日의 막후에 협상지도그룹으로 李克農과 喬冠華 등 국제외교문제 전문가를 배치하였다. 羅銀勝, 『喬冠華傳-紅色外交家的悲喜人生』, 北京:文化藝術出版社, 2012. p.102.

56) 李金明, 「争与和平的理性抉择- 试析周恩来在朝鲜停战谈判中坚持原则性与灵活性的统一」 『軍事歷史研究』, 2003년 제4기. p.60.

57) 張達은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는데 석방되어 귀국한 후 “投敵反國분자”가 되었고 문혁 중에는 “牛鬼蛇神”이 되었다. 기념관은 인민지원군 포로들의 ‘正名’을 위해 이를 전시하였다. 『抗美援朝紀念館』, p27, p.32.

1953년 6월 8일 포로송환문제가 해결되어 정전회담이 재개되었지만, 지원군은 군사분계선을 유리하게 확정짓기 위해 7월 13일 金城전투를 시작했고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해야 전투를 멈췄다. 전시관은 金城전투의 성과를 자세하게 그려서 전시하고 있다.⁵⁸⁾ 전시관은 클라크 총사령관이 회고록에서 ‘내가 미국 역사상 승리하지 못한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육군사령관이었다’고 탄식한 내용을 미국이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정전협정’ 조인으로 항미원조전쟁이 승리로 종식되었다고 서술한다. 승리의 의미는 항미원조전쟁으로 소련으로부터 대규모 군사·경제 원조를 받아 경제회복과 군현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중국군의 정신과 전투능력, 후방지원 등 각 방면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중국은 원래 의도한 유엔에서 중국의 합법적 지위문제와 대만 문제를 포기하고 군사적인 문제로만 국한하게 되었다. 정전협정은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인 것이기에, 전쟁 당사자 모두에게 ‘승리’나 ‘종식’이 아니다.⁵⁹⁾ 미중간 ‘싸우면서 협상하는 원칙’은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포로를 비롯,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⁶⁰⁾ 중국은 한반도 문제해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제네바 회담에 참가하였지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했다. 전시관은 중국이 제네바 회담에 참가하여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58) 이 전투는 적군 7,8만 여명을 사살하거나 부상을 입혔고, 192.6만 평방미터를 점령하여 毛澤東이 전투 결과에 만족했기 때문이다. 毛澤東은 후에 소련대사에게 “순수한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1년 정도만 미국인을 계속 공격한다면, 한강 주변을 점령하기에 유리한 주변지역을 점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沈志華 저·최만원 역, 잊책, p.494.

59) 정전협상은 개시가 늦었고,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합의를 보았음에도 전투를 중단하지 않았고, 포로송환 문제로 협상의 조기타결을 방해하였으며, 협상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과도한 공중폭격을 행사한 점 등에서 전쟁종결은 ‘정의’가 아닌 ‘부정의’로 점철된 전쟁이었다. 한국전쟁 참상. 2백만에서 3백만에 이르는 남북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40만 국군이 희생되었으며, 5만 4천 여명의 미군이 숨졌고, 백만에서 2백만에 이르는 공산군이 사망하였다. 더욱이 그러한 희생의 45%가 휴전협상이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였다. 특히 포로 자원송환 원칙으로 논란을 벌인 15개월 동안 희생된 인원이 연합군측은 125,000며, 공산군측은 25만명에 달하였다. 미군복쪽으로 야기된 민간인 희생도 극심하였다. 정태욱,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 : 한국전쟁 종결의 부정의」, 『민주법학』 43, 2010. pp.142-143.

60)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협정과 전쟁의 유산」,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80호, 2011. p.352.; 정전회담이 2년여 지속되면서 북한과 중국의 대립도 발생하였다. 미군 폭격으로 막대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북한은 정전협정이 빨리 체결되기를 기대하였지만, 毛澤東은 군사행동을 계속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전조건을 쟁취하고자 하였다. 沈志華 저·최만원 역, 잊책, p.492; 박영실, 「정전회담을 둘러싼 북한·중국 갈등과 소련의 역할」, 『현대북한연구』 14-3, 2011. pp.73-74.

IV. 항미원조운동과 기념활동

1. 항미원조운동과 애국주의

중국정부는 항미원조운동을 통해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노동자에게는 애국주의 생산경쟁을, 농민에게는 지원병으로서의 참전을 호소하였다. 항미원조운동의 抗美援朝는 외부의 적으로서 미국보다 그들 내부에 잠재하는 미제국주의적 요소를 제거한다는 의미가 크고, 援朝는 애국적인 국민감정에 호소하여 생산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한다는 데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⁶¹⁾ 항미원조운동관은 ‘美제국주의를 仇視·鄙視·蔑視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항미원조 선전활동을 벌여 ‘親美·崇美·恐美 사상을 깨부수고’ 중국인민 모두 노력하여 항미원조전쟁을 지원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비행기·대포 모금운동과 무기헌납, 애국공약 제창’, ‘증산절약운동과 전쟁물자공급’, ‘군인가족 위문과 3차의 조선위문단 파견’, ‘동북인민의 공헌-모금운동과 위문활동’ 등을 비롯하여 국민경제 회복을 촉진한 기록들을 전시하고 있다.⁶²⁾ 예컨대 제2차 전역시기인 1950년 11월부터 지원군에게 솜을 넣은 군복과 엄청난 양의 미숫가루 등을 만들어 보냈는데, 전시관은 이 솜군복과 ‘미숫가루 제조열풍’을 사진과 실물로 전시하였고, 周恩來 총리 등 지도자들이 틈을 내 직접 북경의 각 단위간부 및 군중들과 함께 미숫가루 제조에 참여한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⁶³⁾

항미원조운동 기간 중국정부는 전쟁영웅 기사를 통해 지원군의 희생을 미화함으로써 국민적 애국심과 자긍심을 제고시켰다. 기념관 입구 앞에는 ‘누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인가’라는 수필(보고문학)이 새겨져 있는 큰 비석이 있다.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은 인민지원군을 지칭한다. 이 시를 쓴 魏巍는 중군작가로 참전하여 지원군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전투에도 참가하였다. 이러한 인민지원군에 대한 영웅적 묘사는 전쟁승리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인민지원군으로 상징화되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⁶⁴⁾ 중국은 매년 항미원조기념일인

61) 傅焜, 「抗美援朝運動期 중국공산당의 한국 이미지 만들기」, 전남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p.9.

62) 『抗美援朝紀念館』, pp.172-173.

63) 당시 긴급한 미숫가루 공급을 위해 동북인민정부는 ‘미숫가루 생산을 위한 규정’을 만들었고, 瀋陽시는 당정군 각 기관이 매일 최소한 미숫가루 13만 8천근을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했다. ‘미숫가루 제조열풍’은 동북지방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동북군구는 12월 8일 ‘미숫가루, 고기포 생산회의’를 열어 한달내로 미숫가루 650만근, 고기포 512만 근을 생산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洪學智 지음·홍인표 옮김, 魏巍, 魏巍, p.148.

64) 1951년 4월 11일 『인민일보』는 1면에서 魏巍의 보고문학 작품인 「누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인가(誰是最可愛的人)」 발표.(인민일보 1951.4.11)이 기사는 인민지원군이 겪고있는 고난에 가득찬

10월 25일에 抗美援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⁶⁵⁾ 1990년대 이후 중국정부는 애국주의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박물관 단체관람을 적극 권장하고 무료로 개방했다. 향미원조기념관은 ‘전국 애국주의교육 시범기지’ (遼寧省 국방교육시범기지) ‘전국 문화공작 선진기관’으로 명명되어, 전국적인 애국주의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영웅만들기와 열사능원

지원군은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싸웠고, 중국의 군사적 손실은 항일전쟁과 내전에서의 사망자 수를 초과했을 정도로 컸던 만큼, 수많은 전쟁영웅과 열사가 만들어졌다. 기념관의 영웅열사관은 2명의 특급영웅, 50명의 1급 전투영웅과 4명의 1급모범 등 모두 56명의 모범인물을 전시하며, 이들이 희생된 순간을 드라마틱하게 그린 대형 그림과 조각물 등으로 전시하고 있다.⁶⁶⁾

인민지원군 열사비와 능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毛澤東의 장남 毛岸英이 미군 공습으로 희생된 후인 1951년 초부터 제기되었다.⁶⁷⁾ 단동의 향미원조기념관이 승리의 기억을 기리는 시설인 모뉴먼트(monument)에 해당한다면⁶⁸⁾, 전사자들을 잊지 않기 위한 애도시설인 메모리얼(memorial)은 丹東의 錦江山공원 구내에 자리한 丹東抗美援朝烈士陵園, 丹東 교외의 元寶區抗美援朝烈士陵園, 瀋陽의 抗美援朝烈士陵園이 대표적이다.⁶⁹⁾ 이하에서는 抗美援朝烈士陵園이 어떻게 조성되었고 어떤 역할

상황을 묘사하며, 이들을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호명하였다. 毛澤東은 이 글을 읽은 후 ‘전군에 배포할 것’을 지시하였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말은 지원군에 대한 친근함과 존경을 표현하는 대중적 호칭이 되었다. 傅焜, 윗글, pp.14-20.

65) 중국의 향미원조기념일은 인민지원군의 한반도에서의 전쟁개시일이다. 종전일을 기념하는 것이 평화와 이어져 있다면 개전일을 기념하는 것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방식이다. 향미원조전쟁과 6.25전쟁이라는 호칭과 개전일을 기념하는 것은, 아직도 남북의 대립적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는 역할을 한다. 김형근, 「한국전쟁 사진과 집합기억 : 전쟁기념관에서의 한국전쟁 사진전시회에 대한 연구」, 『韓國 言論學報』49-2, 2005. p.80.

66) 대표적으로 적의 흉탄을 가슴으로 막은 黃繼光과 폭탄을 품고 적군에 뛰어든 楊根思 등 특급영웅 2명, 몸에 불이 붙었는데도 적에게 잠복위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희생된 邱少雲 등 1급 영웅 50명, 1급 모범 4명, 2급영웅, 2급 모범과 특등공이상자 362명, 각종 유공자 302,714명이 기록되어 있다. 『抗美援朝記念館』, p.175.

67) 周恩來는 毛澤東에 보낸 편지에서 “毛岸英의 희생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대우동과 다른 전쟁터에 중국인민지원군을 기리는 열사비를 세워야 한다”고 썼다. 周恩來軍事活動紀事編寫組編, 『周恩來軍事活動紀事(1918-1975)』下卷, 北京: 中央 文獻出版社, 2000. p.178.

68) 안경화, 「전쟁의 재구성: 기념관 속의 한국전쟁」, p.167; 전쟁에 관한 기념물은 애도를 위한 시설과 사건 자체를 기념하기 위한 시설 두가지로 성격이 구분된다. 향미원조기념관은 전쟁의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한국전쟁 자체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어서 후자에 해당된다. 하세봉, 윗글, p.220.

69) 북한의 평안남도 회창군에도 毛澤東의 장남 毛岸英 묘와 함께 중국 인민지원군열사묘가 있고 평양에도 인민지원군열사 기념비가 있다. 중국은 매년 북한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묘지를 추모하

을 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丹東의 항미열사능원

丹東의 抗美援朝烈士陵園은 전시 사망자가 생기면 바로 안장해야 하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소규모로 여기 저기 분산되어 조성되었다. 단동시내 丹東市 抗美援朝陵園, 花園革命烈士陵園(振興혁명열사능원), 元寶區 항미원조열사능원, 진안구 삼도구 공군열사능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抗美援朝烈士陵園은 1951년 만들어지고 1984년 중건되었으며, 1951년 중국인민지원군 제50군이 세운 ‘중국인민지원군열사기념탑’과 1971년 단동시에서 세운 ‘항미원조열사기념비’가 있다. 안장된 264명 중 인민영웅·전투영웅·특등공신 등이 13명, 간부가 8명이다. 遼寧省 애국주의교육시범기지로 명명되어, 많은 추도활동이 진행되었다.⁷⁰⁾ 花園革命烈士陵園은 1950년 건립되기 시작하여 1994년 중건되었고, 2000년 항미원조 50주년때 묘지를 새로 조성하여 항미원조시기 열사 607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 열사 21명이 안장되었다. 단동시 애국주의교육기지, 遼寧省·丹東市 국방교육기지로 명명되어 혁명선열의 영령을 위문하는 장소, 혁명투지를 고무시키는 교육기능, 국방관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⁷¹⁾ 丹東에서 가장 규모가 큰 元寶區 항미원조열사능원은 1952년 6월 만들어지고 2000년 확대 조성되었다.⁷²⁾ 이 외에도 작은 규모의 열사묘들이 丹東 교외에 흩어져 있고, 파악되지 않은 무명열사 묘지도 다수이다.

2) 瀋陽 항미원조열사능원

1951년 東北軍區가 건설한 심양 항미원조열사능원은 항미원조열사기념비·志願軍조각·烈士묘군·열사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⁷³⁾ 입구 정문 양쪽의 벽에는 원

고 있다. 2013. 4월 청명절에 관화병(關華兵) 주북한 중국대사 일행이 평양시 목단봉에 위치한 중국 인민지원군열사기념비 ‘우의탑(友誼塔)’과 평양시 형제산에 위치한 지원군 열사 묘를 찾아 그들의 충혼을 기렸다고 한다. 『人民日報』, 2013年 4月 5日.

70) 중공중앙총서기 胡錦濤와 전지원군부사령 洪學智 등이 방문하여 항미원조 열사를 추도하였다. <http://baike.baidu.com/view/8287795.htm>

71) 최근 3년래 각급 기관 공청단과 부녀연합회 등 애국주의 교육을 받은 인원이 10만여 명에 이른다 고 한다 <http://gfjy.jxnews.com.cn/system/2010/04/19/011361822.shtml>

72) 능원 내에는 전쟁중 부상당해 중국인민지원군총후의원으로 옮겨와 사망한 열사 688명이 묻혀있는데, 이들의 고향은 중국 21개 省市에 달하며, 출신 부대는 지원군 제38군 등 28개 군, 중국인민지원군1군, 공4군, 안동군분구, 요동군구 등이 포함된다 능원 조성시 자료부족으로 성명과 부대번호, 직무 등만 있고, 참가한 전투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도 한다. http://www.360doc.com/content/10/0808/00/1817883_44434217.shtml

73) 瀋陽抗美援朝烈士陵園編, 『抗美援朝烈士永垂不朽』, 2010. p.8.

쪽에 1950, 오른쪽에 1953이란 숫자가 적혀있고, 입구를 들어서면 정면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⁷⁴⁾ 기념비 앞 광장 양측에 특급영웅과 일급영웅들이 희생된 장면, 지원군전사가 깃발을 높이 들고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의 조각이 있다.⁷⁵⁾ 열사묘군에는 123명의 志願軍 열사가 안장되어 있다.⁷⁶⁾ 열사기념관은 항미원조 60주년을 기념하여 2010년 9월 확대 개관되어, 134명 각급영웅과 217명 團이상 간부의 영웅적 사적을 주로 전시하고 있다.⁷⁷⁾ 현재 전국중점 열사기념건축물보호단위, 전국애국주의교육시범기지로 명명되어, 국경절 등 기념일에 주요 지도자와 및 각계 군중들이 추도활동을 하는 곳이다.⁷⁸⁾ 능원은 추도 보다는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들의 영웅적 행동을 본받는 애국주의 교육기지로써의 역할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V. 맺음말

중국의 항미원조기념관 전시와 기념은 애국주의·국제주의·혁명영웅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항미원조기념관은 전쟁관과 더불어 전쟁지원을 다룬 항미원조운동관,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전시한 中朝人民友誼館, 영웅열사관을 통해 ‘정의롭고 승리한 전쟁’의 이미지를 전시하고 있다. 중국이 항미원조전쟁을 위대한 승리라고 할 때, ‘승리’의 의미는 압록강까지 올라온 미군을 다시 38선 아래로 되돌린 것과 더불어, 인민해방군의 재정비와 무기현대화, 항미원조운동을 통한 생산증대와 경제발전, 대중동원과 애국주의 강화 등 국가안보와 국제적 국가위상을 지키고 높였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최근 중국은 북핵문제에 한·미와 협력하는 등 국가 위상과 이익이 변하고 있다.

74) 기념비 정면에는 ‘항미원조열사 영원하리’란 글자를 새겼고, 상단에는 동으로 주조된 中朝양국 국기가 양국의 우의를 상징하며, 기 아래에는 총을 손에 쥐고 있는 志願軍전사 동상이 올려져있다. 비 아래단 뒷면에 지원군 전투장면을 동으로 새겼다.

75) 瀋陽抗美援朝烈士陵園編, 잇책, p.9.

76) 특급영웅과 일급영웅 등 28명, 지원군 50군 부군장, 지원군 39군 부군장, 지원군 23군 참모장 등 95명 團級 이상 간부들이다. 열사묘 봉분은 전체표면을 시멘트로 마감하여 일반적인 묘의 형태와는 다른데, 이 봉분형식은 동일한 항미원조열사능원 구내에 있는 소련군열사능원의 묘지형태와도 다르다. 이곳의 소련군 묘지는 1945년 8월 심양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사망한 소련군을 기념하는 시설로서 심양역 광장에서 있던 것을 2006년 현위치로 이전했다. 하세봉, 잇글, p.223.

77) 열사기념관에는 특급과 일급 등 영웅들의 사진과 초상화가 절반가량 차지하고, 무기·훈장·수첩 등의 실물과 사진이 조합을 이루며 전시되어 있다.

78) 이 능원에는 1953년 10월 賀龍 원수가 중국인민 제3차 조선파병위문단을 이끌고 와 참배하였고, 1963년 6월 周恩來총리와 陳毅부총리가 崔鏞健위원장이 이끈 조선당정대표단과 함께 참배한 바 있다. 평시에도 많은 부대와 청년학생들이 열사묘 앞에서 입단·입대 선서의를 거행하는 등 매년 참관 군중이 50여 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瀋陽抗美援朝烈士陵園編, 잇책, p.10.

중국의 항미원조기념관도 정세변화에 따라 전시원칙이 바뀌기도 하였다. 올해 정전60주년에는 항미원조 기념에 특별한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중국의 국가이익과 위상이 변한다면 항미원조기념관이 새롭게 재개장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항미원조 40주년을 앞두고 북한의 평양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자료수집에 협조하였듯이, 향후 한중간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정전협정에 변화가 초래된다면, 양국 기념관간의 전시자료 협조도 가능할 것이다. 항미원조기념관 건립은 많은 중국인들의 참관을 위한 공원식 기념관을 지향하였고, 북한등 외국 손님의 참관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⁷⁹⁾ 앞으로 중국의 항미원조기념관이 평화·승리·우의라는 설립이념과 국가위상의 변화에 걸맞게, 세계적인 평화공원으로 재구성되고, 다양한 전쟁 기억들의 차이를 인식하고 연구·교류하는 장소로 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79)『抗美援朝紀念館』, p.135.

Section 4. 정전의 회고

이재훈(동국대),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장 사료에
비친 휴전협상 시기 공산 측의 내부적 갈등”

토론: 이종국(동북아역사재단)

박명립(연세대), “1953년 한미동맹체결: 준다자조약
및 준집단안보체제: 한국문제 해결과 생존방식의
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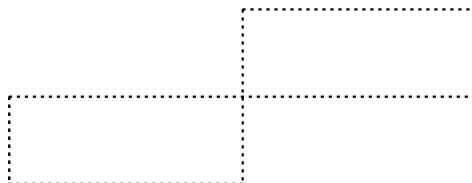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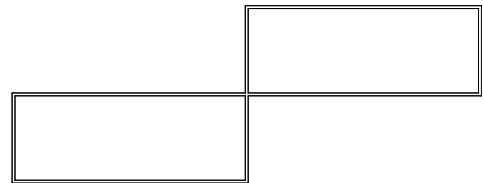
토론: 허은(고려대)

박태균(서울대), “작동하지 않는 정전협정”

토론: 정일준(고려대)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6·25전쟁에 대한 국내
연구의 회고와 전망: ‘전쟁종합사료관’ 구축을
위해”

토론: 홍면기(동북아역사재단)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장 사료에 비친 휴전협상 시기 공산 측의 내부적 갈등

이재훈
동국대

목차

- I. 서론
- II. 휴전 모색 시기 전쟁 지속 여부를 둘러싼 이견
- III. 휴전 협상 시기 군사분계선과 송환포로 문제를 둘러싼 갈등
 - 1) 군사분계선 협상
 - 2) 포로송환 협상
- IV. 결론을 대신하여

I. 서론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한반도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순간 해방이라는 선물이 주어졌고, 그 선물꾸러미를 펼쳐보기도 전에 한반도의 정체성을 자신의 의지대로 규정하고자 하는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 틈바구니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 한반도는 내·외부세력이 총동원되어 펼치는 권력투쟁,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강대국들에 의한 후견과 분단을 겪게 되고, 마침내는 전쟁이라는 또 하나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3년여에 걸친 전쟁의 종단을 알리는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결과 한반도는 분단을 극복하고자 3년 여 간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분단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한국전쟁에서의 휴전 모색은 전쟁 발발 직후부터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휴전 모색은 전쟁이 발발하고 약 1년 후인 1951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교전 양측의 실질적 주체인 미국과 중국 측에 휴전의 동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었다. 미국과 중국이 휴전을 모색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았다. 미국은 더 이상의 전쟁 지속을 통해 한반도에 통일, 자주, 민주 한국을 달성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에서 전쟁의 지속은 의미가 없었다. 아예 38도선을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 휴전협정을 체결한 후 적당한 시기에 한국군을 제외한 외국

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었다. 한편 중국은 1951년 1월 중순 이후 유엔군의 반격작전과 공산 측의 2차에 걸친 전역 과정에서 입은 막대한 피해와 38도선 인근으로의 후퇴를 겪으면서 한반도에서 미국을 상대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국은 ‘항미원조전쟁’의 애초 의도에 따라 적을 38도선 이남으로 물러나게 한 것에 만족하고 이제 전쟁이 아닌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듯 미국과 중국의 휴전에 대한 이해관계가 부합하게 되자 휴전교섭은 급진전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 및 유엔 참전국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사실상 단독으로 휴전협상에 임했던 미국과 달리, 협상의 상대측인 북한, 중국, 소련(이하, 공산 측)은 휴전의 모색과 협상 진행과정에서 상호 긴밀한 대화 채널을 유지했고, 협상에도 북한과 중국 측이 공동으로 임했다. 하지만 대화 채널이 유지되고 공동으로 참여했다고 해서 당시의 북·중·소 3국 관계가 항상 원만한 것은 아니었다. 몇몇 사안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이견과 갈등이 노정되기도 했다. 이는 당연한 것이었다. 전쟁과 휴전에 임하는 3국의 이해관계가 각각 상이한 상황에서 휴전협상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3국이 동일하게 인식하고 통일된 입장을 보이기를 바라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러시아문서보관소 소장 한국전쟁 휴전 관련 사료를 통해 휴전을 모색하고 휴전협상을 진행하던 시기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으로 이어지는 공산 측 지도자들의 상호교섭과 인식 속에 노정되었던 이 같은 이견과 갈등을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혁명과 전쟁을 통해 다져진 동지의식(?)이 각국의 핵심적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II. 휴전 모색 시기 전쟁 지속 여부를 둘러싼 이견

한국전쟁에서 교전 양측의 휴전모색은 전쟁 발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런데 전쟁 초기에는 어떠한 제안도 휴전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전선이 계속 변동하면서 전황의 유·불리가 휴전조건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고, 유리·불리가 교차하는 상황에서는 교전 양측이 동일한 시점에 휴전의 필요성을 갖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1951년 6월부터 전선이 38도선 인근에서 고착되면서 교전 양측의 휴전모색은 새로운 전기

를 맞이하게 된다. 전선이 고착된 상태에서, 양측에게는 휴전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손해가 전쟁의 지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공산 측의 경우 휴전모색과 관련한 의미 있는 움직임은 1951년 6월 초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북경회동에서 있었다. 이 회동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6월 5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¹⁾, 6월 13일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²⁾, 그리고 11월 14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³⁾ 등을 통해 여타 현안들과 함께 휴전문제도 논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마오쩌둥이 6월 5일자 전문을 통해 스탈린에게 알린 바와 같이, 북경에 있던 김일성과 고강(高崗)은 6월 10일 모스크바로 출발하여 스탈린과 회동했고, 스탈린은 6월 13일자 전문을 통해 회동 결과를 마오쩌둥에게 통보했다. 스탈린의 전문에 의하면, 당시 회동한 3인은 ‘현 시점에서 휴전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런데 당시 휴전모색과 관련하여 3국 사이에 일정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는 ‘북경회동에서 김일성이 정전교섭에 분명히 동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마오쩌둥이 김일성을 고강과 함께 모스크바로 보내 스탈린으로 하여금 설득하게 했다’⁴⁾고 보는 반면, 토르쿠노프(Торкунов)는 ‘북한과 중국 간에는 휴전에 이견이 없었으며, 김일성과 고강이 스탈린에게 휴전을 설득했다’⁵⁾고 주장하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1951년 9월 10일 당시 북한 주재 소련대사였던 라주바예프(Разуваев)가 모스크바로 보낸 보고서⁶⁾는 당시 상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인들에게 말리크(Малик) 동지의 연설은 휴전을 체결하려는 중국의 명백한 의도가 표출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북경 방문 결과 김일성은 이러한 (중국의 - 필자 첨가) 의도에 크게 실망했다. 이와 함께 김일성은 중국

1) АПРФ(러시아연방 대통령문서보관소), ф.45, оп.1, д.339, л.23.

2) АПРФ, ф.45, оп.1, д.339, лл.31-32.

3) АПРФ, ф.45, оп.1, д.342, лл.16-19. 전문에는 “김일성 동지가 금년 6월 북경에서 휴전조건을 논의할 때”라고 명시되어 있다. (л.17.)

4) 와다 하루키 지음 서동만 옮김, 『한국전쟁』 창작과 비평사, 1999, 220~221쪽.

5) А.В. Торкунов, Загадочная война: корейский конфликт 1950-1953 годов, М., РОСС ПЕН, 2000, с.162.

6) ‘휴전회담 관련 정치동향과 조중 상호관계’, 출처불명.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당시 북한 주재 소련대사관 1등서기 페투호프(Петухов)가 보낸 ‘조선의 휴전회담 (보고)’에 “휴전회담 관련 정치동향 및 조중 상호관계는 장관님께 보내는 특별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의 문건은 진본으로 판단된다. : АВПР(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 ф.0102, оп.7, п.32, д.65, л.55.

의 역량, 중국의 가능성과 이해관계, 그리고 민주진영의 전반적 투쟁에 있어 조선의 역할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보고서의 언급은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한 6월 이전에는 휴전을 고려하지 않았고, 북경 회동 과정에서야 마오쩌둥이 제기한 휴전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말리크의 연설에 대한 북한 측의 관점을 통해 볼 때 북한 측은 소련 측 역시 시기가 불분명하지만 마오쩌둥의 의도에 따라 휴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보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위 보고서에 따르면, “말리크 동지의 연설이 있고 며칠 동안 북조선 언론과 여타 선전기관들이 그의 제안이 지니는 의미를 설명하지도, 그것을 논평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이 역시 북한 측이 최소한 북경 회동이 있고 일정한 시간이 흐를 때까지도 휴전을 바라지 않았고, 북경 회동 및 김일성, 고강, 스탈린의 모스크바 회동 결과와 이에 따른 소련의 휴전 제안 움직임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당시 시점에서 휴전은 북한 측이 바라는 바는 아니었다.

어떻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산 측 내부에서 휴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제 남은 문제는 공산 측의 휴전제안을 미국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마오쩌둥은 전달 방식과 관련하여 6월 13일 당시 모스크바에 있던 김일성과 고강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냈다.

... 우리가 먼저 휴전을 제안하는 것은 적의 사기를 높일 뿐이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1. 적이 제안할 때까지 기다린다.
2. ... 소련정부가 미국정부에 휴전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 소련정부가 문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휴전문제를 제기하면 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2개의 방법을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다.⁷⁾

당시 김일성과 고강은 이 같은 마오쩌둥의 제안을 스탈린과 논의했고, 스탈린에게서 소련 측이 먼저 미국 측에 휴전을 제안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⁸⁾ 그리고 그 결과 6월 23일 유엔 주재 소련대표인 말리크가 뉴욕에서의 라디오방송을 통해 미국 측에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지 필요성을 제기했고,⁹⁾ 미국 측이 이에 긍정적

7) АПРФ, ф.45, оп.1, д.339, л.58.

8) АПРФ, ф.45, оп.1, д.339, л.78.

9) 「프라브다」, 1951.06.24. “소련인민들은 현재 가장 첨예한 문제인 조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양측의 준비가 요구된

인 답변을 줌으로써 휴전협상의 막이 올랐다.

III. 휴전 협상 시기 군사분계선과 송환포로 문제를 둘러싼 갈등

휴전과 관련한 공산 측 내부의 이견과 갈등은 휴전모색 시기뿐 아니라, 휴전협상 과정에서도 표출되었다. 휴전에 임하는 3국의 이해관계가 달랐고, 3국 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때로는 특정국(특히 북한)의 희망과 이익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공산 측 내부의 이견은 특히 휴전협상 의제 중 협상 양측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제2의제(군사분계선)와 제4의제(포로송환)에서 발생했다.

1) 군사분계선 협상

제2의제(군사분계선) 협상은 제1의제인 ‘협상의제 채택’에 합의한 1951년 7월 26일부터 시작되었다. 협상 양측은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가 협상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담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이미 군사분계선 협상에서 달성할 목표와 원칙을 정해놓고 있었다. 공산 측의 목표는 6월 23일 말리크가 라디오방송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38도선을 분계선으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공산 측은 회담의 의제 채택과정에서 이미 38도선을 분계선으로 설정하자는 주장을 제기했고, 그로 인해 휴전협상 양측이 한차례 논란을 겪은 바 있었다.

그런데 38도선을 분계선으로 설정한다는 공산 측의 공식적 목표가 있었음에도, 제2의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겨우 하루가 지난 7월 27일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미국 측이 기존 전선을 분계선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면, 중국 측은 미국 측에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은 이에 대한 북한 측 의견을 알려줄 것을 김일성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일성은 군사분계선의 양보는 북한 측에게 심각한 정치적 타격이며, 미국이 점령한 북한 지역이 매우 큰 경제적 및 전략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그러한 양보는 불가능하다고 마오쩌둥에게 지체 없이 답변을 보냈다.¹⁰⁾ 이후 미국 측이 기존 전선의 북쪽 후방에 분계선을 설정하자는 요구를 제기하자, 마오쩌둥은 7월 28일 이극농에게 보내는 전문을 통해 중국 측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38도선을 분계선으로 계속 주장할 것임을 김

다. 소련인민들은 그 첫걸음으로 분쟁당사자들이 38도선으로부터 상호퇴각한 후 휴전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10) ‘휴전회담 관련 정치동향과 조중 상호관계’, 출처불명.

일성에게 통보했다.¹¹⁾

군사분계선 협상과 관련하여 7월 27일과 28일 양일에 있었던 김일성과 마오쩌둥 간의 전문 교환은 양자 간 이견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미국 측에 양보를 해서라도 가능한 한 조속히 전쟁을 종식시킴으로써 끝없이 이어지는 대북 원조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중국 측 입장과 국토 완정의 의지는 고사하고 전쟁 이전의 영토마저 잠식당하면서까지 굴욕적인 타협을 할 수는 없다는 북한 측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경우였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측이 중국 측의 희망과는 달리 기존 “전선의 위치보다 30~50km 북쪽에 분계선을 설정”¹²⁾하자는 “광포하고 근거 없는”¹³⁾ 주장을 했기 때문에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이견은 더 이상 표면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협상에서 미국 측이 기존 전선을 분계선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면, 중국 측이 그와 같은 미국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도록 북한 측을 압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알려진 바와 같이, 휴전협상 공산 측 대표단은 북한과 중국 대표로 구성되었고 북한 측 남일(南日)이 대표단장으로 활동했지만, 휴전협상의 실질적 지휘자는 마오쩌둥이었으며, 그는 이극농(李克農)과 교관화(喬冠華) 등을 개성으로 파견해 회담 전략을 수립하고, 회담 내용과 과정을 조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요컨대 휴전협상의 실질적 주체는 중국 측이었다. 그런데 휴전협상 초기 “중국 측은 자신의 입장을 언제나 적시에 북한 측 입장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는 자주 북한 측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¹⁴⁾ 또한 “베이징에서 개성으로 특별히 파견된 중국동지들이 현장에서 남일의 사업을 지도”¹⁵⁾했는데, “후에 남일은 미국 측과의 관계에서 극단적인 유연성과 양보를 보인 이극농과 몇몇 사안에서 견해를 달리했다”¹⁶⁾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정황은 당시 중국 측이 북한 측을 배제한 채 분계선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북한 측에 강요할 수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휴전 모색 시기에 자국의 핵심이익인 중국의 유엔가입과 대만해협에서의 미군 철수를 휴전조건에서 스스로 제외시킨 중국 측 입장에서 자국의 이익과는 크게 관련 없는 북한의 영토적 이익을 위해 미국 측과 한없이 논쟁을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클 수는 없었다.

11)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114-115.

12) Record of Events, Eleventh Session, Conference at Kaesong, Korea, on the Armistice Proposal(1951.07.27.), United Nations Command, Korean Armistice Negotiation.

13) АПРФ, ф.45, оп.1, д.340, л.114.

14) ‘휴전회담 관련 정치동향과 조중 상호관계’, 출처불명.

15) ‘조선의 휴전회담 (보고)’, АВПР, ф.0102, оп.7, п.32, д.65, л.28.

16) ‘휴전회담 관련 정치동향과 조중 상호관계’, 출처불명.

그렇기 때문에 당시 중국 측은 분계선 문제에서 일정하게 양보함으로써 휴전교섭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의도를 가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든 이후 군사분계선 설정을 둘러싸고 협상 양측 간에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었으며, 그 와중에 공산 측이 목표로 하는 분계선에 대한 논의는 38도선으로부터 7월 27일 마오쩌둥이 이미 김일성에게 제시했던 기존 전선으로 변경되었고, 10월 31일 공산 측은 “일부 수정이 가해진 현재의 접촉선에서 군사행동을 중지”¹⁷⁾하자고 제안했으며, 11월 14일부터 19일 사이에 “현재의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 입장을 확정했다.¹⁸⁾

그런데 현재의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 결정이 내려진 11월 19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북한정부가 유엔총회와 유엔안보리에 보내는 호소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 결과 소련 및 중국과의 협의 없이 북한정부가 자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호소문 제출 시도를 연기시켜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 결정은 집행을 위해 즉각 북한주재 소련대사 라주바예프에게 전달되었다.¹⁹⁾ 하지만 소련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은 이 호소문을 유엔에 제출했고, 라주바예프는 이로 인해 모스크바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²⁰⁾

물론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서 조선에서의 전투행동 즉각 중지, 조선인민군 총사령부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 대표들의 공정하고 현명한 제안에 따른 전선으로부터의 군대 철수와 2km의 비무장지대 설치,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 철수”²¹⁾ 등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제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 측이 소련, 중국 측과 논의하지 않은 채 휴전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호소문을 자의적으로 보냈다는데 있었다. 북한 측이 이러한 문제를 소련, 중국 측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리는 만무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스크바-북경-평양은 당시 휴전협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공유했고, 그러한 공유를 통해 3국의 통일된 협상전략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 측은 자의적으로 호소문을 보냈다. 이는 아마도 당시 시점에서

17) АПРФ, ф.45, оп.1, д.342, л.1.

18) АПРФ, ф.45, оп.1, д.342, л.17 및 АПРФ, ф.45, оп.1, д.342, л.23 참조.

19) АПРФ, ф.3, оп.65, д.829, л.45.

20) АПРФ, ф.3, оп.65, д.829, лл.47-48.

21) АПРФ, ф.3, оп.65, д.829, лл.182-183.

북한이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와 관련하여 소련과 중국 측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컨대 당시 북한 측은 “최대한 신속한 휴전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지만, 자국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휴전조건이 강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었다.²²⁾ 하지만 휴전협상 과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담이 군사행동 중지에 대한 회담이고, 적이 38도선 이북의 동부 산악지대와 38도선 이남의 서부 저지대에 대한 즉각적인 교환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 전선에서의 군사행동 중지를 제안하고, 군사분계선으로서의 38도선 문제와 외국군 철군 문제 제기를 유예”²³⁾한다는 중국 측의 휴전전략은 비록 마오쩌둥이 “김일성 동지가 금년 6월 북경에서 휴전조건을 논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해 동일한 견해를 견지했다. 이번에도 그의 동의하에 이를 수행했다”²⁴⁾고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신을 손상시키는 휴전조건이 강요를 거부하는 북한 측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호소문 발송 사건은 전쟁 지속으로 인해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고 있던 북한 측이 조속한 종전을 촉구하고자 단행했던 것이 아니라, 군사분계선 협상에서 소련과 중국 측이 미국 측에 양보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북한 측이 이를 표출하기 위해 단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2) 포로송환 협상

1951년 12월 11일 제4의제인 포로송환 협상을 위한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 협상은 비교적 간단하게 타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미국 측의 일대일 교환, 자원송환과 공산 측의 전원교환, 일괄송환 원칙이 맞서면서 협상이 장기화되었다.

포로송환 협상과 관련하여 공산 측의 이견이 표출된 발단은 미국 측이 1952년 7월 13일 제104차 본회담에서 ‘한국인 76,600명, 중국인 6,400명 등 모두 83,000명의 포로가 송환될 것’²⁵⁾이라고 한 제안이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송환대상 인원 가운데 한국인 포로는 총원 13만9천 여 명 가운데 약 55%(북한 출신 포로만 산정하면

22) АВПР, ф.0102, оп.7, п.32, д.65, лл.54-55.

23) АПРФ, ф.45, оп.1, д.342, л.17.

24) АПРФ, ф.45, оп.1, д.342, л.17. 앞서 본 바와 같이, 1951년 7월 27일 마오쩌둥이 현 전선을 분계선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했을 때, 김일성이 이를 즉각 거부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6월 북경회담에서 현 전선을 분계선으로 설정하자는 마오쩌둥의 제안에 김일성이 실제로 동의했는지, 그리고 동의했다면 그 동의가 김일성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25) Record of Events, 104th Session, 78th Meeting at Pan Mun Jom,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1952.07.13.

약 64%)가 송환을 희망한데 반해, 중국지원군 포로는 2만 여명 가운데 약 32%만이 송환을 희망한 것이었다. 이 제안이 중국 측을 흥분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7월 15일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

... 금년 7월 14일자 귀하의 전문을 받았다.

이 사안에 대해 이틀 동안 검토한 후 우리 동지들 모두는 적이 흥포한 폭격을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발적이고 기만적이며, 사실상 어떠한 양보도 의미하지 않는 적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²⁶⁾

이 전문에 의하면, 7월 14일 김일성이 마오쩌둥에게 전문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유감스럽게도 김일성이 보낸 7월 14일자 전문은 현재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마오쩌둥이 보낸 전문을 통해 김일성이 보낸 전문의 내용을 유추할 수는 있다. 마오쩌둥은 김일성이 보낸 전문을 검토한 후 ‘적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김일성에게 회답했다. 이는 김일성이 7월 13일 미국 측이 제안한 포로 숫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거나, 받아들여야 할지 여부에 대해 문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일성이 먼저 마오쩌둥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전문을 보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았다. 그것은 미국 측 제안을 받아들여서 전쟁을 되도록 빨리 중단시키고 싶다는 의사의 표명이었다. 그런데 김일성은 7월 16일 전문을 통해 마오쩌둥에게 “우리는 현재 상황에 대한 귀하의 분석이 옳다고 생각한다”²⁷⁾라고 알리면서, 같은 날 스탈린에게도 적의 폭격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 마오쩌둥 동지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²⁸⁾라고 전했다. 그리고 같은 날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휴전협상에서의 귀하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오늘 김일성 동지도 귀하의 견해에 동의한다는 소식을 평양으로부터 들었다”²⁹⁾는 전문을 보냈다. 이것으로 북한과 중국 간의 송환 대상 포로 문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된 듯 했다.

하지만 이견은 해소된 것이 아니었다. 8월 20일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저우언

26) АПРФ, ф.45, оп.1, д.343, л.72.

27) АПРФ, ф.45, оп.1, д.343, л.74.

28) АПРФ, ф.45, оп.1, д.343, л.66.

29) АПРФ, ф.45, оп.1, д.343, л.69.

라이(周恩來)의 회답이 있었다. 회답의 주목적은 중국의 제1차5개년계획, 중국에 대한 소련의 군사장비 이전 등이었다. 이 회답에서 저우언라이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스탈린이 ... 마오쩌둥은 포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양보할 생각인지 아니면 자신의 주장을 견지할 것인지 질문한다.

저우언라이가 이 문제에 대한 조선 동지들과의 견해차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미국 측은 8,300명의 포로 송환에 동의했고, 조선 측은 이 제안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 측이 교활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8,300명 중에서 중국인이 6,400명이고, 나머지가 조선인이다. 미국 측은 13,600명의 중국지원군을 더 송환해야 함에도, 미국 측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조선인 7,6000명의 송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중국 측과 조선 측을 이간질하는 선동적 게임을 하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스탈린이 조선인 전쟁포로가 몇 명인지 묻는다.

저우언라이가 96,600명이라고 대답한다. 송환대상 조선인 및 중국인 포로 수는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중국정부는 중국인 20,000명을 포함한 포로 116,000명 전원의 송환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스탈린은 그것이 옳다고 말한다.

저우언라이가 마오쩌둥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성된 상황을 분석하면서 포로 전원의 송환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선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송환포로 수보다 매일 발생하는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 중단은 미국에게 불리하다. 마오쩌둥은 ... 전쟁 지속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스탈린은 마오쩌둥이 옳다고 말한다.³⁰⁾

이 대화를 통해 북한 측은 7월 16일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미국 측의 포로송환 제안에 대한 마오쩌둥의 견해에 동의한다는 전문을 보냈음에도, 실제로는 마오쩌둥의 견해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회담 석상에서 저우언라이는 김일성과 평덕화이(彭德懷)를 모스크바로 초청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스탈린은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³¹⁾ 이에 따라 김일성, 박헌영, 평덕화이를 포함한 8

30) АПРФ, ф.45, оп.1, д.329, лл.65-66.

31) АПРФ, ф.45, оп.1, д.329, л.71.

명³²⁾이 모스크바로 향했으며, 9월 4일 김일성, 평더화이와 스탈린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물론 이 회담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이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탈린 : ... 미국 측과의 회담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와 관련하여 조선과 중국 측에 일정한 이견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김일성 : 내 생각에는 근본적인 이견은 없다. 우리는 중국 동지들이 제기한 방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조선인민들이 겪고 있는 힘겨운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조속한 휴전협정 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 동지들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³³⁾

김일성은 북한과 중국 사이에 근본적인 이견이 없다고 대답했지만, 북한이 처한 힘겨운 상황 때문에 조속한 휴전협정 체결을 원한다는 말을 통해 양국 사이에 사실상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토로했던 것이다.

포로 송환과 관련한 북한과 중국의 이와 같은 이견 역시 북한과 중국 각자의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8월 20일 스탈린과 저우언라이 회담 시 저우언라이는 “조선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송환포로 수보다 매일 발생하는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고, 9월 4일 김일성, 평더화이와 스탈린 회담 시 김일성은 “조선인민들이 겪고 있는 힘겨운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조속한 휴전협정 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포로송환 협상에서 전원교환, 일괄송환이라는 애초의 공산 측 원칙과는 달리 미국 측의 자원송환 원칙이 점차 우세해지는 상황에서 북한 측은 위신의 추락을 경험했을 터였다. 하지만 송환포로 수보다 미군의 공중과 해상에서의 폭격 및 포격으로 인해 매일 발생하는 인적 손실이 더 크고, 국토와 산업시설이 황폐화되는 상황에 처한 북한 측 입장에서는 휴전협상의 마지막 단계인 포로송환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서 전쟁을 중지하는 것이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했다. 요컨대 북한 측은 포로송환 문제와 관련하여 전쟁의 지속을 통해 적을 압박해서 적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는 ‘명예로운 휴전’보다는 조속한 종전을 통해 물적 인적 자원의 보존이라는 현실적 이익을 취하는 ‘실리적 휴전’을 원했던 것이다.

32) АПРФ, ф.45, оп.1, д.343, л.89.

33) ‘1952년 9월 4일 스탈린과 김일성, 평더화이의 대담 기록’, 출처불명.

반면 중국의 경우는 달랐다. 중국은 휴전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포로송환 협상에서 불거진 송환 희망 중국인 포로와 송환 거부 중국인 포로 숫자상의 심각한 격차는 중국 측으로 하여금 전쟁의 지속을 통한 ‘명예로운 휴전’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격차는 작게는 중국과 대만, 크게는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간의 체제경쟁에서 전자(前者)가 열세에 있음을 보여주는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중국 측에게 이 문제는 군사적 경제적 실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핵심적 이익인 정치적 위신의 문제이자 이데올로기적 우열의 문제였던 것이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휴전협상은 전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인 동시에 전후체제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현재 이익과 함께 장래의 이익까지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협상에 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전쟁의 휴전협상은 애초부터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 운명을 안고 있었다. 우선, 전쟁이 어느 일방의 완전한 승리로 종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당연히 교전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더해 다수의 국가가 참전했으므로 동일 진영 내부의 이해관계 조정 역시 큰 난관이었다. 물론 유엔 측은 미국이 한국과 여타 유엔 참전국들의 의지를 배제하고 사실상 미국의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진영 내부의 이해관계 조정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산 측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소련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졌고, 중국이 협상전략을 수립했으며, 북한 측이 협상 실무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직적 위계구조가 형성되었던 것과는 별도로 3국 지도자 간에 긴밀한 대화 채널이 유지되었고, 그 채널을 통해 협상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협의가 진행되고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긴밀한 관계는 필연적으로 3국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한 이견과 갈등을 불러왔다.

이견과 갈등의 대상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랐다. 1951년 6월 교전 양측이 휴전을 모색하던 시기 공산 측 내부의 이견은 휴전의 필요성을 인식한 중국과 전쟁의 지속을 원하던 북한 사이에 있었다. 하지만 1950년 10월 중국군 참전 이래 사

실상 전쟁의 주체가 된 중국의 의지가 자신의 영토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역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의 의지에 의해 포기될 리는 만무했다. 게다가 북한의 마지막 희망인 소련 측마저도 휴전협상에 동의함에 따라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해결되었다.

한편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군사분계선 문제와 포로송환 문제에서 양측 사이에 또 다시 이견과 갈등이 불거졌다. 군사분계선으로 38도선을 고수하려는 북한 측과 이 문제에서 미국 측에 일정한 양보를 해서라도 조속한 휴전을 달성하려는 중국 측 사이의 이 갈등은 북한 측이 중국 측의 손을 들어 준 소련 측의 의사까지도 거스르는 행동을 한 후에야 중국 측이 의도한 바대로 결정되었다. 송환포로 문제에서는 군사분계선 문제 때와는 정반대의 갈등이 있었다. 북한 측은 미국 측 제안을 받아들여서라도 휴전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자 했지만, 중국 측은 전쟁을 지속해서라도 자신의 의지를 고수하고자 했다. 이 문제 역시 소련 측이 가세하여 중국 측 견해를 지지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상과 같이 휴전협상 시 공산 3국의 견해는 전쟁의 지속 혹은 중단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각각의 개별 사안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동료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작동하지 않는 정전협정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소천한국학센터 소장

I. 들어가며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0년이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에 의해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중국을 포함한 공산군에 의한 정전협정으로 전투행위를 마무리했다. 이후에도 남과 북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지속되었고, 몇 차례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60년 동안 더 이상 제2의 한국전쟁은 발발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6년 10월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중요한 제안을 했다. 만약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끝낸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낼 용의가 있다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엄연히 정전협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단 말인가? 부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정전협정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면 왜 체결한 것인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기 미국의 대북정책을 포함하여 대테러전쟁의 명분하에 진행된 일방적인 대외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다. 정전협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강조는 필자)

위의 전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정전협정은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최후적인

평화'를 달성할 때까지 적대행위를 정지하기 위한 조약인 것이다. 상호 간의 전투 행위는 정전협정을 통해 정지될 수 있지만, 이것이 완전한 평화를 위한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정전협정은 전쟁의 완전한 종결을 위해 협정이 조인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치회담을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항에 근거하여 1954년 제네바 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제네바 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종결되었으며, 이후 55년이 넘도록 더 이상 정치회담을 개최되지 못했다.

그리고 전쟁 발발로부터 정확히 60년이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고, 정전협정을 체결로부터 60년이 지난 2013년 초 한반도에서 안보 위기가 고조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고가 북한의 공격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응징'과 '보복'의 필요성을 반복해서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보복행위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법적 견해마저도 출되고 있다.

도대체 이러한 양자 간의 대립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정전협정은 위의 전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상호 간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안함과 같은 사태가 발생해야 하는가? 정전협정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II. 더 이상의 충돌을 막기 위한 조항들

정전협정의 기본적인 목적이 더 이상의 적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남과 북이 실질적인 무기 증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를 조사하고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2조의 13-d 항이다.

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항은 한반도의 외부로부터 더 발전된 무기들이 반입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내에서 긴장의 고조를 막기 위한 근본적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정전협정 내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비밀리에 들어오는 군사기술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무기도입을 막음으로써 군비 증강에 의한 긴장을 막고, 외부로부터의 무기 반입에 의한 전면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정전협정은 13-d 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를 감시하기 위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군과 공산군 측 합의에 의해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가 참여하기로 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42항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바, 13-d 항에 대한 감시와 보고를 가장 중요한 활동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¹⁾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남북이 공히 13-d 항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중립국시찰단(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 NNIT)을 설치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립국 시찰 소조는 4개 중립국에서 파견된 인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국제연합군(이하 ‘유엔군’으로 약칭) 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각기 다섯 개 항구에서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무기를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정전협정의 43항은 다음과 같이 출입 항구를 규정했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 인천, 대구, 부산, 강릉, 군산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 신의주, 청진, 홍남, 만포, 신안주

당시로서는 남과 북의 주요한 항구들로서 외부로부터의 무기 반입을 감시하기에 가장 적절한 지역이었다. 물론 이 조항 내에 공항의 감시가 빠져 있고, 5개 외의

1) 그런데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감시와 관련하여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特點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왜 이런 단서가 붙었는가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냉전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군사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항구를 통해 반입되는 무기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시찰소조의 설치가 외부로부터의 무기 증강을 막는 확실한 내용은 될 수 없다.

물론 후술하듯이 공항을 통한 더 나은 성능의 무기 반입이 결국 문제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에 공히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한국전쟁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파견된 인원들이 배치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무기 증강을 막는다는 상징적이면서도, 국제적인 장치가 될 수 있었다.

한편,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의 위반 사항을 논의하고 조사할 최고 기구로서 군사정전위원회의 설립 역시 협정 내에 규정되어 있다. 20항에는 유엔군과 공산군이 파견한 5명씩의 대표로 구성된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최고위 기구로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전달받고, 이를 각각의 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최고위 논의 기구인 만큼 5명 중 3명은 중장 이상의 계급으로, 나머지 2명은 소장에서 대령 사이의 계급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전협정에서 군사정전위원회가 중요하다는 것은 1991년 남과 북의 총리가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 때에도 제5조에서 ‘남과 북은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다룰 수 있는 남과 북, 공산군과 유엔군 사이에서의 유일한 기구라는 사실이다.²⁾

군사정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조사 기능이다.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사정전위원회는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요청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및 국제연합군의 행정권고 통제권이 미치고 있는 어떤 지역에서든지 정전협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정전협정 13조 d 항의 내용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시찰소조, 그리고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 기구로서 군사정전위원회의 존재는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군사적 충돌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장치로서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립국뿐만 아니라 국제연합군과 공산군 측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장교가 참여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정

2) 1991년까지 군사정전위원회는 미군과 북한군의 대표 아래에 한국군, 영국군, 중국군의 대표가 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전을 국제적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된다고 할 수 있다.³⁾

III. 충돌 저지 및 조사/협의를 위한 조항들의 무효화

1) 13조 d-항의 무효화와 핵무기 배치

1957년 6월 21일 군사정전위원회의 유엔군 측 대표 리젠버그는 돌연 정전협정 13-d 항의 무효를 선언했다.⁴⁾ 무효선언의 빌미를 준 것은 북한의 13-d 항 위반 문제였다. 1954년 2월 11일에는 중립국 감시위원단에서 항공기의 북한 반입을 조사 보고하였으며, 한국정부는 월남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300대의 미그기가 북한에 불법으로 반입되었고 소련군 3000여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것은 명백한 ‘휴전협정’의 조항, 특히 13조 (d)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⁵⁾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에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하였지만, 공산군 측은 증거가 없는 사안이라고 이에 대해 반박했다.

결국 유엔군 사령관은 공항을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13-d 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의 각각 5개 항구에 설치되어 있었던 중립국시찰 소조 역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3-d 항의 무효화는 정전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의 하나가 무효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중립국 시찰소조를 규정한 조항 역시 자동적으로 인공위성이나 항공 사진을 통한 증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뿐 아니라 현재로서는 누가의 주장이 진실인가를 판명할 수는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공산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군의 핵심 전력이었던 미군 측에서 13-d 항의 폐기를 정전협정 직후부터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군사비를 감축한다는 뉴룩(New Look) 정책 하에서 정전협정 체결 직후부터 추진한 주한미군의 감축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미국이 유지비를 부

3) 실제로 군사정전위원회는 푸에블로호 사건,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등 한반도에서의 긴급한 위기 상황 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중요한 논의 창구로 이용되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정전위원회는 양국 사이에 안보적 문제를 논의하는 거의 유일한 공식 창구였으며, 한반도에서의 안보위기가 전면적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

4) Editorial Note, FRUS 1955-1957, Vol. XXIII, part 2, , pp.460-461; 조선일보 1957년 6월 22일자

5) 조선일보, 1955년 9월 7일자

담하고 있는 한국군의 감축을 통해 미 행정부의 재정적자를 축소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군사력의 감축이 한반도 내에서 군사력의 불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였다.⁶⁾ 왜냐하면 북한에는 1958년까지 중국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군대 규모의 축소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불균형을 더 좋은 성능의 무기 도입을 통해 보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그 대체 무기로서 핵무기를 고려하게 된다. 핵무기를 주로 하는 군사전략의 수립은 덜레스 국무장관의 대량보복 전략(mass retaliation strategy)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핵 전력의 보강을 통해 군대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인건비의 절약을 통해 군사비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⁷⁾

결국 유엔군 사령관은 한국 정부에 의해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로 구성된 중립국시찰소조가 남측 항구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주미 스위스, 스웨덴 대사를 불러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시찰단의 철수를 종용했다. 그리고 13-d 항의 무효선언으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아 남한에 핵탄두를 달 수 있는 어네스트 존(Honest John) 미사일과 280mm 원자포를 보유하고 있는 100 포병대대와 633포병대대를 공개적으로 배치하였다.⁸⁾

물론 중립국시찰단이 무력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이후에도 남과 북에 존재했다. 그러나 북한이 1993년과 1995년 각각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대표단을 철수시키면서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⁹⁾ 이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에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양국이 남한과 수교를 맺으면서 취해진 조치였다.¹⁰⁾ 지금도 남쪽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이 그대로 있지만, 북한 측에서는 사무실을 폐쇄한 상태이다.

2) 군사정전위원회의 무력화

또 다른 문제는 1991년 이후 발생했다. 남북 총리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하고 유엔군은 군사정전위원회의 대표를 미군 장성에서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

6) 이상 박태균, 2006《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 제3편 4장 참조.

7) John L. Gaddis, Strategy of Containment

8) ‘한국에 원자무기 수도입’, 조선일보 1958년 1월 29일자; ‘280밀리 원자포 보유: 한미양군 당국서 공식발표’, 조선일보 1958년 1월 30일자

9) ‘북측 철수로 정전감시체제 약화’, 국민일보 2000년 6월 9일자; ‘북, 중감위 사무실 폐쇄’, 동아일보 1995년 5월 4일자; ‘북, 파 축출 공식발표’, 경향신문 1995년 3월 2일

10) 1991년 남한과의 수교 시 폴란드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중립국 감독위원단을 더 이상 존속시킬 의미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중립국감독위 해체와 정전체제’, 한겨레신문 1991년 6월 23일자. 따라서 중립국 감독위원단에서 폴란드의 철수는 북한의 요구와 함께 폴란드 정부의 입장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였다.¹¹⁾ 1991년 3월 미군이 맡아온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에 한국군의 황원탁소장이 임명된 것이다. 북한은 유엔군 측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반발했다. 북한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고, 한국군 책임자가 정전협정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반도 내에서의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비롯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관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¹²⁾

노동신문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논설을 발표하였다.¹³⁾

3월 25일 유엔군 측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남조선괴뢰군 장성을 군사정전위원회 자기측 수석위원으로 임명한다는 이른바 신임장을 우리측에 넘기려 하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었다.

이는 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위반행위로 된다. (중략)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들은 정전협정체결 쌍방인 조중 측과 유엔군 측에 국한되어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현실을 놓고 볼 때도 남조선군의 작전지휘권이 의연히 미국의 손에 쥐여 있으며 군사정전위원회 쌍방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도 미국이 담당 처리하고 있다. (중략)

1953년 7월 15일 미국은 남조선 무력이 정전협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을 우리측에 담보하였다. 바로 이 담보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미국은 남조선괴뢰군장성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장에 데리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유엔군 측 대표는 미국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유엔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전협정에 사인을 하지 않은 한국군이 협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미국이 약속한 이상 정전협정을 위한 논의의

11) 군사정전위원회의 대표를 왜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했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시기가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Ground Forces Review: GPR)를 위한 정책의 초기 단계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주한미군의 감축 및 역할 변화, 그리고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전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물론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있어서 남한을 따돌리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선호했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역시 북미 간의 양자 대화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역시 남한 정부를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이러한 소외 과정이 당시 클린턴 정부와 김영삼정부사이대북정책차이에기인한것이기도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전협정 이후 푸에블로 사건과 같은 중요한 사건들을 북미 직접 대화에 의해 처리해 왔던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13) 한응호, '정전협정 위반자의 황당한 귀변', 노동신문 1991년 4월 6일자

대표는 미군 장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마비되었다.¹⁴⁾ 1991년까지 군사정전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어느 한 쪽이 소집을 제의할 경우 상대방은 이를 이의 없이 받아들이거나 수정 제의할 수 있을 뿐이며 의제가 마땅치 않을 경우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회의 도중 일방적으로 자리를 뜬 적은 있지만 회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불참한 예는 없다.

유엔군사령부는 1992년 5월 22일 철원 북방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투사건과 관련해서 군사정전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5월 29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460차 군사정전위원회에 북한 측은 아무런 응답도 없이 불참하였다.¹⁵⁾ 이로 인해 1953년 이후 38년 간 459차에 걸쳐 개최되었던 군사정전위원회는 더 이상 개최되지 않았다.¹⁶⁾

여기에 더해 중국군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하였다. 1994년 9월 1일 중국 정부는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¹⁷⁾ 이 결정은 동년 8월 30일 중국을 방문한 북한 외교부 부부장 송호경과 중국외교부부부장당가선사이의 합의로 결정되었다. 중국 정부에 의하면 북한이 중국에 이를 요구했고, 중국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점 때문에 북한의 요청을 수용했다.¹⁸⁾ 이에 따라 중국은 1994년 12월 15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를 완료했다.¹⁹⁾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 내 중국대표 철수 직후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를 새로 설치했다.²⁰⁾ 그리고 미국 측에 북미 간의 장성급 회담을 통해 군사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북미 간의 직접 대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중국은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한 장성급 회담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²¹⁾

14) 북한이 정식으로 군사정전위원회에서의 철수를 선언한 것은 1994년 5월이었다. ‘북 군사정전위 철수 선언’, 경향신문 1994년 5월 3일자

15) ‘군사정전위 사실상 마비’, 경향신문 1992년 5월 30일

16) 북한은 1991년 2월 13일 열린 제45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회의소집 제안을 하지 않았으며 1992년 5월 15일 한국육군항공대 헬기 4대가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을 넘어간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회의소집을 요구하지 않았었다. 이로써 군사정전위원회는 1986년 5월 29일부터 1987년 4월 3일까지 307일 간의 휴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17) ‘중, 군사정전위서 철수’, 경향신문 1994년 9월 3일자

18)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국민관인 조어대에서 송부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정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며 관계당사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와 같은 기사.

19) ‘중 정전위 철수 완료’, 경향신문 1994년 12월 16일자

20) 북한 정전위 일방 철수, 동아일보 1994년 5월 3일자; 북 군사정전위 대체 판문점 대표부 설치, 경향신문 1994년 5월 22일자

21) ‘북, 미 독대 구도 중서 엄호’, 경향신문 1994년 9월 3일자. 그런데 중국은 단지 북미 간의 회담

그런데 문제는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장성급 회담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94년 12월 17일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정찰 중 이던 미8군 제17항공여단 소속 OH58헬기 1대가 경계선을 넘어가 비무장지대 북방 5km 지점(향로봉 서북방 10km)에 불시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헬기에는 2인(정 부조정사인 홀 준위와 하일먼 준위)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고, 이 중 1인은 사망하고 1인은 억류되었다.²²⁾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양자간의 군사협의를 시작되었다. 협의는 신속하게 진척되어 북한은 2주일 만에 미군 헬기조종사의 송환을 결정하였다. 조종사 송환을 위해 토머스 허바드 미 국무부 부차관보 일행이 판문점을 통해 12월 28일 북한에 파견했다. 아울러 북한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미국 측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판문점에서 조미 사이에 군부접촉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측 요구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²³⁾

이후 군사정전위원회와 장성급 회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남한 정부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었다.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를 계속 무력화하면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모색했다.²⁴⁾ 1995년 4월 미군은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를 미군 장성으로 교체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²⁵⁾ 이 결정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엔사는 북한에 장성급 회담을 제의했고,²⁶⁾ 이에 대해 한국의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하였다.²⁷⁾

그러나 유엔사 측은 황원탁소장이군정위유엔사측의수석대표로계속남아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 한편 유엔사는 이날 정전위 미군측 대표로 에디슨 와킨스 3세 해군 준장 대신 넬슨 러닝 공군소장을 임명했다. 이후 북한은 1996년 4월 4일 정전협정 준수 의무를 포기한다고 선언하였고, 1998년 6월 강릉 잠수정 침투사건 이후 북한과 유엔사령부 사이의 장성급 회담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만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1996년 이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위해 북미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남한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도 적극 추진하였다. 장성급 회담에 대한 중국의 지지는 평화회담 및 4자회담 추진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 ‘북한 ‘미 헬기 격추’, 경향신문 1994년 12월 18일자

23) ‘북미 군사협의 직통채널 개설’, 경향신문 1994년 12월 31일자

24) ‘대미 군사채널 모색 북 장성급회담 제의’, 경향신문 1995년 3월 2일자

25) ‘정전위 대표 미 장성으로’, 경향신문 1995년 4월 24일자

26) ‘정전위 변질 수순 촉각’, 경향신문 1995년 5월 23일자. 이 기사에 따르면 유엔사가 19일 북한에 ‘장성급 회담’을 제의. 정전위 틀 내에서의 장성급 접촉을 제안하였으며, 대표단은 수석대표가 빠지고 한, 미, 영, 캐나다 장성 1명씩으로 구성되며 미군 대표는 스미스 소장이 맡기로 했다고 한다.

27) ‘군사대화 채널 유지 교육책’, 경향신문 1995년 5월 21일자

장성급 회담이 열린 이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는 더 이상 개최되지 않았다. 북한군과 중국군의 대표가 철수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군사정전위원회는 그 효용성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회담에는 미국 영국 한국 등에서 장성급 4명, 북한에서 장성급 3명이 참석해 군사충돌 등의 현안을 다루고 있다. 1995년 3월 3일과 5월 3일 군사정전위원회의 비서장 회의(대령급)가 개최된 이후²⁸⁾ 2000년 6.15 정상 회담 직후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조성태 국방부장관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간에 서신이 상호교환 되면서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이 일부 복원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²⁹⁾ 이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오히려 북한은 2000년 11월 호주와 영국에게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엔군 측의 합의 사항 위반에 의해 군사정전위원회 자체가 무력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⁰⁾

정전협정 상에는 34항에서 ‘문건철을 두벌 보관’하고, ‘최후 해산 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번씩 나누어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어떤 상황에서 군사정전위원회가 해산하는가에 대해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지 문맥상 볼 때 정치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완전한 평화체제의 성립이 이루어질 때 군사정전위원회가 해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결국 1953년 조인된 정전협정은 1950년대 중반 그리고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조항이 무효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전체 조항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 두 조항이 양 측 사이의 적대행위를 막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국제화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정전협정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IV. 정전협정 자체의 문제

정전협정이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이 문제는 1999년 이후 서해에서 몇 차례에 걸쳐 남북 해군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남북 간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바다 위의 충돌은 단순한 몇 차례 상호 충격에 그친 비무장지대에서의 충돌과는 차원이 달랐다. 양 측이 한 차례 맞붙으면 해군 함정이 침몰하고 많은 군인들이 다치거나 죽는 대형 사태로 발전

28) ‘파 대표철수 공식 항의, 정전위 대령급 접촉서’, 1995년 3월 3일; ‘북 정전위 비서장회의 오늘 판문점 개최 제의’, 경향신문 1995년 5월 3일자

29) ‘군사정전위원회 채널 가동’ 한국일보 2000년 9월 16일

30) ‘북, 호 영 등에 정전위 철수 요구,’ 한국일보 2000년 11월 28일자

되었다. 1999년의 서해 교전은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2002년에 있었던 서해교전은 남한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일어나 그 충격이 더 컸다.

이러한 서해상의 문제는 정전협정이 근본적으로 바다 위의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핵무기로 위협하면서까지 정전협정을 빨리 체결하고자 했고, 북한과 중국도 스탈린 사후 한반도에서 전투행위 종식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체결 후 합의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이었다. 정전협정 내에서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에 대한 조항은 2조의 13-b 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13조 b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道界線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島嶼중에서 白翎島(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大靑島(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小靑島(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延坪島(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隅島(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島嶼群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이 조항 외에 따로 설정된 바다 위의 군사분계선은 없었고, 유엔군사령관은 1953년 8월 30일 공산군 측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³¹⁾ 북한은 이 선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지만, 1968년 남한 정부에 의해 어로저지선이 발효되었을 때에도 따로 새로운 바다 위의 군사분계선을 긋지 않았다.³²⁾

그러던 중 1973년 경부터 북한은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제법에 따라 새로운 바다 위의 군사분계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시작했다. 아래의 1980년대 초 신문기사는 그간의 사정을 잘 보여준다.

31) 북방한계선(North Limited Line)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고려하는 것 역시 흥미로운 일이다. 유엔군에서 북방한계선을 설정한 것은 북한 측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보다는 남한 측에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 의미가 더 크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한계선이라는 뜻이다. 이는 1953년 반공포로 석방을 둘러싸고 한미간의 대립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승만정부가단독으로어떤행동을하지못하도록하기위한조치의하나였던것으로보인다.

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07693>

북괴는 지난 55년 이후 30차례에 걸쳐 이들 지역에 대한 도발을 감행해 왔으나 이번처럼 미그기를 동원, 우리의 영공을 침공한 적은 없었다. 북괴는 지난 55년 5월 10일 조기잡이하던 우리 선단을 습격, 1척은 침몰, 4척은 실종시킨 것을 시작으로 74년까지 주로 어선을 납치하거나 북괴함정으로 하여금 우리 영해를 침범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75년부터는 북괴 미그기가 서해 5도의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75년 3월 24일에는 미그기로 추정되는 북괴기 30대가 대거 백령도 상공을 위협했었다. 그러나 최근 수년 간은 별다른 도발행위가 없었다가 이번에 다시 기습 침공을 자행한 것이다. (중략)

73년 12월 1일 제346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당시 북괴 수석대표였던 김풍섭은 “백령도 등 5개 도서가 유엔군 관할하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도서 주변해역은 북괴의 영해”라고 억지를 부리고 이 도서에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북괴의 사전 승인과 검문검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유엔측 수석대표인 토머스 H 그리어 소장은 섬 주변해역이 북괴의 영토라는 것은 휴전협정을 비롯한 어떠한 규정에도 없다고 반박했고 국방부 당국자도 북괴의 이러한 주장은 휴전협정과 국제법을 무시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북괴는 또 지난 77년 8월 1일 국제법상 유례없는 소위 ‘해상군사경계선’을 설정, 동해 50해리, 서해 200해리 내의 수역에서 외국인, 외국군함, 외국군용기의 활동을 금지하고 민간선박(어선 제외) 민간기는 그들과 사전 합의 또는 승인 아래서만 군사경계선 안에서의 행동이 허용된다고 일방적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해에 긴장이 고조되고 여객선 황진호와 용진호는 우리 함정의 보호 속에 운항하기도 했다.³³⁾

묵시적으로 지켜오던 북방한계선에 대해 1973년 북한이 왜 갑자기 문제를 제기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³⁴⁾ 단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시기가 미국과 한국이 베트남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던 시기였다는 상황적 추측과, 북한의 해군력 및 공군력이 증강된 시기였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다.

해상 군사분계선 문제는 북한 측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33) ‘북괴의 서해 5도 군사침공의 배경’, 경향신문 1981년 8월 21일자

34) 경향신문 1975년 7월 26일자에 의하면, 북한은 1973년 12월 1일 정전위 346차 본회의서 북괴 서해5개도서수역영해 주장했다고 한다.

예컨대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인 1967년 11월부터 북한의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에서 소위 ‘미국의 간첩선’들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는 기사를 두 번 볼 수 있으며,³⁵⁾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에는 미국의 간첩선 문제가 신문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 간의 충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보도는 비밀비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1977년 북한은 다시 한번 해상군사경계선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다.³⁶⁾

평양방송에 따르면 동해는 50마일, 서해는 2백마일의 수역을 해상군사경계선으로 하여 이 수역 내에서 외국의 군용함선 항공기의 군사적 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민간의 출입은 북괴 당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동년 8월 북한을 방문한 일본인들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³⁷⁾ 북한을 방문한 일본인들에 의하면 북한은 ‘인접국가들이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그들도 200 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과 북의 해상 군사분계선 문제는 어선들의 군사분계선 침범 문제를 제외하고는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기본합의서 2장(불가침)의 부속합의서 제10조에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 the areas that have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each side until the present time)으로 한다”라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서해에서의 남과 북의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이라는 표현이 애매하다. 서로가 관할하여 온 구역을 서로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 합의는 ‘합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가 남한의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합의서가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남한에서의 헌법적 판단이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의 2장 부속합의서 10조를 내세워서 서해에서의 군사분계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은 1999년 9월 자신들 나름의 바다 위의 군사분계선을 다시 설정했다. 그리고 이후 수차례에 남북 간의 교전이 발생하고

35) ‘미제 침략군이 또다시 공화국 북반부 연해에 간첩선들을 침입시켜 도발을 감행’, 노동신문 1967년 11월 12일자; ‘미제침략군이 또 다시 동해안 우리 측 연해에서 도발행동을 감행’, 민주조선 1968년 1월 12일자

36) ‘북괴, 해상군사경계선 설정’, 동아일보 1977년 8월 1일자

37) ‘해상의 경계선 타국 승인 불요. 북한서 주장’, 경향신문 1977년 8월 31일자

있다.

정전협정이 처음부터 규정하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는 한반도에서 외국군의 철수와 관련된 문제이다.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안보위기를 막고,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군의 주둔으로 인한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를 막아야 한다.³⁸⁾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은 모두 정전협정 체결 이후 외국군대가 철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정전협정문 내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외국군의 주둔이 한편으로는 안보딜레마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과 북에 의한 치명적인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는 1958년 북한에서 철수한 중국군과는 달리 현재까지도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였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1953년 6월 18일 이승만대통령의갑작스러운반공포로석방지시, 1961년 5.16 쿠데타, 1979년 12.12 쿠데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던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즉, 한국군이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으로부터 마음대로 벗어나 북한에 대해 선제 공격을 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돕기 어렵다는 것이 미국의 공식적 입장이었다.³⁹⁾ 물론 미군의 주둔이 근본적으로 북한의 공격적 전략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⁴⁰⁾

이렇게 본다면 외국군 주둔의 문제를 정전협정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역설적이게도 불안정한, 그리고 핵심적 조항들이 무효화되어 있는 정전체제 하의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준 가장 중요한 기제가 된다.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 의한 도발까지도 막는 역할을 했으니까.

38) 북한이 1950년대부터 핵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 문제가 전술한 바와 같이 1958년 주한미군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부대들이 배치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핵무기 보유는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군에 의한 고려에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이 장기간에 걸친 안보 딜레마의 과정을 보여준다.

39) 이 문제는 1968년 2월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의 특사로 방문한 사이러스 밴스 사이의 협의 속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이러스 밴스는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모종의 보복 조치를 막기 위하여 방한하였고, 그는 박정희 정부 주요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은 피해자여야만 하며, 그럴 때에만 미국이 도와줄 수 있다'는 말로 이들을 설득하고자 했다.

40) 앞으로 좀 더 치밀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1975년 남베트남 정부가 몰락하기 직전 김일성이 북경을 방문했다. 무엇을 위한 방문이었는지, 또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는 현재까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상황을 통해 추측컨대 남베트남 패망을 계기로 해서 군사적 수단에 의한 한국에서의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만약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가 이에 대해 반대하였다면, 이는 1949년 봄 스탈린이 김일성의 계획에 대해 반대했던 것처럼 주한미군의 존재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박태균, 2013 《사건으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34-239쪽 참조.

그러나 정전체제 하에서 외국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전협정의 전문에서 말하고 있는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끊임없이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 북한이나 중국이 남북관계가 호전된 이후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에서의 세력 균형을 위하여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성 발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 외국군에 의해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미군이 아니라 한국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가의 군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중립국감독위원단을 둔 배경이기도 하다.

V. 불안정한 상황을 해결할 해법

전술한 바와 같이 정전협정의 중요한 조항들은 이미 무효화된 상태이다.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최고위 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전체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일방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 측에서 이를 지키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군사정전위원회의 대표를 철수시킨 상황이다. 여기에 더하여 정전협정은 그 자체로서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할 권한은 있지만, 이를 처벌하고 배상할 권한이 없다는 것 역시 근본적 한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근에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것은 정전협정을 복원하거나 아니면 6자회담을 한반도에 대한 안보를 논의하는 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은 모두 실효성을 갖지 않는다. 정전협정 복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사정전위원회뿐만 아니라 중립국 감독위원단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13조 (d)항을 복원시켜야 한다. 이것이 가능할까?

6자회담은 실질적으로 북한 핵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기구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와 정전협정 문제를 일치시킬 수는 없다. 6자회담은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내는 데에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문제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유엔(주로 미국과 남한)과 공산군측(북한과 중국)이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결자해지이다. 유엔이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유엔이 당사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의 대체자나 중재자가 될 수 없다.

결국 이 문제는 4자회담으로 가야 한다. 이는 1970년대 교차 승인론이 나온 이

후 지금까지도 논의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이를 통해서 정전협정의 효력을 증지시킬 수 있는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책 (final peaceful settlement)가 나와야 한다. 이것이 정전협정의 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이며, 이 해결책을 통해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미 외교 관계가 수립된 남한과 중국 외에 미국과 북한의 수료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과 남한이 함께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 한반도에서의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 체결 60년이 된 오늘 동북아 국가들이 함께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미션이 아닐까?

6·25전쟁에 대한 국내 연구의 회고와 전망:

‘전쟁종합사료관’(Korean War Archives and Research Network) 구축을 위해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I. 들어가는 말: 명칭의 문제

1953년 7월 전쟁의 포화가 멎은 지 햇수로 벌써 60년이 되었다. 전쟁 후에 태어난 전후세대가 인구의 절반을 훨씬 넘어서 전쟁을 체험이 아닌 ‘역사’로 바라 볼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 이제 전쟁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적 거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간의 연구를 정리하는 작업은 의미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의 과제를 추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이 논문의 논제 첫 머리에서 ‘6·25전쟁 국내연구동향’으로 할지 아니면 ‘한국전쟁 국내연구동향’으로 할지 정하지 못했던 점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말¹⁾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건의 본질과 내용이 그 용어[언어]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잘 알 수 있다.²⁾ 예를 들어 만약 이 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정의했을 때 우리 학계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렇듯 용어 문제는 매우 뜨거운 이슈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오랫동안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었던 케케묵은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사 정리에 앞서 이 전쟁의 명칭 문제를 우선 논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전쟁’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역사 용어인 ‘6·25전쟁’ 두 명칭이

1) Martin Heidegger, "Brief über den-Humanismus," *Wegmarken. HGA* Bd. 9[하이데거 전집 9권] (Frankfurt am Main, 1976), p. 333. 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s[Language is the house of the Beings.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인간은 그 집에 거주한다. ... 언어 속에서 존재의 드러남이 일어난다. ... 언어의 힘 안에서 인간은 존재의 증인이 된다. ... 인간은 존재의 파수꾼이다." 하이데거 후기 작품인 *A dialogue on Language* (New York: Harper & Row, 1971)에서 인용함. 이 책에는 *Unterwegs zur Sprache[On the Way to Language]* (1959)가 포함되어 있다. 즉 하이데거는 "존재는 언어를 통해 인간에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언어는 인간의 존재를 드러낼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 박명림, "한국전쟁/6·25를 기억하는 방식: 역사용어와 사유체계의 문제," <역사비평>편집위원회, 『역사용어 바로쓰기』(서울: 역사비평사, 2006), pp. 176-196에서는 기억하는 방식에 따라 6·25나 한국전쟁이냐로 달리 쓰인다고 주장된다.

경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 6·25, 6·25사변, 6·25동란 등 다양한 용어들이 1950년 한반도에서 발생한 갈등을 지칭하고 있다. 이 용어들 중 어느 것을 쓸 것인가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여러 논란이 있었다.

1. 전쟁이 아니라 난(亂)이다

1) 임진왜란과 같은 국가가 아닌 임의 단체의 침략?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6·25動亂이라는 표현을 ‘임진왜란’과 유사하게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 그런데 2009년 말에는 이 사건이 전쟁이 아니고 ‘亂’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다시 등장했다. 홍일식 교수는 전쟁이나 戰이라는 말은 정통성 있는 나라끼리 무력으로 다투는 행위를 말한다고 주장했다. 서로가 당당히 선전포고를 하고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선전포고도 없이, 더구나 정통성도 없는 임의 집단이 정통성 있는 국가체제에 도전하는 행위는 ‘전쟁’이라는 이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런 것을 일러 ‘난’(亂)이라 한다고 주장했다. 6·25 발발 당시 ‘한국전란’³⁾ 혹은 ‘6·25사변’이라 불렀는데 줄지에 불법 남침을 당했으니 일단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다. 그 후 1953년 휴전이 되자 그동안의 여러 정황들을 종합 고려한 끝에 ‘6·25 동란’으로 명명(命名)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해서 정부·민간 모두 그렇게 칭해 왔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6·25동란이 적당하며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남조선해방전쟁[북에서는 남조선해방전쟁이 아니라 조국해방전쟁이라 규정하므로 이는 부정확한 평가이다]이라고 부르는 북측의 주장과 논리에 동조·영합하는 것이거나 영어의 ‘war’를 맹목적으로 번역 추종하는 ‘비주체적 망동’이라는 평가이다.⁴⁾ 이렇듯 이전에는 동란, 전란이나 사변으로 불렀다. 그

3) 대한민국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회는 전쟁 발발 이후에 『한국전란지』 1년지 ([부산]: 대한민국국방부, 1951)를 간행했으며 2년지, 3년지, 4년지를 계속 발간했다. 1권 간행시 정훈국장은 이선근 육군준장이었고, 편찬위원장은 이병도였으며 김상기, 이용희, 신도성이 편찬위원이었다. 전란은 亂이라는 의미와 내란이라는 뉘앙스를 암시하고 있는 용어이다.

4) 홍일식, “[시론] 6·25는 ‘전쟁’이 아니다,” 『중앙일보』, 2009년 12월 1일, <http://news.joins.com/article/176/3900176.html?ctg=2001> (검색일 2009년 12월 1일). 한편 북한은 임진왜란을 임진조국전쟁이라고 부른다. 북한 『조선전사』, 제9권 중세편 리조사 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제7장 제목은 “1592-1598년 일본침략자를 반대한 조선인민의 임진조국전쟁”인데 마지막 항이 “임진조국전쟁의 승리와 그 의미”이다. 또한 1998년 임진조국전쟁승리40돐(1598-1998)기념우표를 발행했다. 이렇듯 북에서는 임진조국전쟁이라고 칭하면서 승리했다고 평가한다. 임진왜란이 ‘란(亂)’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남의 견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이화 『한국사, 나는 이렇게 본다』 (서울: 길, 2005); 장학근, 『조선 평화를 짝사랑하다』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8); 백지원, 『조일전쟁』 (서울: 진명출판사, 2009). 이이화 선생은 간지를 사용한 ‘임란’이라는 말 대신 ‘조일전쟁’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구가 아닌 일본이라는 국가가 벌인 전쟁이며 엄연히 국제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전쟁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러나 전쟁이 꼭 주권국가 사이에 벌어져야 할 이유는 없다. 전쟁은 상이한 정치세력(집단) 간의 군사적 갈등까지도 지칭하는 넓은 개념인 것이다.

2) 아직도 쓰이는 6·25사변

한편 1973년 3월 30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6615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는 6.25사변일로 되어 있으며 2003년 11월 27일 대통령령 제18143호로 일부 개정된 동 규정에도 계속 이 명칭이 쓰였으며 2011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23400호로 일부 개정된 규정에도 변함없다(2013년에 6·25전쟁으로 개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변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대한민국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 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이다.⁵⁾ 그런데 남에서는 주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데 비해 북에서는 ‘중대한 일’이라는 의미를 포괄하여 긍정적으로도 쓰인다.⁶⁾ 조선왕조실록의 검색어로 “事變”을 입력하면 원문 기준으로 태조 1년 이래로 1042건이 검색되는 등 많은 용례가 있다.⁷⁾ 중국도 만주사변을 9·18사변으로 호칭하는 등 역사적 사건을 지칭하는 용례가 제법 있다. 또한 일본 군부도 많이 사용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법률제11141호; 2012년 9월 1일 시행) 4조 9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이라고 나온다. 이는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에 대한 규정으로 전쟁의 성격을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제정당시(1984년 8월 2일 법률 제3742호로 제정)부터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79호로 제32차 일부개정 될 때까지(2007년 7월 27일 타법 개정에 의한 법률 제8566호) 6·25사변이라고 규정되었던 것을 고친 것으로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1993년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 1월 법률 제

5) “사변,”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검색일 2009년 6월 16일).

6) 김태훈, “[북녘말] 사변,” 『한겨레』, 2007년 11월 26일, <http://www.hani.co.kr/arti/SERIES/61/252596.html> (검색일 2009년 6월 16일).

7) “事變,”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State=2&mTree=0&clsName=&searchType=a&query_time=%EC%82%AC%EB%B3%80&keyword=%EC%82%AC%EB%B3%80 (검색일 2009년 6월 16일). 그런데 위 링크를 클릭하면 원문 3222건으로 나오는데 이는 한자를 한글로 바꾸어서 검색한 결과이다. 事邊 등 동음이의어를 분간하지 못한 소치이다.

6649호로 개정되면서 개칭된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9년 2월 6일 이 법률 제3장에 ‘단체설립 및 지원’이 신설되면서 2012년 당시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개칭된 상태였다. 제정당시인 1993년 12월 27일(법률 제4658호) 제1조(목적)에서 “이 法은 6·25事變등의 戰鬪 또는 越南戰에 參戰하여 國家를 위하여 獻身하고 轉役(退役 또는 免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退職한 參戰軍人등에 대하여 그 名譽를 宣揚하고, 應分の 禮遇를 함으로써 國民의 愛國精神 함양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전제하여 6·25사변이라는 당시까지의 법률 용어를 답습하고 있다. 같은 법의 제2조(정의) 1항에는 “6·25事變등의 戰鬪”라 함은 1950年 6月 25日부터 1953年 7月 27日까지 사이에 발생한 戰鬪 및 法律 第1260號 軍人年金法 附則 第5項의 規定⁸⁾에 의한 戰鬪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역시 6·25사변으로 되어 있던 것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이 6·25전쟁이라고 쓰면서 전쟁 전후의 전투까지 포괄했다. 이는 전쟁 전후에 참전했던 인사들의 보상 요구에 기인한 것이다.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58호로 전부개정된 위 법률의 제2조(정의) 1항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3년간의 전쟁 이전과 이후의 38선 국경 분쟁, 빨치산 토벌 작전 등을 포괄하고 있어 6·25전쟁을 3년에 국한시키려는 시각과는 대조된다. 별표는 아래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⁹⁾

구 분	번호	지 역 명	기 간
육 군	1	호남 및 영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포함)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8) 본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군인으로서 본법 시행이전에 전투에 종사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2배를 그 전복무기간에 가산한다. 단, 그 기간과 전투에 종사한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BylTextDownload.do?bylSeq=350263&title=%5B%EB%B3%84%ED%91%9C%5D+%EC%A0%9C2%EC%A1%B0%EC%A0%9C1%ED%98%B8%EC%9D%98+%EA%B7%9C%EC%A0%95%EC%97%90+%EC%9D%98%ED%95%9C+%EC%A0%84%ED%88%AC&mode=0> (검색일: 2012년 7월 28일). 이하 법과 규정에 대한 전거는 별도의 출전이 없는 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에 의존했음을 밝힌다.

			1950년 6월 25일까지
육 군	3	용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5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6	6·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7	6·25전쟁 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5월 25일
	8	6·25전쟁 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
해 군	1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 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각 함대 해상전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8월 10일까지
	3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8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4	연합함대 파견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6일까지
공 군	1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3월 31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	용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005년 3월 31일 일부개정(법률 제7485호)되면서 1955년 6월 30일까지로 하한선이 확장되었는데 그에 의거한 별표는 아래와 같다. 2000년의 위 별표에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해병대를 별도로 분류했고 경찰의 공비토벌작전 등이 첨가되었다.

[別 表] <개정 2005. 3. 31>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戰鬪

구 분	번호	지 역 명	기 간
육 군	1	호남 및 영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포함)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	웅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5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6	6·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7	6·25전쟁 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5월 25일
	8	6·25전쟁 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
해 군	1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 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각 함대 해상전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8월 10일까지
	3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8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4	연합함대 파견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6일까지

공 군	1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3월 31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	웅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5	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6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해병대	1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1949년 8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경 찰	1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3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1953년 4월 18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한편 2010년 3월 26일 제정된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시행 2010년 9월 27일] [법률 제10190호] 제2조의 정의에 의하면 6·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은 괄호안의 기간으로 적시되었다. 이 이외에 법률에 6·25가 들어간 것은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 2004년 9월 23일] [법률 제7200호]이 있는데 6·25전쟁이라고 적시되어 있다.¹⁰⁾ 2000년대 들어 법률에서는 모두 6·25전쟁이라는 교과

10) 한편 1988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 1989.1.1] [법률 제4076호]에서 전쟁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면서 6·25전쟁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사업회의 주된 전쟁은 6·25이므로 이를 사변이 아니라 전쟁으로 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서 공식 용어를 쓰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법률용어 면에서는 6·25전쟁이 우세하다.

3) 합의된 명칭의 부재, 그러나 전쟁은 확실하다

이렇게 법령은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한민국 교육 [과학기술]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가 마련한 편수지침에 의거한 교과서 공식용어인 ‘6·25전쟁’으로 정비되었으나¹¹⁾ 학계에서 합의된 명칭은 아직 없다. 과연 갈등 (conflict), 분쟁(dispute, conflict, trouble, strife), 전쟁(war), 난, 동란, 전란, 사변, (불법) 남침 어느 것이 한국 1950년 6·25를 지칭하는 정확한 용어일까? 계량적 국제정치 학자들은 500명 혹은 999명 이상의 인명이 살상되었을 때 전쟁이라고 칭한다고 한다. 이런 계량적이고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6·25는 전쟁임에 확실하다. 그렇다면 전쟁 앞에 6·25를 쓸 것이냐 한국을 쓸 것이냐가 남은 쟁점으로 다가온다.

11)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 - 79호 [별책 7]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7). 그런데 6.25전쟁을 지칭하는 용어는 1954년부터 1990년 5차 교육과정까지 ‘6.25동란’→ ‘6.25사변’→‘6.25남침’→‘6.25전쟁’ 등으로 3차례 바뀌었다. 6·25직후인 1954년부터 1963년(1차 교육과정)까지 초·중·고 역사·사회 교과서에는 6·25가 ‘전쟁’이 아니라 ‘동란(動亂)’으로 표현돼 있다.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남한의 좌익세력이 합세해 난동을 일으켰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일종의 내란설(내전설)이다. 더불어 1차 교육과정에서 6.25를 다룬 서술들은 북한에 대해 ‘괴뢰군’ ‘괴뢰정부’ ‘괴뢰정권’ ‘적화야육’ 등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북한이 남한을 ‘괴뢰패당’ ‘괴뢰군부’라고 부르는 것처럼, 전쟁 직후 정부도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교과서에 그대로 실어 놓은 셈이다. 2차 교육과정(1963~1974)·3차 교육과정(1974~1982) 교과서에는 ‘6·25사변(事變)’으로 돼 있다. 1970년 대한교과서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국사(문교부)와 1980년 국정교과서주식회사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국사(문교부) 등 2·3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 ‘사변’이란 용어가 병력을 사용해 일어난 내부의 다툼이라는 의미가 있어, 폭동과 반란 등을 의미하는 동란과 느낌 상 큰 차이는 없다. 정부는 북한이 먼저 남한을 공격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차 교육과정부터 6.25를 일으킨 북한을 지칭하는 표현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괴뢰군’이라는 표현이 ‘침략 공산군’ 혹은 ‘공산군’으로 교체됐다. 이후 남북대화가 진행되면서 ‘북괴’라는 표현도 차차 사라졌다. 1980년 중·후반 교과서에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6·25남침(南侵)’으로 표현돼 있다. 1986년 발간된 4차 교육과정(1982~1987)의 국사2-하(문교부)가 그 예이다. 1990년에 발간된 5차 교육과정(1987~1992)의 국사-하(교육부)에서부터 6·25전쟁으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현재 6.25를 지칭하는 공식용어는 ‘6.25전쟁’으로 자리 잡았다. ‘6.25전쟁’은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방부가 공식 지정하고 있는 6.25의 명칭이다. 국방부는 1970년 6·25에 대한 전쟁사를 발간하면서 ‘한국전쟁사’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이후 ‘한국전쟁’에 내포된 의미가 정치·이념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2000년에 ‘6·25전쟁사’로 이름을 수정해 발간했다. 목용재, “‘6.25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6.25 동란’이다: ‘동란’은 반란단체 의한 내전 성격을 강조한 용어, 좌파들 주장 ‘한국전쟁’은 북에 의한 남침 희석,” 『데일리안』, 등록 : 2013-06-24 09:13, <http://www.dailian.co.kr/news/view/345424/?sc=naver> (검색일: 2013년 7월 15일); 김진욱, “[자유성] 6·25에 얽힌 용어들,” 『영남일보』, 2013-06-25 07:07:29,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0625.010310705420001> (검색일: 2013년 7월 15일).

2. 6·25전쟁이냐 한국전쟁이냐?

1) 6·25전쟁은 보수진영의 용어라는 진보진영의 흑백논리와 그 비판

이 전쟁의 명칭은 크게 ‘6·25전쟁’이냐 ‘한국전쟁’이냐의 양론으로 집약되어 있다.¹²⁾ 국제학계에서는 ‘Korean War,’ 일본에서는 ‘朝鮮戰爭’이라고 통용되며 한국의 정치학계와 국제정치학계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을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 용어인 6·25전쟁은 공식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도 이 명칭을 통용하고 있다.¹³⁾ 한편 두 용어를 혼합한 ‘6·25한국전쟁’도 있다.¹⁴⁾

김학준 교수는 6·25전쟁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서 상대적으로 어울린다고 주장했다.¹⁵⁾ 서동만 교수의 경우 6·25전쟁이 가장 적합하지는 않지만 한국전쟁은 잘못된 명칭이므로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대한민국의 약칭이기 때문에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무대로 남북이 모두 당사자였던 이 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던 것이다.¹⁶⁾

김명섭 교수도 비슷한 맥락에서 6·25전쟁을 선호했다.¹⁷⁾ 그는 전쟁 발발 시점에서 따온 ‘6·25전쟁’이라는 명칭은 1939년 소련과 핀란드 간 ‘겨울전쟁’처럼 전쟁을 겪은 민중의 경험이 온축되어 있어 가장 객관적인 명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⁸⁾ 당시 민중들은 6·25를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그것이 사변이냐 동란이냐 전쟁이냐는 것은 다음다음 문제였다.

국제학계의 통칭인 Korean War의 직역할 때 우리는 한국전쟁이라하며 북에서는 조선전쟁이라고 하는 등 명칭 면에서 그 齊一性을 기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이므로

12) 박명림, “한국전쟁/6·25를 기억하는 방식: 역사용어와 사유체계의 문제,” <역사비평>편집위원회, 『역사용어 바로쓰기』(서울: 역사비평사, 2006), pp. 176-196.

13) “6.25전쟁50주년,” 『조선일보』, 2000년 4월 20일. 이에 비해 『한겨레』는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을 선호한다.

14) 류재갑 교수의 명명이며 김행자, 『6.25 한국전쟁사』, 1 (동부전선) (서울: 에세이, 2010)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 책에서 6·25 Korean War로 번역되었다. 또한 1989에 대륙연구소에서 간행한 『군과 나: 한국 첫4성장군 白善燁 6·25한국전쟁 회고록』과 이를 재간행한 백선엽, 『군과 나 (6·25 한국전쟁 회고록)』(서울: 시대정신, 2009)에서도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

15) 김학준, “6.25전쟁에 관한 몇 가지 예비적 토론,” 한국전쟁연구회 (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서울: 백산서당, 2000), pp. 26~41.

16)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 p. 53.

17) 김명섭, “아시아·태평양전쟁과 6·25전쟁,” 한국전쟁학회 학술회의 발표문, 2006년 3월 31일, pp. 3-4; 김명섭, “냉전의 종식과 연구의 열전,” 한국전쟁연구회 (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서울: 백산서당, 2000), pp. 1~2.

18) 김명섭, “전쟁 명명(命名)의 정치학: ‘아시아·태평양전쟁’과 ‘6·25전쟁,’”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0집 제2호 (2009년 2월), pp. 71-98.

6·25가 보다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6·25라는 통칭에다가 그 성격을 명시하여 용어를 붙여 사용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역사적 사건을 발생한 날짜 혹은 연도로 지칭(10·26[사건], 4·19)하거나 날짜 혹은 연도를 앞에다 명기하는 식(4·19혁명)은 우리의 전통적 방식이기도 하고 서양에서도 그런 방식(9·11테러; 9/11 attack)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서양에서 전쟁의 명칭을 발발일자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9·11과 같이 개별적인 사건의 경우 일어난 날짜를 명칭으로 사용해 그 날을 기념하기는 한다. 이 경우는 사건이 대개 그날에 끝났으며 6·25처럼 장기화되었던 케이스는 아니다.

또한 진보적 진영에서는 6·25가 보수적 명칭이라고 비판한다. 냉전적 명칭이며 증오와 분단을 내포하는 단세포적 용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양분법·흑백논리에 벗어나는 사례도 많다. 일본 조총련계에서는 6·25전쟁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¹⁹⁾ 또한 북한에서 제작한 대남선전용 매체에서도 대한민국의 통칭인 6.25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²⁰⁾ 한편 2000년 6월 24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났으며 미군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참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2000년 6월 27일 즉각적 담화를 통해 6.25조선전쟁은 미국이 도발한 것이며 이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엄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담화에서 그들이 사용해 오던 ‘조선전쟁’이나 ‘조국해방전쟁’을 ‘6.25조선전쟁’이라고 호칭한 것은 이채롭다.²¹⁾ 이렇듯 북에서도 6·25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 물론 6·25전쟁이라고 직접 호칭하지는 않고 조선전쟁 앞에 6·25를 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

2) 한국전쟁이라는 말의 비주체성과 그 제한성

한국전쟁과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전쟁, 영국전쟁, 미국전쟁이라는 말이 가능한데 남의 나라면 모르되 어느 나라도 자기네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혹은 내전)을 이렇게 남의 나라 전쟁처럼 부르는 용례는 거의 없다.²²⁾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 전

19) “6.25전쟁의 도발자는 누구인가?” 『조국』 (2000년 6월).

20) 『실록 6.25전쟁: 아메리카는 굴복하였다』 ([평양], 1993). 이 책은 평양에서 대남선전용으로 제작해 살포한 것이다. 북한에서 쓰는 책은 자신들의 자료와 중국문헌을 각주로 다는데 비해 이 책은 남한에서 나온 문헌들이 광범위하게 인용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남한을 잘 아는 대남선전기구에서 쓴 것으로 추정된다. 북에서 쓰는 ‘령도’ 대신 남한식 두음법칙에 의거해 ‘영도’라고 쓴 것으로 보아 전적으로 남쪽을 겨냥한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다.

21) 『로동신문』, 2000년 6월 28일.

22) 조동걸, 『현대한국사학사』 (서울: 나남, 1998), p. 481. 남정욱, “6·25를 한국전쟁이라 부르는 이

쟁이 일어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종종 있어도 말이다. 또한 어떤 교전국 일방이 싸웠던 상대방 국가나 싸웠던 지역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그렇다면 미국이 'Korean War'라고 부를 때는 한국에서 싸웠던 전쟁이거나 한국인과 싸운 전쟁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후자의 경우 보다 정확하게는 North Korean War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지역 이름이 우리 지역을 포함하므로 굳이 한국을 붙일 필요는 없으며 교전대상인 북한인을 지칭해 '북한전쟁'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하다).

즉 아테네인은 기원전 5세기 초반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 사이에 벌여졌던 전쟁을 페르시아전쟁이라고 불렀다. 그리스의 입장에서는 페르시아인들이 그리스에 침략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위대한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를 유린하고 아테네를 불태우고 개선하였다"면서 마라톤 평원의 패배 따위는 작은 패전으로 묘사했다. 이렇듯 페르시아 쪽에서는 이 '기분 나쁜' 명칭을 쓰지 않는다. 일본 교토대학 문학부 교수인 스기야마 마사아키는 '페르시아-그리스 전쟁'이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원전 5세기 후반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동맹 세력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동맹 세력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펠로폰네소스전쟁이라고 불린다. 당시 펠로폰네소스인들은 델로스전쟁 혹은 아테네전쟁으로 불렀을 것이다.²³⁾ 또한 미국은 1846년 발발한 멕시코와의 전쟁(1846. 4~1848. 2)을 '멕시코전쟁'(the Mexican War)²⁴⁾이라며 자신의 나라 이름은 빼고 원정 지역 이름[혹은 싸운 상대방 국가명]을 지칭했지만²⁵⁾ 멕시코는 1847년 전쟁(Guerra de

들, 그럼 임진왜란은 한일전쟁." 『조선일보』, 2013년 6월 15-16일 B5면에서는 6·25를 당사자가 아닌 국외자가 사용하는 한국전쟁이라고 부르는 제3자적 시각은 주체가 스스로 제3자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신분열'이라는 악평까지 들어야만 했다. 또한 조선인민군, 공화국이라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불러주는 것은 '이적행위'라고 평가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상대방과의 대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호칭을 부르는 것은 적과의 대화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23) 한정숙, "역사용어를 바로 써야 하는 이유," <역사비평>편집위원회, 『역사용어 바로쓰기』(서울: 역사비평사, 2006), p. 9.

24) 앨런 브링클리(Alan Brinkley),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Unfinished Nation) 2: 하나의 미국-남북전쟁에서 20세기 초까지』, 황혜성 (외역) (서울: 휴머니스트, 2005), pp. 80-81.

25) 1840년대 멕시코 영토였던 텍사스로 미국인들이 이주하자 멕시코 정부는 미국인들이 개척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정착을 허락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멕시코인들보다 인구가 많아지자 독립을 선언했고 텍사스공화국을 세웠다. 멕시코와 싸워 독립을 인정받은 텍사스공화국은 미국 연방에 가입했다. 텍사스 합병 소식이 알려지자 멕시코는 미국과 국교를 단절했다. 미국의 포크(James Knox Polk) 대통령은 1846년 멕시코 국경에 미군 3,500명을 파견해 멕시코를 자극했다. 결국 1846년 5월 전쟁이 일어났고 또 다른 멕시코 영토인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인들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을 인용하게 했다. 신의 축복을 받은 미국은 세계를 미국식 민주주의로 문명화시키기 위해 계속 팽창해야 하고, 그것은 미국의 "명백한 운명"이었다는 것이다. 신의 섭리에 따른 미국의 운명은 대륙전역[나아가 세계전역의 모든 사람과 지상의 모든 공화국에게로]으로 팽창하는 것이라는 많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서를 표현한

1847) 혹은 멕시코·미국 전쟁(Guerra de Mexico a Estados Unidos)이라고 부르지 남의 나라 전쟁처럼 멕시코 전쟁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멕시코·미국 전쟁’[The Mexican-American War]이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되기도 하며 ‘미국침략전쟁,’ 그리고 당시 미국 대통령인 제임스 포크에서 따서 ‘포크의 전쟁’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 이 전쟁밖에 없지는 않다. 한편 미국 사람들이 이미 1871년 신미양요를 Korean War(한국전쟁; the 1871 US Korea Campaign라고 불리기도 함)라고 불렀으나,²⁶⁾ 미국에서 수정주의적 논의가 활발히 일어났던 1970년대 이후 1950년대의 전쟁을 Korean War(한국전쟁)라고 지칭하는 것이 전사학자들이 쓰던 한국갈등(Korean Conflict²⁷⁾ 혹은 한국위기; the Korean Crisis)이라는 표현보다 일반화 되었다[한편 미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 발발 직후 미군을 투입한 뒤에 전쟁이라는 표현 사용을 거부한 채 “유엔에 주도 아래 행해지는 치안 행위”라며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²⁸⁾ 그는 전쟁 대신 갈등(conflict)이라고 썼다²⁹⁾]. 한편 임진왜

용어이다. 이 말은 미국팽창주의자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수사학적인 단골메뉴가 되었다. 결국 미국은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전제 정치에 사형선고를 내린다는 명분으로 수행했던 1846-1848년 멕시코와의 전쟁 결과 멕시코와 조약을 맺고 캘리포니아, 텍사스, 유타 등 서부 지역을 빼앗아 태평양까지 영토를 확장했으므로 진정한 대륙국가가 될 수 있었다(미국은 미국 시민에게 진 멕시코 정부의 빚을 미국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데다가 돈으로 이 지역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그 돈이 1,500만 달러에 불과했으므로 전쟁의 결과로 멕시코 영토 절반 이상을 빼앗은 것이었다). 멕시코는 ‘명백한 운명’ 사상에 따라 “앵글로 색슨족의 월등한 기력에 융합되거나 굴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에 있다”고 주장되었다. 최웅·김봉중, “해외팽창,” 『미국의 역사』, (서울: 소나무, 1997), 212쪽. 이 전쟁은 영토확장을 위한 미국의 제국주의전쟁이었으므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국의 이름을 빼고 명명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26) 『뉴욕타임스』 1871년 8월 22일자에 이렇게 불렀다. "The Korean War," New York Times, Vol. 20, No. 6215, August 22, 1871. 한편 1950년 전쟁이 발발한 후 the Korean War에다가 수식어를 첨가해 ‘the First Korean War’ 내지는 ‘the Korean War of 1871’로 불리기도 했다. 현재는 ‘the United States expedition to Korea’으로 통용되며 ‘the Korean Expedition in 1871,’ ‘the 1871 US Korea Campaign’으로 불린다. Kim Young-Sik, "The early US-Korea relations: Excerpt from "A Brief History of the US-Korea Relations Prior to 1945," 7/25/2003, <http://www.asianresearch.org/articles/1462.html> (검색일 2010년 9월 6일). 한편 1871년 당시 미국에서는 "미개인들과의 조그만 전쟁"이라고 표기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경원, 『미국,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울: 합동, 2003). 또한 "미국의 전쟁사상 가장 작은 전쟁"이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신봉승, 『나라를 세웠으면 역사를 고쳐야지: 흐름으로 읽는 조선의 역사』(서울: 가람기획, 2006), p. 242. 한편 우리 입장에서는 ‘양요’라는 쇄국 지향적·유교적 표현보다 ‘1871년 강화도 한미전쟁’이라 하면 어떨까 한다. 그런데 계량적 국제정치학자들은 500명 혹은 999명 이상의 인명이 살상되었을 때 전쟁이라고 칭하므로 그 미만이 희생된 이 사건은 전쟁으로 분류되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다.

27) 로즈마리 풋이 그의 책 제목에 wrong war와 함께 사용했다. Rosemary Foot, *The Wrong War: American Policy and the Dimensions of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미국에서는 6·25가 터지자 Korean Conflict라고 불렀다가 사태가 커지자 전쟁(War)이라고 불렀다.

28) David Halberstam, *The Coldest Winter: America and the Korean War* (New York:

란을 Korean War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³⁰⁾

그런데 Korean War는 한국정부나 한국인들이 배제된 미국식 용어라는 위와 같은 평가도 있는 반면 남북한 간의 (한국인들끼리의) 전쟁을 연상시키므로 국제전적 성격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엇갈린 평가도 있다(또한 오히려 Korean War의 번역어인 한국전쟁은 북한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한국[대한민국]이 북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혹은 한국[남·북]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사실과 정반대되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북한에 의한 남침을 희석시키는 용어라는 평가도 있다). 그렇다면 유럽평화대학의 요한 갈통(Johan Galtung) 교수의 표현대로 War in Korea(한국에서의 전쟁)가 더 포괄적이다. 전쟁이 일어난 곳은 한반도지만 전쟁의 주체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전쟁’이라고 불러야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베트남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이라는 명칭의 경우도 미국이 베트남 및 이라크를 침략한 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묘사하려면,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도 표기했듯, ‘베트남에서의 전쟁(War in Vietnam)’ 및 ‘이라크에서의 전쟁(War in Iraq)’이라고 써야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³¹⁾(그런데 베트남전쟁은 Vietnamese War가 아니라 Vietnam War,³²⁾ 이라크전쟁은 Iraqi War가 아니라 Iraq War로 불리므로 Korean War와는 달리 베트남인들의 전쟁, 이라크인들의 전쟁을 암시하지 않고 단지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만의 전쟁인 것 같은 Korean War[한국인들의 전쟁]보다는 Korea War[한국전쟁]라는 표현은 그래도 낫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한국전쟁’의 영역은 Korea War이며 Korean War의 국역은 ‘한국의 전쟁’과 ‘한국인의 전쟁’이 모두 가능하나 후자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한국인의 전쟁의 정확한 영역은 Korean's War, 한국인들의 전쟁은 Koreans' War으로 본다면 Korean War의 Korean은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Korea]에 대한 형용사형 [Korean]일 수 있으므로 한국의 전쟁이라는 번역도 가능하다. ‘한국에서의 전쟁’의

Hyperion, 2007).

29) Research Memorandum 52/39, Record Group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Records of Historical Studies Division, The Series Research Memorandums (Slash Series), 1946-1954 [A1 Entry 1468], Lot File 87D236, US National Archives.

30) Nam-lin Hur, "The Celestial Warriors: Military Aid and Abuse during the Korean War, 1592-98," A paper presented in UBC Workshop, February 10-11, 2012.

31) 오창엽, “역사추상형 접근방법, 해방공간은 열린공간: [강정구토론회3] 한국에서의 전쟁 War in Korea,” 『프로메테우스』, 2005년 10월 17일, (검색일 2010년 9월 7일). <http://prometheus.co.kr/articles/102/20051017/20051017004900.html>

32) 전병근, “김명섭 연세대 교수, “한국전쟁은 옳지않은 용어 6·25전쟁이라 불러야,” 『조선일보』, 2011년 6월 21일 A10쪽.

영역은 War in Korea이다). 베트남인들이나 이라크인들은 미국인들이 세계에 전파한 명칭인 베트남전이나 이라크전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Kháng chiến chống Mỹ(반미항전), Kháng chiến chống Mỹ cứu nước(반미구국항전)이라는 베트남[민족주의]식과 Chiến tranh Việt Nam(베트남전쟁)이라는 미국식, Chiến tranh thống nhất [Việt Nam]([베트남] 통일전쟁)이라는 객관적 명칭, Chiến tranh Đông Dương lần 2(제2차 동양[=인도차이나] 전쟁)이라는 프랑스식 명칭을 모두 융통성 있게 사용하고 있다. 훗날 이라크의 역사가들은 "2003 미국의 침략전쟁"같은 식으로 부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만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을 별 뜻 없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전쟁 명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시선으로 그 전쟁을 보느냐”이다. 그렇다 보니 시선이 바뀌면 그 전쟁의 이름이 바뀐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은 타자적 이름이라는 것이다. 우리 시각에서는 한국전쟁이 아닌 다른 명칭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전쟁이라는 이름이 관용화가 되어 바꾸기가 어렵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또 다른 관용적 용어인 6·25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안일 수 있다.

양승태 교수는 6·25내전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은 서구인들의 주관적인 시각을 반영한 용어라고 평가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에 따라 적합한 용어를 설정하는 작업이야말로 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보편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³³⁾

6·25를 증시하는 인사들은 영어명칭에 발발일자를 명기해 'The 6·25 War in Korea (1950-53)' 혹은 'The Communist War in Korea (1950-53)'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국제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개정하기에는 위 용어가 다소 긴 감이 없지 않다.

3) 6·25라는 용어의 시간적 제한성

한편 6·25는 전쟁 전기간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봉 교수는 전쟁이 몇 년 동안 계속 된 것이므로 ‘6·25’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1945년 9월부터 1950년 6월 이전에 이념 갈등과 투쟁 과정에서 10만 명이 희생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6·25’라는 이름에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공산 괴뢰군이 쳐들어 왔다”라는 정치적 의도

33) 양승태, “보수주의라는 정치 현상과 보수주의 이념,” 『우상과 이상 사이에서: 민주화 시대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p. 251.

가 숨어 있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³⁴⁾ 따라서 국제학계의 통칭인 Korean War에서 한국인들끼리 싸운 전쟁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갈통식의 이름에다가 연도를 부기하는 “War in Korea, 1950-1953”으로 하면 어떨까 한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어로는 ‘한국에서의 전쟁, 1950-1953’ 혹은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 1945-1953,’ ‘한국에서 일어난 6·25전쟁’이라고 하면 어떨까 한다(그런데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한국에서의,’ ‘한국에서 일어난’이라는 말은 생략해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1950년 전쟁, 6·25전쟁, 1945-1953년 전쟁 등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인데 또다시 6·25전쟁으로 귀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1948년 이후 남한 내의 빨치산 투쟁과 1949년 38선 부근의 무력 충돌 등 전쟁은 1948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시각에 입각하면 6·25라는 명칭은 부족하다는 견해가 계속 제기되었다. 김영호 교수는 북이 1949년 전쟁을 원했으며 1950년 1월 30일에 결정되었으므로 6월 25일에 갑자기 발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³⁵⁾ 박명림 교수는 “6·25라는 용어는 사건 발생일을 기준 삼아 단일의제로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냉전시대 절대적 사유체계로서의 6·25 담론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6·25에 비판적인 김 교수와 박 교수는 전부터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했다.³⁶⁾ ‘1948-1953년 전쟁’이 제3의 대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심각하게 고려하지는 않았다.

박태균 교수는 남에서 주로 쓰였던 ‘6·25사변’과 북(과 예전 공산권)의 ‘민족해방전쟁’이라는 통칭에 맞서 전쟁 당사국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한국전쟁’이란 이름을 선호했다. ‘한국전쟁’이란 무가치한 이름이야말로 “이 전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³⁷⁾ 그렇지만 한국전쟁은 우리가 창안한 말이 아니므로 미국식 명칭의 번역어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34) 오창엽, “역사추상형 접근방법, 해방공간은 열린공간: [강정구토론회3] 한국에서의 전쟁 War in Korea,” 『프로메테우스』, 2005년 10월 17일, <http://prometheus.co.kr/articles/102/20051017/20051017004900.html>

(검색일 2010년 9월 7일).

35) 김영호, “한국전쟁의 세계사적 의의,” 강규형 (외), 『청소년을 위한 우리 역사 바로 보기』 (서울: 성신여대 출판부, 2006), p. 234.

36) 박명림, 『역사와 지식과 사회(한국전쟁 이해와 한국사회)』 (파주: 나남, 2011). 한편 김영호 교수는 1998년에 두레에서 초판을 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개정판을 2006년 성신여대 출판부에서 재간하면서 제목은 그대로 했다. 그러나 김영호, 캐스린 웨더스비, 이재훈, 강규형, 나종남 (외 공저), 『6·25 전쟁의 재인식: 새로운 자료 새로운 해석』(서울: 기파랑, 2010)의 제목은 6·25전쟁이었다. 김영호 교수가 쓴 이 책 제1장의 제목은 “탈냉전과 6·25전쟁의 재인식”이다. 또한 김영호, “한국의 6·25전쟁,” 문정인·김명섭 (공편),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에서도 6·25전쟁이라고 썼다.

37) 박태균, 『한국전쟁』 (서울: 책과 함께, 2005), pp. 8-9.

김동춘 교수는 '6.25와 조국해방전쟁'으로 정리된 한국전쟁의 공식화된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6.25라는 남한의 전쟁 인식은 전쟁 발발을 기념하는 것으로 전쟁을 개시한 쪽에 대한 맹목적 증오감만을 부추기는 것이며(그러나 북에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6.25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며 그 날짜를 북침개시일로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6.25라는 명칭은 전쟁원인을 북한의 남침으로만 보는 전통주의적 견해라는 비판은 적확하지 않다. 물론 그 명칭에 그런 정서가 내포되어 있기는 하나 피상적인 견해이다. 한편 6.25이전에 전쟁이 배태되었으므로 이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내전문자들의 비판은 타당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국해방전쟁이라는 북한의 전쟁 인식 역시 미 제국주의와 이승만의 반역적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양 국가의 전쟁 인식에는 민족, 국민, 인민의 권리는 설자리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넓은 범위의 한국전쟁이 1948년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2·7정치투쟁과 4·3항쟁, 여순사건 등에서 발생한 경찰·우익단체들과 민중들 사이의 폭력적인 충돌과 1948년 가을 이후 좌익이 주도한 유격투쟁에서 시작되었으며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를 '전면전 시기'라고 따로 지칭했다. 전면전 발발 전후의 시기는 6.25로 지칭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³⁸⁾ 따라서 김동춘 교수가 6.25전쟁이라는 표현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2009년 6월 16일 이완범의 논문발표³⁹⁾에 대해 전인영 교수는 객석에서 6월 25일에 일어났을 뿐 한참을 경과했으므로 6.25는 문제가 있으며 한국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21개국이 참전한 것이므로 한국전쟁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라는 통칭이 닫힌 민족주의의 표상으로 여겨져 '7년전쟁'으로 할 것을 결의해 1970년대 한때 교과서에도 실렸으나 통칭에 밀려 학계에서 퇴진했으므로 '3년전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다.

육군 군사연구소 세계전쟁연구과장 김석구 대령은 2012년 9월 21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학술회의장에서 세계에서 6월 25일 발발한 전쟁이 매우 많으며 6.25전쟁이라는 명칭은 이완범이라는 개인의 이름대신 '61년생 교수'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또한 정용석 교수는 2009년 6월 16일 이완범의 논문에 대한 약정토론에서 “남

38) 김동춘, 『전쟁과 사회』 (서울: 돌베개, 2000), pp. 19-24, 58. 김동춘 교수는 "'6.25'라는 명칭을 통해 우리가 얻을 교훈은 북한의 '적화 야욕'을 경계하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자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우리는 이제 이런 단세포적인 역사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썼다.

39) 이완범, "6.25의 성격과 개전의 주도자," 북한연구소-북한학회 2009년도 전반기 학술회의: 6.25를 돌아보고 내일을 생각한다, 2009년 6월 16일, 32-52쪽.

침이나 도발이라는 언급은 한번쯤은 들어가야 한다”며 이러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이 글은 외국인이 쓴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객관적이라고 일갈했다(이에 본 연구자는 ‘6·25남침’이라고 쓰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 또한 김희철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6·25남침전쟁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다.⁴⁰⁾). 따라서 “북한이 1950년 도발하고 21개국이 참전하여 1953년 끝난 전쟁”이라하면 될 것 같지만 이름으로서 너무 길어서 번거로우므로 어떤 식으로든 줄여야 한다. 또한 남북화해 시대에 남침이나 도발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는 다소 무리한 주장이 있기는 하다. 명칭에 명기하기보다는 전쟁의 성격에 북의 도발을 언급해 ‘(북이 도발한) 6·25전쟁’으로 처음 언급한 후 괄호 안을 생략하면 어떨까 한다. 실제로 남침이라고 명기하면 그것이 북의 남침인지 남쪽에서 [북으로] 침략한 것인지 젊은이들이 헷갈려하기도 한다고 한다(일부 젊은 세대의 설문조사에서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는 대답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혼동의 산물일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최대한 객관에 가까워가려는 학문적 태도와 관점(투철한 국가관)을 투영한 태도가 양립할 수는 없을지 생각하게 한다.

3. 소결: 6·25전쟁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6월 25일 이전(국지적인 내전)과 이후(전면전)는 갈등의 수준이 급격히 전환되었으므로 우리들 뇌리 속에 전쟁이라고 기억되는 것은 6월 25일 이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는 6월 25일 ‘미제가 도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시간을 지칭하는 객관적 명칭인 6·25전쟁이 남의 진보적 학자들 평가와는 달리 오히려 가치중립적이다. 국제학계에서는 한국전쟁을 선호하지만 위와 같이 6·25전쟁이라는 명칭이 당시 일어났던 갈등의 상당부분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는 6·25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어떨까 한다. 미국 등 다른 외국인들이 6·25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6·25전쟁’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1950년 한국에서 일어난 6·25전쟁’이라고 설명해 주면 될 것이므로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다만 전지구적으로 글로벌화하고 있는 학계의 분위기 속에서 로컬한 명칭인 6·25전쟁보다 ‘코리안 워’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 학자들이 더 용이하게 받아들여므로 전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명칭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의 대안으로 ‘코리안 워’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도 2004년 장관의 내부결재에 의거해 6·25전쟁 명칭

40) 김희철, “6·25를 6·25남침전쟁이라고 부르자,” 『조선일보』, 2012년 6월 21일.

사용을 결의했다고 한다(게다가 대한민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임진왜란 대신 ‘조일전쟁,’[이는 명나라의 파병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그 한계가 있다] 병자호란 대신 ‘조청전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남의 한국전쟁(혹은 북의 조선전쟁)이나 남북의 6·25전쟁이라는 용어는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말보다는 본질과 내용을 심각하게 편향시키지는 않는다. 한반도에 대해 조선이나 한국이라는 말 중 어느 쪽은 선택했다고 해서 정치적 시각차이는 있을지라도 지칭하는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국정치학계가 주로 통용하는 한국전쟁이라는 용어와 역사학계·경제사학계에서 주로 통용하는 6·25전쟁이라는 용어를 혼용하는 것에 심각한 소통 문제는 없을 것이나 6·25전쟁이라는 부르는 통례가 더 나은 명칭이라는 주장이 국내학계를 중심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이라는 표현보다 6·25전쟁이라는 용어를 통해 그 사건의 의미를 반추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한편 포화가 멈춘 지 60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전이나 휴전 중 어떤 용어를 쓸 것인가를 둘러싸고 역시 남남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영어본을 저본으로 한국어본을 만들면서 Korean Armistice Agreement라는 제목을 ‘한국 휴전협정’이라고 번역했지만 본문의 armistice는 정전, cease-fire는 정화로 번역했다.⁴¹⁾ 대한민국에서는 북이 만든 용어인 정전협정보다 휴전협정을 선호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김명섭 교수는 북이 ‘짧은 정전’후 전쟁재개를 노렸던 반면 유엔군 측은 ‘긴 휴전’을 원했다고 해석했다.⁴²⁾ 그러나 박태균 교수는 정전은 전투행위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며 휴전은 적대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되나 전쟁은 계속되는 상태라면서 국제법상 휴전은 여전히 전쟁상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전이 평화에 더 가까우므로 정전이라고 쓸 것을 주장했다.⁴³⁾ 그렇지만 미국은

41) "한국휴전협정," 1953년 7월 27일, 대한민국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 『국방조약집』, 제1집 (1945-1980) (서울: 전사편찬위원회, 1981), pp. 124-127.

42) 그런데 이는 1951년 12월 3일 정전협상 제34차 본회의에서 유엔사령부측이 공산측의 태도를 "it is clear that NK does not want armistice but a total cease-fire to permit increase in NK military capability at will"라 평가한 데서 근거한 것이다. 김명섭, "6.25전쟁 정전협정과 휴전체제의 재조명: 영구적 평화체제의 모색," 전쟁기념관 공개학술회의 발표문, 2013년 6월 27일, p. 5 각주 9번. 그런데 당시 공산측이 군사력 강화를 도모해 전쟁의 재개를 원했는지 모르나, 전쟁이 더 장기화되면서는 소모전을 빨리 끝내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휴전협정조인에 반대하며 북진을 주장한 것은 오히려 이승만이였다. 물론 미국으로부터 상호방위조약 등 많은 지원을 얻기 위한 구호이자 위협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따라서 쌍방이 모두 속으로는 긴 정전, 긴 휴전을 원했다고 할 것이다.

43) 박태균, "정전협정인가 휴전협정인가," 『역사비평』 통권 73호 (2005년 겨울), pp. 89-90. 그런데 정전은 국제적으로 중재가 이루어진 것이며 휴전은 아닌 경우라고 평가했는데 이근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함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2호 (2008), p. 168에 의하면 휴전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기관 등 제3자 개입의 결과인 데 비해, 정전은 교전 당

정전(cease-fire)과 휴전(armistice)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혼용해서 사용했다. 또한 truce라는 용어도 역시 별 뜻 없이 혼동해서 사용했다. 따라서 이 세 단어의 차별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전체제이거나 휴전체제이건 ‘전시체제’가 아니라 ‘준평화체제’라는 성격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1953년 7월 27일의 휴전협정은 고전적인 정전협정에서 다루지 않는 포로교환, 민간인 귀환 등의 문제를 규정했으므로 평화조약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다. 이는 협정을 통해 외국군대 철수 등 정치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려 했던 공산측의 입장을 반영했던 결과였지만 말이다.⁴⁴⁾ 따라서 꼭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평화가 구축될 수 있다는 신화에서 헤어 나올 필요도 있다. 더 이상 준전시체제라고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생업전선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런 일반인들은 없을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이 평화의 선결조건이라는 북의 선전에 너무 동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종전이 선언되지는 않았지만 60년 동안 전쟁재개가 선포된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비교적 안정된 평화를 구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1960년대까지의 연구

6·25전쟁에 대한 전통적이고 주류적 연구는 정치·군사적 시각을 가진 것이 많다.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의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전쟁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정치학적 연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편중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했다.

1960년대 이래 주로 관변에서 이루어졌던 전투로서의 전쟁 연구(전투사; 작전사)는 6·25전쟁 연구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쟁을 단순한 군사적 전투행위로 보는 환원적 인식에 매몰되게 하기도 했다(이 연구사 정리에서는 기존의 전투사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다). 또한 연구 주제 면에서 1980년대 이후 수정주의의 직·간접적 영향아래서 이루어진 6·25전쟁 연구 붐은 6·25전쟁의 기원과 발발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게 만들었다.⁴⁵⁾ 수정주의자 브루

사자 상호간의 직접 협상의 결과라고 정반대로 주장되었다. 한편 전미영,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화 가능성과 전제조건,” 이서행 (외), 『분단 재조명: 대립과 갈등을 넘어 통합·번영방안』 (서울: 백산서당, 2009), p. 256에서는 정전을 armistice, 휴전을 truce로 보면서 두 용어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주장되었다.

44) 전미영,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화 가능성과 전제조건,” 이서행 (외), 『분단 재조명: 대립과 갈등을 넘어 통합·번영방안』 (서울: 백산서당, 2009), p. 257.

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이 내란과 혁명으로서 시작되었다고 쓰고 있으며⁴⁶⁾ 메릴은 남한에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빈발하였던 빨치산과 국군과의 비정규전적 내전에 인민군이 개입함으로써 내전적 상황이 끝났다고 주장했다.⁴⁷⁾ 따라서 전쟁의 내

45)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전2권 (서울: 나남, 1996). 이는 학위논문을 증보한 저서이다.

46)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 xxi. 한편 브루스 커밍스, 『한국현대사』, 김동노 (외역)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p. 369와 p. 3 등에서 한국전쟁은 내전이라고 주장되었다. 또한 Bruce Cumings, *The Korean War: A History* (New York: Random House, 2010)에서 Civil War라고 규정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전쟁이 국제전임을 주장하는 스톡 등이 커밍스를 내전론자로 치부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가능성이 있다.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윌리엄 스톡, 『한국전쟁의 국제사』, 김형인 (등역) (서울: 푸른역사, 2001); William Stueck, *Rethinking the Korean War: A New Diplomatic and Strategic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윌리엄 스톡,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서은경 (역) (서울: 나남, 2005). 커밍스는 한국전쟁을 내전이자 혁명전으로 보지만 한국전쟁의 기원을 외부로부터의 개입으로부터 찾고 있으므로 내인만을 유일한 원인으로 강조하는 그런 식의 내인론자는 아니며 외세의 분단책임을 한민족에게 전가시키는 내인론자도 아니다. 이완범, “한국전쟁연구의 국내적 동향: 그 연구사적 검토,” 손호철 (외),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225-227(한편 이완범은 위의 글 p. 227의 각주 57에서 “커밍스는 전쟁이 내인에 의해 일어났다고 주장한 곳은 없다”고 단정했는데, 이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주의에 대비되는 전통주의자들이 국제전적인 요소를 강조한데 비해 커밍스는 한국전쟁이 내란으로 시작되었음을 강조했을 뿐이다(또한 콜코 등의 초기 수정주의자들도 국제적 환경에 비중을 두었다). 커밍스는 전쟁이 발발할 때 이미 강대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커밍스는 내전이 있게 한 기원으로 미·소의 분할점령을 지적하므로, 전쟁의 보다 근본적이며 원초적 원인은 내인이 아닌 국제적 원인에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한국전쟁의 원초적 원인을 제공한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커밍스는 전통주의자들이 내인에 대해 소홀히 했던 것에 주목했을 뿐 한국전쟁이 오로지 내전의 측면만으로 가지고 있는 시종일관한 내전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Bruce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ew York: W. W. Norton, 1997); 브루스 커밍스, 『한국현대사』, 김동노 (외역)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p. 333에 의하면 내전은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나며 먼저 한국을 아무 생각 없이 갈라놓고 식민지 정부기구를 재건한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된다. 커밍스는 『한국현대사』, pp. 417-418에서 이 전쟁은 내전이었지만 순전히 한국인들끼리의 내부충돌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2013년 6월 인터뷰에서 “전쟁의 뿌리(origins: 인용자)는 1945년 이후 발생한 일련의 일들에 있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반도 분단을 결정했고 소련이 나중에 그것을 수용했다. 그것이 한국전쟁의 기반이 됐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의 남과 북에 진주했고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권력을 잡았다. 이 때문에 한국전쟁은 근본적으로 내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원인이 복합작용한 내전”이라고 결론지었다. 김상연, “[정전협정 60년] 브루스 커밍스 美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말하는 ‘한국전쟁’: 美, 스탈린이 ‘北의 南 침공’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서울신문』, 2013년 6월 24일 2면. 내전설을 주장했던 메릴도 내쟁적 요소와 국제적 요소를 모두 전쟁원인으로 고려하면서 남북한간 전쟁전의 갈등을 고려해야 전쟁의 기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외인론자들의 주장이 주류였던 학계에 던진 일종의 반론이었다. John Merrill, *Korea: The Peninsula Origins of the War* (Newark, Delaware: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9), p. 54; 존 메릴, 『새롭게 밝혀낸 한국전쟁의 기원과 진실』, 이종찬·김충남 (공역) (서울: 두산동아, 2004).

47) John Merrill, *Korea: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New York: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9); 존 메릴, 『새롭게 밝혀낸 한국전쟁의 기원과 진실』, 이종찬·김충남 (공역) (서울: 두산동아, 2004). 이러한 남쪽에 한정된 '내'의 범위에 비하여 시몬스식 내전(civil war) 개념에서 내전은 남북간의 내전이다. Robert R. Simmons, *The Strained Alliance: Peking, P'yongyang, Moscow and the Politics of the Korean Civil War* (New York: The

쟁적 요소를 중시하는 수정주의자들은 1950년 6월 이후 6·25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상황보다 그 이전에 배태되었던 상황적 조건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⁴⁸⁾ 그런데 이러한 기원에 대한 상대적 강조를 문제 삼은 학자들은 전쟁의 전개과정에 대한 관심을 돌릴 것을 주장했으며 결국 기원뿐만 아니라 전개과정 등도 다루어지기 시작했다.⁴⁹⁾ 또한 1990년대 이후에는 정치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 사회사적 연구 등이 천착되기 시작했다. 사람들 간의 싸움이었던 전쟁 연구에서 사람의 생생한 목소리가 빠져있으며 6·25전쟁은 박제화된 사실로 전쟁기념관에 처박혀 있다는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6·25전쟁의 영향에 대한 연구 과제 설정과 관련이 있다.

한국인 학자들이 주로 한국에서 발표한 연구물들을 중심으로 6·25전쟁 연구사를 개괄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⁵⁰⁾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발표한 것과 외국인들의 업적을 한국에서 번역한 것도 보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이 외국어로 한국에서 발표한 것은 본 문헌해제의 대상이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한국어로 간행한 것은 물론 외국어로 한국에서 발표한 것도 언급할 것이다. 다만 북한에서의 연구는 다른 문헌해제를 기약할 것이다. 한국인들에 의하여 본격적이면서도 학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에 의하여 연감과 전사 등이 편찬되었을 뿐, 학

Free Press, 1975).

48) 커밍스는 1950년 6월 25일은 한국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1945년 해방이후부터 시작되었던 갈등에 대단원(denouement)의 막이 이루어진 계기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Bruce Cumings, "Introduction: The Course of Korean-American Relations, 1943-1953," Bruce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p. 41. 1950년 6월 이전에 이미 10만여 명의 인명이 손실된 한반도에서의 상황에 주안점을 둔 메릴은 전쟁은 1948년 초부터 1950년까지 점차 고조·에스컬레이션되었다고 주장한다.

49)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서울: 두레, 1998). 한편 박명림은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서울: 나남, 2002)에서 1951년 1·4후퇴까지 다루고 있다.

50) 기존 연구사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학준, 『한국정치론사전』 (서울: 한길사, 1990), pp. 365-417; 이완범, "한국전쟁연구의 국내적 동향," 손호철 (외),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203-245; 이완범, "한국전쟁 연구 50년과 과제," 『경제와 사회』 제46호 (2000년 여름), pp. 8-29; 김기조, "한국전쟁의 최근 연구동향: 탈냉전 후 신경향의 문헌을 중심으로," 『외교』 제54호 (2000년 7월), pp. 121-130. 김기조 박사는 후자의 글에서 스탈린주도설과 마오쩌둥의 실수 등에 관해 논의했다. 한편 박명림 교수는 김학준 교수의 연구사가 이완범에 의해 계승되었다면서 양인이 모두 이론적 차원의 분석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학준 교수가 1차자료에 의존하지 않은 해외연구를 독창적인 학설인양 소개했다며 비판했다. 박명림, 『역사와 지식과 사회(한국전쟁 이해와 한국사회)』 (파주: 나남, 2011), p. 203, pp. 93-94. 그런데 1970·1980년대는 1차자료가 거의 발굴되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한계는 필연적이었다. 또한 선구적 학자들이 연구의 불모지에 던진 추론과 이에 바탕한 여러 학설들은 지금 보면 진부하고 자료가 빈약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독창적인 학설로 간주되었던 상황이었다.

문적인 업적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970년대 이전 국내에서는 ‘남침의 진상’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쓴 미국인 종군기자 등의 회고담류가 다수 번역되었다.

또한 연구 초기 연구자들은 주로 미국 자료를 발굴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에도 자료가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파악하면서 전쟁의 핵심당사자인 남북한의 자료는 아예 없는 것으로 치부했다. 미 자료 중 비밀문헌은 1970년대에야 기밀해제되었으므로 이 시기까지 국내의 연구는 미진했다. 따라서 1980년대 이전까지 6·25전쟁 연구의 중심은 미국학계에 있었다.

그런데 6·25전쟁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였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 공부한 한국인 학자들에 의하여 6·25전쟁이 국제정치적인 접근법으로 논구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인사로 두 명을 열거할 수 있다. 우선 김명희(Myong Whai Kim) 교수는 미국 New York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Prisoners of War as a Major Problem of the Korean Armistice, 1953” (1960)을 작성하여 선구적인 업적을 일구어 내었다. 그는 당시 국제사회에 하나의 중심적인 이슈였던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 문제를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소진철 교수인데 그는 미국 University of Oklahom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Some Causes of the Korean War of 1950: A Case Study of Soviet Foreign Policy in Korea(1945~1950) with Emphasis on Sino-Soviet Collaboration” (1963)을 통과시켰다. 이 논문의 논지를 발전시켰던 후속 연구 “The Role of the Soviet Union in Preparation for the Korean War,” Journal of Korean Affairs, vol III, no. IV (January 1974); 「한국전쟁과 중·소동맹의 대일 포위전략」, 외교안보연구원, 1984.11; 「소련·중공·북한의 한국전쟁 음모」, 김철범 (편), 『한국전쟁』 (서울: 평민사, 1989); 『한국전쟁의 기원』 (익산: 원광대학교 출판부, 1996)등에서 그는 대담한 가설인 ‘음모설’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6·25전쟁은 기본적으로 소련과 중공·북한의 음모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1950년 동북아시아에 대한 소련의 설계들 가운데 하나는 일본을 남·북으로 포위함으로서 우선 미국의 대일 단독강화를 저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을 적화하는 것이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공산당을 개조해 나갔다는 것이다. 소련의 그리고 중소동맹의 그러한 설계, 즉 ‘국제공산주의자들의 대전략’은 소련의 6·25전쟁 음모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6·25전쟁 승리를 통해 그러한 설계를 실현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6·25전쟁의 ‘실패’로 이 설계를 무산되었고 이 음모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 교수는 2008년 『한국전쟁 어떻게 일어났나』 (서울: 한국학술정

보)라는 저서를 통해 “소련의 스탈린은 오래 전부터 전쟁을 구상했고 북한의 김일성은 이를 충실히 실행에 옮겼으며 중국의 마오쩌둥은 전쟁을 연대보증했다”고 해석했다. 그는 전쟁 전 이미 중국과 소련의 군인들이 북한군에 합류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중국인민의용군 소속 3개 조선족 사단이 1950년 4월까지 북한군 5사단, 6사단에 각각 편입했다. 소련은 자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부리야드 공화국(현 몽골)의 기갑부대 요원 1,500여 명을 파견했으며 전쟁 초 서울에 나타난 북의 탱크는 모두 이들이 조종했다고 소 교수는 주장했다.

1960년대 냉전시대 상황의 산물이었던 이들 연구자들은 당연히 미국의 주류적 전통주의 전통에 의지했었으며 불모지 상태였던 한국 학계에 진출한 이후 그들의 학문적 성과를 이어가면서 학문적 후학세대를 양성하기에 그 기반이 취약했으므로 여러 제약점이 있었다. 또한 1960년대 후반에는 재미한인학자들의 경우도 이 분야 박사 학위 논문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므로 1960년대에도 1950년대의 학문적 공백이 대체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III. 민간 연구 태동과 외부적 탄압에 따른 침체: 1970년대 말-1980년대 중반

민간 차원에서 6·25전쟁이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6·25전쟁이 끝난 지 20여 년이 지난 1970년대 중반 이후이다. 그런데 김점곤은 관변적이며 천편일률적인 전사의 차원을 처음으로 뛰어 넘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육군장군(6·25전쟁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 차장을 역임함) 출신의 교수이다. 김점곤은 해방직후에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 전향했던 인사들(특히 『실록 남로당』을 1975년 신현실사에서 간행한 김남식)과의 광범위한 인터뷰를 토대로 여러 자료까지 가미해 1972년 경희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 논문 「한국에 있어서의 공산주의투쟁형태연구, 1945-1950: 특히 무장투쟁을 중심으로」를 작성했다. 1973년 박영사에서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으로 간행되었는데, 6·25전쟁을 빨치산투쟁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내전적 인식을 국내외 학계에 심어준 최초의 저작이다. 미국 존 메릴의 내전론이 나오기 훨씬 전의 선구적 업적이었다. 당시로서는 금기시되었던 분야였고 시각이었지만 자료에 토대를 둔 엄밀한 실증이 이러한 금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저작도 6·25전쟁 연구가 활성화된 1970년대 말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89년에 발간된 그의 「남로당 폭력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한국전쟁」, 김철범 (편), 『한국전쟁: 강대국 정치와 남북한 갈등』에서 내전적 시각이 보다 명확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1970년대까지 군출신 인사만의 전유물이었던 6·25전쟁 연구가 민간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기여한 사람들은 외국에서 학위논문 등을 작성하고 귀국한 학자들이었다. 김학준 교수는 1970년 미국 Kent State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 논문 “The Korean War and China: Sino-North Korean Relations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를 작성했을 정도로 일찍부터 6·25전쟁을 연구했다. 박사 학위논문은 6·25전쟁에 관한 Monograph가 아니었지만 계속 6·25전쟁에 관한 논문을 산출하여 군의 전유물이자 학문적 연구의 불모지였던 이 분야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그는 1970년대 중반 귀국하여 논의조차 금기시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소개하면서 6·25전쟁에 대한 논의자체를 활성화시켰다. ‘6·25전쟁의 기원’ 문제에 관하여는 일찍이 1975년에 ‘남침설’ 뿐만 아니라 ‘북침설’과 남북한 모두 전쟁을 준비했던 상황에서 북한이 선제공격을 개시했다는 ‘중간설’을 ‘흥미 있는 추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이면서 ‘학문적으로’ 제시하여⁵¹⁾ 한국학계에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전통주의가 지배했던 한국학계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려 했던 후학들은 두 갈래로 영향을 받았다. 먼저 남침설의 자료를 더욱 확고하게 수집하여 그 논의를 엄밀화시켰던 부류가 하나 있었다. 다른 부류는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북침설을 언급하는 학자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수정주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연구자들이다. 전혀 다른 두 갈래의 상반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결국 김 교수의 저작은 연구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그는 이후 6·25전쟁 연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지가 비슷한 글을 반복적으로 발표했으며 포괄적 저서인 『한국전쟁』(서울: 박영사, 1989)을 출간하는 결실을 보게 된다.⁵²⁾ “한국전쟁을 겪은 당사자인 우리 한국인의 손에 의해 국내에서 출판된 단행본의 수는 매우 적다”는 상황평가 아래 해외의 저술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자 자신이 기왕에 발표한 글을 중심으로 편집한 책이 바로 이 단행본이다. 원인·과정·휴전·영향을 부제로 원인에 관한 글 3편(한반도의 분단과정: 한국전쟁의 한 원인, 한국전쟁의 기원, 한국전쟁의 개전에 관한 북한 정치과벌의 입장), 과정에 관련된 글 1편(한국전쟁의 시기에 있어서 남북한 각자의 동맹국들과의 관계), 휴전 2편(한국전쟁 기간에 제기된 휴전안들의 내용과 그 의미, 한국정전협정의 성립과정), 결과 1편(한국전쟁이 국제정치와 남북한에 미친 영향) 등 총7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필자 자신은 국제전의 성격과 내전의 성격을 함께 지닌 전쟁으로 보아 ‘전통

51). 김학준, 「한국전쟁 문헌 해제」, 『서울평론』, 제84·85·87호 (1975년 6월-9월).

52) 『한국전쟁: 원인·과정·휴전·영향』, 제3개정·증보판 (서울: 박영사, 2003)을 간행한 후 2010년 같은 제목으로 제4수정 증보판을 출간했다.

주의적 해석과 수정주의적 해석을 배합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라종일 교수는 1972년 영국 Cambridge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논문 “Britain and the Korean War, 1950~1954”를 작성했다. 그는 영국 외무성의 비밀문서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6·25전쟁의 발발에서부터 1954년 제네바회담까지를 다루었다. 그는 이후에도 주로 6·25전쟁을 영국 혹은 영미관계와 연결시키는 저작들을 양산했다.⁵³⁾

6·25전쟁 연구의 1970년대 선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해야 할 인사는 박두복 교수이다. 그는 중화민국 문화대학에서 취득한 정치학박사 논문을 『中共參加韓戰原因之研究』라는 제목으로 臺北의 黎明文化事業公司에서 1975년에 출간했다. 그는 중공과 마오쩌둥에 대한 스탈린의 의심을 풀어주는 것이 장래를 위해 긴요하다는 판단에서 중국이 참전했다고 보았다. 이 논문의 중요 부분은 한국과 미국 학계에 연속적으로 공간되었다.⁵⁴⁾

1980년 11월 6·25전쟁 연구에 관한 한 ‘지적 충격’을 가져다주었던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언론문화클럽의 『계간 현대사』 창간호가 발간되었으나 그 즉시 폐간되었던 것이다.⁵⁵⁾ 이는 주류적 학계에서 연구의 공백을 깨려는 시도가 외부적 탄압에 의해 무산되었음을 뜻했다. 당시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따른 신군부의 권력장

53) 「한국동란과 영국」, 『군사』 (1983년 7월); “Political Settlement in Korea: The British Views and Policies with regard to the Internal Political Arrangements in Korea in the Autumn of 1950,” 『국제정치논총』 제23집 (1983); “Political Settlement in Korea: British Views and Policies, Autumn 1950,” James Cotton and Ian Nearly, eds, *The Korean War in History* (Manchester, GB: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9); “Special Relationship at War: The Anglo-American Relationship during the Korean War,” *Korea and World Affairs*, vol. VIII, no. 2 (Summer 1984); 라종일 (편),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서울: 예진, 1991); 『끝나지 않은 전쟁: 한반도와 강대국 정치, 1950-1954』 (서울: 전예원, 1994); “맥아더 해임의 배후에 영국이 있었다: 영국의 극비문서가 30년만에 밝힌 비화,” 『신동아』 (1984년 6월), pp. 128-141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이 맥아더(Douglas MacArthur)의 해임 압력을 미국에 가했다는 것이다. 한편 元泰載의 “6.25전쟁과 영국의 역할,” 『軍史』 제59호 (2006년 6월)도 있다.

54) 「중공의 한국전 개입」, 김철범 (편), 『한국전쟁: 강대국 정치와 남북한 갈등』 (서울: 평민사, 1989); 「중공의 한국전쟁 개입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의 정치외교사적 고찰: 한국정치외교사학회논총 제5집 (서울: 평민사, 1989); “China and the Korean War,” Chae-Jin Lee and Doo-Bok Park, *China and Korea: Dynamic Relations* (Stanford: The Hoover Institute, 1996);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원인,” 한국전쟁연구회 (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서울: 백산서당, 2000).

55) 수록 논문은 다음과 같다. 최정호, 「한국 ‘현대사’와 한국전쟁」; 차하순, 「현대사의 과제와 방법」; 정일영,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성격」; 박용옥, 「세계전사 속에서의 한국전쟁」; 한배호, 「1950년 전후의 미 극동전략」; 한승수, 「한국전쟁과 세계경제」; 이재원, 「미국 중요언론에 비친 한국전쟁」; R. J. 램멜, 「제2의 ‘한국전’가능성에 대하여」; 오꼬노끼 마사오, 「전이하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1942년에서 1950년까지」; 이상우, 「6·25와 한국소설의 관점」; 정진위, 「북한-중공-소련의 삼각관계」; 김남식, 「남과 북의 ‘조선로동당」; 김병익, 「6·25와 한국소설의 관점」; 김학준, 「해방3년사와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동향: 저술과 자료를 중심으로」; 김경동, 「전쟁사회학 시론: 한국전쟁의 사회적 충격」; 「한국전쟁일지」.

악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냉전적 사고가 지배적이었던 사회상황을 반영하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군인 출신으로 학술교류를 통해 민간과 소통을 꾀한 선구적 학자로 온창일 육군 사관학교 교수가 있다. 그(Chang-Il Ohn)는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U. S. Policy and Strategy Regarding Korea, 1945-1953,”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1983을 작성했다. 또한 Ohn, Changil, “1950-53 Korean War and Measures for Preventing Anothe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East Asian Review. vol. 2 no. 3 (Seoul: The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eptember 1990), pp. 80-94; 溫暢一, “中國의 韓國戰 介入에 대한 美國의 政策과 戰略,” 『軍史』 제42호 (2001년 4월); 溫暢一, “전쟁사 연구의 의의 및 중요성,” 『戰史』 제1호 (1999년 9월)도 있다. 그의 최근 업적은 “6.25전쟁이 남긴 명제와 과제,” 『軍史』 제75호 (2010년 6월), pp. 1-39이 있다.

군과 민의 교류를 촉진시킨 다른 학자로는 류재갑⁵⁶⁾ 경기대 교수, 정토웅⁵⁷⁾ 김광수⁵⁸⁾ 나종남⁵⁹⁾ 육군사관학교 교수, 허남성(許南溍)⁶⁰⁾ 손경호⁶¹⁾ 국방대학교 교수, 정명복 공주대 안보대학원 교수⁶²⁾ 등이 특기할 만하다.

56) Jae-Kap Ryoo, "Land reform and its effects on social equality in Japan and Taiwan: a comparative study,"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1978.

57) 程士雄, “6·25전쟁 55주년 回顧와 展望,” 『軍史』 제55호 (2005년 6월); 程士雄, “6·25전쟁 아나바시: 장군들의 회고록에 관한 연구,” 『軍史』 제52호 (2004년 8월); 程士雄, “한국전쟁중 美8軍 司令官의 작전지도: 워커, 리지웨이, 밴플리트, 테일러 장군,” 『戰史』 제4호 (2002년 6월); 程士雄, “韓國戰爭 研究方法에 관한 考察,” 『戰史』 제1호 (1999년 9월).

58) “인천상륙작전은 기습이 아니었는가,” 『전사』2 (1999); “한국전쟁 개전당시 북한군의 작전계획과 웅진전투,” 『군사』41 (2000); “북한의 한국전쟁수행 연구를 위한 문헌 및 자료 분석,” 『군사』제55호 (2005년 6월); “6.25전쟁 초기전투와 공황,” 『정신전략연구』36 (2005); “낙동강전선에서 패배 이후 북한 인민군의 재편과 구조 변화,” 『군사』제59호 (2006년 6월);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박사학위논문, 경남대 북한대학원 2008; 김광수, “미 제1기병사단의 영동·황간전투,” 『軍事史 研究叢書』 第1輯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김광수, “한국전쟁 개전 당시 북한군의 작전계획과 웅진전투: 소련군 총참모부 문서와 북한 노획문서를 중심으로,” 『軍史』 제41호 (2000년 12월).

59) 그는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 “Making Cold War Soldiers: America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1945-55”이라는 제목으로 2006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53,” 『군사』63 (2007년 6월)도 있다. 그는 김영호, 캐스린 웨더스비, 이재훈, 강규형, 나종남 (외 공저), 『6·25 전쟁의 재인식: 새로운 자료 새로운 해석』(서울: 기파랑, 2010)에 논문을 게재했다.

60) Nam Sung Huh, “The quest for a bulwark of anti-communism: the 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officer corps and its political socialization, 1945-1950,” Ph.D.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1987.

61) 그는 미국 Ohio State University에서 2008년에 “The 4.3 Incident: Background, Development, and Pacification, 1945-1949”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다.

62) 『잊을 수 없는 생생 6·25전쟁사』 (파주: 집문당, 2011)외에 다수의 중국관련 업적은 중국관계

IV. 전통주의적 연구의 조직화: 1980년대 후반

김철범 교수는 한국내의 주류적 연구를 집약시키는데 기여한 학자인데⁶³⁾ 그는 1987년 5월 이후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이제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를 외국학자에 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평가하고 정리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라는 판단 속에서 ‘한국전쟁연구회’를 발족했다. 6·25전쟁과 관련된 국내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이 학회는 국내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6·25전쟁 연구의 중심을 한국으로 만들려 했고, 외국의 권위 있는 학자들과의 학술 교류를 도모했다.

이 학회는 1987년 6월 15-16일간 제1차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고 이 결과물들은 1988년에 국토통일원에서 『한국전쟁전후 민족 격동기의 재조명』으로 간행했으며 전술한 김철범 (편), 『한국전쟁: 강대국 정치와 남북한 갈등』 (서울: 평민사, 1989)으로 재출간했다. 또한 1989년 6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한국인 학자들만 참석하여 제2차 한국전쟁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했는데 수정보완된 발표논문들은 1989년 국토통일원에서 『한국전쟁과 휴전체제』로 출간되었다.⁶⁴⁾

한국전쟁연구회는 1990년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John Merrill, James Matray, William Stueck Jr., Rosemary Foot 등 국외의 권위자까지 포괄하여 “한국전쟁과 한반도의 평화정착”(Division, Destruction and Disarmament)이라는 주제로 제2차 국제학술

문헌 부분에서 열거할 것이다.

63) 1984년 SUNY at Buffalo에서 “U.S. Withdrawal Decision from South Korea, 1945~1949”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는 『국제정치논총』 제24권 1집(1984)에 “U.S. Withdrawal Decision from Korea, 1945~1949: Bureaucratic Perspectives”와 『신동아』 1986년 6월호에 「6·25 전 주한미군 철수의 내막」을 각각 발표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남침을 빚어낸 미국의 철군정책」, 김철범 (편), 『한국전쟁: 강대국 정치와 남북한 갈등』 (서울: 평민사, 1989); 「한국전쟁과 미국의 외교정책: 철수, 참전, 복진, 휴전 결정을 중심으로」, 김철범 (편),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 (서울: 을유문화사, 1990); 「한국전쟁 전야에 있어서 미국의 대한정책: 포기냐 보호냐」, 김철범 · 제임스 매트레이 (공편), 『한국과 냉전: 분단과 파괴와 군축』 (서울: 평민사, 1991) 등을 연속적으로 발표했으며, 철군을 다룬 위와 같은 글들을 시기적으로는 휴전까지 확장하여 『한국전쟁과 미국』 (서울: 평민사, 1990)을 간행했다. 또한 『진실과 증언: 40년만에 밝혀진 한국전쟁의 진상』 (서울: 을유문화사, 1990)을 편집했는데, 제1부는 소련측 증언, 2부는 재소고려인의 증언, 3부는 중국측 증언, 4부는 프랑스·재미학자의 연구 등 새로운 자료를 집중 수록했다.

64)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서대숙, 「한국전쟁의 성격」; 김유남, 「한국전쟁과 동북아 냉전체제」; 정토웅, 「한국전쟁과 미국의 제한전쟁」; 소진철, 「한국전쟁과 일본 공산당의 개조」; 박두복, 「한국전쟁이 중공정치에 미친 영향」; 라종일, 「제네바 정치회담: 회담의 정치」; 김학준, 「통일사적 측면에서의 한국전쟁」; 안병준, 「한국전쟁의 유산과 북방정책」; 온창일, 「한반도에서의 핵의 역할」; 김부기, 「남북한의 군비통제」.

회의를 개최했다.⁶⁵⁾

한편 한국정치외교사학회에서는 1987년 연중 내내 그리고 1988년 전반기에 여러 번에 걸친 논문발표를 진행하여 1989년 평민사에서 『한국전쟁의 정치외교사적 고찰: 한국정치외교사학회논문총 제5집』을 간행했다.

또한 전쟁기념사업회는 1990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전쟁의 역사적 재조명: 한국전쟁 40주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Philip West, 김학준, 신복룡, John E. Wilz, Kathryn Weathersby, 허만호, 라종일, Harold C. Hinton, Alexander V. Kovalykov, 조영환, Roger Dingman, 온창일, 김계동, A. Farrar-Hockley.

한국국제정치학회는 전쟁기념사업회의 후원을 받아 1990년 6월 대구에서 「한국전쟁 40주년 기념 하계특별지방학술회의」를 개최했는데 『한국전쟁의 역사적 재조명』이라는 제목으로 국제정치논문총특집호를 1990년 10월에 간행했다.

또한 동아일보사의 현대사 연구 계획에 따라 기획된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2권 (1989)의 제4부가 「6·25의 국제적 성격과 국내적 영향」이다.

이상 경쟁적으로 출간된 연구물 중에서 주요한 학문적 논문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전쟁: 강대국 정치와 남북한 갈등』(이하 『한국전쟁』으로 약함), 『한국전쟁의 정치외교사적 고찰』(이하 『정치외교사』로 약함),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하 『현대사』로 약함),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이하 『시각』으로 약함)의 4권이다.⁶⁶⁾

65) 발표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학준, 「6·25연구의 국제적 동향」; James Matray, 「일종의 내전: 한국전쟁의 국제적 기원」; John Merrill, 「한국전쟁의 기원: 대답없는 질문」(주한미국공보원이 1990년 7월에 간행한 『시사평론』 제32호에 번역됨); 小此木政夫(오코노키 마사오), 「북한정권의 수립」; William Stueck Jr., 「소련과 한국전쟁의 기원」; Károly Fendler, 「동구제국, 특히 헝가리의 국내외 문제에 있어 한국전(1950-1953)의 역할: 헝가리의 지원형태」; 김철범, 「한국전쟁 전야에 있어서 미국의 대한정책」; Michael Schaller, 「맥아더 장군: 중국문제, 정책갈등, 한국전쟁」; Rosemary Foot, 「적과의 협상과 우방과의 협상: 휴전회담에서의 화해정치」; Jonathan D. Pollack, 「중국, 중소동맹, 한국전쟁」(『사상』 1990년 봄호에 실림); Francois Joyaux, 「한국전쟁기간 중 중국군의 개입」; 伊豆見元(이즈미 하지메), 「미중정책과 한국전쟁」; 翟志海(Zhai ZhiHai), 「중국의 한국전쟁참전결정에 대한 재고」; Stephen Kirby, 「한국전쟁과 평화정착」; Kevin Lewis, 「동북아에 있어 군비통제전망: 최근 타지역 발전으로부터의 교훈」; 노경수, 「1990년대 강대국의 안보정책과 동아시아: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안병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평가와 군비통제」.

66) 이 논문집들의 저자와 논문명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김경동, 「오늘의 시점에서 본 6·25의 사회적 흔적」, 『현대사』; 김경수, 「한국전에서의 인도의 역할」, 『정치외교사』; 「한국전쟁과 중립국의 역할: 인도의 평화 중재 노력을 중심으로」, 『시각』; 김부기,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의 정책」, 『시각』; 김영식, 「제한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 『정치외교사』; 김유남, 「한국전쟁과 중·소관계」, 『시각』; 김윤식, 「6·25전쟁문학」, 『현대사』; 김점곤, 「남로당 폭력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한국전쟁」, 『한국전쟁』; 「한국전쟁과 김일성의 통일전략」, 『시각』; 김철범, 「북한의 남침을 빚어낸 미국의 철군정책」, 『한국전쟁』; 「한국전쟁과 미국의 외교정책: 철수, 참전, 복진, 휴전 결

주류적 연구들을 평가해 보면 역시 김철범, 김학준, 김점곤, 라종일 교수 등의 연구자가 한국전쟁에 대한 전통주의적 기성 학계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천 교수의 『남침유도설해부』(서울: 과학지식사, 1993)는 실증적 연구로서 전통주의적 연구의 새로운 경향을 대변했다.

한편 전쟁기념사업회는 『한국전쟁사』, 전6권을 행림출판사에서 1990년부터 1992년 사이에 완간했다. 집필위원은 류재갑, 김학준, 박상섭, 김점곤, 김부기, 황병무, 김철범 등이며 각권의 부제는 1권: 요약통사, 2권: 전쟁의 기원, 3권: 북한군침공과 한국군방어, 4권: 낙동강에서 압록강으로, 5권: 중공군 개입과 새로운 전쟁, 6권: 한국전쟁의 영향 등이다.

이러한 전통주의적이며 주류적 연구자들은 6·25전쟁 40주년인 1990년이래 젊은 세대의 6·25전쟁 연구가 수정주의에 의해 압도당하는 것을 비판했으며 이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여러 논쟁에 참여했다.

V. 수정주의적 경향의 등장: 1980년대

1980년 광주항쟁이 휩쓸고 간(67) 1980년대 초반 세계관의 전환 속에서 태동된 진보적 학문의 초창기적 집결 분위기 속에서 콜코 부처(Gabriel and Joyce Kolko)와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의 해방3년사에 관한 논문과 저작이 한국에 부분 번역되면서 <『한국현대사의 재조명』(서울: 돌베개, 1982); 『분단전후의 현대사』(서울: 일월서각, 1983)> 한국현대사에 관한 수정주의적 연구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초기의 연구는 1945년부터 1948년 사이의 역사에 국한되었는데(이른바 『해방전후사의 인식』, 전6권 [서울: 한길사, 1979-1989]이 조성한 1980년대 대학생들의

정을 중심으로), 『시각』: 김학준, 「북한 정치지도층의 권력투쟁과 한국전쟁」, 『한국전쟁』: 「한국전쟁의 기원」, 『정치외교사』: 「6·25연구의 국제적 동향」, 『현대사』, 『시각』: 남주홍, 「미국의 참전」, 『정치외교사』: 라종일, 「한국전쟁의 의미: 한국의 입장」, 『시각』: 박두복, 「중공의 한국전 개입」, 『한국전쟁』: 「중공의 한국전쟁 개입의 원인에 관한 연구」, 『정치외교사』: 박상섭, 「한국전쟁과 유엔의 역할: 한국전 발발에서 중국군 한국전 개입까지의 유엔의 결정과정」, 『시각』: 서대숙, 「북한의 소비에트 정권수립」, 『한국전쟁』: 소진철, 「한국전쟁: 국제 공산주의자들의 음모」, 『한국전쟁』: 신복룡, 「한국전쟁의 휴전」, 『정치외교사』: 안병만, 「6·25의 국제적 영향」, 『현대사』: 안병영, 「6·25가 미친 정치적 영향」, 『현대사』: 온창일, 「휴전을 둘러싼 한·미관계」, 『한국전쟁』: 「초총력전 그리고 제한전」, 『정치외교사』: 「한국전쟁의 양면성」, 『시각』: 이대근, 「6·25가 미친 경제적 영향」, 『현대사』: 이우진, 「한국전쟁과 미국의회」, 『정치외교사』: 정종욱, 「한국전쟁과 한국외교」, 『현대사』: 홍순호, 「한국전쟁과 UN군」, 『정치외교사』: 황병무, 「한국전쟁과 중국의 외교정책」, 『시각』.

67) 박명림, 『역사와 지식과 사회(한국전쟁 이해와 한국사회)』(파주: 나남, 2011), p. 39.

학습열풍을 반영함⁶⁸⁾) 이 경향이 6·25전쟁까지 확장되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⁶⁹⁾ 1981년에 간행된 커밍스의 저작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이 여러 우여곡절 속에 1986년에야 번역되었던 것이다. 1981년 원서 출간 당시에는 군부의 출판에 대한 검열과 판금 등이 엄존했던 상황이었으므로 검열이 완화되는 상황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다.

1980년대 미국기밀자료의 공개로 가능했던 커밍스의 저작은 국내 학계에 서설적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했다. 그의 가설에 동조하는 사람은 그의 연구를 주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 했으며,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의 연구가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고 그의 연구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른바 '커밍스 콤플렉스'와 '커밍스 알레르기'라는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⁷⁰⁾

1980년대 말 한국 학계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6·25전쟁 연구는 수정주의가 풍미했다. 대개 국내대학에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한 수정주의적 연구자들은 1989년 개별적으로 연구업적을 간행한데 이어 6·25전쟁 발발 40주년인 1990년에는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편), 『한국전쟁의 이해: 한국전쟁 발발 40주년 논집』 (서울: 역사비평사, 1990; 이하 『이해』로 약함)과 최장집 (편), 『한국전쟁연구』 (서울: 태암, 1990; 이하 『연구』로 약함)을 출간했다. 양 논문집에 비슷한 연구가 많은데 주제별 정리는 각주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⁷¹⁾

68) 박명림, 『역사와 지식과 사회(한국전쟁 이해와 한국사회)』 (파주: 나남, 2011), pp. 44-51. 소위 『해전사』 1권은 출간되자마자 10·26 박정희시해사건으로 판금될 때까지 열흘 만에 무려 4,500부가 판매되었다고 한다. 김언호, 『책의 탄생』, II (서울: 한길사, 1997), p. 359. 이 책의 탄생과 의미에 대해서는 김언호, 『책의 공화국에서』 (파주: 한길사, 2009), pp. 345-376에 나와 있다.

69) 이대근 교수는 국외에서의 수정주의적 연구가 번역되기 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박사논문을 작성한 비판적 계열의 선구적 학자이다. 그는 일찌기 1982년 12월에 발간된 『한국경제』 제10호에 「6·25가 미친 경제적 영향」을 실었으며 1984년에 자신과 정운영 교수가 공편한 『한국자본주의론』 (서울: 까치, 1984)에 「6·25의 사회경제적 인식」을 발표했다. 이어 그의 박사논문(「한국전쟁과 1950년대 자본축적: '원조의존축적론'의 비판적 극복을 위한 일시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을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 (서울: 까치, 1987)로 간행했다. 경제학자가 다룬 몇 안되는 6·25전쟁 관계 논문이다. 따라서 국내의 6·25전쟁 관련 세미나 기획에서 경제분야 발표자나 필자를 선정할 때 거의 항상 초청되었다.

70) 전상인,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이해,” 『한국현대사연구』, 1 (1998), p. 204. 커밍스는 최근에 Bruce Cumings, *The Korean War: A History* (Modern Library Chronicles) ([New York]: Modern Library/Random House, 2010)을 출간했다.

71) 최장집, 「한국사회에 대한 하나의 이해」, 『연구』; 박명림, 「한국전쟁 연구서설」, 『이해』; 남기정, 「한국전쟁의 국제적 배경과 원인」; 강경성, 「한국전쟁의 국내적 배경과 원인 I: 남한정치의 전개과정(1948-50)」; 김용복, 「한국전쟁의 국내적 배경과 원인 II: 북한정치의 전개과정(1948-50)」, 이상 『이해』; 최봉대, 「한국전쟁의 기원과 성격을 둘러싼 몇가지 문제」, 『연구』; 박명림,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연구』; 이광일, 「한국전쟁의 발발 및 군사적 전개과정」, 『이해』; 김남식, 「전쟁전후 남한에서의 무장유격투쟁의 전개」, 『연구』; 김주환, 「한국전쟁 중 북한의 대남한점령정책」, 『이해』; 장미승, 「북한의 남한 점령정책」, 『이해』; 김창우, 「한국전쟁초기 미국의 전쟁정책과 북한 점령」, 『연구』; 임재동·최정미, 「미국의 전쟁전략과 전쟁정책」, 『이해』; 신현, 「중국의 참전 배경」

이들 진보적 연구자 중 6·25전쟁 연구를 국내에 남아 계속한 전문 연구자로는 1994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명림을 들 수 있다. 그는 자신이 기존에 집필했던 6·25전쟁에 관한 개론 수준의 다양한 연구⁷²⁾의 수준을 넘어 북한 노획문서 중심의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자료와 발굴 초기의 러시아측 증언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6·25전쟁의 기원과 발발 배경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또한 국내 인사의 인터뷰와 대한민국 국방부 소장 자료의 발굴은 국내 자료는 소홀히 하면서 국외 자료에만 지나치게 의존했던 기존 전통주의적 연구경향에 반향을 주었다.⁷³⁾

VI. 후기수정주의적 종합의 모색: 1990년대 초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대립 속에서 중간적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들은 후기수정주의(post-revisionism)⁷⁴⁾적 입장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하영선 교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자신의 지도를 받은 석사 논문들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서』(서울: 나남, 1990)라는 편저를 간행했다.⁷⁵⁾

또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1991년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편집·간행했다.⁷⁶⁾ 이 책의 저자들 중 수정주의적 경향에 동조하는 인사가

원인 및 영향, 『이해』; 김상배, 「한국전쟁중 북한의 국내정치」, 『이해』; 류상영, 「휴전협정의 성립 과정과 성격」, 『이해』; 이해원·조현연, 「한국전쟁의 국내외적 영향」, 『이해』; 정해구,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연구』; 古關彰一, 「한국전쟁과 일본재군비」, 『연구』; 임현영, 「전후문학에 나타난 한국전쟁 인식의 변모」, 『연구』; 류상영, 「북한의 한국전쟁인식과 성격규정」, 『연구』.

72) 박명림의 연구로는 위에서 열거된 논문 외에 다음과 같은 저작이 있다. 「한국전쟁사의 쟁점」, 김명섭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6 (서울: 한길사, 1989); 「한국전쟁」,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편), 『한국정치사』 (서울: 백산, 1990).

73) 박명림, “통일 이후 한국전쟁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 『戰史』 제4호 (2002년 6월).

74) 이를 후기수정주의로 번역하지 말고 탈수정주의로 번역하자는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냉전후 시대(post Cold War era)를 탈냉전기로 부르지 후기냉전기로 부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개 이들은 post-revisionism의 수정주의에 대한 연속성을 단절로 보는 전통주의의 계승자이다.

75) 수록 논문은 다음과 같다. 안병길, 「한국의 세계체제 편입에 관한 연구: 1945-1946년을 중심으로」; 전진호, 「이승만의 단정노선에 관한 연구」; 하영선, 「냉전과 한국」; 이원덕,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연구」; 최광녕, 「한국전쟁의 원인에 관한 연구」; 서주석,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연구: 미국의 전쟁제한 정책 결정과정과 그 원인을 중심으로」; 채용기, 「한국전쟁의 종전에 관한 연구」; 하영선, 「북한의 한국전쟁해석」.

76) 목차는 다음과 같다. 손호철, 「한국전쟁과 이데올로기지형: 국가, 지배연합, 이데올로기」; 이삼성, 「한국전쟁이 냉전과 한미관계에 미친 영향: 전통적 시각과 비판적 시각의 비교」; 김대환,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강문구, 「한국군부의 창설·변화과정: 해방이후 한국전쟁기까지」; 유석춘, 이우영, 장덕진, 「한국전쟁과 남한사회의 구조화」; 강정구,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건설」; 이완범, 「한국전쟁연구의 국내적 동향: 그 연구사적 검토」.

주류였지만 『이해』와 『연구』 저자들보다는 비교적 세대가 높으며 중도적 흐름까지도 포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논문집이었다고 할 수 있다.

VII.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냉전기의 새로운 연구경향으로서의 다국사료교차분석: 세대교체와 후기수정주의-아카이브 결합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들어서 6·25전쟁 연구자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1980년대 말 탈냉전이 시작될 즈음에는 이러한 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했는데 1988년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에서 「한민족의 단일성과 한국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⁷⁷⁾을 작성한 허만호 교수와 역시 1988년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Western Intervention in Korea, 1950~1954”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김계동(金啓東) 박사 등이 그 주역이다. 허만호 교수는 『한국정치학회보』 제23집 1호 (1989)에 「한민족의 단일성과 지속성: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실었고,⁷⁸⁾ 김계동 박사는 「한반도 분단과 전쟁에 있어서 외세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창간호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9); 「미국의 대한반도군사정책변화」, 『군사』 제20호(1990)⁷⁹⁾; 「한국전쟁과 영미의 외교적 갈등」, 『국제정세』 (1990년 6월);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 전쟁기원과 중국의 참전과정」, 『통일문제연구』 제2권 2호(1990년 여름); “중국의 한국전 개입 이후 미국의 세력권 회복 전략,” 『軍史』 제56호 (2005년 8월); “한반도 분단과 전쟁 과정에서의 유엔의 역할,” 『軍史』 제67호 (2008년 6월)⁸⁰⁾; “中國의 韓國戰 介入에 關한 英國의 政策,” 『軍史』 제41호 (2000년 12월)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 또한 그는 학위논문을 Foreign Intervention in Korea라는 제목으로 영국 Aldershot에 있는 Dartmouth 출판사에서 1993년에 간행했으며 2000년 서울대 출판부에서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민족분열과 국제개입 갈등』을 간행했다.

77) Man-Ho Heo, “La Constance de l'Unite Nationale Coreenne: essai d'une nouvelle interpretation de la guerre de Corée”(한민족의 단일성의 지속성: 한국전쟁의 새로운 해석을 위한 한 시론), Ph. D. Thesis, É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1988.

78) 허만호, “6.25 전쟁의 국내적 요인: 국가건설과정에서의 폭력의 심화,”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6.25 전쟁의 재조명: 전쟁의 원인, 수행과정 및 결과, 한국국제정치학회-동북아전략연구소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문, 1999년 6월 17일 등이 특기할 만하다.

79) 미국의 대한군사정책과 관련해서는 李美淑, “6.25전쟁기 미국의 한국군 증강정책과 그 특징,” 『軍史』 제67호 (2008년 6월)도 있다.

80) 유엔에 관해서는 박흥순, “한국전쟁과 유엔의 개입 (1950),” 강성학 (편), 『유엔과 한국전쟁』 (서울: 리북, 2006)도 특기할 만하다.

1990년대 중·후반에는 국내·국외 가릴 것 없이 6·25전쟁 연구자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자로는 전술한 박명립 교수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면면을 들 수 있다. 먼저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1945-61년간의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 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서동만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이론으로 학위를 한 김영호,⁸¹⁾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1996년 「한국의 국가체제 형성과정: 제1공화국 국가기구와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학위를 받은 서주석,⁸²⁾ 프랑스 소르본느대학교에서 6·25전쟁 이후의 유럽 문제로 1996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김명섭,⁸³⁾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이승만 시대 안보문제로 1996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홍용표⁸⁴⁾ 등이 199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6·25전쟁 연구자들이다. 또한

81)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서울: 두레, 1998)은 전쟁의 기원뿐만 아니라 전개과정을 쐐기(wedge)이론이라는 국제정치이론에 토대하여 분석한 저서이다. 미 버지니아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을 증보-변역한 것으로 2006년 성신여대 출판부에서 개정판이 나왔다. 스탈린이 전쟁을 주도했음을 주장했다. 즉 미국과 소련 사이에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된 냉전대결에서 소련이 세계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하고 지원했다는 '스탈린의 롤백 전략'을 통해 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서평으로는 김명섭, "한국인의 한국 전쟁 연구: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김영호 著 <書評>," 『동아시아비평』 2 (1999년 4월), pp. 130-141이 있다. 또한 金暎浩, "맥아더 해임과 문민우위 원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비판적 고찰," 『軍史』 제71호 (2009년 6월); "미국의 6·25전쟁 연구 동향," 『軍史』 제55호 (2005년 6월); 金暎浩, "한국전쟁시 춘천전투의 세계사적 의의," 『戰史』 제3호 (2001년 6월)도 있다.

82) 전술한 바와 같이 그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1986년 석사학위 논문 제목은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연구: 미국의 전쟁제한정책 결정과정과 그 원인을 중심으로"이다.

83) 그는 "INTEGRER POUR REGNER: La stratégie globale de l'administration Truman et l'origine de la régionalisation tripolaire"(통합과 지배: 트루먼행정부의 세계전략과 삼각적 지역체제의 기원)라는 제목으로 프랑스 Paris I-Panthéon Sorbonne 대학에서 1996년 6월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르누뱅(Pierre Renouvin)과 뒤로젤(Jean-Baptiste Duroselle)의 프랑스 국제관계사 학풍을 이어받아 한국의 국제관계사를 꽃피우려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명섭, "한국전쟁이 냉전체제의 구성에 미친 영향," 『國際政治論叢』 제43집 1호 (2003년 4월), pp. 115-133; 김명섭, "한국전쟁 직전의 '애치슨선언'에 대한 재해석: 서유럽에서 동아시아로 확장되는 미국의 전략적 관심," 『軍史』 제41호 (2000년 12월); 김명섭, "6·25전쟁 직전의 '애치슨선언'에 대한 재해석: 서유럽에서 동아시아로 확장되는 미국의 전략적 관심," 박두복(편), 『한국전쟁과 중국』(서울: 백산서당, 2001); 김명섭, "전쟁 명명(命名)의 정치학: '아시아-태평양전쟁'과 '6·25전쟁',"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0집 제2호 (2009년 2월), pp. 71-98; 김명섭, "아시아-태평양전쟁과 6·25전쟁," 한국전쟁학회 학술회의 발표문, 2006년 3월 31일; 김명섭, "냉전의 종식과 연구의 열전," 한국전쟁연구회(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서울: 백산서당, 2000); 문정인-김명섭(공편),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김명섭, "한국전쟁 연구를 위한 다국 사료 교차 분석법과 그 국내적 기반," 『정신문화연구』 제23권 2호 (2000년 여름); 김명섭, "아시아-태평양전쟁과 한국의 주권회복,"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4호 (2005년 겨울), pp. 5-36; 김명섭, "증언을 통해 재구성하는 한국전쟁사의 쟁점," 『사회와사상』 통권 제22호 (1990년 6월), pp. 202-238; 김명섭, "전쟁당시의 통일행정과 그 좌절," 『국제정세』 통권 제12호 (1990년 6월), pp. 36-47; 김명섭, "분단의 구조화 과정과 한국전쟁," 김명섭(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4 (서울: 한길사, 1989); 김명섭, "해방 전후 북한현대사의 쟁점," 김명섭(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6 (서울: 한길사, 1989) 등의 6·25전쟁 관련 업적이 있다. 이외 주제에 관한 국제관계사 분야 글은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2호와 3호 (2003)과 『국제정치논총』 제36집 2호 (1996), 40집 3호 (2000), 45집 2호 (2005) 등에 실려 있다.

84) 그는 199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로스마리 풋(Rosemary Foot) 교수의 지도아래 작성한 박사학위논문("State Security and Regime Security: The Security Policy of South Korea

1999년에 학위를 받은 양영조(梁寧祚) 박사는 2007년 『한국전쟁과 동북아 국가정책』을 선인에서 같은 해에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1950』 한국학술정보에서 간행했다.⁸⁵⁾ 또한 國防軍史研究所에서 『韓國戰爭 以前 38度線 衝突: 1945-1950』을 1999년에 출간했다.⁸⁶⁾

이러한 새로운 연구자들의 등장은 기존의 전통주의적 학계를 변화시키고 세대 교체의 바람을 몰고 왔다. 이들은 대체로 새로운 자료를 동원해 기존의 해석을 재해석하면서 탈냉전시대 6·25전쟁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기존의 연구자들과는 다른 새로운 주제를 개척해 6·25전쟁 연구의 영역을 다양화시켰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연구경향의 또 다른 특징은 다국사료교차분석법이다. 전통주의는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사료에 국한해 논의를 전개했는데 이러한 일국적 연구의 한계를 뛰어 넘는 것이 다국언어-다국사료교차분석법이다. 이는 21세기 지구화의 조류와도 일맥상통하며 아카이브 등에서 수집한 1차자료와 기존의 시각을 결합시키는 후기수정주의적 접근과도 어느 정도 맥이 닿고 있다.

1990년대 소련방이 몰락하면서 소련 측 자료가 전부는 아니지만 비교적 체계적으로 공개되자 기존의 전통주의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으며 전통주의에다 고증을 더하여 “orthodoxy plus archives”라고 칭해지는 후기수정주의(post-revisionism)가

Under President Syngman Rhee, 1953-1960”)을 증보해 *State Security and Regime Security: President Syngman Rhee and the Insecurity Dilemma in South Korea* (London: Macmillan, 2000)라는 저명한 출판사의 단행본을 간행했다.

85) 이 책은 그의 1999년도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남북한 군사정책과 6.25전쟁의 배경 연구: 정부수립초기(1948-1950년)를 중심으로”를 증보한 것이다.

86)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업적이 있다. 梁寧祚, “6·25전쟁시 중국군의 지구전 전략과 군사개혁: 조중연합군사령원 彭德懷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3집 (2005년 여름); 梁寧祚, “한국전쟁기 해외 군사경력자들의 재편과정과 정치화,”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6집 (2003년 가을); 양영조, “1953년 6월 반공포로 석방과 의미,” 『鄉防저널』 제16권 6호 (2011년 6월); 梁寧祚, “北韓의 韓國戰爭 兵力 動員體制 樹立過程,” 『戰史』 제3호 (2001년 6월); 梁寧祚, “해방직후 냉전이 38도선의 군사적 충돌에 미친 영향,” 『軍史』 제55호 (2005년 6월); 梁寧祚, “한국전쟁시 대구지역 피난민 실태 분석,” 『軍史』 제50호 (2003년 12월); 梁寧祚, “1951년 단장의 능선 전투와 군사분계선 협상,” 『戰史』 제5호 (2003년 6월); 梁寧祚, “중공군 신정공세와 미국의 38도선 유지 전략,” 『戰史』 제4호 (2002년 6월); 양영조, “한국전쟁 이전 미국의 한반도 군사정책: 포기인가 고수인가?” 『軍史』 제41호 (2000년 12월); 梁寧祚, “韓國戰爭 直前 南北韓의 軍事政策 比較,” 『戰史』 제1호 (1999년 9월); 梁寧祚, “蘇聯의 對北韓 軍事政策 1948-50,” 『軍史』 제39호 (1999년 12월); 양영조, “38선 충돌과 이승만정권의 대응 (1949-1950),” 『역사와현실』 27 (1998년 3월), pp. 52-75; 梁寧祚, “韓國戰爭 以前(1948-50) 北韓의 統一論과 그 性格,” 『軍史』 제33호 (1996년 12월); 梁寧祚, “韓國戰爭時 勞務動員과 運營에 관한 研究,” 『軍史』 제29호 (1994년 12월); 梁寧祚 “韓國戰爭과 日本의 役割,” 『軍史』 제27호 (1993년 12월); Jay Luvaas, “戰爭의 歷史的 敎訓,” 梁寧祚 (譯), 『軍史』 제22호 (1991년 6월). 양 박사는 『占領政策·勞務運用·動員』(서울: 國防軍史研究所, 1995)을 내기도 했는데 북한 전시동원에 대해서는 朴英子. “6·25전쟁기 북한의 '후방정책': 후방 전시동원에 대한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軍史』 제57호 (2005년 12월)에 나와 있다.

하나의 대안적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1970년의 『후르시초프회고록』,⁸⁷⁾ 1980-90년대에 이어진 소련 거주 공산권 인사들의 증언에다가 최근에 공개된 소련 문서 등은 6·25전쟁의 진상에 더욱 가까운 분석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전통주의자들의 입장을 보완시켜 주었다. 러시아 옐친 대통령은 대한민국 김영삼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시(1994년 6월 1일부터 6월 4일) 6·25전쟁에 관련된 비밀문서(러시아 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와 러시아외무부외교정책문서보관소 소장 문서)를 제공했다.⁸⁸⁾ 현재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에서 『한국전쟁(1950. 6. 25) 관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53』, 『한국전쟁(1950. 6. 25) 관련 러시아문서: 보충문헌, 1949-53』이라는 표제 하에 소장하고 있는데 원본은 216건 548페이지 분량이며 번역본과 합치면 1,100페이지 가량 된다.⁸⁹⁾ 그런데 이 자료들은 러시아가 임의로 선별하여 제공한 것들이므로 전쟁의 전체상을 객관적으로 그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원문서(러시아 외무성 관계자가 작성한 것을 근거로 대한민국 외무부가 번역한 요약과 내용구성에는 6월 23일-30일)는 제공당시 빠져있었다. 소련문서가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날조하려고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공당시 은폐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므로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사료비판이 필요하다⁹⁰⁾ 러시아는 공개 당시 6·25전쟁의 발발에 있어 김일성의 개전의지만을 부각시켜 그 책임을 김일성에게만 전가시키려고 선별적으로 공개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

87) 1970년대 전에 *On the Korean War, 1950-53, and the Armistice Negotiation*이라는 제목의 소련 자료집이 있었다. 이는 미국과 전쟁 중인 베트남에 대한 소련의 지원문제를 중국, 월맹측 관계관과 협의하려는 소련관계관들에게 배경정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소련 외무성이 6·25전쟁에의 소련과 중국의 개입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다.

88) “러시아 제공 한국전쟁 관련문서: 6.25의 기원은 이렇다.” 『통일한국』, 통권 제129호 (1994년 9월), 82~89쪽.

89) 다음 자료집은 주요 자료를 일지와 내용구성 형식으로 요약한 것이다. 『한국전쟁 관련 소련 극비 외교문서 (1949. 1-1953. 8)』 (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1994);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비밀 외교문서』 (서울: 서울신문사, 1995). 그런데 이들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 기본문헌과 보충문헌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서울신문의 연재물(“6·25내막 모스크바 새증언”: 1995년 5-6월에 연재)은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부학장 바자노프 부처가 제공한 것이었으며 그들의 저서에는 이들 문서들에다가 김영삼대통령 제공본에는 없는 새로운 문서가 첨가되어 있다.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김광린 (역) (서울: 열림, 1998); Evgeniy P. Bajanov and Natalia Bajanova,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The Most Mysterious War of the 20th Century, Based on Secret Soviet Archives," Completely Rewritten and Edited by Dr. & Mrs. Tong-chin Rhee.

90) 한편 일본의 産經新聞社와 영국의 텔레비전국은 1995년 여름에 1950년 6월 26일 자하로프 참모장에게 보내는 슈티코프의 보고서를 입수했다. 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6-7 (Winter 1995/1996), pp. 39-40. 『正論』은 1950년 7월 15일, 19일 혹은 20일, 8월 28일의 슈티코프 보고, 10월 7일자 마트베예프(자하로프의 가명) 보고 등 모두 4점의 신자료를 발굴해서 발표했다. 『正論』 (東京: 産經新聞社, 1995년 11월-12월).

심을 만들게 했었다. 그러나 그 후 전쟁 직전 문서까지도 공개되었으므로⁹¹⁾ 의혹은 대체로 불식되었다.⁹²⁾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는 위 자료에다가 전현수 교수가 수집한 자료를 첨가한 결정판이다.

또한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 등의 주도로 구소련 시대의 비밀문서 발굴작업이 행해졌는데 이 중 6·25전쟁 관계 자료는 한국 외무부 소장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 상당 부분이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⁹³⁾ 등에 실려 있으며 웹에도 제공되어 있다.⁹⁴⁾ 웨더스비가 수집한 자료는 406건 1,148페이지 분량이다.⁹⁵⁾ 이들 러시아 자료는 이상 제기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매우 귀중한 자료임에는

91) 예를 들면 1950년 6월 26일 슈티코프가 자하로프에게 보낸 문서에 의하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40분에 인민군의 반격이 개시되었다고 적고 있다. "Report on Military Situation by Shtykov to Cde. Zakharov," June 26 1950, http://www.wilsoncenter.org/index.cfm?topic_id=1409&fuseaction=va2.document&identifier=5034BF66-96B6-175C-911EAEC95D486CF7&sort=Collection&item=The%20Korean%20War (검색일 2010년 9월 18일).

92) 기광서 교수는 열친 제공 문서의 러시아아카이브 소재 원문서의 문서번호를 추적한 결과 1950년 6월 전후의 민감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공되었으며 불리한 부분을 빼버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광서 교수와의 인터뷰," 2000년 6월 10일; 2010년 9월 17일.

93) 이에 기반한 연구물들은 1993년 이후 다음과 같이 우드로 윌슨 센터 등에서 간행되었다. Kathryn Weathersby,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45-1950: New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Working Paper No. 8, Washington, D. 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1993; "The Soviet Role in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War: New Documentary Evidenc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2, No. 4 (Winter 1993), pp. 425-458; "To Attack, or Not to Attack? Stalin, Kim Il Sung, and the Prelude to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5 (Spring 1995), pp. 1-9;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6-7 (Winter 1995/1996), pp. 30-84; Vladislav Zubok, "To Hell with Yalta!: Stalin Opts for a New Status Quo,"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6-7 (Winter 1996/1997), pp. 24-27; Alexandre Y. Mansourov, "Stalin, Mao, Kim, and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6-7 (Winter 1995/1996), pp. 94-119; "Communist War Coalition Formation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h. 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1997; SHEN Zhihua,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ussian and Chinese Version of Mao's 2 October 1950 Message to Stalin on Chinese Entry into the Korean War: A Chinese Scholar's Reply," translated by CHEN Jian,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8-9 (Winter 1996/1997), pp. 237-242; Dieter Heinzig, "Stalin, Mao, Kim, and Korean War Origins, 1950: A Russian Documentary Discrepancy,"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8-9 (Winter 1996/1997), p. 240.

94) 우드로윌슨센터의 '국제냉전사 프로젝트(Korean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KWIHP)의 "The Korean War" 항목에 영어로 번역되어 있다. http://www.wilsoncenter.org/index.cfm?topic_id=1409&fuseaction=va2.browse&sort=Collection&item=The%20Korean%20War (검색일 2010년 9월 19일).

95) 와다 하루끼, 『한국전쟁』, 서동만 (역)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9), p. 354. 이외에 『서울신문』도 950여 건, 3천 페이지를 입수했다고 하며 1995년 5월 15일부터 8월 11일까지 6·25전쟁 관련 특집을 연재했다.

분명하다.

그런데 외부개입자 중 주로 미-소가 자료를 공개했고 중국은 공식자료(毛澤東의 전문 중심)와 회고담 등을 선택적이고 비체계적으로 공개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역시 毛澤東이 외국에 보낸 전문 등인데,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에서 1987-1990년에 4책으로 편집-간행한 『建國以來毛澤東文稿』 중 한국전쟁 관련 부분이 “毛澤東의 전쟁지휘 전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월간조선』 (1991년 8월)에 번역되었다.⁹⁶⁾ 중국은 자료를 현재의 입장에서 개작하기도 하므로 인용할 때에는 다른 사료와의 교차 비교를 통한 사료비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공식전사는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가 1987년 공간한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이다. 이 책은 『월간조선』 (1991년 8월)에 소개되었으며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에서 번역해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抗美援朝戰史』라는 이름으로 세경사에서 1991년에 번역되었다.⁹⁷⁾ 이러한 중국 문서와 증언에 주로 기반한 연구가 비교적 축적되었다.⁹⁸⁾

96) 총 46통의 전보가 번역된 영문본으로는 Li Xiaobing, Wang Xi, and Chen Jian, "Mao's Dispatch of Chinese Troops to Korea: Forty-Six Telegrams, July-October 1950," *Chinese Historians*, Vol. 5, No. 1 (Spring 1992), pp. 63-86가 있다. 또한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p. 229-291에 전쟁관련 82개의 공식 문서들이 수록되었는데 그 중 62건이 『建國以來毛澤東文稿』에 수록된 것이다. 후자는 세르게이 곤자로프-존 루이스-쉐리타이, 『흔들리는 동맹: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한국전쟁』, 성균관대학교 한국현대사연구반 (역), (서울: 일조각, 2011)으로 번역되었다.

97) 한편 紫成文-趙勇田,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板門店談判』, 尹永茂 (역) (서울: 한백사, 1991)도 특기할 만한 중국의 자료이다.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으로 참전했던 洪學智의 회고록 『抗美援朝戰爭回憶』 再版 (北京: 解放軍 文藝出版社, 1991)을 번역한 『중국이 본 한국전쟁: 인해전술의 전쟁기록』, 홍인표 (역) (서울: 고려원, 1992); 『중국이 본 한국전쟁: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 홍학지의 전쟁 회고록』, 홍인표 (역)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도 있다. 한편 중국 외교관 伍修權이 1983년 8월부터 5회에 걸쳐 北京에서 발행하는 격주간지 『世界知識』 (제16호 - 제20호)에 “在外交部八年的經歷 (1950. 1 - 1958. 10)”이란 제목으로 연재한 것을 “伍修權의 外交回顧錄”으로 『中蘇研究』 제8권 제1호, 제2호 (1984년 봄, 여름) 두 호에 걸쳐 번역-게재되었다. 中國 공산당 중앙학교 산하 당사연구소 연구원 姚旭이 연구소 기관지 『黨史研究』에 1980년에 실은 “抗美援朝的英明決策”을 당시 미국 예일대 교수였던 이흥영 교수의 제공으로 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한 현명한 정책: 중국인민지원군이 출국하여 참전한 30주년을 기념하며,” 『中蘇研究』 제8권 4호 (1984년 겨울)에 번역되었다.

98)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Hao Yufan and Zhai Zhihai,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History Revisited," *China Studies Quarterly* No. 121 (March 1990), pp. 94-115; 자이 지하이, “中國의 韓國 戰爭 參戰 決定,” 김철범 (편), 『진실과 증언: 40년 만에 밝혀진 韓國 戰爭의 진상』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160-196; 자이 지 하이, “中國의 韓國戰爭 參戰 決定,” 김철범-제임스 매트레이 (공편), 『韓國과 냉전』 (서울: 평민사, 1991), pp. 235-264; Hao Yufan and Zhai Zhihai,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History Revisited," Kim Chull Baum and James I. Matray, eds., *Korea and Cold War: Division, Destruction, and Disarmament* (Claremont, California: Regina, 1993), pp. 141-166; 朱建榮, 『毛澤東의 朝鮮戰爭: 中國가 鴨綠江을 渡るまで』 (東京: 岩波書店, 1991, 2004년 개정판); 주지안롱(朱建榮), 『마오쩌둥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서각수 (역) (서울: 역사넷, 2005); 주건영 “마오쩌둥의 한국전쟁-중국이 압록강을 건너기까

한편 북한은 공식 문서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전에 대한 확증은 불가능하지만 남한⁹⁹⁾-미-소-중의 자료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북한 노획문서¹⁰⁰⁾만을 놓고도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북한-남한-미국-소련-중국-일본 등 관련국의 다국자료를 다층적으로 교차비교하는 방법이 후기수정주의적 조류의 하나이다.

이러한 아카이브와 후기수정주의의 결합을 피한 대표적 연구물로 들 수 있는 것이 박명립의 학위논문을 증보한 저서, 와다 하루끼의 저작,¹⁰¹⁾ 김영호의 저작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서울: 두레, 1998) 등이다. 특히 와다는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등 4개 외국어와 일본어 등 5개 국어를 해독할 수 있다.

지: 서평,” 李炳柱(역), 『軍史』 제63호(2007년 6월), pp. 113-146; 平松茂雄, 『中國と朝鮮戦争』(東京: 勁草書房, 1988); 황인모(역), 『중공과 한국전쟁』(서울: 병학사, 1989);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hu 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세르게이 곤자로프·존 루이스·쉐리타이, 『흔들리는 동맹: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한국전쟁』, 성균관대학교 한국현대사연구반(역), (서울: 일조각, 2011); 조성훈, “마오쩌둥의 군사사상이 한국전쟁에 미친 영향,” 『해외한국학평론』 2(서울: 일조각, 2001), pp. 103-129; Chae-Jin Lee and Doo-Bok Park, “China and the Korean War,” *China and Korea: Dynamic Relations* (Stanford: The Hoover Institute, 1996), pp. 7-58; SHEN Zhihua,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ussian and Chinese Version of Mao's 2 October 1950 Message to Stalin on Chinese Entry into the Korean War: A Chinese Scholar's Reply,” translated by CHEN Jian,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8-9 (Winter 1996/1997); 沈志華, 『毛澤東-斯大林 与 朝鮮戦争』(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003); 沈志華, “蘇聯과 韓國戦争: 러시아 비밀 해제 당안 속의 역사 진상,” 『現代北韓研究』 3(2000), pp. 11-91; 楊奎松, “中國의 조선 출병 시말,” 『現代北韓研究』 3(2000), pp. 93-148; 박두복, “中國의 韓國戦争 介入원인,” 韓國戦争研究會(편), 『탈냉전시대 韓國戦争의 재조명』(서울: 백산서당, 2000), pp. 143-172; 朴斗福, 『中共參加韓戰原因之研究』(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75); 이병주, “중국의 한국전쟁개입과 그 영향,” 한국국제정치학회(편), 『한국전쟁의 역사적 재조명』(서울: 국제정치학회, 1990); 송재경, “중국의 한국전 개입의 내정적(內政的) 요인분석,”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991; Lawrence Stephen Weiss *Storm and the Cradle: the Korean War and the Early Yea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53*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은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9)의 연구 수준을 한 차원 더 심화시킨 것이다. 화이팅은 中國參戰의 배경을 외부의 안보적 동기에서 구했는데, 陳兼과 張曙光 등은 모두 中國參戰의 中國 내정치적 연원과 파급효과 등에 주목하고 있다.

99) 남한의 경우는 자료집 등을 통해 제한된 양의 비밀자료도 공개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의미를 평가할 수 있는 보고서는 거의 없고 작전관계 자료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미-소에 비해 그 질적 수준이 다소 낮은 편이다.

100) 북한 자료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노획한 북한 문서”에서 그 편린을 볼 수 있으나 내부적인 정책결정 문서 등은 거의 없다. 13만 여장의 노획문서를 검색한 일본 언론인 하기와라 료는 조선전쟁관련 자료집을 일본에서 간행했다. 萩原 遼, 『朝鮮戦争』(東京: 文藝春秋, 1993).

101) 和田春樹, 『朝鮮戦争』(東京: 岩波書店, 1995); 서동만(역), 『한국전쟁』(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9). 한국어 번역본은 원서의 에필로그가 생략되고 보설로 “러시아 새 자료에 따른 검토”가 추가되었다.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의 기원』 1권에서 주로 미국 내쇼날아카이브에 있는 미국 문서와 북한노획문서, 한국에서 수집한 한국자료 등에 의존했는데 1990년에 간행한 그의 『한국전쟁의 기원』 2권은 특히 미국 문서에 치중했으며 북한문서는 비교적 소홀히 취급했다. 이에 비해 박명림 교수의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전2권 (서울: 나남, 1996)은 그전까지 소홀히 취급되었던 한국 정책 결정자들의 인터뷰 기록과 작전명령 등 내부 문서의 발굴에 기여했다. 그렇다고 그의 저작이 미국 등의 문서를 소홀히 다룬 것은 아니다. 특히 그는 북한노획문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6·25전쟁이 김일성의 주도로 발발되었음을 밝히려 했다.¹⁰²⁾

한편 김영호 교수가 미 버지니아 대학에서 작성한 박사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간행한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서울: 두레, 1998)은 1990년대 후반에 나온 관계로 미국 문서 외에 1990년 중반 이후 공개된 러시아 문서도 상당 부분 참조하여 보완할 수 있었다.

그런데 러시아 문서의 공개가 기존의 전통주의적 견해를 보다 더 강화시켰으며 수정주의를 완전히 압도했다는 평가도 있다. 소련의 몰락으로 ‘고개를 숙인’ 수정주의가 러시아 문서의 공개로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남침설에 국한된 견해이며 남침설이 정설로 정착된 후 소모적인 논쟁이 지양되어 수정주의-전통주의간에 생산적 논쟁을 전개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국면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점에서도 진보적 입장인 수정주의가 완전히 패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건설적 논쟁이 시작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남침이 있게 한 구조적 요인이지만 쌍방이 모두 무력통일을 호언장담했던 상황에서 전쟁의 주도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수정주의자들의 주요한 주장 중의 하나였다. 또한 6·25전쟁의 전체상과 연결시키면 러시아 문서 발굴로 인한 다국사료 교차 분석 방법의 도입으로 인해 수정주의자들은 문제의식을 오히려 심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와다 교수는 다른 연구자들이 비교적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중국측 자료의 분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 6·25전쟁을 국공내전의 연장선상에 본 사실을 강조해 북한-중국 관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그는 중국의 6·25전쟁 참전 배경을 설명하려면 북한-중국 사이의 깊은 역사적-인간적-심리적 연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102) 朴憲玉, “6.25전쟁에서 김일성의 역할과 북한군의 전쟁수행.” 『軍史』 제63호 (2007년 6월)에서도 김일성의 역할이 지대함을 밝히고 있다.

연구의 시각과 내용 면에서 커밍스와 박명림의 연구가 기원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데 비해 와다 교수는 기원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지만 전쟁의 직접적 배경이나 전쟁과정에 그 주요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즉 개전에서부터 정전협정까지를 주로 다루고 있다. 물론 박명림도 발발의 직접적 배경을 중시하고 있으며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 2권은 1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발의 직접적 배경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중국참전의 배경에 대해서도 박명림의 연구는 비교적 상세한 해설을 하고 있다. 따라서 박명림-커밍스-와다-김영호 4인의 저작을 비롯해 다른 기존 연구성과를 함께 비교-대조한다면 6·25전쟁의 포괄적 전체상을 그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연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설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보다 더 엄밀한 업적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검토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면에서 각각의 연구는 모두 하나의 자료를 침소봉대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국사료교차 분석을 통해 다양한 비교를 행하여 각각의 사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안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1990년대 후반기(1997, 1998, 1999) 6월 25일에 해마다 개최된 한국전쟁연구회의 세미나 발표자의 면면을 보면 1990년대 전반기에 활동했던 전통주의적 중진 연구자들과 신진 연구자의 균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97년의 세미나 주제는 「한국전쟁과 한반도 통일문제」였으며 1998년은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1999년은 「한국전쟁의 회고와 과제: 새 천년에의 의미」였다. 이러한 활발했던 1990년대 후반기의 세미나가 2000년 한국전쟁 50주년을 기념하여 공간되었는데 장을 달리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VIII. 6·25전쟁50주년 기획, 2000년

2000년에는 6·25전쟁 5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세미나와 저서들이 공간되었다. 먼저 한국전쟁연구회 (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서울: 백산서당, 2000)이 특기할 만하다. 이 저작은 기존에 한국전쟁연구회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원고와 새로 작성된 것을 묶어서 공간한 것이다.

총4부로 이루어졌는데 제1부는 한국전쟁의 해석과 연구동향이다. 먼저 전쟁 연구의 선구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학준 교수는 「6·25전쟁에 관한 몇 가지 예비적 토론」이란 글에서 한국전쟁이나 6·25동란이라는 용어보다 6·25전쟁이라는 말이 상

대적으로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섭 교수는 「냉전의 종식과 연구의 열전」에서 탈냉전기 6·25전쟁 연구가 활발해진 상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김영호 교수는 「한국전쟁 연구의 향후 과제와 전망」에서 6·25전쟁의 기존 연구과제를 원인-전개과정-종전과정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원인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6·25전쟁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개과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로 중국의 개입을 들고 있다. 휴전회담과 연결시킨 기존의 종전과정에 대한 연구는 소련의 비밀문서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스탈린이 한국전쟁의 종전을 유럽에서의 공산세력 팽창과 어떻게 전략적으로 연결 짓고 있었느냐와 국군 포로의 문제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6·25전쟁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6·25전쟁이 남북한의 국가형성, 남북관계, 동북아질서 형성, 세계 냉전구도에 끼친 영향 등을 경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부는 한국전쟁의 국제적 기원-개입과 갈등인데 이완범 교수의 「한국전쟁의 국제적 기원」에서는 세계적 냉전이 동북아 지역에 어떻게 침투하는지가 역사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두복 교수의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원인」은 이 분야의 권위자답게 기존의 논쟁을 잘 정리하고 있으며 중소관계와를 개입결정의 피동적 원인으로 그리고 保家衛國을 개입의 능동적 측면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대소일변도 정책과 절박해진 전통적 友敵 관념의 전도, 대중운동의 전개, 중국과 毛澤東에 대한 스탈린의 불신을 개입의 또 다른 능동적 측면으로 보고 있다. 6·25전쟁에 대한 중국의 개입결정은 피동적 요인과 능동적 요인의 상호 결합의 결과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한국전 개입결정은 외래적 강박과 내재적 自願이 상호 결합된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김계동 교수는 「한국전쟁 기간 영-미간의 갈등」을 유화론과 강경론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강경론과 유화론의 대립을 중국 참전과 ‘중국에 대한 침략자 규정 결의안’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홍용표 박사는 「전쟁 전개과정에서의 한-미간의 갈등」을 이승만의 북진통일론과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단독 북진 위협과 반공포로 석방 문제 등이 심층적인 주제들 중의 하나이다.

제3부는 한국전쟁과 남북한 국가체제 형성인데 서주석 박사는 「한국전쟁과 남한의 국가형성」을 재정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는 역사사회학적 틀을 통해 한국에서의 전쟁-국가형성 과정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서동만 교수는 「한국전쟁과 북한체제의 변화」에서 전시농업생산체제와 지방통치체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전후 사회주의건설체제를 분석하고 있다. 홍용표 박사의 두 번째 글인 「한국전쟁이 남북한관계에 미친 영향」이 김일성의 반미의식과 이승만의 반공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4부는 한국전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다. 라종일 교수는 「북한통치의 반성」이라는 제목에서 1950년 가을 미국이 주도한 유엔의 북한점령통치를 강대국 정치라는 시각에서 매우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의 국무부 문서 중 795시리즈와 영국 런던의 공공기록처(Public Record Office; 약칭 PRO) 문서 등에다가 국내 자료를 포함하여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는 그의 글은 다국사료교차분석의 선구자적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온창일 교수는 「한국전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중국의 참전에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그려내고 있다. 중국의 개입이 한국전쟁을 완전히 새로운 전쟁으로 전화시켰으며 결국 군사적 승리대신에 정치적 타협안을 모색할 밖에 없게 되었다. 미국은 전쟁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논의했는데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한미동맹관계는 진전되었던 것이다. 허만호 교수는 「휴전협정의 평화체제화」에서 반세기 가까이 진행되어온 남북한간의 정부간 협상이 미시적-협상기술론적 관점에서 의사협상(pseudo-negotiation) 내지 협상 발전단계의 극히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미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통해 평화체제를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대안적 제안을 다루고 있다. 서주석 박사는 두 번째 글인 「한국전쟁과 한반도 안보구도의 변화」에서 한국전쟁 전후시기와 이후시기의 한반도 안보구도의 변화과정을 역사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반도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수립방향을 다룬 부분에서는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무실화) 전략을 언급한 후, ‘한국전쟁 이후체제’(post-Korean War structure)의 종식과 평화적 전환방향에 대해 논했다. 김계동 교수의 두 번째 글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이다. 이 글에서 김 교수는 국제적 탈냉전의 유형으로 3가지로 살펴보았는데 독일의 탈냉전을 교류-협력형으로 보고 있으며 유럽의 탈냉전을 신뢰구축형으로 미-소의 탈냉전을 압박-굴복형으로 명명했다. 한반도가 냉전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적 대안은 이러한 유형의 예에서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 방안으로는 대결-압박-봉쇄에서 화해-포용으로 나아가는 체제경쟁 종식 방안과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에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신뢰구축을 할 수 있는 당사자 플러스 다자적 접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상 내용을 통해서 보면 중견학자와 신진학자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전통주의와 수정주의가 수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³⁾ 1987년 전통주의자들이 주도하여 결성된 한국전쟁연구회가 1980년대 말과 1990년 초 전통주의적 연구를 조직화하고 1990년대 말 새로운 조류를 접하면서 2000년에는 새로운 종합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0년에는 여러 연구 모임에서 6·25전쟁 50주년 특집을 기획하여 새로운 의미를 되새겼다. 개최 순서대로 열거하면 우선 한국역사연구회가 6월 10일에 「한국전쟁의 재인식: 분단을 넘어 통일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모임에서 도진순 교수는 「서설: 화해와 통일을 위한 전쟁인식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정병준 선생의 「1949-50년 38선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계획», 안정애 박사의 「한국전쟁기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활동」가 이어졌다. 또한 기광서 교수의 「소련의 한국전쟁관과 개입과정», 양영조 박사의 「한국전쟁기 한국 군부의 재편과 정치화 과정」이 발표되었다.

6월 13일에는 서울대 법학연구소에서 「6·25의 법적 조명」이라는 주제 하에 한상희 교수의 「전시하의 헌법체제», 한인섭 교수의 「부역자 처벌의 법적 문제」가 발표되었다.¹⁰⁴⁾

6월 24일에는 한국정치학회, 21세기평화연구소, 한국전쟁연구회, 한국정치외교사학회 공동주최로 「한국전쟁과 21세기 한반도 평화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국제정치학회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전쟁이후 50년: 냉전적 대립에서 평화공존으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2000년에 출간된 6·25전쟁 관련 논저들은 먼저 「특집: 오늘의 시점에서 본 한국전쟁」, 『경제와 사회』 제46호 (2000년 여름)¹⁰⁵⁾와 「탈냉전기 신자료로 본 한국전쟁」, 『정신문화연구』 제23권 2호 (2000년 여름)¹⁰⁶⁾; 「한국전쟁의 미시적 분석」, 『역사비평』 통권 51호 (2000년 여름)¹⁰⁷⁾ 등 특집-기획 시리즈를 들 수 있다. 또한 김계

103) 「중-러 기밀자료들 공개... 6·25연구 활기」, 『조선일보』, 2000년 6월 23일.

104) 법에 관해서는 孫熙斗, “한국전쟁 초기의 법령 조치,” 『軍史』 제59호 (2006년 6월)도 특기할 만하다.

105) 이완범, “한국전쟁 연구 50년과 과제”; 김귀옥,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와 반성”; 공제욱, “한국전쟁과 재벌의 형성”; 정진상, “한국전쟁과 전근대적 계급관계의 해체”; 정성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과 영구군비전쟁”; 김정훈, “한국전쟁과 담론 정치: 민족해방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과 반공규율사회의 형성.”

106) 김명섭, “한국전쟁 연구를 위한 다국 사료 교차 분석법과 그 국내적 기반”; 방선주, “한국전쟁 당시 북한 자료로 본 '노근리' 사건”; 조성훈, “미국 자료를 통해 본 휴전 협상의 지연 요인 연구: 포로 문제를 중심으로”; 이완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중국-러시아 자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와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서울: 돌베개, 2000); 이희진-오일환, 『한국전쟁의 수수께끼: 분단의 미스터리, 개전의 의혹을 파헤친다』 (서울: 가람기획, 2000);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나: 한국전쟁의 진실과 의미』 (서울: 다홍미디어, 2000);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서울: 명지출판사, 2000); 이완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 (서울: 백산서당, 2000) 등 단행본을 들 수 있다. 이 들 연구는 모두 한국전쟁 50주년에 맞추어 내어놓은 것이다.¹⁰⁸⁾

또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6.25전쟁 50주년 기념』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6·25전쟁 50주년기념』, 2 (서울: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2002)도 반드시 거명해야 할 업적이다.

유영익-이채진 (공편), 『한국과 6·25전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도 특기할 만하다. 2005년에 박태균 교수가 책과함께에서 출간한 『한국전쟁』 도 주목받았다.

IX. 전쟁60주년: 2010년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산하 6·25전쟁60주년사업위원회(www.koreanwar60.go.kr)에서는 2010년 6월 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6·25전쟁60주년 국제학술 심포지엄: 6·25전쟁으로부터 글로벌 코리아까지”를 한국국방연구원 주관(매일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개최했다. 기조 강연은 ‘변혁의 시기와 두 개의 한국’이라는 주제로 로버트 스칼라피노 UC버클리 명예교수가 했다. 이후 ‘6·25전쟁의 의미와 평가’ ‘6·25전쟁이 남긴 유산’ ‘6·25전쟁을 넘어서’ 등 6·25전쟁을 중심으로 한반도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¹⁰⁹⁾ 허만호 경북대 정치학과 교수,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107) 류춘도·윤해동, “인민군 여자군의관으로 겪은 한국전쟁”; 이도영, “‘백조일손지묘’가 말하는 전쟁기 제주도 양민학살”; 서동만, “한국전쟁과 김일성”; 김동춘, “서울시민과 한국전쟁: ‘잔류’·‘도강’·‘피난’”; 김재용, “염상섭 전쟁문학과 분단극복의 눈.”

108) 이희진은 60주년에 즈음해 『625 미스터리: 한국전쟁 풀리지 않는 5대 의혹』 (서울: 가람기획, 2010)을 단독 출간했다.

109) “6·25전쟁의 세계사적 의미: 코리아의 ‘반제·반공주의’를 중심으로,” http://www.kida.re.kr/dmedia/seminar_forum/2010/0623/kms/default.htm (검색일: 2012년 9월 24일).

등이 발표에 나섰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2012년 7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국방안보 포럼 주관으로 “6·25전쟁 60주년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국가보훈처와 6·25전쟁 60주년사업위원회가 후원했는데 “6·25 전쟁과 정전체제-교훈과 나아갈 길”을 대주제하에 양영조 박사의 “6·25 전쟁 정전에 의한 봉합: 과정과 배경,” 손경호 교수의 “6·25전쟁 정전 60년 유산과 교훈: 대군사회(大軍社會)의 형성과 발달을 중심으로,” 김명섭 교수의 “한반도 영구평화론: 정전체제를 통해서, 정전체제를 넘어서”라는 소제목의 3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6·25전쟁)제60주년 관련 연구산물 모음집』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가 특기할 만한데 권말부록으로 “6·25전쟁 제60주년 전쟁사 자료 목록”이 실려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6·25전쟁 60주년 기념행사는 주로 국내외 참전용사 초청과 전쟁인식 제고 등 이벤트성 행사에 치중했으며 학술세미나가 중심은 아니었다. 또한 미국의 한국전쟁60주년기념사업회(<http://www.koreanwar60.com/>)와 연대를 꾀한 것이 특이한 점이였다.

한편 2010년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분과에서 2000년대 이후 한국 역사학계의 한국전쟁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사실로부터 총체적 인식으로, 한국전쟁 60주년 특별기획』 (서울: 휴머니스트, 2010)을 간행했다. 다음은 이 책의 목차이다.

1부 : 전쟁과 국제정치

동아시아 냉전과 6·25 전쟁¹¹⁰⁾ | 양영조

미소의 38선 정책과 남북 갈등의 기원 | 정병준

한국전쟁의 기본개념으로서 제한전의 성립과 분화 | 도진순¹¹¹⁾

한국전쟁 속의 스탈린 | 기광서¹¹²⁾

한국전쟁 휴전회담 협상전략과 지휘체계 | 김보영¹¹³⁾

110) 선행연구로는 金陽明, “동아시아의 전후 국제관계와 6·25전쟁,” 『戰史』 제1호 (1999년 9월)이 있다.

111) 다른 저자의 제한전과 핵무기에 대한 글로서는 姜昌國, “제한전 성격의 6.25전쟁과 핵무기 등 무기의 역할,” 『軍史』 제63호 (2007년 6월)가 있다.

112) 같은 저자의 奇光舒, “한국전 개입에 나타난 스탈린의 역할 실상,” 『軍史』 제63호 (2007년 6월)도 있다.

113) 같은 저자의 金甫穎, “한국전쟁 휴전회담 초기 '개성사건'과 군사분계선 협상,” 『軍史』 제67호 (2008년 6월)도 있다. 그녀는 한양대학교 사학과에서 “한국전쟁 휴전회담연구”로 2008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전쟁 휴전협정과 전쟁의 유산,” 『역사와 현실』 제80호 (2011)을 발표하기

유엔군사령부의 '수복지구' 점령정책과 행정권 이양 | 한모니¹¹⁴⁾

미국의 정전협정 일부 조항 무효선언과 그 의미 | 박태균

2부 : 전쟁과 군사전략

맥아더의 한국전쟁 군사전략 | 이상호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과 군사계획 | 양영조

미군의 뼈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 | 정용욱¹¹⁵⁾

무제한전쟁을 향하여 : 한국전쟁기 미 공군¹¹⁶⁾ 공중폭격작전의 성격 변화 | 김태우¹¹⁷⁾

공중폭격과 민간인 희생 : 1951년 1월 산성동 폭격사건과 미10군단의 파괴정책을 중심으로 | 도진순

북한의 비정규전 조직과 전개 | 김광운¹¹⁸⁾

한국전쟁 전후 빨치산의 형성과 활동 | 이선아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조직과 주요 활동 | 박동찬

3부 : 전쟁과 사회

한국전쟁기 남한 민간인 인명피해 조사의 유형과 특징 : 한국정부의 통계 · 명

도 했다.

114) 그녀는 “한국전쟁 전후 '수복지구'의 체제 변동 과정: 강원도 인제군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박사학위논문을 가톨릭대 대학원 사학과에서 2009년 작성했다. 이외에도 “'수복지구' 주민의 정체성 형성과정: '인민'에서 '주민'으로 '주민'에서 '국민'으로,” 『역사비평』 통권91호 (2010년 여름), pp. 128-150; “한국전쟁기 미국의 북한 점령정책과 통치권 문제: 평양과 양양 지역의 행정조직 구성 비교,” 『역사와 현실』 통권78호 (2010년 12월), pp. 161-193; “한국전쟁기 남한(유엔군)·북한의 '점령통치'에 대한 연구사 검토와 제언,” 『역사와 현실』 통권84호 (2012년 6월), pp. 407-431 등의 업적이 있다. 또한 “'붕기'와 '학살'의 간극: 황해도 신천사건에 대한 검토,”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전쟁의 유산담 (편),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그 유산 II: 동원과 학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2013년 4월 5일을 발표했다.

115) 같은 저자의 “한국전쟁시 미군 방첩대 조직 및 운용,” 『軍事史 研究叢書』 第1輯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도 있다. 한편 뼈라 문제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의 연구는 朴玆秀, “6.25전쟁기 뼈라의 사회기호학적 분석,” 『軍史』 제73호 (2009년 12월)가 있다.

116) 한국공군에 대해서는 다음 업적이 특기할 만하다. 李明煥, “6.25전쟁 중 한국공군의 항공작전: 1950. 6~1953. 7,” 『軍史』 제59호 (2006년 6월); 이명환, “한국전쟁 기간 중 항공작전 연구,” 『軍事史 研究叢書』 第1輯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117) 그는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공중폭격에 관한 연구,”로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2008년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또한 “한국전쟁기 북한의 남한 점령지역 토지개혁,” 『역사비평』 제70호 (2005)와 “육감에서 정책으로: 한국전쟁기 미공군 전폭기들의 민간지역 폭격의 구조,” 『역사와 현실』 제77호 (2010)를 발표했다.

118) 金光雲, “한국전쟁기 북한의 게릴라전 조직과 활동,” 『軍史』 제48호 (2003년 4월)도 있다.

부를 중심으로 | 정병준

6·25남북전쟁시기 이북 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 | 이신철

국민보도연맹, 과연 전향자단체인가 | 김선호

한국전쟁기 대구지역 피난민의 실태와 구호활동 | 양영조

마을에서의 전쟁경험과 그 기억 : '이천의 모스크바'로 불린 마을의 경험 | 이용기

전쟁 인플레이션과 '백재정' | 정진아

6·25 전쟁기 전비지출 문제와 경제조정협정 | 이현진

한국전쟁과 임시토지수득세의 실시 | 김소남

부록 : 한국전쟁과 관련 자료 수집 및 발굴현황

남북한 자료의 발굴 · 정리 · 활용 현황 | 한모니까

미국 자료 국내 수집 현황 | 윤시원

러시아 자료 발굴 및 정리 현황 | 이재훈¹¹⁹⁾

중국 자료 공개 현황 | 오규열

이 책은 기존의 정치사·외교사·군사사의 머물던 전쟁사 연구를 사회사·경제사·문화사 영역까지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사료 비판과 검증은 바탕으로 한 ‘역사주의적 접근’을 통해 한국전쟁의 총체적 역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한국전쟁 연구는 미국·중국·구소련·북한의 자료와 문서가 공개 및 발굴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기존 정치사, 외교사, 군사 측면에서의 심화된 연구에서 더 나아가 사회사, 경제사, 문화사 영역으로까지 연구주제가 확대됨으로써 전쟁의 다양한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전쟁의 기원과 발발 주체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심리전,¹²⁰⁾ 공중폭격, 수복지구, 미군사고문단, 전쟁피해, 민간인 희생과 전쟁기록, 백재정 연구와 전비지출, 임시토지수득세 연구 등 새로운 연구 영역 확장과 더불어 주제적 접근을 해왔다.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분과에서 기획 편집한 이 책은 국제적, 국내 정치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분야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민간인 연구 등 새롭게 영역을 확장해가는 최근 10년간의 한국전쟁사 연구성과를 한자리에

119) 李在勳, “한국전쟁과 소련: 전쟁 주도권 문제에 대한 재검토,” 『軍史』 제59호 (2006년 6월); 李在勳, “러시아의 한국전쟁 연구동향,” 『軍史』 제55호 (2005년 6월); 이재훈, “한국전쟁기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의 전투활동,” 『戰史』 제4호 (2002년 6월)도 있다.

120) 이에 대해서는 張泳敏, “한국전쟁 전반기 미군의 심리전에 관한 고찰,” 『軍史』 제55호 (2005년 6월); 金種淑, “6·25전쟁기 심리전 운용실태 분석,” 『軍史』 제53호 (2004년 12월); 崔勇城, “한국전쟁시 미군의 전술심리전 효과분석, 1950년 6월~12월,” 『軍史』 제50호 (2003년 12월)도 있다.

모았다. 특히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를 대표하는 글들을 한데 엮음으로써 한국전쟁이 현재까지 가지는 의미를 포괄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한국전쟁의 상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21세기 한국전쟁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 현황과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이후 이어질 전쟁사 연구의 초석 역할을 담당하고자 했다.

한반도의 분단구조와 지정학적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지만 탈냉전 이후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학계의 전쟁 연구와 인식도 나름대로 크게 발전하였다. 전쟁발발의 원인과 구조적 배경, 전쟁을 결정하고 수행한 전쟁 주체들의 사고와 행위동기, 전쟁수행 전략이 보다 풍부한 사료적 토대, 보다 정치한 분석 논리와 연구방법에 의해 해명되었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보다 너른 시야와 충실한 사실(史實) 분석에 입각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한국전쟁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전부터 논의되어온 전쟁사 인식이나 전쟁의 성격 이해와 관련한 구조적 배경과 사건, 주요 개념, 전쟁 주체들의 전략적 구도 등이 최근 10년간의 논의에서는 더욱 심화됨으로 개별 주제를 본격적으로 해명하거나 재해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책의 1, 2부에 실린 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쟁의 기원과 형성(정병준), 미국·중국·러시아(구소련) 등 주변 열강의 정책과 태도(양영조, 기광서), 제한전 개념과 교전 양측의 전쟁전략(도진순, 이상호), 휴전회담(김보영), 그리고 정전협정의 사문화 과정을 다룬 글들(박태균)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글들은 남북관계의 차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적 차원, 미·소 세계전략의 차원으로 확대하여 전쟁의 구조적 배경과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전쟁의 다양한 측면들을 본격적으로 분석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글들을 다수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의 다양성은 새로운 사료를 기반으로 한다. 1970년대 중반에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 문서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된 이래 1990년대 탈냉전 이후 구소련 문서들과 북한정부·군의 고위급 인사들의 증언, 그리고 중국 자료들이 공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전쟁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한국전쟁의 주요 행위주체였던 구소련, 북한, 중국 등 3개국의 전쟁 당사자와 관련자들이 생산한 각종 자료들이 공개 및 발굴되면서 이들 자료의 비교·교차 분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 경향은 신전통주의·신수정주의 혹은 이러한 구분과 경계를 뛰어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역사학계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사료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다각도로 한국전쟁을 연구하려는 시도들을 해왔다. 뼈라를 통한 심리전(정용욱), 미

공군의 무차별 공중폭격(김태우, 도진순), 수복지구 점령정책(한모니까), 비정규전과 빨치산(김광운, 이선화), 전쟁 피해 관련 통계나 명부에 대한 분석과 남북한 민간인 희생(정병준, 이신철, 양영조), 구술사를 통한 마을 단위의 전쟁기억 연구(이용기), 주한미군사고문단(박동찬)과 국민보도연맹(김선호), 임시토지수득세(김소남), 인플레이션(정진아), 경제조정협정(이현진) 등 전시 경제구조에 대한 연구들이 바로 그러하다. 이들 주제는 저마다 전쟁의 성격을 새롭게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전쟁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돕거나, 장래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구실을 한다.

이 책은 전후 한국사회와 역사학계가 이룬 성취를 기반으로, 전후세대 역사학자의 학문적 고민을 모았다. 특히 1990년대 이전 한국전쟁 관련 연구가 주로 전쟁의 발발과 책임 규명에서 출발하여 한국전쟁의 큰 그림을 그렸다면, 최근 역사학계의 연구는 후보천리의 우직하면서도 치밀한 작업을 통해 미시적 접근으로 한국전쟁의 총체적 역사상을 그려나가고 있다. 역사학의 본령은 철저한 사료 비판과 검증이다. 이데올로기적이고 선협적인 판단과 증거들에 의지하지 않고, 역사적 자료의 가치를 우선해서 판단하고 그에 기초해 연구를 진행하는 ‘역사주의적 접근’은 역사학자들의 일차적 덕목인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역사주의적 사료 분석을 통해 연구한 23편의 글을 실고 있다. 이들 글에는 필자들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실천적 고민들이 응집되어 있다. 이들 글에 담긴 역사학자로서의 학문적 문제의식은 한국 역사학계의 전쟁사 연구를 보다 발전시키고 풍부히 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전쟁 인식을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록으로 실린 한국전쟁 관련 국내외(남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자료 발굴 현황은 이는 이후 한국전쟁 연구를 위한 연구사적 과제의 점검과 자료 수집에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부설 현대한국학연구소는 제11차 우남학술회의를 2010년 11월 19일 개최했는데 대주제가 “이승만과 6·25전쟁”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南廷屋(남정옥) 박사는 2010년 한국학술정보에서 다음 3권의 책을 간행했다. 『6.25전쟁시 예비전력과 국민방위군』; 『미국은 왜 한국전쟁에서 휴전할 수밖에 없었을까?: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체제하의 전쟁정책과 전쟁지도를 중심으로』¹²¹⁾; 『미국의 마셜 계획과 유럽 통합 정책』.¹²²⁾ 그리고 같은

121) 이는 단국대 대학원에서 2007년에 서양사 전공으로 받은 박사학위 논문 “미국의 국가안보체제 개편과 한국전쟁시 전쟁정책과 지도”의 증보판이다.

122) 이는 충남대학교에서 1993년에 받은 석사논문 “마셜 계획(Marshall Plan)과 미국의 유럽 통합 정책”을 수정한 “미국 트루만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 마셜 플랜을 중심으로.” 『史學志』 제32호

해 이담북스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6·25 전쟁』을 삼우사에서 『6·25전쟁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를 발간했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의 영문저널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4 (Winter 2010)는 아래와 같은 특집논문(Special Issue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을 실었다.

Spencer C. Tucker, “The Korean War, 1950-1953: From Maneuver to Stalemate.”

Kwangsik Kim, “Historical Awareness of the Post-War Generation in Korea and Nati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Heo Man-ho, “Abduction of Civilians during the Korean War: Analysis of Abductee Lists and Armistice Talks.”

한편 양영조, “6·25전쟁 시 유엔을 통한 각국의 지원 연구: 유엔을 통한 각국의 물자지원을 중심으로,” 6·25전쟁 60주년 3차년도 포럼: 「6·25 전쟁지원국」 현황연구, 대한민국 국방부, 2012년 5월 10일, p. 30에 의하면 6·25전쟁시 유엔을 통해 한국을 지원한 국가는 참전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물자지원 39개국으로 총 60개국이라고 주장되었다. 또한 Myongsob Kim, “The Politics of Troop-Dispatch: Why Did the Europeans Send Their Boys to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VI No. 2 (Fall 2004), pp. 227~251¹²³⁾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참전동기가 고찰되고 있다. 한편 남도현, 『끝나지 않은 전쟁, 6·25: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6·25전쟁의 숨은 이야기, 6·25전쟁유사(六·二五戰爭遺事)』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0)도 간행되었다.

X. 중국의 전쟁 참전에 대한 국내 연구

(단국대학교 사학과, 1999년 12월), pp. 185-206의 증보판이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업적이 있다. “6·25전쟁시 이승만의 초기 대응과 전시지도자로서 역할,” 『軍史』 제79호 (2011년 6월); 남정옥, “6·25전쟁시 미국 지상군의 한반도 전개방침과 특징,” 『軍史』 제72호 (2009년 8월); 南廷屋, “6·25전쟁과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지도(戰爭指導),” 『軍史』 제63호 (2007년 6월); 南廷屋, “6·25전쟁 초기 미국의 정책과 전략, 그리고 전쟁지도,” 『軍史』 제59호 (2006년 6월); 南廷屋, “6·25戰爭時 駐日美軍의 參戰決定과 韓半島 展開,” 『軍史』 제54호 (2005년 4월); 南廷屋, “6·25전쟁기 북한의 게릴라전 지도와 수행,” 『戰史』 제6호 (2004년 6월); 南廷屋, “한국전쟁 주요 10대 전투 고찰,” 『戰史』 제3호 (2001년 6월).

123) http://kida.re.kr/data/kjda/16-2_09.pdf (검색일: 2012년 9월 24일).

한중수교 20주년을 1년 넘긴 2013년에 중국의 6·25전쟁 개입 문제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역할 등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1950년 10월 중국의 6·25전쟁개입으로 대한민국과 중국은 정면으로 대결했지만 이미 60년이 훌쩍 넘은 과거의 일이 되었으므로 이제 객관화할 수 있는 는 시간적 시차·거리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간의 전쟁이 아니라 인민지원군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기에 보다 더 쉬운 면도 있을 것이다.

명칭 면에서 한국은 6·25전쟁 혹은 한국전쟁이라고 칭하는데 비해 중국은 1950년 6월 25일부터 중국 참전 전인 1950년 10월 19일까지는 조선내전이라고 하며 그 이후는 ‘抗美援朝[전쟁]’라고 분리해서 인식한다.¹²⁴⁾ 또한 동북아3국이 참여한 전쟁인 1592-1597년간의 임진왜란에 대해 중국에서는 17세기 당시 ‘東援一役,’ ‘東事,’ ‘征東,’ ‘万曆東援之役,’ ‘万曆東征之役,’ ‘征倭援朝,’ ‘經略復國,’ ‘再造藩邦’이라고 불렀다. 한동안 ‘万曆朝鮮役’이라는 명칭이 대세이기도 했었다(役이라는 말은 戰役이라는 말과 같이 ‘어디로 나가는 큰일’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다가 한국과 비슷하게 壬辰倭禍, 壬辰戰爭으로 칭하기도 한다.¹²⁵⁾ 현대에는 조선을 구해주었다는 뜻의 ‘위안차오셴(援朝鮮), 援朝抗倭, 援朝抗日[戰爭]¹²⁶⁾라고 부르는 것이 대세이다.¹²⁷⁾ 援朝란 말은 조선을 도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이 말에는 자신들의 참전과 원조를 조선에 대한 특별한 은혜로 여기는 중국의 생색과 함께 그와 맞물린 시혜자 인식이 함축되어 있다.¹²⁸⁾ 한편 중국인들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원조를 ‘援

124) [오규열, “역자일러두기,”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抗美援朝戰爭史』, 오규열 (역), 1 (서울: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2002), p. iii. 그런데 선즈화,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최만원 (역) (서울: 선인, 2010), p. 29의 각주 26에서는 이러한 구분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좀더 깊은 학술적 토론을 위해서도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된다.

125) 陳尙勝, “山東半島与古代中韓交流的歷史進程,” 陳尙勝 (編), 『山東半島与中韓交流』 (香港: 香港出版社, 2007), p. 24. 한편 朱法武, “明援朝御倭戰爭与中日關係,” 陳尙勝 (編), 『山東半島与中韓交流』 (香港: 香港出版社, 2007), p. 232에서는 明援朝御倭戰爭라고 칭해진다. 御라는 글자는 禦의 간자로 防禦하다는 의미이다. 御는 抗보다 다소 수세적인 표현이다.

126) “援朝抗倭,” 『圖說天下: 明』 (長春: 吉林出版集團, 2007), pp. 154-155. 1950년 6·25전쟁 당시의 抗美援朝[전쟁]를 연상케 한다[그런데 중국은 1950년 6월 25일부터 중국 참전 전인 1950년 10월 19일까지는 ‘조선내전’으로 간주한다.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抗美援朝戰爭史』, 오규열 (역), 1 (서울: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2002), p. iii]. 다만 원조와 항왜(항미)사이의 위치가 바뀌었다. 16세기 말은 조선을 도와준다는 것이 주였으며 20세기 중반의 그것은 미국에 저항한다는 것이 주였던 것이다. 손위국[순웨이귀] 교수는 ‘항왜원조’라는 표현을 썼다. 孫衛國, “明兵部尙書石星與抗倭援朝戰爭,” 임진왜란 발발 420년 한-중 워크샵, 동북아역사재단 11층 중회의실, 2012년 5월 10일.

127) 劉寶全, “대의명분론과 임진왜란: 명왕조의 시각으로 본 임진왜란,” 국제전쟁으로서의 임진왜란,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한국사학사학회 공동주최 임진왜란 제7주갑 기념 국제학술대회, 2012년 11월 9일, p. 216.

越抗美'로 칭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¹²⁹⁾ 이러한 중국의 명칭에는 전통시대의 중화주의적 인식이 현대에 이르러서도 내포되어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인 학자들이 주로 한국에서 발표한 연구물들을 중심으로 중국참전 연구사를 개괄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발표한 것과 외국인들의 업적을 한국에서 번역한 것도 보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이 외국어로 한국에서 발표한 것은 본 문헌해제의 대상이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한국어로 간행한 것은 물론 외국어로 한국에서 발표한 것도 언급할 것이다. 다만 북한에서의 연구는 다른 문헌해제를 기약할 것이다. 선행 연구사 중 주로 중국에서의 연구성과에 대한 리뷰로는 중국 전문가 吳圭烈 교수의 “중국의 6·25전쟁에 대한 연구 성과와 동향,” 『軍史』 제55호 (2005년 6월); 오규열, “중국의 6·25전쟁에 대한 연구 성과와 동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학술회의: 6·25전쟁사 연구동향과 발전방안, 2012년 9월 21일, pp. 73-96이 매우 포괄적이며 탁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중국측 업적과 미국·중국·러시아의 사료 공개 등을 중심으로 한 리뷰는 선즈화,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최만원 (역) (서울: 선인, 2010), pp. 18-27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1. 1970년대까지

중국 참전에 대한 서방학계의 학문적인 연구의 효시는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이다. 이 책은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9)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중국 참전을 ‘자위적’인 것으로 평가해 그때까지만 해도 호전적이며 모험주의적인 나라로 인식되던 중국의 대외행태가 신중한 판단에서 나온 것임을 주장했다. 유엔군이 38선을 넘자 중국도 압록강을 넘었음을 강조했다. 중국 참전의 이유는 동북지역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하여 개입의 배후에 동기(motivation behind intervention)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북한-소련 협의설을 주장했다.

김학준 교수는 1970년 미국의 Kent State University에서 중국과 한국전 발발과의 관련성에 대해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는데 이는 1985년 한국연구원에서 펴낸

128) 한명기, “동아시아사 속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우리 역사 길라잡이』, 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8), pp. 228-229.

129) 이단혜, “중미관계의 긴장 완화와 '월월항미': 중국 외교전략 조정 중의 베트남 요인,” 서상문 (편), 『동아시아 전쟁사 최근연구 논문선집: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The Sino-North Korean Relations, 1945-1984의 제1부 “The Korean War and China: Sino-North Korean Relations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에 증보되어 있다. 이 논문의 핵심논지는 James Cotton과 Ian Nearly가 공편한 The Korean War in Histo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9)의 한 후인 “China's Non-involvement in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A Critical Re-assesment”에 실려 있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연구의 1970년대 선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해야 할 인사는 박두복(朴斗福) 교수이다. 그는 중화민국 문화대학에서 취득한 정치학박사 논문을 『中共參加韓戰原因之研究』라는 제목으로 臺北의 黎明文化事業公司에서 1975년에 출간했다. 그는 중공과 마오쩌둥에 대한 스탈린의 의심을 풀어주는 것이 중국이 장래를 위해 긴급하다는 판단에서 참전했다고 보았다. 이 논문의 중요 부분은 한국과 미국 학계에 연속적으로 공간되었다.¹³⁰⁾ 이 책에서 그는 중국 참전의 외적 원인(중공과 毛澤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과 내적 원인(중국의 안보, 정치적 고려) 등을 분석했다.

2. 1980-90년대: 중국자료 소개에 따른 연구의 활성화

1980년대에 들어서 다음과 같은 중국 자료들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伍修權의 外交回顧錄 (1950.1 ~ 1958.10),” 陳維利 (譯), 『中蘇研究』 제8권 1호 (1984년 3월), pp. 251-282; “伍修權의 외교회고록 (II) (1950.1 ~ 1958.10),” 陳維利 (譯), 『中蘇研究』 제8권 2호 (1984년 6월), pp. 253-280. 또한 中國 공산당 중앙당학교 산하 黨史研究室 소속 연구원으로 추정되는 姚旭이 기관지 『黨史研究』에 1980년에 실은 것을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한 현명한 정책: 중국 인민지원군이 출국하여 참전한 30주년을 기념하며,” 李鴻永 (譯), 『中蘇研究』 제8권 4호 (1984년 12월), pp. 213-235로 번역 출간했다.¹³¹⁾ 이외에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 (北京: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1987);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抗美援朝戰史』, 한국전략문

130) 박두복, “중공의 한국전 개입,” 김철범 (편), 『한국전쟁: 강대국 정치와 남북한 갈등』 (서울: 평민사, 1989); 「중공의 한국전쟁 개입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의 정치외교사적 고찰: 한국 정치외교사학회논문총 제5집』 (서울: 평민사, 1989); 「한국전쟁이 중공정치에 미친 영향」, 『한국전쟁과 휴전체제』, 제2차 한국전쟁 학술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전쟁연구회 주최, 국토통일원 후원, 1989, pp. 135-169; “China and the Korean War,” Chae-Jin Lee and Doo-Bok Park, *China and Korea: Dynamic Relations* (Stanford: The Hoover Institute, 1996);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원인,” 한국전쟁연구회 (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서울: 백산서당, 2000).

131) 한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는 미국 내쇼날아카이브 북한 노획 문서에 의존하여 『한국전쟁기 중공군 문서』 전4권을 2000년에 간행했는데 중국군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제연구소 (역) (서울: 세경사, 1991); 紫成文-趙勇田,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板門店談判』, 尹永茂 (역) (서울: 한백사, 1991). 또한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으로 참전했던 洪學智의 회고록 『抗美援朝戰爭回憶』 再版 (北京: 解放軍 文藝出版社, 1991)을 번역한 『중국이 본 한국전쟁: 인해전술의 전쟁기록』, 홍인표 (역) (서울: 고려원, 1992)도 있다. 위와 같이 중국은 抗美援朝戰[爭]이라고 호칭을 주로 사용한다.

또한 일본인이 쓴 平松茂雄(히라마쓰 시게오), 『中國と朝鮮戰爭』 (東京: 勁草書房, 1988); 황인모 (역), 『중공과 한국전쟁』 (서울: 병학사, 1989)¹³²⁾도 특기할 만하다. 또한 같은 일본에서의 업적으로 朱建榮, 『毛澤東の朝鮮戰爭: 中國が鴨綠江を渡るまで』 (東京: 岩波書店, 1991, 2004년 개정판); 주지안룡(朱建榮), 『마오쩌둥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서각수 (역) (서울: 역사넷, 2005); 주건영 “마오쩌둥의 한국전쟁-중국이 압록강을 건너기까지: 서평,” 李炳柱 (역), 『軍史』 제63호 (2007년 6월), pp. 113-146도 주목받았다.

한편 宋在卿, “中國의 韓國戰 介入의 內政的 要因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991도 선구적 국내 업적이다.

또한 정토웅은 한국국방연구원 (편), 『한국전쟁의 현대전략적 조명』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88)에서 “북진작전과 중공군 개입평가”를 발표했는데 『군사』 제20호 (1990)에 재수록했다. 또한 황병무는 김철범 (편),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 (서울: 을유문화사, 1990)에 “한국전쟁과 중국의 외교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이병주¹³³⁾, “중국의 한국전 개입과 그 영향,” 한국국제정치학회 (편), 『한국전쟁의 역사적 재조명: 국제정치논총특집』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0년 6월), pp. 233-253는 본 연구의 주제와 일치하므로 언급할 만하다.

1990년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한국전쟁연구회는 “한국전쟁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주제로 제2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는데 모두 5개의 분과 중 제4분과가 ‘중국과 한국전쟁’이었다. Jonathan D. Pollack의 “중국, 중소동맹, 한국전쟁”(『사상』 1990년 봄호에 실림), Francois Joyaux의 “한국전쟁기간 중 중국군의 개입,” 伊豆見元の “미중정책과 한국전쟁,” 翟志海(Zhai Zhihai)의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결

132) 일본 방위연구소 연구원인 그는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의 『국제문제』 1977년 8월호에 “朝鮮戰爭の開戦と中國: 中共系朝鮮人部隊の役割”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 글은 “한국전쟁의 개전과 중국: 중공계 조선인부대의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김동춘 (편역), 『한국현대사연구』 (서울: 이성과 현실사, 1988), 249-268쪽에 번역되었으며 그의 저서 2장에도 실려있다.

133) 李炳柱, “共產軍側과 韓國戰爭 停戰會談: 스탈린, 마오쩌둥의 協商指導와 戰略的 目標의 차이점,” 『戰史』 제5호 (2003년 6월); 이병주, “최신 舊 소련 비밀자료에 의한 한국전쟁 발발 배경: 남침계획을 둘러싼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 관계,” 『戰史』 제4호 (2002년 6월); 李炳柱, “韓國戰爭 休戰會談 新析: 中國側 新資料로 본 공산군측 협상전략, 전술,” 『中蘇研究』 58 (1993년 6월), pp. 197-228도 있다.

정에 대한 재고”등이 발표되었다. 이 당시 중국의 참전 문제에 대한 연구는 한국이 아닌 주로 외국에서 이루어졌고, 자이의 논문¹³⁴⁾이 한국학계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김계동 교수는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 전쟁기원과 중국의 참전과정,” 『통일문제연구』 제2권 2호 (1990년 여름)을 발표했는데 10년 후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을 간행하면서 7장을 “평화중재, 회복정책과 중국의 개입” 부분에 할애하여 치밀한 분석을 시도했다.

신현은 “중국의 참전 배경-원인 및 영향”을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편), 『한국전쟁의 이해: 한국전쟁 발발 40주년 논집』 (서울: 역사비평사, 1990)에 발표했다.

한편 전쟁기념사업회는 『한국전쟁사』, 전6권을 행림출판사에서 1990년부터 1992년 사이에 완간했다. 집필위원은 류재갑, 김학준, 박상섭, 김점곤, 김부기, 황병무, 김철범 등이며 각권의 부제는 1권: 요약통사, 2권: 전쟁의 기원, 3권: 북한군침공과 한국군방어, 4권: 낙동강에서 압록강으로, 5권: 중공군 개입과 새로운 전쟁, 6권: 한국전쟁의 영향 등이다. 중국의 개입이 전6권 중 한 권을 차지할 정도로 이 문제가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Edwin P. Hoyt는 *The Day the Chinese Attacked, Korea, 1950: the Story of the Failure of America's China Policy* (New York: McGraw-Hill Pub. Co., 1990)를 저술해 중국 참전을 미국의 대중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또한 전사학자 Roy Edgar Appleman은 그의 한국전쟁연구 5부작 중 하나인 *Disaster in Korea: the Chinese Confront MacArthur* (College Station, TX: Texas A & M University Press, 1989)를 내어 놓았는데 이는 Texas A & M University Military History Series의 11권 책이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미국에서의 연구가 특기할 만하다. Chae-Jin Lee and Doo-Bok Park, "China and the Korean War," *China and Korea: Dynamic Relations* (Stanford: The Hoover Institute, 1996), pp. 7-58; Shu 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134) Hao Yufan and Zhai Zhihai,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History Revisited," *China Studies Quarterly* No. 121 (March 1990), pp. 94-115로 서방학계에 최초로 소개된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국내학계에 반복해서 발표되었다. 자이 지하이, “中國의 韓國 戰爭 參戰 決定,” 김철범 (편), 『진실과 증언: 40년 만에 밝혀진 韓國 戰爭의 진상』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160-196; 자이 지 하이, “中國의 韓國 戰爭 參戰 決定,” 김철범 · 제임스 매트레이 (공편), 『한국과 냉전: 분단과 파괴와 균축』 (서울: 평민사, 1991), pp. 235-264; Hao Yufan and Zhai Zhihai,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History Revisited," Kim Chull Baum and James I. Matray, eds., *Korea and Cold War: Division, Destruction, and Disarmament* (Claremont, California: Regina, 1993), pp. 141-166.

Kansas, 1995). 조성훈 박사는 후자의 책을 “마오쩌둥의 군사사상이 한국전쟁에 미친 영향,” 『해외한국학평론』 2 (서울: 일조각, 2001), pp. 103-129라는 제목 아래 비평했다.

이러한 研究들은 기존의 研究 수준을 한 차원 더 심화시킨 것이다. 화이팅은 中國 參戰의 배경을 외부의 안보적 동기에서 구했는데, 첸지안(陳兼)¹³⁵⁾과 장슈광(張曙光)¹³⁶⁾ 등은 모두 中國參戰의 中國 국내정치적 연원과 파급효과 등에 주목하고 있다. 송재경도 기존의 연구가 냉전 출현이라는 국제정치적 상황과 중국의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內政的 요인도 개입의 주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공산주의 정권 수립 이후 내부적으로 시급히 요청되는 사회주의체제의 정비, 毛澤東 체제의 확립과 당시 경제적-군사적으로 필요한 소련으로부터의 지원 필요성 등이 內政的 요인이라는 것이다.¹³⁷⁾ 또한 池在運 교수는 “中國의 韓國戰爭 參戰決定에 관한 研究,” 『中國研究』 제17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 1996), pp. 29-51에서 중국자료를 다각도로 활용하여 참전결정이 거의 毛澤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A. V. Vorontsov, “어떻게 해서 1950년 한국전에 중국의용군의 개입이 이루어 졌는가?” 『국제고려학』 제5호 (1999년); 박동찬, “한국전쟁과 중국의 참전결정,” 『전사』 (1999년 12월), pp. 111-146등도 중국과 소련의 자료 공개현황에 부응하고 있는 연구들이다. 또한 이공환 석사는 “中國의 韓國戰 參戰 決定 研究: 既存研究의 批判的 檢討,” 정치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1999에서 전통주의, 수정주의, 후기수정주의, 탈냉전기 논의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다.

한편 吳洙烈 교수는 “中國의 韓國戰 參戰決定 背景과 그 過程,” 『군사논단』 11 (1997년 7월), pp. 33-51을 발표했는데 그의 논문집인 『미·중 시대와 한반도』 (부산: 신지서원, 2002), pp. 107-130에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배경과 그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재수록 했다.

135)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미국에서의 연구로 1980년대에 출간된 다음 연구도 특기할 만하다. Lawrence Stephen Weiss, *Storm and the Cradle: the Korean War and the Early Yea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53*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136) Shu 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137) 宋在卿, “中國의 韓國戰 介入의 內政的 要因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991, p. i. 그는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은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연계이론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다.

3. 2000년 전쟁 50주년 이후 한중학술교수의 본격화

한편 2000년 10월 한국전쟁연구회(1987년 발족¹³⁸); 2000년대에 한국전쟁학회로 발전되었다)를 중심으로 한중 한국전쟁관련 국제학술회의가 열리는 등 한중간의 학술교류가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중국 참전 연구가 산출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중 “제3장 한국전쟁과 북한-중국관계”에서 중국의 참전결정과정과 전쟁 수행을 다루고 있다.¹³⁹

이완범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중국-러시아 자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China's Entry into the Korean War: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ussian Declassified Materials and the Chinese Documents), 『정신문화연구』 제23권 2호 (2000년 여름)외에 「미국과의 대결을 주저했던 소련과 중국: 중국의 한국전 참전 - S. 곤차로프 (외), 미답지 않은 맹우들: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한국전쟁」, 『해외한국학평론』, 2 (서울: 일조각, 2001)¹⁴⁰; 이완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한국의 연구성과, 자료와 논점,” 『한국전쟁 중 한국의 참전전략과 포로문제』, 한-중 국제학술세미나, 2001년 10월 25일, 39-60쪽을 발표했다.

沈志華, “蘇聯과 韓國戰爭: 러시아 비밀 해제 당안 속의 역사 진상,” 『現代北韓研究』 3 (2000), pp. 11-91; 楊奎松, “中國의 조선 출병 시말,” 『現代北韓研究』 3 (2000), pp. 93-148 등은 한국전쟁연구회가 주최한 1999년의 비공개 학술회의 결과물로서 당시로서는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되는 중국의 학문적 업적이었다.

또한 2000년 10월 중국 단둥에서 개최된 한국전쟁50주년 한중학술회의(제1차한중한국전쟁국제학술회의)의 발표 논문 대부분이 박두복 (편), 『한국전쟁과 중국』 (서울: 백산서당, 2001년 6월 30일)으로 발간되었다. 당시 발표된 중국측 논문 12편에서 선정된 5편의 논문과 한국측 논문 11편 중 선정된 10편을 가지고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단행본으로 만든 것이다. 제1부는 한국전쟁의 국내외적 배경으로 김기

138) 연구회 시절에 간행한 책으로는 전술한 한국전쟁연구회 (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서울: 백산서당, 2000) 이외에 한국전쟁연구회 회장 박두복 (편) 『한국전쟁과 중국』 (서울: 백산서당, 2001)이 있다(후술함). 같은 제목의 책인 『한국전쟁과 중국: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 전2권은 한국전쟁학회와는 관련이 없으며 정부기록보존소에서 2002년에 간행한 자료집이다.

139) 이종석, “한국전쟁과 북한-중국관계,” (I) 『전략연구』 통권15호 (1999년 2월), 222~251쪽; 이종석, “한국전쟁과 북한-중국관계,” (II) 『전략연구』 통권16호 (1999년 7월), 228~260쪽이 증보되어 수록되어 있다.

140)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의 서평이다. 이 책은 세르게이 곤차로프·존 루이스·쉐리타이, 『흔들리는 동맹: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한국전쟁』, 성균관대학교 한국현대사연구반 (역), (서울: 일조각, 2011)으로 번역되었다.

조 박사의 「한국전쟁의 근인이 된 열강에 의한 한반도 분할과정: 한국전에서의 스탈린의 주도적 역할」과 양영조 박사의 「북한의 화전 양면정책과 그 성격 (1948-1950)」, 김명섭 교수의 「6·25전쟁 직전의 ‘에치슨선언’에 대한 재해석: 서유럽에서 동아시아로 확장되는 미국의 전략적 관심」, 서주석 박사의 「한국전쟁을 전후한 한반도의 국제관계」 등이 실려 있다. 제2부는 중국 국내정치와 참전으로 박두복 교수의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원인: 개입결정의 피동적-능동적 측면」, 章百家 교수의 「위기처리 시각에서 본 항미원조 출범과정」, 이완범 교수의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과정」, 沈志華 연구원의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결정에 대한 평가: 50년 후 한국전쟁 역사에 대한 고찰과 회고」, 楊奎松 교수의 「중국의 한국전 출범 시말」 등이 있다. 마지막 제3부는 중국 참전과 국제정치이다. 온창일 교수의 「중국의 한국전 개입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전략」, 김계동 교수의 「중국의 한국전 개입에 대한 영국의 정책」, 牛軍 교수의 「한국전쟁에서 중-미 양국 결정에 대한 비교연구」, 李丹慧 연구원의 「38선과 17도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중-미 정보소통 비교연구」, 조성훈, 「한국전쟁의 세균전논쟁 비판」 등이 실려 있다. 또한 김기조, “미-중-소 관계의 진전과 한국전쟁의 발발 배경: 미국과 중국은 그 전쟁을 사전에 얼마나 알고 있었나?” 『한국전쟁 중 한국의 참전전략과 포로문제』, 한-중 국제학술세미나, 2001년 10월 25일, 61-80쪽도 특기할 만하다. 한편 박창희,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결정과 군사전략 목표,” 『군사』 제48호 (2003년 4월), pp. 47-91도 소련과 중국 자료를 활용한 수작이다. 또한 金眞經, “한국전쟁 직전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과의 관계,” 『戰史』 제3호 (2001년 6월)와 이종석, “한국전쟁 중 중·조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軍史』 제44호 (2001년 12월)는 세부적 주제를 탐구해 전쟁사 연구를 한층 더 심화시킨 수작이다.

국외의 업적으로는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1977년 “미국의 對中-對韓 정책 연구, 1947-1950”¹⁴¹⁾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William Whitney Stueck, Jr가 1995년 프린스턴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한 *The Korean War : An International History*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1999년 일본의 明石書店에서 『朝鮮戰爭: 民族の受難と國際政治』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으며 2001년에 김형인-김남균-조성규-김재민 등에 의해 『한국전쟁의 국제사』라는 제목으로 국역되었다. 이 책의 3장이 “유엔의 반격과 중국의 개입”이다. ‘맥아더의 오판,’ ‘중국의 참전으로 당황하는 미국,’ ‘미-중 충돌은 방지할 수 있었는가?’ 등이 다루어져 있다. 또한 Richard C. Thornton, *Odd Man Out: Truman,*

141) 이 논문은 *The Road to Confrontation: American Policy toward China and Korea, 1947-195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1)로 출간되었다.

Stalin, Mao,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Brassey's, 2000)도 훌륭한 업적이다.

한편 중국 장군들의 회고담을 번역 편집한 것으로 Xiaobing Li, Allan R. Millett, Bin Yu eds. and trans., *Mao's Generals Remember Korea*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1)이 있다.¹⁴²⁾ 이외에 데이빗 쉰이(徐澤榮)는 『중국의 6·25전쟁 참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을 작성하면서 高崗의 부인 李立群과 경호실장 魏寶玉, 마오쩌둥의 러시아어 통역관 師哲 등 부모의 친척·친구 등 지인들의 인터뷰를 행했다.

또한 沈志華 (主編). 『蘇聯歷史檔案選編』. 第26卷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3); 沈志華 (編).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 全3卷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史料叢刊, 2003; 700여건의 문서 수록)을 편집했던 쉰지후아의 업적이 주목할 만하다. 그는 SHEN Zhihua,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ussian and Chinese Version of Mao's 2 October 1950 Message to Stalin on Chinese Entry into the Korean War: A Chinese Scholar's Reply," translated by CHEN Jian,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8-9 (Winter 1996/1997)를 저술한 이래 沈志華, 『毛澤東-斯大林 与 朝鮮戰爭』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003)을 간행했다. 이 책의 2판은 셴즈화,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최만원 (역) (서울: 선인, 2010)으로 번역되었다. 또한 Zhihua Shen. *Mao, Stalin and the Korean War: Trilateral Communist Relations in the 1950s* (Oxford, UK: Routledge, 2012)도 나왔다.¹⁴³⁾

또한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에서는 2002년에 『한국전쟁과 중국』 전2권이 라는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을 간행했다.

張澤石,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我的朝鮮戰爭: 一個志願軍戰俘的自述)』, 손준식 (역) (서울: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2009; 원 저작은 2000년 출간)도 있다.

21세기 이후 다음과 같은 업적을 더 언급해야 한다. 김옥준, “중국의 한국전 참

142) 한편 Xiaoming Zhang, *Red wings over the Yalu: China, the Soviet Union, and the Air War in Korea* (College Station, TX: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2)는 중국과 소련의 공군 작전에 대한 책으로 Texas A & M University Military History Series 80호이며 Patrick C. Roe의 *The Dragon Strikes: China and the Korean War, June-December 1950* (Novato, CA: Presidio, 2000)은 중국참전이 이루어진 과정과 1950년 12월까지의 남진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또한 Zhang Xiaoming, "China's perception of and response to the Korean War," 『軍史』 제57호 (2005년 12월)도 있다.

143) 이에 대한 서평으로는 Kathryn Weathersby, "The Korean War in the Context of Sino-Soviet Relations," *H-Diplo* (April, 2013), <https://www.h-net.org/reviews/showrev.php?id=37597> (검색일: 2013년 4월 18일)이 있다.

전과 국내정치: 참전의 대내적 요인과 영향을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제42집 1호 (2002년 5월), pp. 225-250; 장시아오밍, “한국전쟁기 중공의 인식과 대응,” 『6·25전쟁과 동북아 군사관계의 변화』, 6·25전쟁 국제학술세미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년 6월 9일, pp. 81-102; 趙成勳, “6·25전쟁 이전 한국지도자의 중국정세 변화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1집 (2004년 겨울), pp. 245-271; 조성훈, “한국전쟁시 중국군 彭德懷의 참전전략과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3집 (2005년 여름); 정현수, “중국 조선족의 한국전쟁 참전연구,” 『국민윤리연구』 57권 (2004년 1월), pp. 241-270; 정현수, “중국자료로 본 한국전쟁: 중국의 입장과 역할을 중심으로,” 『시민정치학회보』 제6권 (2003년 12월), pp. 129-166; 김경일(金景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한중관계의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홍면기(洪冕基) (역) (서울: 논형, 2005).¹⁴⁴⁾ 金景一, “1990년대 이래 중국의 군사사연구 동향,” 『軍史』 제57호 (2005년 12월)와 홍면기, “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변화,” 『전사』 제4호 (2002년 6월), pp. 205-248도 특기할 만하다. 홍면기 박사는 중국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에서 2000년에 “中國對韓半島地緣戰略與東北亞新秩序的探索”이라는 학위 논문을 작성했다.¹⁴⁵⁾

구체적인 전투사인 吳圭烈, “중공군의 상감령(上甘嶺)전투에 대한 재평가,” 『軍史』 제46호 (2002년 8월)까지도 국내에서 연구될 정도로 각론화 되었다. 田鍾淳, “中共軍 正月攻勢時 리지웨이와 彭德懷의 作戰指導,” 『軍史』 제45호 (2002년 4월)도 있다.

또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상문(徐相文) 연구원은 중국 자료를 포괄적으로 활용해 『毛澤東과 6·25전쟁: 과병 결정과정과 개입동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를 간행했다. 그는 『동아시아 전쟁사 최근연구 논문선집: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¹⁴⁶⁾을 편집했으며 “새로운 사실,

144) 이 책의 서평으로 이완범의 「한-중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6·25전쟁」,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1호 (2005년 봄), pp. 251-256이 있다.

145) 중국 동북지방을 바라보는 지정학적 시각에 기반해 작성된 저서『영토적 상상력과 통일의 지정학』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6)은 홍면기 선생의 역작이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토적 욕심을 꿰뚫어 보면서 향후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다. 국경이라는 개념은 정치·군사적 성격을 본래 갖고 있다. 그러한 정치적 인식을 문화적·경제적인 쪽으로 전환해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용하다.

146) 해제 I : 전쟁사 연구의 필요성과 수록 논문 소개 / 서상문

해제 II : 강대국의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본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 서상문

(제1부) 6.25 전쟁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마오쩌둥의 6.25전쟁 개입동기 / 서상문

장개석과 6.25전쟁 : 그 인식과 대응 / 유유개[劉維開; 『軍史』 제65호 (2007년 12월)에도 수록됨; 전술한 바와 같이 2007년 10월 학술회의에서도 발표됨]

새로운 관점: 마오쩌둥의 6.25전쟁 동과정과 동의를 의미 재검토,” 『軍史』 제 71호 (2009년 6월)를 저술하기도 했다.

염인호 교수는 『또 하나의 한국전쟁: 만주조선인의 ‘조국’과 전쟁』을 2010년 역사비평사에서 간행했다. 또한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서울: 명지출판사, 2000)은 조선의용군 제1지대 후신으로 1950년 방호산 사단이 되었던 부대원인 필자가 조선의용군 출신 인민군 장교(군관)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저술한 책이다. 한편 국공내전 당시인 1946년 7월부터 1949년까지 중국 공산당은 북한을 후방기지로 활용했는데 그 기록인 “東北解放戰爭時期 東北局 駐朝鮮辦事處回憶,” 中共中央黨資料征集委員會 (編), 『遼瀋決戰』, 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8), pp. 624-633이 이정식,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후사』, 허동현 (편)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pp. 245-257에 번역되어 있다.¹⁴⁷⁾ 이정식은 앞의 책, p. 90에서 스탈린이 자신의 통치하에 있던 북한을 중국 공산당의 후방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은 이를 사용하지 않아 국민당이 승리하게 되면 국민당의 배후에 있던 미국이 중국 전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소련을 위협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공내전 당시 만주 등 중국에 있던 한국인들은 황무지 開墾權을 준다는 공산당의 약속 때문에 공산당편에서 싸웠으므로 중국 공산당은 일찍부터 한국인들에 대해 일종의 동지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공산혁명을 위해 자원해 희생했으므로 마오쩌둥의 개입은 일종의 부채를 갚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인들의 희생은 제1차 국공내전(1927-1937), 항일전쟁(1937-1945), 제2차 국공내전(1945-1949) 기간 내내 이어졌다. 특히 제2차 국공내전 시 10만 명 정도의 중국 거주 한국인들이 중국공산당에 참여했다. 1940년대 말 중공당군 제156, 164, 166 사단의 3개 사단은 중국 국적 조선족

6.25전쟁과 대만'안전'의 상관관계 논석 / 서상문[『軍史』 제54호 (2005년 4월), pp. 217-264에도 실림]

6.25전쟁이 중국외교에 미친 영향(1949~1978) / 이옥정[李玉貞; 『軍史』 제65호 (2007년 12월)에도 수록됨; 전술한 바와 같이 2007년 10월 학술회의에서도 발표됨]

6.25전쟁이 중국군사에 미친 영향 / 조학공[趙學功; 『軍史』 제65호 (2007년 12월)에도 수록됨; 전술한 바와 같이 2007년 10월 학술회의에서도 발표됨]

6.25전쟁 당시 일본의 협력 / 오누마 히사오(大沼久夫) 289

핵무기와 6.25전쟁 / 아카키 간지(赤木完爾) 333

6.25전쟁 개전 전후의 몇 가지 문제들 / Yu. V. 바닌 363

소련인들이 기억하는 6.25전쟁 / A. 보론조프

(제2부) 베트남전쟁(생략)

147) 이 사료는 일찍이 이정식 교수의 제자인 백학순 박사의 논문인 “중국내전시 북한의 중국공산당을 위한 군사원조: 북한군의 파병 및 후방기지 제공,” 『한국과 국제정치』 제10권 1호 (1994)에서 주목되었다.

들로 편성되어 있었다.¹⁴⁸⁾ 이들은 중국공산혁명에 지대한 공로를 세워 한반도를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하려는 김일성의 전쟁 시도를 마오쩌둥이 외면할 수 없었다.¹⁴⁹⁾

한편 2007년 10월 26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전쟁기념관 대회의실에서 한-중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6·25전쟁이 중국의 군사, 외교, 정치에 미친 영향 등을 토론했는데 동년 12월 『군사』지에 이때 발표된 다음과 같은 중국학자 3인의 연구를 실었다. 趙學功, “6·25전쟁이 중국군사에 미친 영향”; 李玉貞, “6·25전쟁이 중국외교에 미친 영향 (1949-1978)”; 劉維開, “장개석과 6·25전쟁: 그 인식과 대응.” 또한 李鍾判·小柳順一, “한국전쟁 당시 중국개입의 예측실패에 관한 연구: 미국동 군사령부의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軍史』 제67호 (2008년 6월); 吳正澤, “한국전쟁 초기 중국군의 군사전략과 전술 변화양상 연구,” 『軍史』 제67호 (2008년 6월)도 있다. 鄭明福, “6.25전쟁기 중공군 5월 공세에 대한 전투사적 고찰,” 『軍史』 제71호 (2009년 6월); 鄭明福, “중공군 5차 전역 2단계 작전간 피·아 작전지도에 관한 고찰: 현리지역 전투를 중심으로,” 『軍史』 제67호 (2008년 6월); 『중공군 공세 의지를 꺾은 현리·한계 전투』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09)도 특기할 만하다. 또한 阪田恭代, “미국의 한국전쟁 휴전에 관한 기본방침의 형성: 중국참전과 UN군 총퇴각을 중심으로,” 허진녕·이진성 (역) 『軍史』 제63호 (2007년 6월), pp. 147-176도 있다.

이외에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抗美援朝戰爭史¹⁵⁰⁾』, 오규열 (역), 1 (서울: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2002);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抗美援朝戰爭史』, 박동구 (역), 2-3 (서울: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2005)와 같은 번역본이 나왔다. 데이빗 쑤이(徐澤榮), 『중국의 6·25전쟁 참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¹⁵¹⁾도

148)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 106; 데이빗 쑤이(徐澤榮), 『중국의 6·25전쟁 참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pp. 48-49.

149) 오규열, “중국의 6·25전쟁에 대한 연구 성과와 동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학술회의: 6·25전쟁사 연구동향과 발전방안, 2012년 9월 21일, p. 86. 한편 오규열 “세계혁명의 일환으로 결정된 중국의 6·25전쟁 개입,” 김영호 (외), 『6·25전쟁의 재인식』 (서울: 기파랑, 2010)도 있다.

150) 이는 1987년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史』라는 제목으로 중국에서 최초 간행되었다가 (1991년 한국의 전략문제연구소에서 번역) 2000년 9월 공개된 기밀문서 등을 보완하여 중국에서 개정되었다. 중국의 참전결정과정, 조·중 연합사령부의 구성과 운영, 정전협상전략, 중국군의 전술 운용 등 당시 중국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다.

151) 데이비드 쑤이(徐澤榮; David Tsu; 쉬저룡)는 관계국의 문헌은 물론 중국 정책 결정자들과 그 측근에 대한 인터뷰(저자 부모의 친구나 지인들인 중·소회담 시 중국 측 통역인 師哲, 高崗의 부인 李立群과 경호실장 魏寶玉)까지 활용해 1999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박사학위논문 “조선전쟁

특기할 만하다. 정용욱, “6·25전쟁기 미·중관계,” 역사학회 (편),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서울: 일조각, 2006)도 있다.

또한 육군 군사연구소가 번역한 『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 전4권 (계룡: 육군 군사연구소, 2009)은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전쟁 경험총결 편집위원회 (편), 『항미원조전쟁적 경험총결(抗美援朝戰爭的 經驗總結)』 제3권 전례선집, 1956이 원본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6·25戰爭史』 시리즈 제7권(中共軍참전과 유엔군의 철수) 제8권(中共軍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을 출간했다.

최근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이재석·조성훈 (편), 『한반도 분쟁과 중국의 개입』 (서울: 선인, 2012)이 출간되었는데 그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신복룡, “동방 삼국을 바라보는 당태종의 시선: 동북공정의 원류를 찾아서”
- 한명기, “壬辰倭亂과 明의 역할”
- 권혁수, “청일전쟁 당시 청군의 조선출병 과정 및 그 목표의 변화”
- 김옥준, “중국의 한국전 참전과 국내정치 -참전의 대내적 요인과 영향을 중심으로”
- 조성훈, “한국전쟁 이후 ‘중국군 위협’에 대한 한·미의 대응”
- 박종철,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과 북중관계”
-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 이상현,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한국에 대한 안보적 함의”

또한 2013년에는 王樹增(왕수정)의 년 픽션 소설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나진희·황선영 (역) (과주: 글항아리, 2013)이 출간되

에서 중국의 역할을 작성했다. 이 연구에서는 그는 중국이 전쟁 개입 동기가 기존 연구에서 주장되듯이 중국 영토에 대한 침략 가능성의 두려움이나 唇亡齒寒 때문이 아니라 모스크바의 요구를 중국이 스스로 따르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과 중국, 소련의 합작품이라는 주장이다. 광저우(廣州) 사회과학원 연구원이었던 그는 중국군 기밀을 인용했다는 죄목으로 11년간 옥살이를 하다 2011년 6월에 풀려났는데 위 책이 박사학위논문 번역본이다. 정용환, “시진핑 강조 ‘항미원조전쟁’ 뒤집어: 중국군 기밀 인용 11년 옥살이 ... 추이 박사 논문 보니,” 『중앙일보』, 2011년 7월 30일; 정용환, “중국군 기밀 인용 ‘한국전 논문’ ... 11년 옥살이 추이 박사: “중국, 6·25전쟁 한국민에게 끼친 상처 사과해야,” 『중앙일보』, 2011년 10월 4일; 문창극, “살아있는 수정주의,” 『중앙일보』, 2011년 8월 9일. 그는 학위논문에서 6·25전쟁을 김일성이 기획 단계부터 주도하며 마오쩌둥(毛澤東·마오쩌둥·1893~1976)의 지원 의사를 이끌어낸 뒤, 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Iosip Stalin·1878~1953)의 비준을 거쳐 시작한 매우 계획적인 전쟁으로 규정했다. 김일성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승만도 북진통일 주장을 펴긴 했으므로 당시 통일 의지는 남북 모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승만은 미국의 반대로 말로만 그치고 말았으나 김일성은 마오쩌둥과 스탈린을 끌어들여 남침을 현실화했다.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다.

었는데 원본은 『朝鮮戰爭』이라는 이름으로 1999년(초판)과 2009년(개정판)에 중국에서 간행되었다. 기존 중국의 전쟁사가 주로 정치·군사적인 데에 치중했는데 비해 이 소설은 사람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전쟁연구자들이 1990년대 말 이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쟁경험’과도 코드를 맞출 수 있다. 일종의 민중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중국의 전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6·25전쟁에 참전했던 중국에 대한 한국내 연구는 비교적 축적되어 있으나 아직도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들이 없지는 않으며 중국과의 학술교류를 통해 학술적 깊이와 우호관계를 장차 더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상호간의 인식 차와 불확실한 미래 등을 앞에 놓고 한층 더 가열찬 토론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된다면 수교20년 동안 축적된 무역중심의 관계가 정치적 차원까지 승화되어 선린우호관계가 더 돈독해 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육지로 연결된 가장 가까운 지리적 (唇亡齒寒의) 隣邦이며 역사·문화적으로도 뗄 레야 뗄 수 없는 일의대수(一衣帶水) 관계로서 양국간의 정치적 평화체제구축이 동북아지역 최고의 당면 과제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양국간의 공식 역사관에 반영된 인식 차는 심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토론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은 일조일석(一朝一夕)에 기대하기 어렵다. 일례로 2010년 10월 24일 귀보슝(郭伯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평양에서 열린 6.25 전쟁 60주년 기념행사에서 “북중 관계가 피로 맺어졌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날인 10월 25일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항미원조전쟁 참전 제60주년 좌담회에서 참전 중국 노병들에게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으며 “60년 전에 발생한 전쟁은 제국주의가 중국인민에게 강요한 것이었다”고 말해 북침으로 발생한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중국사람들이 제국주의라고 말할 때 이는 주로 미국을 지칭한다. 이에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 전쟁이 “북한 침공에 의한 전쟁”이었다며 반박해 논쟁이 발생했다. 중국으로서는 내부적으로 행했던 발언을 외국에서 크게 보도하자 황당했을 것이며 한국과 미국은 아무리 내부적 발언이라도 그 왜곡이 너무 심했다 싶었을 것이다. 이렇듯 상호간 인식의 격차는 컸다

고 할 것이다. 김성환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은 "북한의 남침에 의한 전쟁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으며, 월터 샤프 한미연합군사령관도 "한국전쟁은 북한의 침공에 의한 전쟁이었다"고 강조했다.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내게는 옳은 얘기로 들리지 않는다"며 "돌아가서 역사책들의 먼지를 털어봐야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10월 27일엔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전쟁이 북한 공격으로 시작된 것을 인정하는 인민해방군 국방대 교수인 쉬옌(徐焰) 소장 기고문을 소개해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는 시진핑 부주석의 발언이 한국과 미국 등에서 마치 북한의 남침을 부인하는 듯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되자 중국측은 이를 종식시키기 위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쉬옌(徐焰) 소장의 기고문은 2005년 『신시다오칸』(信息導刊)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글인데 이날 다시 게재해 부각시켰다. 쉬 교수는 기고문에서 "최근 러시아 기밀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조선전쟁(한국전쟁)의 발발의 유래는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6.25전쟁이 북한의 전면 공격에 의해 개시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나 쉬 교수는 "강조해야 할 점은 남북이 모두 하나의 조선을 인정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조국해방을, 다른 한쪽에서는 '북진통일'을 외치는 형국에서는 누가 먼저 총성을 울렸느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는 조선의 내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해 선제공격이 어느 쪽에서 있든 6.25전쟁은 남북 상호 간의 내전이었던 중국의 전통적 관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쉬 교수는 내전으로서의 '조선전쟁'과 국제전으로서의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쉬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조선전쟁'과 '항미원조전쟁'을 헷갈려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있지만 구별해야 할 개념"이라며 "조선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까지이고 항미원조전쟁은 중국 지원군이 출병한 1950년 10월부터 1953년 7월까지"라고 정의했다. 1950년 6월 27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6.25전쟁 참전을 선언하고 대만에 미군을 전개시킴으로써 갖 출범한 중국이 절체절명의 안보위기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중국이 '보가위국(保家爲國)'에 나선 것이 바로 '항미원조전쟁'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북한이 일으킨 '조선전쟁'은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났지만 북중국경인 압록강 인근까지 유엔군이 치고 올라왔을 때 시작된 항미원조전쟁은 400km 이상 '침략자'를 몰아낸 상태에서 끝났다는 점에서 '위대한 승리'라고 쉬 소장은 덧붙였다.¹⁵²⁾

이렇듯 남침임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 했으나 마자오취(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

변인은 10월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시 부주석이 항미원조전쟁 참전 60주년 좌담회에서 중국 정부를 대표해 입장을 천명했다"며 "중국에는 일찍이 그 역사 문제에 대해 정해진 정론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항미원조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며 참전 정당성을 강조했던 시 부주석의 발언을 정부 차원에서 지지한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마 대변인은 "중화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평화공존 원칙 아래 관련 국가와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안정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¹⁵³⁾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식의 인식은 북한의 공식 입장인 ‘정의의 조국해방전쟁’론과 일치한다.¹⁵⁴⁾ 북에서는 이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다.¹⁵⁵⁾ 처음부터 미국이 도발(개입)하여 조국해방전쟁이 되었으며 미제와 조선민중 간 대립이 전쟁으로 비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조국해방전쟁승리¹⁵⁶⁾ 40돐을 기념하여¹⁵⁷⁾ 허종호가 전영률, 강근조, 리정인, 리준항 등과 분담하여 쓴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3), 전3권의 1편 10쪽 서두에 의하면 “조선전쟁은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되었다. 미제는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고 나와 있다. 또한 같은 책 10쪽과 88쪽에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함으로써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되었다고 적혀 있다. “미제가 강점한 빼앗긴 땅을 도로 찾는 정의의 전

152) 김태홍, “中매체 '시진핑 항미원조전쟁 발언' 진화 나서: "'조선전쟁'과 '항미원조전쟁' 구분해야"...인민해방군 장성 기고문 게재,” 『데일리NK』, 2010-10-28 08:46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ld=nk00100&num=87433> (검색일: 2012년 10월 15일).

153) 장종회 “中, "한국전쟁관련 시진핑 발언이 정론" 마자오쉬 외교부 대변인 공식입장 밝혀...파장 커질 듯,”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0.10.29 07:20:29,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586617> (검색일: 2012년 10월 15일).

154) 중국이 말하는 정의의 전쟁은 강대국이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 정의로운 약소국을 침략했을 때 이에 항거하는 전쟁을 가리킨다.

155) 류상영, “북한의 한국전쟁 인식과 성격규정,” 최장집 (편), 『한국전쟁연구』(서울: 태암, 1990); 정해구,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 안병우 (외), 『북한의 한국사 인식』, 2 (서울: 한길사, 1990). 한편 정해구 교수는 1989년에 “휴전회담 교착과 미국의 전략,” 『역사비평』 통권7호를 저술하기도 했다.

156) 이기지 못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자신들의 도발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깔린 해석이다. 즉 미국의 침략을 격퇴해 조국을 해방시키고 승전했다는 것이다. 비교적 중국편향적인 홍콩 교과서에서도 승패를 가리지 못했다고 기술했다. 『新編 世界歷史』, 2 (香港: 雅集出版有限公司, 2006), p. 112.

157) 20돐 즈음에는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민족보위성 전쟁경험연구실 (공편),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로 그리고 30돐 기념으로는 허종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라는 이름으로 공식 전쟁사를 간행했다.

쟁”이라는 것이다.

제3자이지만 공산권 국가의 일원이었던 소련측의 자료 공개로 국제학계에서는 이미 힘을 잃어버린 북침론을 공식적으로는 과기하지 못하고 북한의 해석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할 있다. 중국은 6·25전쟁에서 풍전등화(風前燈火)에 빠진 북한을 도와준 혈맹이었던 것이다. 또한 대만과의 양안관계에서 대만의 독자적 존재를 부인하며 1민족 1국가(2제도; 兩制)를 주장하는 중국은 1민족 2국가를 인정하는 남한에 맞서 북한의 1민족 1국가(2제도) 통일론을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북-중동맹의 견고함 앞에서 한-중관계는 그 정치적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의 교류를 저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니 만치 보다 장기적인 대화와 교류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XI. 2000년대의 새로운 연구경향

2000년대 전까지 6·25전쟁 연구는 총론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전후는 각론을 파고들어 심화시키는 후속연구들이 나오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록 2000년대는 아니지만 그 즈음으로 간주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1999년 “정착촌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속초 ‘아바이마을’과 김제 ‘용지농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 아래 6·25전쟁 후 월남민들의 이주촌 건설 문제로 학위를 한 김귀옥,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전쟁중 유엔군의 포로정책 연구」로 1999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조성훈(趙成勳) 국방군사연구소 연구원 등이 있다. 조성훈 박사의 학위논문은 『한국전쟁과 포로(The Korean War and POWs)』 (서울: 선인, 2010)로 증보되어 출간되었다.¹⁵⁸⁾ 그는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등을 연속적으로 저술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¹⁵⁹⁾

158) 목차는 다음과 같다.

- I. 서론
- II. 공산포로의 발생과 포로수용소
- III. 포로 대우와 교육
- IV. 포로수용소의 갈등과 분류
- V. 포로 교환과 송환거부포로의 처리
- VI. 결론

159) “6.25전쟁 중 북한 포로수용소 실태와 국군포로 사망자 유해 발굴 가능성,” 『軍史』 제75호 (2010년 6월), pp. 153-186; 『외국 군사사연구기관의 조직과 활동』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한국전쟁의 유격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6·25전쟁기 미군 통제하의 유격부대 활동,” 『戰史』 제6호 (2004년 6월); “한국전쟁기 제3국행 포로의 정착과정과 그 성격,” 『戰史』 제3호 (2001년 6월); “한국전쟁의 세군전 논쟁 비판,” 『軍史』 제41호 (2000년 12월)

또한 2006년 정병준 교수는 돌베개에서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¹⁶⁰⁾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내전설’을 체계화했다.¹⁶¹⁾ 이 책은 미국에 소장된 전쟁 당시 북한 노획문서와 소련이 공개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전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연구한 실증적 저서이다. 1990년대 초 발굴되었던 문서들(재미 방선주 박사의 선별노획문서와 소련문서)을 커밍스는 참조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허점들이 정병준 교수의 노작에서는 극복되었다. 커밍스가 여러 가설들 중 하나로 제시했던 남침유도(provoke)설에 대해 정병준 교수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했다. 남쪽은 신속하게 철군을 하기는 했지만 선제공격을 가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함으로써 미국의 개입을 획득할 만큼 명민하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1949년 38선 충돌이 전쟁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대는 더욱더 각론화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맥아더(Douglas MacArthur)¹⁶²⁾를 연구한 이상호 박사¹⁶³⁾와 KMAG을 연구한 박동찬 박사 등이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이상호 박사는 200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맥아더와 한국전쟁: 1945~1951”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를 증보해 2012년 『맥아더와 한

도 있다.

160)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서울: 돌베개, 2006).

161) 그는 2001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체재하면서 광범한 자료를 수집했다. 북한노획문서는 북한 외에 존재하는 6.25전쟁사 연구의 보고(寶庫)이다. 정병준, “탈취-노획의 전쟁기록, NARA의 북한 노획문서 컬렉션,” <역사비평>편집위원회, 『역사용어 바로쓰기』(서울: 역사비평사, 2006), pp. 203-208. 아니 북한에서도 볼 수 없는 세계유일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선별노획문서’(신노획문서; 방선주, “미국 국립공문서관 소장 RG 242 내 <선별노획문서> 조사연구,” 『해외사료총서 4: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II』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 pp. 1-492)를 포함한 북한노획문서뿐만 아니라 소련문서, 남한문서 등을 참조하여 전쟁형성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노력했다. 미국에서 6.25전쟁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커밍스는 북한노획문서 등은 참조했으나 1990년대 초에 발굴된 선별노획문서나 1990년대 중반에 비밀해제된 구소련문서를 본격적으로 참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기 이래 탈냉전기 6.25전쟁 연구의 신조류인 다국사료교차분석(multi-archival research)을 통해 커밍스의 저작 등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Lee Wan Bom, “New Directions in Korean War Studies: In Memory of the Ordinary Lif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IX no. 2 (June 2006), p. 5.

162) 맥아더에 대한 논문은 金南均, “더글러스 맥아더 재평가: 미국의 세기와 맥아더,” 『軍史』 제59호 (2006년 6월)도 있다.

163) 그는 “한국전쟁기 맥아더사령부의 핵투하계획,” 『軍史』 제67호 (2008년 6월), pp. 133-166; “인천상륙작전과 북한의 대응: 사전인지설과 전략적 후퇴에 대한 반론,” 『軍史』 제59호 (2006년 6월); “웨이크 섬(Wake island) 회담과 중국군 참전에 대한 맥아더사령부의 정보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5집 (2008년 여름), pp. 140-168; “한국전쟁기 미군의 공산포로 ‘미국화 교육,’” 『역사와 현실』 통권78호 (2010년 12월), pp. 419-447; “한국전쟁기 맥아더사령부의 뼈라 선전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8집 (2011년 가을), pp. 178-213; “전후 동아시아 보수주의의 산파 맥아더,” 『황해문화』 통권 제65호 (2009년 12월), pp. 259-269를 저술했으며 박영실 박사와 함께 『6.25전쟁 소년병 연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를 간행하기도 했다.

국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푸른역사에서 출간했다. 박동찬 박사는 2011년 한양대 대학원 사학과에서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조직과 활동(1948~53)”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한국전쟁 인식과 대응,” 『軍史』 제 79호 (2011년 6월), pp. 111-149 등을 게재했다.¹⁶⁴⁾ 또한 朴東燦,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 분석, 1950. 6~1951. 4,” 『軍史』 제49호 (2003년 8월); 박동찬, “한국전쟁과 중국의 참전결정,” 『전사』 (1999년 12월), pp. 111-146 등을 발표했다. 한미관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이들은 ‘한국전쟁’이라는 용어사용을 고집하고 있다.

1. 남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인적 손실 문제

19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각광받았던 주제는 ‘6·25전쟁의 영향’이었다. 사람들간의 싸움이었던 전쟁 연구에서 사람의 생생한 목소리가 빠져있으며 6·25전쟁은 박제화된 사실로 전쟁기념관에 처박혀 있다는 반성이 199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6·25전쟁의 영향에 대한 연구 과제 설정과 관련이 있다.

6·25전쟁의 영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적 손실이다. 이 전쟁의 인적 손실은 어마어마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부상자와 실종자-전쟁고아 등을 계산하지 않고 단지 사망자만 본다 해도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남북한 각각 약 60만 명(596,967명 중 민간인 373,569명[사망 244,633명, 학살 128,936명], 한국군 223,398명¹⁶⁵⁾)과 약 70만 명(700,151명 중 민간인 406,000명, 북한군 294,151명¹⁶⁶⁾)이 사망하여 무려 130만 명 정도의 한국인이 희생되었다고 추정된다. 민간인 사상자의 비율이 세계사상 어느 전쟁보다 높다는 사실에서 이 전쟁의 참혹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전의 국제전화는 한국과 전혀 상관없는 외국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중국군 약 18만 4천여 명,¹⁶⁷⁾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 3만 6천

164) KMAG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안정애의 1996년 仁荷大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駐韓美軍事顧問團에 관한 연구: 韓國軍 創軍過程(1945-1950)에서의 役割 및 機能을 중심으로”; “美軍政期 軍事顧問團의 性格과 機能에 관한 研究: 韓國軍 創軍에 미친 影響을 중심으로,” 『軍史』 제32호 (1996년 6월), pp. 254-282와 조이현, “1948~1949년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활동,” 『한국사론』 35권 (1996), pp. 265-328 등이 있다.

165) 군사정전위와 유엔군의 집계에 의하면 민간인 사망자와 학살자는 위와 동일하다. 그런데 한국군 사망자의 경우 군사정전위 자료에는 위 수치이며, 유엔군 자료에는 사망 58,809명, 부상 178,632명, 실종 82,318로 나온다. 전쟁기념사업회 (편), 『한국전쟁사』, 6: 한국전쟁의 영향 (서울: 행림출판, 1992), p. 15.

166) 일본 내 반이승만계열의 동포 신문 『통일조선신문』 자료에 의함. 전쟁기념사업회 (편), 『한국전쟁사』, 6: 한국전쟁의 영향 (서울: 행림출판, 1992), p. 15. 최근에 발굴된 라쥬바에프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전쟁 후 100만 명의 민간인 인구감소를 기록했다고 한다.

167) 일본 내 『통일조선신문』 자료에 의하면 184,128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은 715,872명, 실종 21,836명으로 총 921,836명의 피해가 있었다 함. 전쟁기념사업회 (편), 『한국전쟁사』, 6: 한국전쟁의 영향 (서울: 행림출판, 1992), p. 15.

여 명¹⁶⁸⁾이 목숨을 잃었다.¹⁶⁹⁾

최근 대한민국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한국군 14만 9005명, 유엔군 3만 7936명(혹은 3만 3870명), 북한군 29만 4000명, 중국군 18만 4000명이 전사했으며, 남측 민간인은 사망 24만 4663명, 학살 12만 8936명, 북측 민간인은 사망 40만 6000명이라고 집계했다.¹⁷⁰⁾ 이 통계를 앞의 통계와 비교한다면 한국군 전사자는 다소 적으며, 유엔군 사망자는 비슷하고, 다른 통계는 거의 일치한다.

실종자와 부상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물론 더 늘어난다.¹⁷¹⁾ 가장 포괄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통일조선신문』 자료에 준거하여 모든 피해자를 합산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 민간인 피해가 367만여 명(남 99만여 명, 북 268만 명), 한국군 98만 여명, 북한군 61만 여명, 유엔군 15만 여명(그중 미군이 14만 명), 중국군 90만여 명¹⁷²⁾으로 총계 631만 명이다. 그런데 이는 과장된 수치일 가능성이 높으며 경상자-행방 불명자까지 포함하거나 중복된 사람을 가려내지 못한 통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조선전사』에는 한국군 피해를 1,130,965명으로 적시하여¹⁷³⁾ 전과를

168) 유엔군의 집계에 의하면 36,991명의 유엔군이 사망했다고 한다. 전쟁기념사업회 (편), 『한국전쟁사』, 6: 한국전쟁의 영향 (서울: 행림출판, 1992), p. 15.

169)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Yoshikazu Sakamoto, *Korea as a World Order Issue, World Order Project Paper no. 3* (New York: Institute for World Order, 1978), p. 6에는 위 남.북.유엔.중국인 사망자 통계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170) 『아! 6.25: 6.25전쟁 50주년 특별기획전』 (서울: 조선일보사-전쟁기념관, 2000), p. 120.

171) 김학준 교수는 영국측 자료를 인용하면서 총 약 4백만 명(전투원 3백만 명-미군 14만, 남한군 132만, 미군 이외의 유엔군 1만 이내, 북한군 52만, 중국군 90만/ 민간인 1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Survey of International Affairs*, 1953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p. 210; 김학준, "韓國戰爭," 韓國政治學會 (編), 『現代韓國政治論』 (서울: 法文社, 1986), p. 185. 그러나 이 수치는 死傷者와 사망자를 분간하지 못한 과장으로 추정된다. 한 자료에는 남측은 130만 명(死傷者포함), 북한 및 중국은 250만 명, 미국은 11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다. 최정세, "한국전쟁의 기원과 성격," 김대환 (외), 『한국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열음사, 1987), p. 132. 남한 약 150만 명과 북한 약 250만 명, 중국군 약 100만 명,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 5-6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자료도 있다. 손호철 (외), 『한국전쟁과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 (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1), p. i. 그런데 존 할리데이와 브루스 커밍스는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고 전제하고 총 사망자수는 3백만에서 4백만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2백만 이상의 북한 민간인과 약 50만 명의 북한군인, 약 100만의 중국군인(중국의 한 일차 자료는 그 숫자를 3백만으로 기록하고 있다), 약 100만의 남한 민간인들이 죽었고(전투와 관련해서는 47,000명), 미군은 54,246명이 죽었는데 그 중 33,629명이 전투 중 사망했다. 기타 국가의 사망자 총수는 3,914명인데, 그중 686명이 영국인이며, 유엔군 중 사망률과 부상률이 높은 나라는 터키, 프랑스, 그리스이다. Jon Halliday and Bruce Cumings, *Korea: The Unknown War* (London: Viking, 1988), pp. 200-201. 한편 중국의 전사인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소 (편),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서울: 세경사, 1991)에 의하면 북측은 남측의 109만 명에 피해를 입혔으며 그 중 유엔군 39만 명, 국군 64만 명, 기타는 유엔군이라는 것이다.

172) 『통일조선신문』 자료에 의하면 921,836명의 피해가 있었다고 하며, 정부자료를 인용한 유완식, 김태서, 『북한삼십년사』 (서울: 현대경제일보사, 1975), pp. 137-138와 군사정전위 자료에는 900,000명의 피해가 기록된다. 전쟁기념사업회 (편), 『한국전쟁사』, 6: 한국전쟁의 영향 (서울: 행림출판, 1992), p. 15.

과장하였다.¹⁷⁴⁾ 한편 1996년에 국방군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전쟁피해통계집』에 의하면 남측의 인명피해는 군인 616,702명, 경찰 19,034명, 민간인 990,968명 등 총 1,626,704명으로 집계하고 있다.¹⁷⁵⁾ 북의 피해는 공식 발표도 없으므로 더욱 오리무중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발굴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2등 서기관 페트로프(П. М. Петров)의 "1950-1953년 전쟁기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의 총 손실 규모: 정보보고(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통계국 자료에 의거)," 평양, 1954년 3월 자료에 의하면 북한 민간인 중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282,000명이며, 남측으로 납치되거나 실종된 자가 796,000명, 중국 및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소개된 자가 80,000명, 분계선 설치 후 남조선 지역에 편입된 자 40,000명, 군 징집자가 600,000명으로 집계되었다.¹⁷⁶⁾ 민간인 사망자만 국한해 보면 남측의 집계인 40만 명 선보다 적은 편이다. 한편 남측 학자가 북의 피해를 추정 한 것에 의하면 인명피해는 300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망한 자는 군인 50만 명 이상이며 민간인까지 합치면 90만 명 이상이라는 것이다.¹⁷⁷⁾ 이는 당시 북한 인구 1,000만 명 중 무려 30%의 인명 피해에다가 9%의 사망률을 보인 것으로 군인 사망자의 경우는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¹⁷⁸⁾ 이러한 통계들을 감안하여 군병력 피해만을 종합한다면 유엔군을 포함한 남측 군대와 북한군의 피해자(중국군 인명피해는 제외, 북한군 부상자 포함)가 각각 50만 명 정도일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¹⁷⁹⁾

또한 이산가족문제는 6·25전쟁이 낳은 가장 심각한 휴유증이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피해일 것이다. 심각한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일 (편), 『사라져간 그들: 6·25전쟁 납북가족 증언집』 (서울: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12)을 참조할 수

173) 전쟁기념사업회 (편), 『한국전쟁사』, 6: 한국전쟁의 영향 (서울: 행림출판, 1992), p. 15.

174) 『북한삼십년사』와 『통일조선신문』 등에 의하면 98만여 명에 이르며 군사정전위원회와 유엔군 자료는 각각 34만여 명과 31만여 명으로 나온다. 뒤의 두 자료도 우리의 피해를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 전쟁기념사업회 (편), 『한국전쟁사』, 6: 한국전쟁의 영향 (서울: 행림출판, 1992), p. 15.

175) 정토웅, "한국전쟁의 영향에 관한 연구," 『군사』, 제40호 (2000년 6월), pp. 210-211. 민간인 피해는 유엔군 집계와 동일하며, 군인 피해는 유엔군을 합친 수치로 『한국전란지』 합계본 (606,449명)과 유사하다.

176)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 36.

177) 정토웅, 앞의 글, p. 212.

178) 『북한삼십년사』에는 520,000명이 사망했지만 『통일조선신문』에 의하면 294,151명 사망에다 부상 225,849명, 실종 91,206명을 나온다. 따라서 앞의 자료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친 숫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정전위 자료에도 사망-부상-실종자 구별 없이 총 520,000명으로 나온다. 단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국전란지』 1년지, 2년지, 3년지, 4년지를 합치면 508,797명으로 나오는데, 이는 전과에 대한 당시의 과장일 가능성이 있다. 전쟁기념사업회 (편), 『한국전쟁사』, 6: 한국전쟁의 영향 (서울: 행림출판, 1992), p. 15.

179) 김광수 교수의 "한국전쟁 인적 피해," 미발표 논문에 의함.

있을 것이다.

2. 사회사와 인류학적 연구: 사람들의 전쟁 경험¹⁸⁰⁾

많은 인적 피해를 논한 것의 결론은 6·25전쟁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당시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과 살아남은 자의 ‘수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난에 대한 연구는 논의조차 금기시되었든지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1990년대 말 이후 노근리사건¹⁸¹⁾을 필두로 거창사건, 함평사건 등이 조명을 받으면서 ‘학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환기되었다.¹⁸²⁾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이 정치사적 시각에서 접근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6·25전쟁을 직접 겪은 민중들의 전쟁경험에 대한 논의가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6·25전쟁에 중 민중들의 삶을 관심 깊게 지켜보던 김동춘 교수는 1999년 10월 9일 한국산업사회학회가 주최한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논문인 “한국의 인권 현실과 인권의 사회학”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그는 2000년 돌베개출판사를 통해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를 출간했다. 피난-점령-학살을 화두로 삼은 이 책의 제4부 학살(195-286쪽)편에서 저자는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비교적 길게 본격적으로 천착했다. 그는 이 책을 “한국전쟁 당시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억울하게 스러져 간 남북한의 모든 이름 없는 영령들 앞에 바친다”고 적고 있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전쟁이 일반민중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오늘날의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명하고자 했다.

비슷한 시기에 6·25전쟁에 대한 사회사적 문제제기가 이루어 졌다.¹⁸³⁾ 전상인, “한국전쟁의 사회사를 위하여,” 『사회비평』 제24호 (2000년 여름), 104-116쪽이 그것이다.¹⁸⁴⁾

180) 李完範, “6.25전쟁 연구의 국내적 신경향,” 『軍史』 제71호 (2009년 6월), pp. 151-178.

181) 정구도 (외), 『한국전쟁기 인권침해 및 역사인식의 문제: 노근리 사건 등 미군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서울: 두남, 2008)는 노근리 사건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보고서 등을 모아놓은 책이다.

182) 선구적인 문제제기로 정희상,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 6.25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발굴』 (서울: 돌베개, 1990)이 있다.

183) 사회학계의 6·25전쟁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집대성되었다.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서울: 풀빛, 1992)가 그것이다.

184) 전상인, 『고개 숙인 수정주의: 한국현대사의 역사사회학』 (서울: 전통과 현대, 2001), 236-249쪽에 재수록 되었다. 이 글은 김성철, 『역사 앞에서』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3)이라는 일기와 박완서의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서울: 웅진출판, 1995);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서울: 웅진출판, 1992)라는 두권의 소설, 할머니 시인 류춘도의 『잊히지 않는 사람들』 (서

한편 김동춘 교수의 문제제기에 기반하여 일군의 인류학자들이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연구』 (Korean War, Community, and Residents' Experiences) (서울: 한울, 2003)¹⁸⁵⁾를 간행했다. 기존의 연구가 정치적 성격이 짙은 ‘위로부터의 연구’라고 파악했는지, 부제를 이렇게 달았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 중 전쟁 이후 국가주의 또는 반공주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망각되거나 민중들은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진단하면서 전쟁 이후 빨갱이 또는 부역자로 단죄된 사람들 및 그 가족들의 전쟁경험을 주로 인터뷰하여 자료화 한 후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연구를 행하여 한 권의 논문 모음집으로 구성했다. 인류학자들에게 각광을 받는 생애사(life history), 구술사(oral history) 방법론을 채용하여 전쟁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¹⁸⁶⁾

반공의 관점에서 기층민, 인권, 여성 등의 관점이 완전히 누락되었다고 진단한 저자들은 구술사적 접근을 통해 이들의 생활사를 복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주로 전남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전쟁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전쟁 후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생활세계 속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전쟁 경험이 어떻게 반복, 재생산되는가하는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지방민들의 역사적 경험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민군 치하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부역자로 몰려 죽임을 당할까 무서워 자의반 타의반 빨치산이 되었던 얘기(박정석 교수의 “전쟁과 ‘빨갱이’에 대한 집합기억,” 61쪽)며, 강진의 대표적 양반가문인 해남 윤씨 집안이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함으로써 좌우익 대립 구도 속에서 ‘좌익 또는 빨갱이 가문’으로 낙인찍히는 과정에 대한 생생한 증언(염미경 교수의 “전쟁과 지역권력구조의 변화,” 116쪽) 등은 텍스트화된 역사서 이상의 의미를

을: 사람생각, 1999)라는 시집에 대한 서평이다.

185) 또한 위 공동연구의 후속작으로 기획된 『전쟁과 기억: 마을공동체의 생애사』 (Korean War, Community, and Residents' Memories) (파주: 한울, 2005) 책머리에서 저자들은 “한국전쟁을 체험했거나 한국전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생애 이야기를 수집해 생략된 과거를 복원하고 생생한 역사 자료를 발굴하는 과정은 지방사를 재구성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한국전쟁이라는 큰 틀에 묻혔던 민초들의 생생한 삶을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3년의 전편이 총론격이라면 2005년의 저작은 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천착하고자 한 각론이다. 전쟁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며 그 기억은 이후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는지가 연구자들의 치밀한 현지 조사와 지역민들의 구술이 상호작용하여 복원되었다. 지역민, 주변인, 산자와 죽은 자의 전쟁 등 총 3부,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죽음 처리방식과 의미화과정’ 등 9편으로 구성되었다. 최정기·정호기·최호림·김권호·노영기·양라운·박현정, 『전쟁과 재현: 마을 공동체의 고통과 그 대면』 (파주: 한울, 2008)는 그 후속작이다.

186) 이러한 구술사 채록자료의 예로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내가 겪은 한국전쟁과 박정희정부』 (서울: 선인, 2004)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자료집은 평범한 사람들의 전쟁 이야기는 아니며 유명 인사들의 증언 모음집이다.

가지는 것이다.

전쟁경험에 대한 구술을 통해 한 필자는 사람들이 전쟁상황을 이념보다는 훨씬 전통적인 사회관계의 틀로 이해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윤형숙 교수의 “전쟁과 농촌사회구조의 변화,” 77쪽). 이것은 한국전쟁을 이념전으로만 환원시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부분적으로나마 허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역시 인류학자인 윤택림 박사가 『인류학자의 과거 여행: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서울: 역사비평사, 2003)를 집필했다.

또한 한국구술사학회 (편),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토박이와 민통선 사람들, 전쟁미망인과 월북가족, 그들이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2011)가 간행되었다. 목차는 아래와 같다.

머리말 : 구술사가 들려주는 또 하나의 한국전쟁 -- 함한희

1부 전쟁 안의 또 다른 전쟁

1.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 -- 윤택림
2. 분단선 위를 걷는 사람들 -- 김귀옥
3. 감옥에서 사라진 사람들 -- 심규상
4. ‘굴’로 간 사람들의 또 다른 역사 -- 김경현

2부 침묵의 집에 갇힌 사람들

5. 빨치산, 또 하나의 전쟁 -- 김진환
6. 가난한 자의 피할 수 없는 전쟁 — 어느 의용군 이야기 -- 오유석
7. 마당 위의 삼팔선 — 세 미망인 이야기 -- 김현선
8. 분단의 긴 그림자 — 월북가족 이야기 -- 조은
9.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 -- 이용기

에필로그 : ‘육이오’를 증언하는 ‘가명’의 사람들 -- 유철인

이 책은 구술 사료를 토대로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을 재구성하기 위해 기획했다. 서울과 민통선, 대전과 경남 지역 사람들의 한국전쟁 경험을 비롯해서, 빨치산·의용군·전쟁미망인·월북가족·빨갱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구술사를 통해 공식 역사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한국전쟁의 미시사를 들려주고 있다. 미망인에 대한 구술사 연구로는 이임하,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구술로 풀어쓴 한국전쟁과 전후 사회』 (서울: 책과함께, 2010)가 특기할 만하다.

한편 사회학도로서 전쟁을 주목하는 연구로 한성훈, 『전쟁과 인민: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과주: 돌베개, 2012)도 있다. 한성훈은 2010년에

“한국전쟁과 북한 국민형성: 동원, 학살, 규율과 전쟁의 미시적 분석”라는 제목으로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전시 북한의 반동분자 처리: 군중심판과 두문,” 『사회와 역사』 통권93호 (2012년 봄), pp. 113-148; “개인 편지에 나타난 북한 인민의 전쟁 서사,” 『경제와 사회』 통권94호 (2012년 여름), pp. 339-372; “진영지역 학살과 진실규명: 역사의 법정과 희생자 복원,” 『역사연구』 제21호 (2011년 12월), pp. 73-101; “조선인민군의 당-국가 인식과 인민형성: 동원, 징병, 규율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통권89호 (2011년 봄), pp. 233-270; “과거청산과 민주주의 실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과 권고사항의 이행기 정의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통권93호 (2010년 겨울), pp. 116-141; “기념물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집단 정체성: 거창사건의 위령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통권78호 (2008년 여름), pp. 35-63; “거창사건의 처리과정과 남는 문제,” 『제노사이드 연구』 창간호 (2007년 2월), pp. 41-72; “거창사건의 정치사회적 분석: 기억의 정치와 학살의 승인,” 『사회와 역사』 통권69호 (2006년 봄), pp. 215-244; “한국전쟁시기 거창학살 사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과, 2005년 8월; “민간인 학살의 진실과 책임을 외면하는 사람들,” 『사람이 사람에게』 통권11호 (2001년 10·11월), pp. 70-73 등을 저술했다.

또한 김경현, 『민중과 전쟁기억: 1950년 진주』 (서울: 선인, 2007)와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광주: 사회문화원, 2001)¹⁸⁷⁾ 등이 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실태 보고서』 (서울: 한울, 2005)는 1945년부터 1953년까지 남한 전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관한 미완의 종합보고서이다. 1장에서는 민간인학살 사건목록과 지역별 사건 보고서를 담고 있다. 2장은 대구 10.1사건, 여순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각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발생한 특수사건들에 관한 내용이다. 3장은 해방기에 발생한 좌우익 테러사건 목록과 주요사건의 개요를 수록하고 있다. 부록으로 참고문헌 목록과 학살 사건의 증거가 되는 미군문서 등의 원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6.25전쟁 이후 분단의 장벽에 막혀 목소리조차 드러낼 수 없었던 소외된 사람

187) 『신동아』 1989년 6월호에 실린 저자의 함평양민학살사건 기사를 '온전한 글'의 형태로 다시 쓴 것이다. 어린시절을 바로 함평양민학살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 보낸 지은이는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모든 민간인 학살사건을 다각적으로 구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책을 펴냈다. 이 책의 제1부는 함평양민학살사건에 관한 연구논문을 실었다. 2부와 3부는 관련자들의 인터뷰와 관련자료들을 각각 실었다.

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6·25전쟁에 대한 총체적 인식에 도달하고 대립과 전쟁을 극복하여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역사학계 중심의 학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전쟁의 어두운 측면인 비전투원·민간인(양민)의 희생에 대해 학살, 대학살,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¹⁸⁸⁾로 인식되어 조망되는데 공산측에 협력한 민간인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이었으며 전쟁의 일환인 교전행위로 합리화하려는 입장과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집단학살적인 시각에서의 글들은 위 인류학·사회사 학계의 조망 외에 아래와 같은 연구가 있다. 역사학계에서도 학살의 문제 등을 연구하여 아래와 같은 업적들을 내어놓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선 박찬승 교수는 “한국전쟁과 진도 동쪽 마을 세등리의 비극,” 『역사와 현실』 제38호 (2000), pp. 274-308을 저술했다.¹⁸⁹⁾ 그는 계급 중심으로 한국전쟁을 해석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세등리의 전쟁 경험 중 마을 내 친족, 가족 간의 갈등과 대립이 대량학살의 주요원인이라고 해석했다. 박 교수는 영암, 부여, 당진, 금산 등에서 미시사적인 구술 채록 작업을 계속 진행해 『마을로 간 한국전쟁: 한국전쟁기 마을에서 벌어진 작은 전쟁들』 (과주: 돌베개, 2010)을 간행했다. 마을에서 벌어진 갈등과 상호 학살을 통해 살펴본 한국전쟁의 미시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역사학자들의 시각에서 남북의 점령정책, 학살·동원의 문제를 다룬 연구로서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전쟁의 유산팀 (편),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그 유산,” 전2권, 2012-2013이 있다. 제1권은 남북한 점령정책을 다룬 것으로 기광서, 정병준, 양영조, 한모니까, 김보영의 글이 아래와 같이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2집 (2012년 가을)에 수록되었다.

奇光舒,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남한지역 토지개혁,” pp. 7-32.

鄭秉峻, “한국전쟁기 북한의 점령과 지방사회의 변화: 경기도 시흥군의 사례¹⁹⁰⁾,” pp. 33-77.

188) 제노사이드는 단지 많은 인간을 죽인다는 것(대량학살)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멸종을 목적으로 한 대량 살육행위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genocide란 ‘종족’을 의미하는 genos와 ‘학살,’ ‘죽임’을 의미하는 cide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기 때문이다.

189) 6·25전쟁때 경찰부대가 후퇴하면서 진도 보도연맹원 260여명을 학살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박문규·장명혜, 『6·25전란극복 구술사: 진도군 150개 마을 2천여 명 학살증언록 제2집』 (광주: 책가, 2012)이 나왔다. 이미 간행된 박문규 (편), 『침묵의 전설: 진도 갈매기섬 집단처형 증언록』 (광주: 금호문화, 2003)의 후속편이다.

梁寧祚, “남한과 유엔의 북한지역 점령정책 구상과 통치,” pp. 78-108.

한모니까, “한국전쟁 이후 ‘收復地區’에서의 농지개혁법 적용 과정과 그 의미,” pp. 109-139.

金甫穎, “유엔군의 해상봉쇄·도서점령과 NLL,” pp. 140-175.

제2권은 오보경, 황윤희(이상 대학원생), 정병준, 양영조, 한모니까, 기광서, 김보영이 동원과 학살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2013년에 정병준, 양영조, 한모니까, 기광서, 김보영의 글이 『이화사학연구』 제46집 (2013년 6월)에 아래와 같이 게재되었다.

정병준, “북한의 남한 점령기 ‘의용군’ 동원과 운용: 의용군명부·포로심문조서를 중심으로,” pp. 1-57.

양영조, “북한의 남한 점령기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와 미군(KWC) 조사기록의 비교를 중심으로,” pp. 59-96.

한모니까, “‘봉기’와 ‘학살’의 간극, 황해도 신천 사건,” pp. 97-137.

기광서, “한국전쟁 휴전에 대한 공산측 지도부의 입장,” pp. 139-175.

김보영, “유엔군의 포로 정책: ‘석방’과 ‘송환’을 중심으로,” pp. 177-221.

또한 김기진, 『한국전쟁과 집단학살: 미국 기밀문서의 최초 증언』 (서울: 푸른역사, 2006)도 특기할 만하다. 이 책에는 국민보도연맹 조직에 관한 종합 보고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는 『일찍이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부산·경남지역』 (서울: 역사비평사, 2002)을 저술했다.¹⁹¹⁾

190) 정 교수는 남한 농지개혁에 대해서 “한국 농지개혁의 재검토: 완료시점·추진동력·성격,” 『역사비평』 65호 (2003)를 작성한 바 있다. 박명림 교수는 “북한의 남한 통치 II: 토지혁명과 사회경제변혁,”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파주: 나남, 2002)를 저술했다.

191) 김기진 부산일보 기자는 2000년부터 6·25전쟁 중 한국정부가 저지른 민간인 학살사건을 추적해 왔다. 국민보도연맹 피학살자 유족을 주축으로 '부산·경남유족회'를 2000년 결성했다. 2003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미국 메릴랜드대학에 객원연구원으로 있으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문서 발굴 작업을 벌였다. 2004년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용역을 받아 미국 소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관련 문서 현황 해제문을 썼다. 미국의 학살 책임을 은폐하고 북의 학살은 부각시키려는 미국의 이중성을 파헤치기 위해 스위스 국제적십자본부에 소장된 문서도 발굴했으나 적십자 자료도 큰 차이가 없었다고 회고했다. “인터뷰: 《한국전쟁과 집단학살》 쓴 김기진 부산일보 탐사보도팀 팀장: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스위스 국제적십자본부 소장 기밀자료 발굴: 출판전문가들, ‘자료 발굴·저술 노력만으로도 평가할 만.’” 『출판저널』 (2006년 3월).

남한의 공산측 소탕을 위한 학살에 대해서는 정병준, “한국전쟁 초기 국민보도연맹원의 학살배경과 구조,” 『역사와 현실』 제54집 (2004); 최정기, “해방 이후 한국전쟁까지의 형무소 실태 연구: 행형 제도와 수형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제노사이드 연구』 제2호 (2007년 8월), pp. 63-93; 지수걸, “공주의 한국전쟁과 전쟁피해,” 『제노사이드 연구』 제4호 (2008년 8월), pp. 139-206; 박만순, “한국전쟁기 청원군에서의 민간인학살,” 『제노사이드 연구』 제4호 (2008년 8월), pp. 207-254; 김귀옥, “한국전쟁기 강화도에서의 대량학살사건과 트라우마: 1950년 10월~1951년 6월을 중심으로,” 『제노사이드 연구』 제3호 (2008년 2월), pp. 13-65; 최태욱, “강화군 민간인학살: 유격대 교전지역에서의 학살,” 『제노사이드 연구』 창간호 (2007년 2월), pp. 155-208; 홍순권·배병욱, “한국전쟁 전후 김해지역 민간인학살의 실태와 성격,” 『제노사이드 연구』 제4호 (2008년 8월), pp. 83-138 등이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 전후의 과거사 위원회의 평가와 조사보고서류로는 함평군 (편), 『함평군 한국전쟁기간 민간인 희생자 피해연구 보고서』 (함평, 함평군, 2006);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피해자 현황조사 용역결과 최종결과보고서』 (광주: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200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편),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전4권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¹⁹²); 홍순권, “<2007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대하여,” 『제노사이드 연구』 제2호 (2007년 8월), pp. 301-316; 정근식, “민간인학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의 현황과 과제,” 『제노사이드 연구』 창간호 (2007년 2월), pp. 11-40 등이 있다. 홍순권 (외), 『전쟁과 국가폭력』, 제노사이드총서 1 (서울: 선인, 2012)도 특기할 만하다. 또한 신경득 (편), 『조선종군실화로 본 민간인 학살』 (서울: 살림터, 2002)은 전쟁 기간 『로동신문』·『해방일보』·『민주조선』·『조선인민보』 등 북한 신문에 실린 김사량, 박팔량, 리태준 등의 종군실화와 민간인 학살 기사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민간인 학살 주체로 미군과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을 들고 있다. 북한 종군작가나 기자의 입장에서 쓴 것이긴 하지만 노근리 학살 사건 등과 같이 이미 사실로 확인된 것들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한편 북한측의 남한점령시 학살에 대해서는 김성동, “6·25때 좌익이 학살한 5만 9964명 명부 발견: 영광 대학살의 현장을 가다,” 『월간조선』 (2003년 2월); 최정기, “한국전쟁기 영암지역에서의 민간인학살: 사건의 형태분류 및 피해내용 분

192) 이는 www.jinsil.go.kr에서 볼 수 있다.

석을 중심으로,” 『제노사이드 연구』 제3호 (2008년 2월), pp. 101-129; 박정석, “전쟁과 폭력: 영광지역 한 마을 사람들의 기억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66집 (2004년 12월), pp. 225-257; 김행복, “북한군 양민학살에 관한 연구,”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3); 정병준, “한국전쟁기 남한 민간인 인명피해 조사의 유형과 특징: 한국정부의 통계·명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제14호 (2008년 6월), pp. 133-171; 서중석, 김득중, 강성현,¹⁹³⁾ 이임하, 김학재, 양정심,¹⁹⁴⁾ 연정은, 『전쟁 속의 또 다른 전쟁: 미군 문서로 본 한국전쟁과 학살』 (서울: 선인, 2011)¹⁹⁵⁾; 황윤희,¹⁹⁶⁾ “한국전쟁범죄조사단(KWC) 문서,” 『崇實史學』 제28집 (2012년 6월), pp. 429-440.

서중석·김학재·이임하·강성현·양정심·김득중, 『전쟁과 사람들: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일상』 (서울: 선인, 2010)은 피난민과 주민의 실태를 연구한 책이다. 이 공동연구에서는 미국 내쇼날아카이브 소장 문서를 중심으로 당시 피난민·전재민들의 실태와 그들의 어려움 등을 고찰했다.

193) 그는 “한국 사상통제기제의 역사적 형성과 '보도연맹 사건', 1925-50,”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2012년 2월에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한국전쟁기 유엔군의 피난민 인식과 정책,” 『史林』 제33호 (2009년 6월), pp. 77-119; “제노사이드와 한국현대사: 제노사이드의 정의와 적용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18호 (2008년 12월), pp. 95-150; “'지연된 정의'와 대면하기: '보도연맹 사건'과 '과거청산,’”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8호 (2005년 하반기), pp. 73-102; “전향에서 감시·동원, 그리고 학살로: 국민보도연맹 조직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14호 (2004년 12월), pp. 55-106; “제주 4·3 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 대량학살 시기(1948년 10월 중순-1949년 5월 중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 2002년 8월 등을 저술했다. 또한 허버트 허시, 『제노 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삶을 위한 죽음의 연구』 강성현 (역) (서울: 책세상, 2009)라는 번역서도 출간했다.

194) 그녀는 “제주 4·3투쟁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성균관대 사학과 대학원에서 2006년 2월에 발표했으며 “한국전쟁기 제주지역사회의 변동,” 『史林』 제33호 (2009년 6월), pp. 121-154를 내어놓았다.

195) 목차는 아래와 같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의 연구 방향 / 서중석

한국전쟁 전후 육군 방첩대(CIC)의 조직과 활동 / 김득중

한국전쟁 전 정치범 양산 '법계열'의 운용과 정치범 인식의 변화 / 강성현

한국전쟁기 부역자처벌 / 이임하

전쟁포로들의 저항과 반공오리엔탈리즘: 한국전쟁기 유엔군 포로수용소 내 사건들을 중심으로 / 김학재

한국전쟁기 미군의 전쟁범죄 조사와 처리: 전쟁범죄조사단(KWC)을 중심으로 / 양정심

북한의 남한 점령시기 '반동분자'인식과 처리 / 연정은

'노근리조사기록'(No Gun Ri Research Document)의 성격과 주요 내용 / 김득중

196) 그녀는 “번스(Arthur C. Bunce)의 내한활동과 한국문제인식”라는 제목으로 숭실대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2008년에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편 2011년에는 전갑생,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새로운 자료, 다른 시각』 (서울: 선인, 2011)이 출간되었는데 보도연맹 사건 등과 부역자 처형 사건, 거제도 포로수용소, 1945-1953년간 간첩사건 등을 다루었다.¹⁹⁷⁾ 전갑생은 “경남지역 민간인 학살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와 경계』 제56집 (2005년 9월), pp. 23-53; “한국전쟁기 오무라수용소(大村收容所)의 재일조선인 강제추방에 관한 연구,” 『제노사이드 연구』 제5호 (2009년 2월), pp. 13-44; “한국전쟁 전후 대한청년단의 지방조직과 활동,” 『제노사이드 연구』 제4호 (2008년 8월), pp. 11-82; “거제도 포로수용소 설치와 포로의 저항,” 『제노사이드 연구』 제2호 (2007년 8월), pp. 95-125를 저술했는데 위 저서에 일부를 소화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2국 조사1팀장으로 근무했던 신기철은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위원회에 제출한 2차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진실, 국가범죄를 말하다: 금정굴 사건으로 본 민간인 학살』 (서울: 자리, 2011)을 간행했다.

4. 비교사적 연구

김동춘 교수¹⁹⁸⁾는 “한국전쟁기 대량학살에 대한 집단기억과 남한에서의 역사적 규명,” 역사문제연구소·포츠담현대사연구센터 (공편),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

197) 목차는 아래와 같다.

제1부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 = 11
 부산 전평 노동자와 보도연맹 학살사건 = 12
 지심도 보도연맹원 학살사건 = 32
 6·25전쟁 중 자행된 무차별 '사형집행' = 50
 또 하나의 전쟁, '부역자' 학살 = 70
 쓰시마의 적으로 내몰린 재일조선인 = 98
 6·25전쟁 중 쓰시마로 밀항한 사람들 = 114
 재일조선인의 좌우 분리공작 = 134
 부록- 대마신문 기사목록 = 161
 제2부 절멸의 수용소, 반공의 탄생 = 165
 최초의 발굴, 거제도포로수용소의 숨겨진 진실 = 166
 수용소의 탄생과 절멸 = 198
 왜곡된 수용소의 사건들 = 214
 역사의 현장, 포로수용소 = 228
 제3국행 전쟁포로 귀국 공작한 이승만 = 234
 부록- 거제도포로수용소 일지 = 255
 제3부 전쟁과 간첩 그리고 조작 = 261
 '북풍'의 시작, 방첩대 간첩단 조작 = 262
 김영삼 모친 살해사건과 간첩조작 의혹 = 276
 부록- 1945~1953년 간첩단 사건일지 = 294

198) 총 5장으로 구성된 김동춘, “20세기 한국에서의 제노사이드,” 『4·3과 역사』, 5 (2005)의 3장 제목은 “학살의 백화점으로서의 한국전쟁 전후 학살”이다.

선: 한국, 동서독,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서울: 역사비평사, 2010)를 작성했는데 이 책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제1부 전쟁의 국제적 성격과 유럽인의 전쟁인식

변방의 전투?: 한반도와 한국전쟁을 둘러싼 강대국의 전략 / 베르트 슈퇴버

6·25전쟁의 국제적 영향 / 김광운

서유럽과 한국전쟁: 프랑스의 정치문화에 미친 영향 / 토마스 린덴베르거

‘평화투쟁’과 전쟁공포: 폴란드와 헝가리에 미친 한국전쟁의 영향 / 아르파드 폰 클리모·얀 C. 베렌즈

제2부 전쟁이 분단국가에 미친 영향: 한국과 독일의 비교

한국전쟁과 헌법의 변화: ‘균등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건국헌법과 전후헌법 비교를 중심으로 / 박명림

일어나지 않은 전쟁: 지나간 전쟁경험과 분단독일에서의 한국전쟁 / 미카엘 램케

한국전쟁이 남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 김성보

서독과 서유럽경제에서 한국전쟁의 의미 / 베르너 아벨스하우저

동서의 양진영에서-남북한에 대한 동서독의 개발원조 1953~1963 / 이유재

제3부 전쟁과 기억

한국전쟁기 대량학살에 대한 집단기억과 남한에서의 역사적 규명 / 김동춘

한국인의 전쟁기억·전쟁기념물을 통한 기억의 구성 / 오유석

이제 전쟁의 기억에 대한 비교사적인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연구의 성과가 축적되었다고 할 것이다. 6·25전쟁 연구의 중심이 한국으로 오고 있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우리 전쟁을 연구할 수는 있으며 글로벌한 시대에 꼭 한국이 중심이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되풀이한다면 포스트모던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구시대적 민족주의를 연상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이만치 우리의 기억들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위가 아닐까 한다.

같은 냉전의 첨병이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대비되는 독일의 학자들이 위와 같이 많이 참여해 미카엘 램케, “일어나지 않은 전쟁: 지나간 전쟁경험과 분단독일에서의 한국전쟁” 등이 발표되었던 것이다.

5. 참전군인 등의 증언록

대한민국에서 참전자 증언록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인데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수집한 4,118건을 확보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는 이종판 (집필)·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1, 북한의 남침과 서전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를 간행했다.

육군본부 군사연구소도 증언 테이프 313개를 확보하고 있다. 『증언록』 I, II, III권을 간행했으며 녹취록 162건을 가지고 있다. 육군본부 군사연구소는 이상철·권혁수 (편),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을 2012년에 그리고 『6·25전쟁 피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간행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전쟁 체험 수기를 묶은 책도 있다. 임성연 (등저), 『6.25 우리들의 이야기: 전민족 체험기』 (서울: 월간조선사, 2001); 이무호, 『어느 졸병이 겪은 한국전쟁: 제2회 나라 안팎 한국인기록문화상』 (서울: 지식산업사, 2003); 조선일보 특별취재팀 (편), 『나와 6·25: 6·25전쟁 60주년 조선일보 특별기획』 (서울: 기과량, 2010). 최근 실록 스타일의 연구서들이 출간되었다. 최용호-김병륜, 『그때 그날: 끝나지 않은 6·25전쟁이야기』 (서울: 삼우사, 2003); 이선교, 『제2차한국전쟁1-끝나지 않은 전쟁 6·25를 말한다』 (서울: 봄, 2003). 한편 경상북도는 2012년 『나라를 구한 영웅, 학도병』을 발간했는데 ‘다부동 전투,’ ‘안강전투,’ ‘포항기계 전투,’ ‘영덕의 장사상륙작전’ 등 경북 지역의 주요 전투에 참전했던 총 26명의 참전 학도병 이야기를 생생한 스토리텔링(Story Telling)형식으로 담았다.

물론 1980년대에도 참전군인들을 중심으로 구술사 자료수집이 있었다. Changil Ohn, "The Oral History Interview Project on the Korean War, 1950-1953," In U.S.-Korean Security Relation: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roceedings of the Third Annual Conference, November 29-December 2, 1987, Seoul: Council on U.S.-Korean Security Studies, 1988이 그러한 결과의 산물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참전자들의 증언록이 비교적 많이 출간되었다. 최근에는 Douglas Rice, ed., Voices from the Korean War: Personal Accounts of Those Who Served (New York: iUniverse.com, 2011)이 나왔다.

XII. 정전 60주년을 맞이한 미래 전망, 21세기 6·25전쟁연구의 방향설정: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쟁연구

1980년대 초반까지의 6·25전쟁 연구는 본격적이면서 학문적인 연구가 일천했기 때문에 아직 개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전문화되지 못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이데올로기적 제약 때문에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한국현대사연구 붐이 조성되면서 새로운 6·25전쟁연구 전공자 그룹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학문적 토론이 가능했던 것은 일종의 연륜이라고도 할 수 있다. 포화가 멈춘 지 60년이 경과한 2013년 한국인에 의한 6·25전쟁 연구는 그 전망이 밝다. 아카이브와 기존의 연구경향을 결합시킨 것이 주류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주제에 대한 천착이 행해지고 있다.

또한 6·25전쟁 연구는 기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전개과정, 영향에 대한 연구로 순차적으로 그 연구의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이다. 이제 기존의 국제정치사적 접근¹⁹⁹⁾이나 기원에 대한 과도한 강조 등이 극복되고 국내정치적 접근이나 사회학적 접근, 포로 등에 관한 심층적 접근 등도 추구되고 있다. 한편 보다 새로운 주제로서는 유엔군의 점령지에 대한 군정 실시, 세균전 문제²⁰⁰⁾ 등도 연구의 과제로 제기되었다. 6·25전쟁 연구는 이제 정치적 접근에서 사회적-인류학적 접근으로, 거시적 접근에서 미시적 접근으로, 집단적 이념의 차원에서 개인적 생활의 차원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²⁰¹⁾ 2000년 이후 역사학계는 기존의 문헌중심의 역사연구의 대안으로 구술에 의한 역사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윤택림 박사는 "예전에는 지배층만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문헌중심의 역사는 지배층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며 "피지배층은 기록을 가지지 못한 계층임

199) 그렇지만 지금도 이러한 접근에 기반한 번역서들이 나오는 것은 6·25전쟁이 기본적으로 국제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윌리엄 스톡, 『한국전쟁의 국제사』, 김형인 (등역) (서울: 푸른역사, 2001); 윌리엄 스톡,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서은경 (역) (서울: 나남, 2005).

200) 다음 저서가 번역되었다. 스티븐 앤디콧, 에드워드 해거먼 (공저),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 안치용, 박성휴 (공역) (서울: 중심, 2003). 한편 중국은 현재도 미국의 세균전 주도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陳時偉, “朝鮮戰爭時期圍繞細菌戰問題的三場國際政治動員: 基于中英兩國檔案的解讀,” 『歷史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院, 2006年 6期; 雙月刊), pp. 115-137에 의하면 1952년 말 중국 정부가 미군이 한국전장과 중국 동북에서 세균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폭로한 후 국제여론을 환기시킨 결과 영국 과학자 조셉 니담(Joseph Needham)이 이끄는 국제과학조사팀이 중국에 와서 미국이 세균전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표했다고 한다. 그 결과 신중국은 외교적 고립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동정을 받았으며 니담은 영국으로 돌아간 후 영국 정부로부터 비난받았는데 이는 냉전시대 동서이데올로기 갈등이 희생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 경제사적 접근은 일찍부터 시도되었으며 정치사와 함께 6·25전쟁 연구의 주요한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진보적 연구물로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전쟁과 자본주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이 있다.

으로 구술에 의한 역사 읽기는 민중의 삶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²⁰²⁾ 박명림 교수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2010년까지의 6·25전쟁 연구를 ‘괄목할 만한 30년’ 동안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연구들의 성격을 ‘탈이념화’, ‘다양화’, ‘구체화’로 요약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과정은 진실과 자유, 평화와 생명을 향한 기나긴 여정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의 발견’이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21세기 6·25전쟁 연구의 기초는 ‘인간의 발견’, ‘인간중심의 연구’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박 교수는 전쟁 30주년인 1980년의 연구 상황과 60주년을 맞았던 2010년을 비교할 때 그 사이 30년 동안 연구 환경과 조건, 주제, 저변, 자료, 국가 기구 설치, 시각, 수준은 혁명적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그것은 한마디로 진실과 자유, 평화와 생명을 향한 기나긴 여정이라는 것이다. 이념, 체제, 제도, 군사, 전략, 작전 중심의 연구들은 마을, 개인, 이산, 포로, 가족, 공동체, 문중, 지역단위의 체험과 유산에 대한 연구로 옮겨갔다고 조망했다.²⁰³⁾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된 시점에 영향에 대한 연구²⁰⁴⁾와 함께 그 동안 소외받았던 민중의 삶도 주목대상이 되었으니, 평화체제 구축이 멀지 않았음을 예감할 수 있다.

즉 ‘전쟁과 평화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²⁰⁵⁾ 이전에는 6·25전쟁 이후의 휴전체제가 6·25전쟁 연구에 있어 관심의 영역이 되어 「한국전쟁과 휴전체제」라는 제목을 걸고 1989년 한국전쟁연구회와 1997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학술회의를 개최했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역시 8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신진학자가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이외에도 1990년 『사상과 정책』은 「6·25한국전40년 한반도휴전체제」를 특집으로 기획해 전통주의 일색의 글을 실었다). 또한 조민,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전망』 (서울: 해남, 2007)은 훌륭한 문제제기이다.

그런데 정전60년이 지난 2013년의 시점에서는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202) “「인류학자의 과거여행」퍼낸 윤택림씨,” 연합뉴스 2003-07-04 19:09,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404880§ion_id=103&menu_id=103 (검색일: 2006년 2월 21일).

203) 박명림, 『역사와 지식과 사회(한국전쟁 이해와 한국사회)』 (파주: 나남, 2011), p. 385.

204) 김행선, 『6·25전쟁과 한국사회문화변동』 (서울: 선인, 2009)은 1950년대 원조물자의 대량유입과 그 영향, 1950년대 대중문화의 변화 등을 다루고 있다.

205)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가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2006년 10월 25일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한국사의 전쟁과 평화: 그 정치사상사적 조망”은 임진왜란, 독립전쟁, 6·25전쟁 등을 조망한 “한국의 전쟁과 평화사상”을 비롯해 유럽, 중국, 일본(무사도)의 전쟁을 조망한 “동서양의 전쟁과 평화사상,” 중일전쟁기 종군문학, 전쟁의 낭만적 이상화, 온라인 게임의 전쟁코드를 조망한 “전쟁과 문화”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제기되어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미국과 직접 대화하며 한국을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 배제하려하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남북관계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던 상황에서 개막된 1990년 9월 남북고위급회담의 결과로 1991년 12월 13일에 조인(1992년 2월 18일 발효)된 남북간의 기본합의서 제 5조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협정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인 6·15남북공동선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이후 군사회담이 열렸지만 그 한계가 노출되었으므로 평화체제 구축은 점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주제 천착과 연구자들의 조직화를 통해 6·25전쟁 연구의 중심은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당위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²⁰⁶⁾ 이러한 당위는 세계화시대에 역행하는 닫힌 민족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 역사 연구의 중심을 한국 내에 세워 세계로 전파한다는 주체적 역사인식이다. 6·25전쟁은 아직도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절박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연구의 중심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다면 하나의 화석화된 역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반면 우리가 연구의 중심을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민족적 비극을 세계인에게 전파시켜 전쟁방지와 평화체제 구축의 보편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6·25전쟁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들(예를 들면 고구려-수나라와의 전쟁, 고구려-당전쟁, 나당전쟁, 임진왜란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면 ‘한국에서의 전쟁사’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 전쟁사 연구의 수준을 좀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의 온창일 교수(『韓民族戰爭史』, 서울: 집문당, 2001)나 한국역사연구회(『한국역사 속의 전쟁』, 서울: 청년사, 1997) 등에서 이미 관심을 가져왔으나²⁰⁷⁾ 아직 표준적 교과서로 간

206) 그런 맥락에서 국외 업적을 우리 입장에서 소화하려는 다음 시도는 의미 있다.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편), 『해외한국학평론』, 2(서울: 일조각, 2001).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J. 개디스/ 우리는 이제 안다: 냉전사를 재고함 -차상철; W. 스톡/ 한국전쟁: 국제사 -김남균; J. 첸/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중·미대결의 기원 -박명림; S. 곤차로프 외/ 미덥지 않은 맹우들: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한국전쟁 -이완범; S. G. 장/ 마오쩌둥의 군사적 낭만주의: 중국과 한국전쟁 1950~1953 -조성훈; R. 풋/ 승리의 대안: 한국후전회담과 평화구축 -홍용표; 엔디코트와 헤이거만/ 미국과 생물학전: 초기냉전과 한국전쟁의 비밀 -김귀옥; R. 맥글로스런/ 단애치슨과 미국의 아시아방파정책 -김정배; M. 샬러/ 더글라스 맥아더: 극동의 장군 -김남균; S. 리/ 제국의 전초기지들 : 한국·베트남, 아시아에서 냉전의 기원, 49-54 -전상인.

207) 이외에도 다음 업적이 있다. 이기훈, 『전쟁으로 보는 한국역사』, 서울: 지성사, 1997; 국방군사

주될 수 있는 결정적 업적이 나오지는 않았으므로 한국의 전쟁사에 대한 통사 발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쉽게 서술한 책으로는 김광일, 『전쟁으로 읽는 한국사: 한반도의 역사를 뒤바꿔놓은 결정적 전쟁 이야기』 (서울: 은행나무, 2012)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육군 군사연구소-한국미래문제연구원 (공편), 『한국군사사』 전16권 (서울: 한국미래문제연구원, 2012)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과 같은 세계사적으로도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쟁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국내학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다. 문희수 교수와 이창훈 교수, 우철구 교수, 신승권 교수 등이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조직화의 수준은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러일전쟁 국제학술회의가 “포츠머스조약과 동북아 평화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주제로 2005년 11월 17일 아셈연구원(회장 이창훈 교수)에서 열렸던 것도 이러한 연구를 조직화하려는 시도이다. ‘한국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이 전쟁을 이론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1998년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냉전의 전개와 한국전쟁의 발발: 스탈린의 전후구상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를 받은²⁰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2012년 『국제정치논총』 제52집 3호에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이론적 의미,” pp. 201-225를 발표했는데 부제인 “현상타파/현상유지 국가 논의의 재조명”이 상징하듯이 전쟁 당시 중국과 소련을 공격적인 현상타파국가로 보는 통설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히 소련은 현상유지적인 측면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끝난 지 60년이 지난 2013년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재차 제기되었다. 육사출신으로 독일육사에 편입했으며 독일 보쿰대학에서 역사학박위를 받았던 대한민국 현역 군단장인 류제승이 『6·25,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북한, 소련, 중국의 전쟁 기획과 수행』 (서울: 책세상, 2013)을 간행한 것이다. 이렇듯 군 일각에서는 이 전쟁의 종결과 미봉을 바라지 않는 시각이 존재한다.

연구소 (편), 『한민족전쟁통사』 I-IV,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1997; 이재 (외), 『한민족전쟁사총론』, 서울: 교학연구사, 1988; 3사관학교군사교재편찬회 (편), 『국난극복사』, 서울: 공학사, 1979; 이선근, 『한민족의 국난극복사』, 서울: 휘문출판사, 1978; 이선근, 『민족의 위란과 극복』, 서울: 심산문화사, 1995; 이재범 (외), 『한반도의 외국군주둔사』, 서울: 중심, 2001.

208)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Jihwan Hwang, “Weaker states, risk-taking, and foreign policy: rethinking North Korea's nuclear policy, 1989-2005,”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2005.

XIII. 맺음말: ‘전쟁종합사료관’(Korean War Archives and Research Network) 구축을 위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다국사료 교차분석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수 있는 다국적 ‘전쟁사료관’(Korean War Archives)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미래 과제들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다가 미국 내쇼날아카이브 소재 북한 노획 문서도 첨가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북한 스스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한다. 현재 아카이브들이 각국에 산재해 있어 자료수집을 위해 출장을 가야 하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합·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네트워크를 구성해 하나의 통합적인 포털을 만드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이다. 또한 이 포털을 통해 각국의 연구물들도 볼 수 있다면 연구자의 수고를 덜고 그 연구의 기반을 대중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래 우리가 해야 할 장기 과제이며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강토에서 발생한 전쟁이므로 우선 한국이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학계, 학회, 관계 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자료수집 현황을 정리하고 협조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미 존재했으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기록보존관련기관협의회’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연후에 국제학계와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전쟁종합사료관’(Korean War Archives and Research Network)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